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100084-01

2025 Census 센서스 100년

센서스 100년
한국의 인구

통계청

발간사

신라시대의 촌락문서와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호구(인구·가구·주택)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천년이 넘는 오랜 전통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는 1925년에 근대적 인구센서스가 '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센서스는 국가 제1의 기본통계로, 주기적으로 전국의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기록해 왔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은 물론 그보다 작은 집계구, 격자 단위로 자료가 생산되어 공공과 민간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의사 결정, 연구와 교육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구 추계, 주택보급률 등 가공통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다른 표본조사의 표본틀이자 조사추정치 작성에 필요한 모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센서스 100년, 한국의 인구」와 「센서스 100년, 한국의 주택」은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어 센서스 100년을 기념하고, 정리하며,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센서스 100년, 한국의 인구」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외국인, 가족 구성, 경제활동,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구와 관련된 주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통계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정책적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센서스 100년, 한국의 주택」은 점유형태, 주택 유형, 주거 수준, 빈곤과 주거복지 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빈집, 가구 유형 변화, 지역 간 주거 격차 등 주택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폭넓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통계 자료집이 아니라, 인구와 주택을 매개로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침서입니다. 정부, 민간, 학계의 다양한 독자들이 인구와 주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에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인구와 주택의 미래는 지난 100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최선의 선택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통계청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책자의 기획과 집필, 편집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8월

통계청 차장 안형준

안 형 준

차례

1장 한국의 인구·가구·주택 100년 1

1. 머리말 3
2. 인구주택총조사 100년의 변화 8
   1) 인구주택총조사의 출발: 조선후기 호적과 일제강점기 국세조사 8
   2)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인구주택총조사 11
   3) 인구통계와 경제성장 15
3. 현대 한국의 인구·가구·주택 변화 20
   1) 인구 변화 20
   2) 가구 변화 25
   3) 주택 변화 27
4. 맺음말 33

2장 인구주택총조사 작성방법의 변화 35

1. 머리말 37
2. 조사방법의 변화 40
   1) 100년 간의 변화과정 개요 40
   2) 표본조사방법 42
   3) 자료수집방법 43
3. 조사항목의 변화 45
4. 자료처리 및 자료제공방법의 변화 50
   1) 자료입력방법의 변화 50
   2) 자료처리방법의 변화 51
   3) 자료제공방법의 변화 52

차례

5. 센서스 장성 방식의 패러다음 전환 ····· 53
1) 등록센서스 작성 현황 ····· 53
2) 등록센서스 작성 방법 ····· 54
3) 등록센서스 DB 구축 및 통계생산 ····· 55
6. 맺음말 ····· 57

3장 인구주택총조사와 지리정보시스템(GIS) ····· 59

1. 머리말 ····· 61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GIS 활용 동향 ····· 63
3. 인구주택총조사 계획 및 실행 과정과 GIS ····· 66
1)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용 지도 제작 ····· 66
2) 집계구 및 다양한 통계구역 설정 ····· 69
3) 인구주택총조사 실행에서의 GIS ····· 71
4.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집계 및 서비스 ····· 72
1)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집계 및 공간 DB 구축 ····· 72
2) 인구주택총조사 온라인 서비스 ····· 74
5. 맺음말 ····· 76

4장 인구 성장과 변천 ····· 77

1. 머리말 ····· 79
2. 해방 이전의 인구변천 ····· 82
1) 변천 이전 전통적 성장기(1910년 이전) ····· 82
2) 초기 변천기(1910~1945년) ····· 83

3. 해방 이후의 인구변천 ····· 86
1) 인구학적 혼란기(1945~1960년) ····· 86
2) 후기 변천기(1960~1985년) ····· 87
3) 포스트 변천기(1985년 이후) ····· 88
4. 세계 속 한국의 미래 ····· 92
5. 맺음말 ····· 94

5장 인구 성·연령 구조 ····· 95

1. 머리말 ····· 97
2. 개념과 범주 ····· 97
3. 성별 구조 ····· 99
1) 전체 인구의 성비 ····· 99
2) 연령별 성별 구조의 변화 ····· 101
4. 연령 구조 ····· 106
1) 1925~1970년대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 108
2) 1980~2010년대의 종형 인구구조 ····· 112
3) 2020년 이후의 항아리형 인구구조 ····· 113
5. 맺음말 ····· 115

6장 인구분포 ····· 117

1. 머리말 ····· 119
2. 개념과 범주 ····· 120

차례

3. 지역별 인구분포 ····· 121
1) 시도별 인구분포 ····· 121
2) 권역별 인구분포 ····· 129
4. 도시화 ····· 133
5. 맺음말 ····· 135

7장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 ····· 137

1. 머리말 ····· 139
2. 외국인 인구구조 ····· 142
1) 국내 외국인 인구규모 동향 ····· 142
2) 외국인 인구의 연령 구조와 부양비 ····· 145
3) 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 ····· 148
4) 외국인 인구의 지역별 분포 ····· 151
3. 외국인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156
1) 교육수준 ····· 156
2) 경제활동 ····· 157
4. 다문화 가구의 특성 ····· 163
5. 맺음말 ····· 167

8장 출산력 ····· 171

1. 머리말 ····· 173
2. 인구정책과 출산 ····· 175
3.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변화 ····· 179

4. 유배우 비율과 기혼여성의 출산력 변화 184
1) 초혼연령과 유배우 비율의 변화 184
2)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 변화 187
5.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도별 차별출산력 변화 190
1) 교육수준별 차별출산력의 변화 192
2) 경제활동 상태별 차별출산력의 변화 196
3) 시도별 차별출산력의 변화 198
6. 맺음말 202

9장 사망력 205

1. 서론 207
2. 사망수준 208
1)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 208
2) 연령별 사망률 209
3) 기대수명 211
3. 사망원인 215
1) 10대 사망원인 215
2) 연령대·사망원인별 사망률 217
4. 맺음말 219

10장 국내 인구이동 221

1. 머리말 223
2. 국내 인구이동 추이 224

차례

3. 시도 간 인구이동 ····· 226
4. 수도권의 인구이동 ····· 232
5. 맺음말 ····· 236

11장 경제활동과 산업 및 직업 ——— 239

1. 머리말 ····· 241
2. 경제활동참가율 ····· 243
   1) 개념 및 정의 ····· 243
   2)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245
   3) 취업자의 성별·연령별 구조 ····· 252
3. 산업구조 ····· 255
4. 직업구조 ····· 258
   1) 직업구조 변화 ····· 258
   2) 성별 직업구조 ····· 259
   3) 성별·연령별 직업구조 ····· 261
   4) 교육수준별 직업구조 ····· 264
   5) 고용형태별 직업구조 ····· 267
5. 맺음말 ····· 270

12장 통근·통학과 주간인구 ——— 273

1. 머리말 ····· 275
2. 전국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 277
   1) 통근·통학인구 비율과 연령대별 특성 ····· 277
   2) 지역별 주간인구 지수 ····· 284

3. 수도권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 288
1) 수도권 통근·통학 특성 ····· 288
2) 수도권 주간인구 ····· 293
4. 맺음말 ····· 297

13장 혼인과 가구·가족 ····· 299

1. 머리말 ····· 301
2. 혼인상태의 변화 ····· 303
1)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의 혼인통계 ····· 303
2)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비 ····· 303
3. 가구와 가족 ····· 308
1) 용어 정의 ····· 308
2) 가구 수와 평균 가구원 수 ····· 309
3) 가구 규모와 세대 구성 ····· 311
4) 1인 가구 ····· 313
5) 여성 가구주 가구 ····· 314
4. 맺음말 ····· 317

14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및 아동 양육 가구의 보육 ····· 319

1. 머리말 ····· 321
2.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경력단절 ····· 323
1) 여성 고용률 변화 ····· 323
2)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및 핵심연령층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 326

차례

3. 보육 ····· 334
1) 아동 양육 가구 특성 ····· 334
2) 보육현황 ····· 337
4. 맺음말 ····· 342

15장 고령인구의 삶: 사회참여, 활동제약 및 돌봄, 생활비 원천 ——— 343

1. 머리말 ····· 345
2. 고령인구 현황 ····· 348
1) 인구 특성 ····· 348
2) 고령인구가 속한 가구의 세대 구성 변화 ····· 349
3.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 351
1)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 ····· 351
2)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사회활동 참여 ····· 354
4. 고령인구의 활동제약과 돌봄 ····· 355
5. 고령인구의 생활비 원천 ····· 360
6. 맺음말 ····· 365

16장 교육 ——— 367

1. 머리말 ····· 369
1) 연구 배경과 목적 ····· 369
2) 인구주택총조사 교육 관련 조사항목의 변화 ····· 370

2. 공교육 기반의 확대와 교육수준의 향상 372
1) 학교와 학생 수의 변화 372
2) 급격한 교육수준의 향상 376
3.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 381
1) 전국의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 381
2) 시도별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와 인구이동 382
3) 서울의 구별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 387
4.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 391
1) 교육과 경제활동 391
2) 교육과 직업·산업 393
5. 맺음말 397

17장 종교인구의 변화 399

1. 머리말 401
2. 인구주택총조사 이전의 종교인구 조사 402
3. 종교인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 404
1)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 변화 404
2) 성별 종교인구 변화 407
3) 연령별 종교인구 변화 408
4) 지역별 종교인구 변화 409
5) 비종교인구 변화 414
4. 맺음말 417

차례

18장 인구정책 ——— 419

1. 머리말 ····· 421
2. 출산조절정책 ····· 422
   1) 인구증가억제정책(1962~1995년) ····· 422
   2) 인구자질향상정책(1996~2004년) ····· 423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2005년~) ····· 425
3. 이민정책 ····· 430
   1) 이민정책 기조 변화 ····· 430
   2) 이민자 유치 정책 ····· 431
   3) 이민자 정착 정책 ····· 433
   4) 이민통합정책 ····· 437
4. 맺음말 ····· 441

참고문헌 ——— 442

다산글방

〈표 차례〉

표 1-1. 국세조사의 조사항목(1925~1940년) ····· 10
표 1-2. 전국·서울의 주거상황(1955년) ····· 14
표 1-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수 변화(1925~2020년) ····· 16
표 1-4. 동·읍·면부별 총인구 변화(1955~2020년) ····· 21
표 1-5. 시도별 총인구 구성비 변화(1975~2020년) ····· 22
표 1-6. 주요 인구 동향(1970~2020년) ····· 24
표 1-7. 총인구 변화(2016~2023년) ····· 24
표 1-8.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변화(1975~2020년) ····· 26
표 1-9. 일반가구 수 변화(2016~2023년) ····· 27
표 1-10. 주택 수 변화(1960~2020년) ····· 28
표 1-11. 동·읍·면부별 주택 수 변화(1960~2020년) ····· 29
표 1-12. 주택유형별 주택 수 변화(1970~2020년) ····· 30
표 1-13. 주택 수 변화(2016~2023년) ····· 32

표 2-1. 인구주택총조사의 역사(1925~2020년) ····· 40
표 2-2.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수의 변화(1925~2020년) ····· 46
표 2-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변화(1960~2020년) ····· 46
표 2-4.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별 응답비중 변화(2015·2020년) ····· 51

표 3-1. SGIS 공간 DB 구축 현황 ····· 73

표 4-1. 우리나라 인구변천의 시기별 주요 특성 ····· 81
표 4-2. 한국의 인구성장과 변천(1925~2020년) ····· 84
표 4-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추세(1950~2070년) ····· 93

표 5-1. 연령별 성비 변화(1925~2020년) ····· 102
표 5-2.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1925~2020년) ····· 108
표 5-3. 인구구조의 변화(1935·1949·1955년) ····· 110

표 6-1. 시도별 인구 변화(1925~2020년) ····· 122

차례

표 6-2.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1925~2020년) ····· 123

표 7-1. 외국인 인구구조의 변화(1966~2022년) ····· 143
표 7-2. 외국인과 내국인 인구구조의 변화(1966~2022년) ····· 146
표 7-3. 외국인과 내국인 인구 부양비의 변화(1966~2022년) ····· 147
표 7-4. 외국인의 성별·연령별 분포(2022년) ····· 149
표 7-5. 외국인의 연령계층별 성비 변화(1966~2022년) ····· 150
표 7-6. 외국인과 내국인의 거주 지역(2022년) ····· 152
표 7-7. 외국인과 내국인의 도시 거주 비율 변화(2005~2022년) ····· 155
표 7-8. 외국인과 내국인의 연령계층별 도시 거주 비율 변화(2005~2022년) ····· 155
표 7-9. 외국인과 내국인의 교육수준 변화(2015·2020년) ····· 156
표 7-10.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2015·2020년) ····· 158
표 7-11. 외국인과 내국인의 종사상 지위 변화(2015·020년) ····· 158
표 7-12. 외국인과 내국인의 직업 변화(2015·2020년) ····· 159
표 7-13. 외국인과 내국인의 종사 산업 변화(2015·2020년) ····· 161
표 7-14. 시도별 다문화 가구 수 변화(2010~2022년) ····· 163
표 7-15. 다문화 가구 구성 변화(2020·2022년) ····· 166

표 8-1. 인구주택총조사의 출산 관련 항목 변화(1960~2020년) ····· 178
표 8-2.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변화(1970~2023년) ····· 179
표 8-3.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변화(1980~2021년) ····· 181
표 8-4. OECD 주요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 변화(1980~2021년) ····· 182
표 8-5. 성별·연령대별 유배우 비율 변화(1970~2020년) ····· 185
표 8-6.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1970~2020년) ····· 188
표 8-7. 25~44세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별 비율 변화(1970~2020년) ····· 189
표 8-8. 차별출산력 변화 분석 대상 집단 ····· 191
표 8-9. 모의 연령대별 출산 자녀 수별 비율 변화(2005·2020년) ····· 191
표 8-10. 남녀의 교육수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 192
표 8-11. 여성의 교육수준별·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 193
표 8-12. 모의 교육수준별·연령대별 출산 자녀 수 구성비 변화(2005·2020년) ····· 194
표 8-13. 여성의 연령대별·교육수준별 혼인과 출산 선택 변화(2005·2020년) ····· 195

표 8-14.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 196
표 8-15.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별·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 197
표 8-16. 모의 경제활동 상태별·연령대별 출산 자녀 수 구성비 변화(2005·2020년) ····· 197
표 8-17. 여성의 연령대별·경제활동 상태별 혼인과 출산 선택 변화(2005·2020년) ····· 198
표 8-18. 시도별·기혼여성의 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 199
표 8-19. 시도별 합계출산율 변화(2005~2023년) ····· 201

표 9-1. 연령별 5대 사망원인과 사망률(2023년) ····· 218

표 10-1. 국내 인구이동 변화(1965~2020년) ····· 225
표 10-2. 시도 간 전출자 수와 전출률 변화(1965~2020년) ····· 227
표 10-3. 시도 간 전입자 수와 전입률 변화(1965~2020년) ····· 229
표 10-4. 시도 간 순이동과 순이동률 변화(1965~2020년) ····· 231
표 10-5. 수도권의 인구이동 변화(1965~2020년) ····· 233
표 10-6. 연령대별 수도권 인구이동 변화(1975~2020년) ····· 235

표 11-1.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66~2020년) ····· 246
표 11-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80~2020년) ····· 247
표 11-3. 성별·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80~2020년) ····· 250
표 11-4. 성별·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80~2020년) ····· 252
표 11-5. 성별·연령별 취업자의 분포 변화(1980~2020년) ····· 253
표 11-6.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1995~2020년) ····· 256
표 11-7. 직업구성의 변화(1955~2020년) ····· 259
표 11-8. 성별 직업구성의 변화(1955~2020년) ····· 260
표 11-9. 직종별 여성 비 변화(1955~2020년) ····· 261
표 11-10. 남성 직업별 연령 중앙값 변화(1955~2020년) ····· 263
표 11-11. 여성 직업별 연령 중앙값 변화(1955~2020년) ····· 263
표 11-12. 취업자의 학력별 분포 변화(1960~2020년) ····· 265
표 11-13. 전문·관리직 종사자 학력 구성의 변화(1960~2020년) ····· 265
표 11-14.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 학력 구성의 변화(1960~2020년) ····· 266
표 11-15. 생산직 종사자 학력 구성의 변화(1960~2020년) ····· 267
표 11-16. 종사상 지위 구성비의 변화(1960~2020년) ····· 268

차례

표 11-17. 직종별 임금근로자 비중의 변화(1960~2020년) ····· 268

표 12-1. 시도별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1995~2020년) ····· 278
표 12-2. 연령대별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1995~2020년) ····· 280
표 12-3. 연령대별 통근·통학 유형 비율 변화(1995~2020년) ····· 282
표 12-4. 시도별 주간인구 지수 변화(1995~2020년) ····· 285
표 12-5. 주간인구 지수 상위 15개 시군구(1995~2020년) ····· 287
표 12-6. 수도권 내 시도 간 통근·통학 비율의 변화(1995~2020년) ····· 291
표 12-7. 수도권 주간인구 지수 변화 상하위 5개 시군구(2000·2020년) ····· 296

표 13-1. 혼인상태별 구성비 변화(1925~2020년) ····· 305
표 13-2. 성별·연령대별 미혼율 변화(1970~2020년) ····· 307
표 13-3.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기준 ····· 309
표 13-4. 일반가구 수와 평균 가구원 수 변화(1925~2020년) ····· 310
표 13-5. 일반가구 규모와 세대 구성 변화(1980~2020년) ····· 312
표 13-6. 1인 가구의 성, 혼인상태, 연령대 구성비 변화(1980~2020년) ····· 313
표 13-7. 여성 가구주 비율 및 혼인상태 변화(1980~2020년) ····· 315

표 14-1. 여성 고용률 변화(1970~2020년) ····· 324
표 14-2. 2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변화(2015·2020년) ····· 327
표 14-3. 2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출산 자녀 수별 비중 변화(2015·2020년) ····· 328
표 14-4. 20~54세 기혼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변화(2015·2020년) ····· 328
표 14-5. 전체 여성과 20~54세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 변화(2015·2020년) ····· 331
표 14-6. 전체 여성과 20~54세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의 직업 분포 변화(2015·2020년) ····· 332
표 14-7. 전체 여성과 20~54세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2015·2020년) ····· 333
표 14-8. 미혼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된 가구 수 변화(2005~2020년) ····· 335
표 14-9. 아동 수별 아동가구 수 변화(2005~2020년) ····· 336
표 14-10. 보육 유형 변화(2005~2020년) ····· 338
표 14-11. 자녀의 연령대별 보육 유형 변화(2005·2020년) ····· 340
표 14-12. OECD 주요국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변화(2005~2020년) ····· 341

표 15-1. 인구주택총조사의 고령인구 특성 관련 분석 문항(2020년) ····· 347

표 15-2.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변화(2005~2020년) 348
표 15-3. 고령인구의 세대 구성 변화(2005~2020년) 350
표 15-4. 고령인구의 성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 변화(2015·2020년) 352
표 15-5.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 변화(2015·2020년) 353
표 15-6.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 변화(2015·2020년) 354
표 15-7.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일상적 신체활동 제약 변화(2005~2020년) 356
표 15-8.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인지기능 제약 변화(2005~2020년) 357
표 15-9.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대별 활동제약과 돌봄 필요 비율 변화(2020년) 358
표 15-10.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 대한 주간(9~18시) 주된 돌봄제공자(2020년) 359
표 15-11. 고령인구의 생활비 원천 구성 변화(2010~2020년) 362

표 16-1. 교육 관련 조사항목의 변화(1960~2020년) 371
표 16-2. 학교급별 학교수 변화(1970~2020년) 372
표 16-3. 학교급별 취학률 및 상급학교 진학률 변화(1980~2020년) 373
표 16-4.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1970~2020년) 374
표 16-5.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1970~2020년) 376
표 16-6. 13세 이상 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읽고 쓸 줄 아는 비율(1960년) 377
표 16-7. 13세 이상 인구의 성별·연령대별 글을 아는 비율(1970년) 377
표 16-8. 30세 이상 인구의 성별 교육수준 변화(1970~2020년) 379
표 16-9.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 변화(1970·2020년) 381
표 16-10. 시도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1970년) 383
표 16-11. 시도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2020년) 384
표 16-12. 25~29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현 거주지와 출생지(2020년) 386
표 16-13. 25~29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현 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2020년) 386
표 16-14. 서울 구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1970년) 388
표 16-15. 서울 구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2020년) 388
표 16-16. 교육수준별 취업자 수와 고용률 변화(2000~2020년) 392
표 16-17.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2000·2020년) 392
표 16-18. 취업자의 직업별 교육수준 변화(2000·2020년) 394
표 16-19. 취업자의 산업별 교육수준 변화(2000·2020년) 395

차례

표 17-1. 종교별 종교인구 변화(1971~1980년) ····· 402
표 17-2. 종교별 종교인구 변화(1985~2015년) ····· 405
표 17-3. 성별 종교인구 비율 변화(1985~2015년) ····· 407
표 17-4. 연령대별 종교인구 비율 변화(1985~2015년) ····· 408
표 17-5. 시도별 종교인구 비율 변화(1985~2015년) ····· 410
표 17-6. 연령대별 비종교인구 변화(2005·2015년) ····· 414
표 17-7. 시도별 비종교인구 변화(2005·2015년) ····· 415
표 17-8. 비종교인 비율 상위 10개국(2010·2017년) ····· 416

〈그림 차례〉

그림 1-1. 한국의 근현대사와 인구주택총조사 연혁(1925~2020년) ····· 4
그림 1-2. 한국의 인구·가구·주택 변화(1925~2020년) ····· 5
그림 1-3. 역대 장래인구추계의 총인구(중위추계) 변화(2020~2072년) ····· 6
그림 1-4. 국세조사 홍보 전단(1940년) ····· 9
그림 1-5. 제1회 총인구조사의 조사지침서와 홍보 기사(1949년) ····· 13
그림 1-6. 국세조사 안내문(1960년) ····· 17

그림 2-1.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 ····· 39
그림 2-2. 등록센서스 작성 체계 ····· 56

그림 3-1. 센서스 단계별 GIS의 활용 ····· 64
그림 3-2. 1990년대 조사구 설정 절차 ····· 67
그림 3-3.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지도(조사구요도) ····· 68
그림 3-4.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지도(조사구요도) ····· 69
그림 3-5. 우리나라의 통계구역 체계 ····· 70
그림 3-6. SGIS의 주제도 서비스 ····· 75

그림 4-1. 한국의 인구성장과 변천(1925~2020년) ····· 85
그림 4-2. 15~49세 여성인구와 총인구 대비 구성비 변화(1960~1985년) ····· 88

그림 4-3. 포스트 변천기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 변화(1985~2020년) 90
그림 4-4. 15~49세 여성인구와 총인구 대비 구성비 변화(1985~2020년) 91
그림 4-5. 포스트 변천기 출생아 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변화(1985~2020년) 91

그림 5-1. 인구의 성비 변화(1925~2020년) 99
그림 5-2. 인구피라미드 변화(1925~2020년) 106
그림 5-3.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1925~2020년) 112

그림 6-1. 전국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2000·2020년) 129
그림 6-2. 권역별 인구분포 변화(1925~2020년) 130
그림 6-3. 한국의 도시화율 변화(1925~2020년) 134

그림 7-1. 외국인 인구구조의 변화(1966~2022년) 144
그림 7-2. 외국인과 내국인의 성별·연령별 인구피라미드(2022년) 151
그림 7-3. 외국인과 내국인의 전국 시도별 인구분포(2022년) 153
그림 7-4. 외국인과 내국인의 수도권 거주 비율 변화(1966~2022년) 153
그림 7-5. 거주지별 외국인의 규모와 비율 변화(1966~2022년) 154
그림 7-6. 외국인과 내국인의 직업(2020년) 160
그림 7-7. 외국인과 내국인의 종사 산업(2020년) 161
그림 7-8. 시도별 다문화 가구 분포 변화(2010~2022년) 165

그림 8-1. 시대별 인구 포스터의 변화 175
그림 8-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에 따른 대응 예산 변화(2006~2023년) 177
그림 8-3.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변화(1970~2023년) 180
그림 8-4.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변화(1980~2021년) 181
그림 8-5. OECD 주요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 변화(1980~2021년) 183
그림 8-6. 출생아의 성비 변화(1981~2023년) 183
그림 8-7. 성별·혼인연도별 평균 초혼연령 변화(1990~2020년) 184
그림 8-8. 여성의 연령대별 유배우 비율 변화(1970~2020년) 186
그림 8-9. 남성의 연령대별 유배우 비율 변화(1970~2020년) 186
그림 8-10. 혼인연도별 초혼 후 첫 출산까지 소요된 평균기간 변화(1980~2018년) 187
그림 8-11.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1970~2020년) 188

차례

그림 8-12. 25~44세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별 비율 변화(1970~2020년) ····· 189

그림 9-1.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변화(1970~2023년) ····· 209
그림 9-2. 성별·연령별 사망률 변화(1983~2023년) ····· 210
그림 9-3. 성별 기대수명 변화(1970~2023년) ····· 211
그림 9-4. 시도별 기대수명 변화(2005·2023년) ····· 213
그림 9-5. 10대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변화(1983~2023년) ····· 216

그림 12-1. 시도별 통근·통학인구 비율(2000·2020년) ····· 279
그림 12-2. 연령대별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1995~2020년) ····· 281
그림 12-3. 연령대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1995~2020년) ····· 283
그림 12-4. 시군구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2000·2020년) ····· 284
그림 12-5. 시도별 주간인구 지수 변화(2000·2020년) ····· 286
그림 12-6. 수도권 시군구별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2000·2020년) ····· 289
그림 12-7. 수도권 시군구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2000·2020년) ····· 290
그림 12-8. 수도권 시군구별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00·2020년) ····· 292
그림 12-9. 수도권 시군구별 서울로의 통근·통학 시간 변화(2000·2020년) ····· 292
그림 12-10. 수도권 시군구별 통근·통학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 변화(2000·2020년) ····· 293
그림 12-11. 수도권 시군구별 주간인구 지수 변화(2000·2020년) ····· 295

그림 13-1. 인구와 가구 수 변화(1955~2020년) ····· 311

그림 14-1.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화(2000~2020년) ····· 324
그림 14-2. 기혼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화(2000~2020년) ····· 325
그림 14-3. OECD 주요국의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15~64세 여성 고용률(2019년) ····· 326
그림 14-4. 연령별·취업여부별 20~54세 경력단절 여성 비중 변화(2015·~2020년) ····· 329
그림 14-5. 학력별·취업여부별 20~54세 경력단절 여성 비중 변화(2015·~2020년) ····· 330
그림 14-6. 아동 수별 아동가구 수 변화(2005~2020년) ····· 336
그림 14-7. 아동 수별 아동가구 비중 변화(2005~2020년) ····· 337
그림 14-8. 보육 유형 변화(2005~2020년) ····· 339

그림 15-1.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변화(2005~2020년) ····· 349
그림 15-2.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 변화(2015~·2020년) ····· 352

그림 15-3. OECD 국가의 고령인구 소득원 구성 비교(2020년) ····· 361
그림 15-4. 고령인구의 성별 생활비 원천 구성(2020년) ····· 363
그림 15-5.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생활비 원천 구성(2020년) ····· 364

그림 16-1. 초등학교·대학교 학생수 변화(1970~2020년) ····· 375
그림 16-2. 30세 이상 인구의 성별 교육수준 변화(1970~2020년) ····· 380
그림 16-3.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 변화(1970·2020년) ····· 382
그림 16-4. 도심 소재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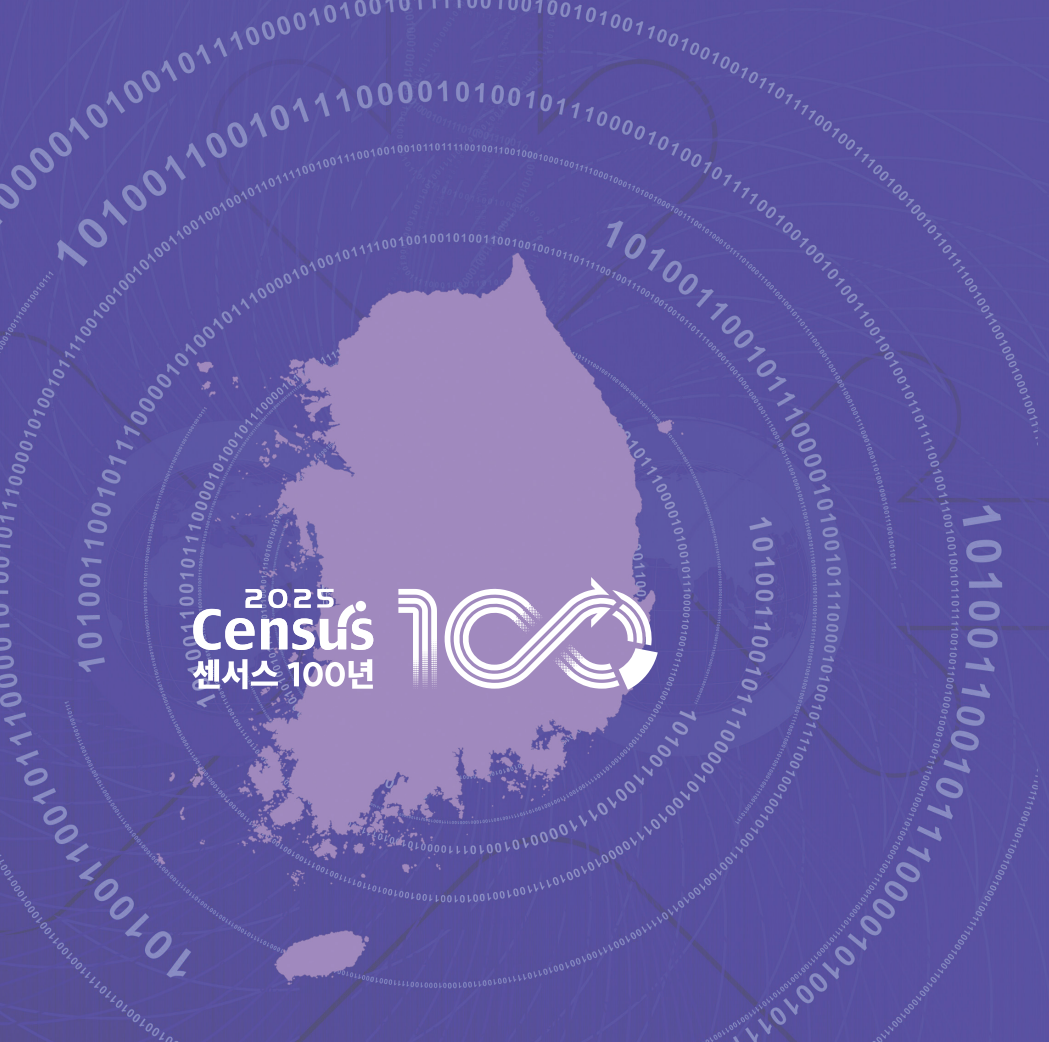
그림 17-1. 종교별 종교인구와 비종교인 비율 변화(1985~2015년) ····· 405
그림 17-2. 시도별 종교인구 및 비종교인구 비율 변화(1985·2015년) ····· 412

IEBOOK
Draft Prop
다산글방

1장

한국의 인구·가구·주택 100년

최은영 · 김기성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센서스(census)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처음 실시되어 2025년에는 21번째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100년 동안 일제강점과 광복,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등을 거쳤다(그림 1-1).

인구센서스는 특정한 지리적 영역, 주로 한 국가 내의 모든 인구에 대한 조사를 뜻한다. 센서스는 자국 언어로 표기되는데, 중국은 '인구보사(人口普查)', 일본은 '국세조사(国勢調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국세조사'에서 해방 이후에는 '총인구조사', '국세조사', '인구센서스', '인구및주택센서스'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90년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로 불린다. 센서스의 국어 표기는 '총조사'로 인구센서스는 '인구총조사', 주택센서스는 '주택총조사', 인구주택센서스는 '인구주택총조사'로 기술한다. 다만 특정 연도의 조사명은 고유 표기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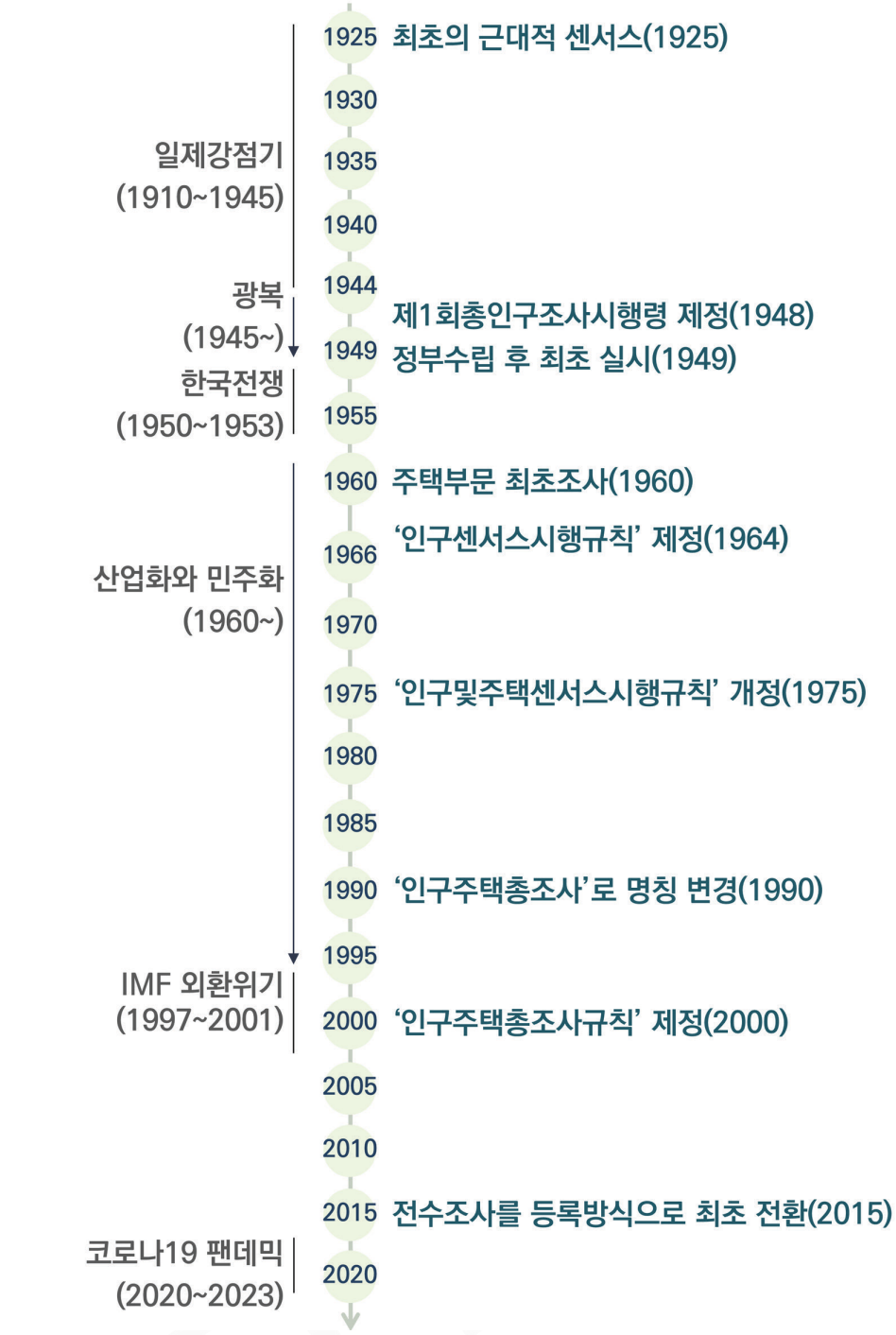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의 근현대사와 인구주택총조사 연혁(192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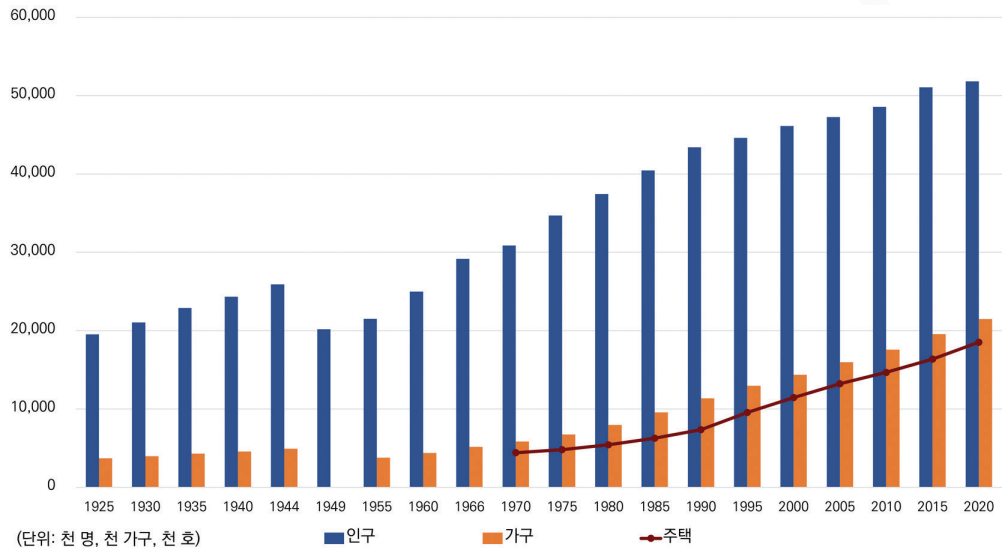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의 인구·가구·주택 변화(1925~2020년)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총인구 기준임.
2) 가구 수는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수 기준임.
3) 주택 수는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하지 않은 매매 단위 주택 수이며 빈집이 포함됨.
4) 1944년까지는 한반도 전역의 집계치이며, 1949년부터는 한국의 실효지배 영역의 집계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인구주택총조사로 살펴본 지난 100여 년간의 인구·가구·주택 수는 〈그림 1-2〉와 같다. 1949년[1] 약 2,000만 명이던 인구는 1970년 3,000만 명, 1985년 4,000만 명, 2015년 5,000만 명을 초과했다. 가구 수는 1955년 380만 가구에서 1960년 500만 가구, 1990년 1,000만 가구, 2020년 2,000만 가구를 초과했다. 주택 수는 1970년 약 443만 호에서 1980년 500만 호, 2000년 1,000만 호를 초과했고, 2020년에는 2,000만 호에 근접했다. 해방 이후 인구·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주택총조사가 시작된 이래 주택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인구·가구·주택 모두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

그러나 2020년을 정점으로 절대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그림 1-3〉은 2005년부터

1) 1949년 자료는 한국전쟁 등으로 상당 부분 소실되었으며, 현재 KOSIS에는 인구와 관련된 소수의 정보만 공표되고 있다.

2022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작성된 장래인구추계의 총인구(중위추계) 변화이다. 2005년 기준 추계에서는 2018년에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이후 인구추계에서는 정점 시기를 2030년 전후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절대인구 감소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인구·가구·주택 변화는 해결이 쉽지 않은 도전적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1인 가구 급증, 주택가격 상승, 빈집 증가 등으로 가구와 주거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이주민(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근대사와 현대사를 관통하는 100년간의 총조사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를 토대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해 지난 1세기 동안 인구·가구·주택이 사회경제 현상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으며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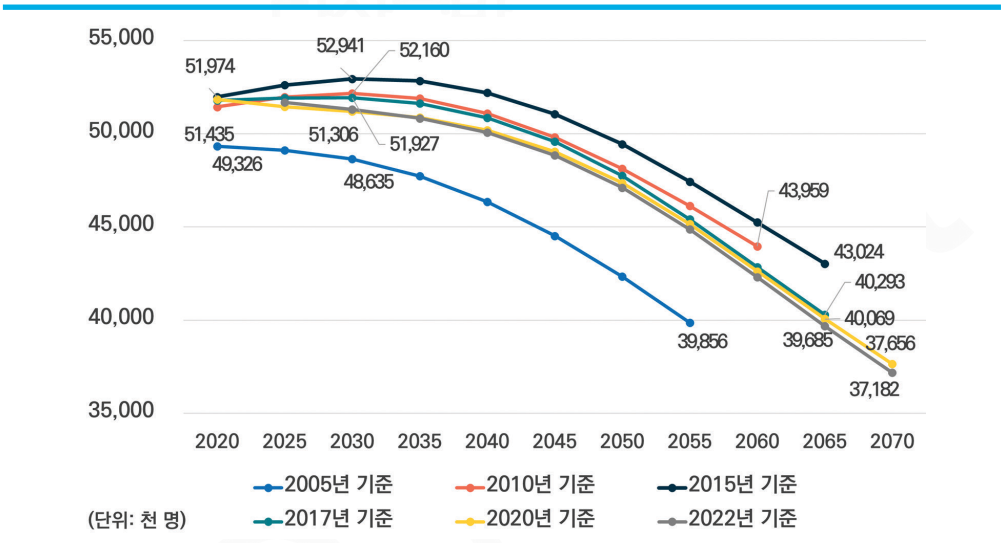


그림 1-3. 역대 장래인구추계의 총인구(중위추계) 변화(2020~2072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5년 기준, 2010년 기준, 2015년 기준, 2017년 기준, 2020년 기준, 2022년 기준).

유엔의 『인구주택센서스 지침(Principal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에서는 센서스를 "데이터를 기획·수집·평가·공표·분석하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UN DESA, 2017).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이면서 어떤 내용을,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생산의 역사적 과정이다.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행과 열로 배열된 숫자인 동시에, 시대를 담아내는 데이터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그의 저서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센서스, 지도, 박물관'을 새로운 장으로 추가했다(Anderson, 2006). 그는 유럽의 식민 통치자와 연구자가 식민지인 동남아시아의 인종·민족·종교·문화 등을 유형화하고 집계하는 것을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캐나다의 연구자 브루스 커티스(Curtis, 2001)는 19세기 캐나다에서 센서스가 시행되는 과정을 조명하면서 '센서스 만들기(census making)'를 지식과 정보를 집중화하고 선별적으로 나누는 정치적 과정으로 보았다.

현대의 센서스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시행·관리되며, 조사가 시행되는 국가의 특성, 관리 주체의 의도, 시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장래인구·가구추계, 주택보급률, 고령화지수 등의 파생통계 작성에 활용되며, 공적연금이나 주택공급과 같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가 된다.

이 장에서는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인구주택총조사를 역사적 흐름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일제강점,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도시화, 금융위기와 같은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 흐름 속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변천을 살펴본다.

2. 인구주택총조사 100년의 변화

1) 인구주택총조사의 출발: 조선후기 호적과 일제강점기 국세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2025년에 100년을 맞이하지만, 1925년 총조사는 조사대상도, 조사기관도 지금과 다르다. 당시에는 한반도 전역이 조사대상이었다.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었으나, 총조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는 일본 제국의회와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였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인구통계 자료는 호적(戶籍)이다. 호적은 인구·가구에 관한 기본 문서로, 조선왕조는 지역별로 3년마다 호구총수(戶口摠數)를 집계해 통치와 재정 운영에 활용했다. 호적은 1896년 새로운 호구조사규칙이 도입되며 크게 바뀌었는데, 이를 광무호적(光武戶籍, 혹은 신호적)이라 부른다. 하지만 광무호적은 전국의 호구를 모두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 경찰력을 동원한 1906년 이후에 어느 정도 총조사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신호적은 1908년까지 조사되었고, 1909년부터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인 민적(民籍)으로 대체되었다(박명규·서호철, 2003; 손병규, 2020).

한반도에서의 근대적인 인구조사는 1925년 일본이 실시한 국세조사가 효시이다.[2] 국세조사는 19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몇 차례 연기되었다. 일본 제국의회는 1902년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20년에 일본 본토와 식민지의 국세조사 실시를 계획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3.1운동의 여파로 1920년에 조사가 실시되지 못했고, 1925년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

1920년 7월 15일자 동아일보에는 "국세조사에서 조선제외 이유, 소란 후 인심의 동요가 안정되지 아니해 조선은 호구조사만 할 터"라는 이름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서는

2) 국세조사는 일본과 타이완, 사할린(가라후토)에서는 1920년에, 한반도에서는 192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국세를 조사함에는 5만 인의 조선인 촉탁(囑託)을 요하는데, 소요 이래 조선인은 관공서에 복무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조사원을 모으기 불능한 고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한다.[3] 3.1운동 직후 조선총독부가 조사원을 모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규모 조사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 대규모 조사에서 조사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것은 현재도 쉽지 않은데, 당시 항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조선총독부가 조사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조사환경 극복을 위해 기념우표나 홍보 전단을 발행하고, 조사원에게 기념 배지를 지급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를 홍보했다(김경리, 2023)(그림 1-4).

국세조사는 1925년부터 1940년까지 5년마다 실시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체제에 들어간 총독부는 한반도에서의 물자동원을 위해 통계 생산에 더 많은 공을 들였다. 1944년에는 전시 총동원 과정에서 간이인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다른 조사들이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시행된 것과 달리 당시 조사는 「자원조사법」에 기반해 시행되었다(조은주, 2014).


紀二千六百年 昭和十五年國勢調査 十月一日

今秋十月一日を期して事變下の國勢調査が行はれます。その目的は主として現下の國勢國策の基礎資料を整備せんとするのであつて、極めて重要な調査であります。

調査を受ける人々

は原則として調査の時期に朝鮮内に現在する者であります。尚今回は軍人や従軍中の軍屬等に就いてはその現在する場所が何處であつても配偶者、父母等の續柄等が朝鮮内に居るときはその世帶から申告せねばなりません。

調査の事項は

(一)氏名 (二)世帶に於ける地位 (三)男女の別 (四)出生の年月日 (五)配偶の關係 (六)所屬の部落及團體(最近六箇月間一箇所一箇月一回) (七)指定技能(指定の基準及内容は別表) (八)兵役の關係 (九)出生地 (十)本籍地 (十一)民族又は國籍

國勢調査の大事業は、官民の一致協力に依たなければ、到底その完全な目的は達せられません。何卒本調査の重要な所以を自覺し、自ら進んで正確な申告をせられ、本調査の實施に遂行出來る樣半島二千五百萬民衆の御協力をお願ひする次第であります。

正しい申告

一人の嘘は萬人の眞を殺す

朝鮮總督府

그림 1-4. 국세조사 홍보 전단(1940년)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 e뮤지엄.

3) 동아일보. "國勢調査에서 朝鮮除外 理由, 騷擾後 人心의 動搖가 安定되지 아니해 朝鮮은 戶口調査만 할터". 1920.07.15.

국세조사의 조사단위는 개인과 세대였는데, 10월 1일을 기준시점[4]으로 한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가 조사대상이었다.[5] 현재 인구주택총조사가 상주인구(de jure population)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국세조사의 '세대' 개념은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개념과 유사하다. 세대 혹은 가구는 혈연이나 법률, 호적 등에 의한 가족 개념이 아닌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단위이다. 그러나 국세조사에서는 현주인구 기준이었기 때문에 친정에 잠시 방문한 결혼한 딸의 경우, 평상시에 사는 집의 세대원이 아닌 친정의 손님으로 조사했다. 조사시점에 기숙사·병원·여관·하숙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준세대'라는 개념을 활용하기도 했다.

국세조사의 조사항목은 〈표 1-1〉과 같이 변화했는데, 일본에서 시행된 국세조사 항목과 거의 같았다. 1940년에는 '지정기능(지정 직업과 학력)'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같아졌다(박명규·서호철, 2003).

표 1-1. 국세조사의 조사항목(1925~1940년)

구분	조사항목
1925	씨명 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 배우관계, 본적(민적) 또는 국적
1930	씨명 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배우관계, 본적(민적) 또는 국적, 세대에서의 지위, 출생지, 직업, 읽고 쓰는 정도
1935	씨명 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 배우관계, 본적(민적) 또는 국적, 상주지
1940	씨명, 성별, 출생연월일, 배우관계, 본적(민적) 또는 국적, 세대에서의 지위, 소속산업과 직업, 지정기능, 병역관계, 출생지, 본적지

자료: 박명규·서호철(2003), 양진아(2023)를 종합하여 작성.

4) 단, 1940년의 국세조사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5) 현주인구는 조사 기준시점의 거주 인구, 상주인구는 평상시의 거주 인구가 기준이다.

조사항목의 변천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당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활발해진 인구이동을 고려해 출생지를 조사했고, 1935년부터는 상주지를 조사하여 현주인구와 상주인구의 차이를 포착하고자 했다. 이전까지 '씨명(氏名) 또는 성명(姓名)'이었던 조사항목을 1940년에 '씨명'으로만 재편한 것은 창씨개명(創氏改名)과 관련된다.[6] 1940년에는 병역관계를 조사하고, 이전 조사보다 산업·직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전시동원과 관련된 문항이 크게 늘었다. 일제강점기에 마지막으로 시행된 1944년 인구조사는 일본의 패전으로 제대로 집계되지 못했고 간이보고서로만 남아 있다.[7]

2)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인구주택총조사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우리나라의 해방은 인구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종전 직후 한반도에 미군정이 들어섰지만 조선총독부의 행정조직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한편 일본과 만주 등지의 조선인,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귀환으로 대규모 국제 인구이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경계, 특히 영토와 국민의 경계를 두고 혼란이 지속되었고, 조사대상인 인구의 포괄범위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창씨개명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행정적·사법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미군정은 1946년 10월 「조선성명복구령」으로 창씨개명된 호적을 말소하고, 1948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회의에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반포하여 한국인의 국적을 확립하고자 했다(김수자, 2009). 또한 등록표 제도[8]를 실시하여 총선거 및 남한 정부 수립을

6) 창씨개명은 1940년 2월 시행되었고, 국세조사는 194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다.

7) 현재 KOSIS에는 1944년의 통계표도 제공하고 있는데 성별, 연령, 국적, 경제활동(직업), 교육정도,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

8) 당시 미군정과 남한의 행정조직이 시행한 제도의 이름은 '주민'이나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등록표'를 발급하는 것이었으며, 현재 박물관 등에 남아 있는 다수의 소장품에는 '등록표'라는 이름 아래, 발급일자, 성명, 주소, 연령, 신장, 직업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표 제도는 1947년 3월 발급을 시작했지만 전국민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되지는 않은 채 일정 기간 발급되다가 사멸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시민증·도민증과 주민표 제도, 1962년 「주민등록법」을 통해 오늘날의 주민등록제도로 정착되었다(김영미, 2007).

위한 거주민 정보 파악에 힘을 기울였다(김영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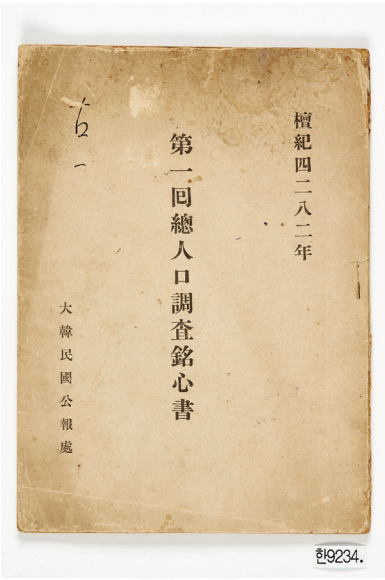
미군정 초기에는 군정청 기획과 내 센서스통계담당관과 조사기획담당관에서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업무를 담당했다. 1947년 미군정의 관료 조직이 한국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통계업무는 서무처 내의 통계서와 조사연구서로 이관되었으며, 보건후생부에서 인구동태통계를 집계했다(통계청, 2015a; 조계표·박재익, 2016).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1949년 1월 27일, 최초의 통계 관련 법령인 「인구조사법」이 공포되었다.[9] 1950년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총인구조사를, 중간 연도인 5년마다 간이총인구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하였으며, 제1회 총인구조사는 194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1949년 총인구조사를 '제1회'로 공표한 것은 당시 입법부가 해방 이전의 국세조사와 한국 총인구조사 간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조은주, 2014).

제1회 총인구조사는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10]에 의해 실시되었다. 기준시점은 1949년 5월 1일 현재였고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남한에서 진행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했고, 「인구조사법」에서 조사대상을 "대한민국 영역 내 총인구"로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사대상은 헌법·법률과 불일치했다. 이는 현재의 「헌법」과 통계법령, 그리고 실질적인 조사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11]

〈그림 1-5〉는 제1회 총인구조사에서 조사원들에게 배포되었던 조사지침서이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조사지침서가 작성되는데, 당시에는 '명심서'로 불렸다. 1949년 4월 29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이번 총인구조사는 국가시책의 기본이 된다. 너도나도 빠짐없이 신고하자!"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위 두 자료를 통해 당시 정부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조사원을 관리하고, 조사 시행을 홍보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9) 「통계법」은 1962년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구조사법」은 폐지되어 통계법으로 통합되었다.
10) 「제1회총인구조사시행령」은 「인구조사법」보다 빠른 1948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다.
11)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서는 조사대상의 지리적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제1회 총인구조사 조사명심서(조사지침서)



제1회 총인구조사 홍보 신문기사

그림 1-5. 제1회 총인구조사의 조사지침서와 홍보 기사(1949년)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 e뮤지엄;
동아일보, "이번 總人口調査는 國家施策의 基本이 된다. 너도나도 빠짐없이 申告하자!", 1949.04.29.

제1회 총인구조사 결과는 1949년 9월 1일, '제1회 총인구조사 결과 속보'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속보 이외의 조사자료는 소실되어 간략한 정보만 남아있다(통계청, 2015b). 1949년 총인구조사 결과는 현재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되어 있지만, 거주지역, 성별, 내외국인 여부 이외의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12]

한국전쟁과 휴전협정 이후 총인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1955년 대통령령으로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령」이 공포되어 조사의 세부사항이 규정되었고, 내무부장관이 조사를 총괄했다. 조사령 공포 직후 조사규정을 통해 조사구 획정, 조사사무의 지시와 협의, 조사원 임명,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13] 1955년 조사는 기

12) 본래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에 의하면 조사항목에는 성명, 가구 내 지위, 출생년월일, 성별, 배우관계, 직업 및 특수기능, 학력, 광복 시점 거주지, 본적지, 군사경험, 징용경험이 포함되었다.

13) 1949년 제1회 총인구조사에서도 총리령으로 「제1회 총인구조사지방사무처리규칙」과 「제1회 인구조사특별지

준시점이 9월 1일이었고, 결과는 1956~1957년에 걸쳐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1955년 조사는 간이조사로 명명되었으나, 조사항목은 1949년 조사보다 많았다. 조사항목은 성명, 가구 내 지위, 생년월일, 성별, 배우관계, 직업, 학력, 불구상태, 전입구별, 본적 또는 국적, 주거상황, 농가 여부 등이었다.

이 가운데 '불구상태'와 '전입구별' 항목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불구상태'는 오늘날의 장애 여부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①실명, ②손의 절단, ③발의 절단, ④농아, ⑤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징용·징병과 한국전쟁으로 부상자가 많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전입구별' 항목은 남한에 전입한 시기를 ①8·15 이후, ②6·25 이후, ③1·4 이후로 나눈 뒤, 전입국가를 다시 북한/중국/일본/기타외국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인구이동이 활발했던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1955년 처음으로 주거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1955년 조사의 '주거상황' 항목은 ①자택, ②관사 또는 사택, ③차가(借家), ④셋방(貰房), ⑤기타로 구성되어 있다(표 1-2). 이는 현 인구주택총조사의 점유형태 문항에 해당하는데, '차가'와 '셋방'의 구분은 1955년 인구총조사에만 나타난다. '차가'는 집 한 채를 빌려 사는 것, '셋방'은 임대인의 주택 일부(주로 방 한 칸)에 '세들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전세/월세 구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거에 관한 문항 추가는 해방과 전쟁을 거쳐 서울 등 도시에 형성된 대규모 셋방살이 가구의 주거상황을 포착하려던 노력을 하고 있다.

표 1-2. 전국·서울의 주거상황(1955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자가	관사·사택	차가	셋방	기타
전국	3,801,947	79.5	1.9	5.9	10.8	1.9
서울	281,601	45.5	4.3	15.3	31.3	3.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역조사규칙」이 공포되었으나, 1955년의 규정이 훨씬 체계적이었다.

3) 인구통계와 경제성장

1960~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는 통계자료 수집과 이용의 체계화를 촉진했고, 통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했다. 이 시기 「통계법」 제정 등을 통해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1960년 조사는 해방과 전쟁 이후 혼란스럽던 행정을 정비하고, 국제적인 센서스 기준 및 기법을 다수 수용하여 고도화되었다. 이에 여러 문헌에서 1960년 조사를 '첫 번째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라고 부른다(김민경, 2002; 통계청, 2015a). 1960년에는 인구와 주택 부문에 대한 조사가 함께 실시되었다. 다음 조사는 재정 문제로 1년 연기되어 1965년이 아닌 1966년에 시행되었으며 1970년부터 다시 5년 단위로 정례화되었다.

1960년 조사를 위한 준비는 1955년 조사 직후 이루어졌다. 1956년부터 「통계법」 제정안 검토가 시작되었고, 통계행정 정비 및 통계요원 자질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58년 국무회의에서 '통계행정강화요강'이 채택되었다(통계청, 2015a). 1958년부터 1963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주한 통계고문단[14]은 통계의 체계화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 조사는 이전과 다르게 일제강점기의 '국세조사'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했다. 1960년 11월 공포된 「국세조사령」은 1960년 12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국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전과 달리 상주인구 개념을 도입했고, 조사문항이 늘어났으며, 20% 표본 가구에 대해 경제활동 및 출산력을 집계했다.

1960년을 기점으로 조사문항이 크게 증가했다(표 1-3). 1960년에 추가된 문항은 취학 여부, 수학연수, 문맹 여부, 총출산 자녀 수, 경제활동 상태, 취업 여부이며, 1955년에 가구·주택 부문에서 주거상황(점유형태)과 농가 여부만 조사하였던 것과 다르게 주택총조사 문항 18개를 신설했다. 1960년 주택총조사 문항은 크게 '집 또는 거주에 대하여'와 '건물

14) 주한 통계고문단은 한국 정부, 미국 대외원조처, 서베이·리서치사(Surveys&Research Corporation) 삼자 간 협력으로 구성되어 통계국(局)의 위상 확립, 표본조사기법 도입, 1962년 「통계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유홍림·김경태, 2008; 조은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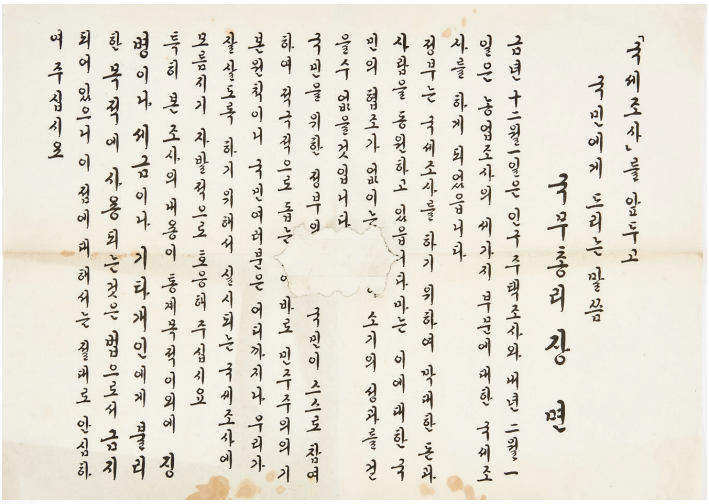
에 대하여'로 구분되었고, '집 또는 거주' 항목에는 소유관계, 거주년수, 방 수 및 평수, 설비의 종류 등, '건물' 항목에는 건물 내 거처의 수, 건물의 형태, 벽·지붕의 자재, 건물의 상태, 건축연도 등이 포함되었다.

표 1-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수 변화(1925~2020년)

(단위: 개)

구분	전수조사			표본조사		
	계	인구	가구·주택	계	인구	가구·주택
1925	5	5	–	–	–	–
1930	9	9	–	–	–	–
1935	6	6	–	–	–	–
1940	11	11	–	–	–	–
1944	10	10	–	–	–	–
1949	11	11	–	–	–	–
1955	12	10	2	–	–	–
1960	35	17	18	–	–	–
1966	7	7	–	6	6	–
1970	14	7	7	16	9	7
1975	11	6	5	16	16	–
1980	22	6	16	18	18	–
1985	28	16	12	–	–	–
1990	33	11	22	10	8	2
1995	17	7	10	11	9	2
2000	20	8	12	30	21	9
2005	21	8	13	23(3)*	16	4
2010	19	8	11	31(3)*	20	8
2015	12(1)**	7(1)**	5	52	34	18
2020	16(1)**	8(1)**	8	55	33	22

주: 1) 표본조사항목 수에는 전수조사항목이 아닌 항목만을 집계함.
2) 교육상태(취학여부)와 교육정도(학력)는 하나의 항목으로 집계함.
3) *( ) 안의 숫자는 도별 특성항목 수이며, 총항목 수에 포함함.
4) **( ) 안의 숫자는 등록센서스에서만 작성하는 항목임. 2015년에는 본관, 2020년에는 국적취득연도가 해당함.
자료: 통계청(2015b), 통계청(2020)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조사표에 기반해서 수정함.



국세조사를 앞두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국무총리 장 면

금년 十二월一일은 인구 주택조사와 내년 二월一일은 농업조사의 세가지 부문에 대한 국세조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국세조사를 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과 사람을 동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걷을수 없을것 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하여 국가적으로 돕는 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니 국민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국세조사에 모든지기 자발적으로 호응해 주십시요
특히 본 조사의 내용이 통계목적 이외에 징병이나 세금이나 기타 개인에게 불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심하여 주십시요

그림 1-6. 국세조사 안내문(1960년)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 e뮤지엄.

1960년 국세조사 안내문은 숫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사 개요,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그림 1-6). 조사목적을 "우리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인구주택총조사를 민생경제 및 국가발전과 연결 짓는 관점이 잘 드러난다. 이어 "본조사의 내용이 통계목적 이외에 징병이나 세금이나 기타 개인에게 불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심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통계법」 제33조의 '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 「통계법」 제정 전이었지만 정부는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다.

통계 수집 및 이용의 고도화에는 통계 장비의 현대화와 전산화도 큰 역할을 했다. 1960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전자계산기가 사용됐고, 1966년 조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주전산기(컴퓨터)인 IBM1401이 사용되었다. 분석을 위한 컴퓨터 시동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국가적인 관심도 상당했다. 이후 다른 통계의 집계와 분석에도 전산화된 기기 사용이 점차 확산되었다(통계청, 2015b).

1960년과 1966년의 조사는 조사항목 증가나 방법론적 진전 이외에도 장래인구추계, 가족계획정책 등 정부의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1960년대에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는데, 박정희 정부는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1964년에는 매년 피임방법별 목표량을 정해 전국 각지에 할당하였는데, 지역별 사업대상 부인 수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조은주, 2018). 또한 1960년과 1966년의 조사결과는 각각 1964년·1970년에 발표된 인구추계 작성에 활용되었다(통계청, 2015b).

1964년 '인구센서스 시행규칙' 제정 이후 1966년 조사에서 '인구센서스(총인구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70년에는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조사명을 '인구 및 주택센서스'로 변경했고 1985년까지 조사표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15] 1990년에 채택한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조사명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외청으로 독립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통계사무 담당기관의 위상이 높아졌다(통계청, 2015b). 한편 조사기준일은 1980년부터 11월 1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문항은 1990~1995년 조사의 큰 틀이 유지된 채 일부 문항만 변경되었다. 정보화 흐름에 맞춰 표본조사에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문항이 추가되었고,[16] 자가용 보급 확대에 따라 자동차 보유와 주차시설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거주지나 생활비 원천, 부양자나 거동불편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2000년대 들어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면 현장조사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졌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인터넷조사와 방문조사를 혼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는 전수조사 항목을 행정자료에 기반해 파악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되

15) 1970~1975년에는 조사보고서 등 간행물에 '총인구 및 주택조사'와 '인구 및 주택센서스'라는 조사명이 혼용되었다. 여기서는 시행규칙과 조사표를 기준으로 조사의 명칭 변경 연혁을 정리했다.

16) 이 문항은 2000년도에만 조사하고 그 이후로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었다. 또한 통계청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표를 모아서 제공하는 KOSIS나, 이용자가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가 마련되며 이용자 입장에서 통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3. 현대 한국의 인구·가구·주택 변화

여기서는 해방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가구·주택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주택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출판되는 『한국의 주택』에서 다룬다.

1) 인구 변화

해방 이후 인구는 1955년 2,153만 명에서 1960년 2,499만 명, 1966년 2,919만 명, 1970년 3,147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표 1-4). 특히 1960년과 1966년에는 이전 인구총조사 대비 인구증가율이 15%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1970년 3,000만 명을 초과한 뒤, 1985년에는 4,000만 명, 2015년에는 5,000만 명을 초과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며 동부[17] 거주 인구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도 계속해서 높아졌다.

1960~1970년대에는 도시 지역에서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산업화에 따라 농촌이 도시로 탈바꿈하거나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1960년 시부 인구 비율은 전국의 28.0%였으나, 1970년에는 41.2%까지 상승했으며, 1980년부터는 50%를 초과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빠르게 일어났다. 1955년 157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1960년 245만 명, 1966년 379만 명, 1970년 554만 명, 1975년 689만 명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전국 인구 중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상승하여 1975년에는 약 20%에 도달했다(표 1-5).

서울의 인구집중이 심화하자 정부는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1964)', '수도권 인구의 과

17) 인구주택총조사는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별 집계치를 제시한다. 행정구역을 1955년에는 시부·군부, 1960~1990년에는 시부·읍부·면부, 1995년부터는 동부·읍부·면부로 구분하여 집계치를 공표했다.

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토지이용·교통·주택·생활환경정비 등 다방면의 정책, '수도권계획', '개발제한구역'의 밑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이후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계획이나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현재 국토계획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표 1-4. 동·읍·면부별 총인구 변화(195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전국	동부		읍부		면부	
1955	21,526	5,281	24.5	-	-	16,245	75.5
1960	24,989	6,997	28.0	2,259	9.0	15,734	63.0
1966	29,192	-	-	-	-	-	-
1970	31,466	12,953	41.2	2,854	9.1	15,656	49.8
1975	34,707	16,793	48.4	3,723	10.7	14,187	40.9
1980	37,436	21,434	57.3	4,540	12.1	11,463	30.6
1985	40,448	26,443	65.4	4,817	11.9	9,188	22.7
1990	43,411	32,309	74.4	3,604	8.3	7,498	17.3
1995	44,609	35,036	78.5	3,484	7.8	6,088	13.6
2000	46,136	36,755	79.7	3,756	8.1	5,625	12.2
2005	47,279	38,515	81.5	3,944	8.3	4,820	10.2
2010	48,580	39,823	82.0	4,200	8.6	4,558	9.4
2015	51,069	41,678	81.6	4,775	9.3	4,617	9.0
2020	51,829	42,065	81.2	4,651	9.0	5,113	9.9

주: 1) 1990년까지는 동부가 아닌 시부임.
2) 1955년에는 시부와 군부로 구분됨.
3) 1955~1970년 총인구는 KOSIS에서 공표하지 않아,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를 합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5. 시도별 총인구 구성비 변화(1975~2020년)

(단위: %)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19.9	22.3	23.8	24.4	22.9	21.4	20.8	20.2	19.4	18.5
부산	7.4	8.7	8.9	8.9	8.6	7.9	7.5	7.0	6.8	6.5
대구	4.4	4.9	5.2	5.4	5.5	5.4	5.2	5.0	4.8	4.7
인천	2.8	3.3	3.8	4.4	5.2	5.4	5.4	5.5	5.7	5.7
광주	2.1	2.3	2.6	2.6	2.8	2.9	3.0	3.0	2.9	2.9
대전	1.8	2.1	2.3	2.4	2.9	3.0	3.1	3.1	3.0	2.9
울산	1.1	1.5	1.7	1.9	2.2	2.2	2.2	2.2	2.3	2.2
세종	–	–	–	–	–	–	–	–	0.4	0.7
경기	8.9	9.9	11.5	13.9	17.1	19.5	22.0	23.4	24.4	26.1
강원	5.4	4.8	4.3	3.6	3.3	3.2	3.1	3.0	3.0	2.9
충북	4.4	3.8	3.4	3.2	3.1	3.2	3.1	3.1	3.1	3.1
충남	6.7	5.7	5.1	4.6	4.0	4.0	4.0	4.2	4.1	4.2
전북	7.1	6.1	5.4	4.8	4.3	4.1	3.8	3.7	3.6	3.5
전남	9.4	7.8	6.7	5.8	4.6	4.3	3.8	3.6	3.5	3.5
경북	9.6	8.3	7.2	6.4	6.0	5.9	5.5	5.4	5.2	5.1
경남	8.0	7.2	6.8	6.5	6.5	6.5	6.5	6.5	6.5	6.4
제주	1.2	1.2	1.2	1.2	1.1	1.1	1.1	1.1	1.2	1.3

주: 1) 2010년까지는 2010년 행정구역 기준, 2015년 이후로는 당해연도 행정구역 기준임.
2) 1975~2010년 세종의 행정구역 기준은 반영하지 못해 충남과 통합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70년대까지의 도시화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1980년대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두드러졌다. 경기도 인구 비율은 1975년 전국 인구의 8.9%에서 1995년 17.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표 1-5). 인천 인구 비율 역시 1975년 2.8%에서 1995년 5.2%로 증가했다.[18] 서울 인구 비율은 1975년 19.9%에서 상승하다 1990년 24.4%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둔화했지만, 경기도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2020년에는 전국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었다.

수도권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가운데 농촌 인구는 빠르게 감소했다. 지역별 인구 비율이 1975년 시부 48.4%, 면부 40.9%였으나, 1995년 동부 78.5%, 면부 13.6%로 변화했다. 도시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부산, 인천, 대구 등 거점 도시의 인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재편되었다.[19] 거점 도시가 직할시(광역시) 형태로 분리되고, 농촌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전국 대비 인구 구성비가 1975~2000년 사이에 감소했다.[20]

1980년대 이후 인구는 과거의 추세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총인구는 증가 추세를 유지했으나, 출생아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표 1-6).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 1985년 1.66명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 100.7만 명에서 1985년 65.5만 명까지 줄어들었지만,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1970년 62.3세이던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까지 높아졌고,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18) 인천이 경기도에서 독립되어 직할시가 된 것은 1981년이고, 광역시가 된 것은 1995년이다. 계양, 검단 등 경기도 일부가 이 시기 전후로 인천으로 편입되었다. 〈표 1-5〉는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 행정구역 기준으로 연도별 인구를 계산한 결과이다.

19) 부산은 1963년 직할시로 분리되었고, 이후 대구(1981년), 인천(1981년), 광주(1986년), 대전(1989년)이 차례로 직할시가 되었다. 1995년에는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었고, 울산이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다.

20) 총인구가 경남에서는 1975년 278만 명에서 2000년 298만 명으로 약 20만 명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비수도권도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절대인구 감소 규모는 전남(125만 명), 경북(62만 명), 전북(57만 명) 순으로 크다. 이 기간 서울과 경기의 총인구는 각각 301만 명, 591만 명 증가했다.

표 1-6. 주요 인구 동향(1970~2020년)

(단위: 천 명, 명, 세)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출생아 수	1,006.6	874.0	862.8	655.5	649.7	715.0	640.1	438.7	470.2	438.4	272.3
사망자 수	258.6	270.7	277.3	240.4	241.6	242.8	248.7	245.9	255.4	275.9	304.9
자연증가	748.1	603.4	585.6	415.1	408.1	472.2	391.3	192.8	214.8	162.5	-32.6
합계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8	1.09	1.23	1.24	0.84
기대수명	62.3	64.2	66.1	68.9	71.7	73.8	76.0	78.2	80.2	82.1	83.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표 1-7. 총인구 변화(2016~2023년)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인구	51,270	51,423	51,630	51,779	51,829	51,738	51,692	51,775
변화율	0.4	0.3	0.4	0.3	0.1	-0.2	-0.1	0.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1.6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1.09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연간 출생아 수 역시 71.5만 명에서 43.9만 명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이후 잠시 상승하며 2012년에 1.30명, 2015년 1.24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8년부터 1.00명 미만이 되었고, 2020년 0.84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이 되었다.

2020년대에는 절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표 1-7). 2020~2021년 총인구는 5,183만 명에서 5,174만 명으로 약 9만 명(0.2%) 감소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합계출산율이

줄곧 1.5명 미만이었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2020년 전까지 총인구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도 감소했다. 2023년에는 외국인 증가로 전년 대비 총인구가 약 8만 명(0.2%) 늘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2만 명으로, 1970년 100.7만 명은 물론 20년 전인 2000년 64.0만 명에 비해서도 차이가 크다. 2022년에만 10만 명 가까이 자연감소했으며, 최근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자연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7.2%로 OECD 평균인 12.8%에 비해 낮았으나, 2022년에는 17.5%로 OECD 평균 18.0%에 근접했다(OECD, 2023).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지속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18.6%까지 상승했다.

2000년 이전 인구억제정책을 펴던 정부는 방향을 전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가구 변화

지난 50년 사이 가구 수는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했다(표 1-8). 전국의 가구 수는 1975년 665만 가구에서 2020년 2,093만 가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가구 수는 1990년에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2,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023년까지도 가구 수는 연간 1.3~2.9%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표 1-9). 2020년대 들어 인구가 감소한 것과 달리 가구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2021년에는 이례적으로 가구 수의 증가폭이 커졌다.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가구분리만으로 연간 약 30~60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가구원 수별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1·2인 가구 비중 증가가 뚜렷하다. 1975년에는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가구 비중이 40.7%로 높았는데, 1980년 29.8%, 1990년 9.8%, 2000년 3.3%, 2020년 0.9%로 매우 빠르게 낮아졌다.

반대로 1·2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80년까지 5% 미만이었던 1인 가

구 비중은 1995년 12.7%로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2005년 20.0%에 도달한 뒤, 2020년에는 31.7%로 30%를 초과했다. 2인 가구 비중도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22.2%, 2020년 28.0%로 높아졌다. 한편 4인 가구 비중은 1975년 16.1%에서 1995년 31.7%까지 상승하여 최고점을 기록한 뒤,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여 2020년에는 15.6%로 1975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구분리로 인한 1·2인 가구 비율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구증가 추세가 둔화된 이후에도 가구 수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표 1-8.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변화(197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6,648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20,9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281	383	661	1,021	1,642	2,224	3,171	4,142	5,203	6,643
	4.2	4.8	6.9	9.0	12.7	15.5	20.0	23.9	27.2	31.7
2인	553	840	1,176	1,566	2,185	2,731	3,521	4,205	4,994	5,865
	8.3	10.5	12.3	13.8	16.9	19.1	22.2	24.3	26.1	28.0
3인	815	1,153	1,580	2,163	2,636	2,987	3,325	3,696	4,101	4,201
	12.3	14.5	16.5	19.1	20.3	20.9	20.9	21.3	21.5	20.1
4인	1,073	1,620	2,422	3,351	4,110	4,447	4,289	3,898	3,589	3,271
	16.1	20.3	25.3	29.5	31.7	31.1	27.0	22.5	18.8	15.6
5인	1,218	1,597	1,863	2,140	1,667	1,443	1,222	1,078	940	761
	18.3	20.0	19.5	18.8	12.9	10.1	7.7	6.2	4.9	3.6
6인 이상	2,708	2,377	1,871	1,113	718	479	360	320	283	185
	40.7	29.8	19.5	9.8	5.5	3.3	2.3	1.8	1.5	0.9

주: 일반가구 기준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9. 일반가구 수 변화(2016~2023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가구 수	19,368	19,674	19,979	20,343	20,927	21,448	21,774	22,073
변화율	1.3	1.6	1.6	1.8	2.9	2.5	1.5	1.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주택 변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경제성장은 한국의 주택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국민소득과 소비수준이 향상되었고, 도시는 빠르게 변모했다. 달동네가 사라지고, 저층 주거지가 고층 아파트 숲으로 바뀌는 변화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무허가정착지는 합동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단지로 바뀌었으며, 수도권 인근 택지에는 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표 1-10〉은 주택총조사가 시작된 1960년 이후 주택 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주택 수는 1970년 443만 호에서 1990년 736만 호, 2010년 1,468만 호로 빠르게 증가했다. 5년 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1970~1975년에는 10%에 못미쳤으나, 그 후에는 5년마다 10% 이상씩 증가했다. 특히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이 실행된 1990~1995년에는 5년간 증가율이 30.1%에 이를 정도로 증가폭이 컸다.

표 1-10. 주택 수 변화(1960~2020년)

(단위: 천 호, %)

구분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 주택 수	4,465	4,434	4,816	5,434	6,271	7,357	9,570	11,472	13,223	14,677	16,367	18,526
	-	-0.7	8.6	12.8	15.4	17.3	30.1	19.9	15.3	11.0	11.5	13.2
사용 주택 수	4,378	4,360	4,734	5,319	6,104	7,160	9,205	10,959	12,495	13,884	15,298	17,015
	-	-0.4	8.6	12.4	14.8	17.3	28.6	19.1	14.0	11.1	10.2	11.2
빈집	87	74	82	115	167	197	365	513	728	794	1,069	1,511
	-	-14.9	10.8	40.2	45.2	18.0	85.3	40.5	41.9	9.1	34.6	41.3

주: 1) 다가구 구분거처는 반영되지 않음.
2) 1960년은 거처수 기준으로 판잣집·천막·토막 등 비적정 주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3) 주택 수 아래 비율은 직전 조사연도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90년 이전 빈집수는 윤주현(2002) 인용.

주택 수는 인구·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동부(시부)의 주택 수는 1975년 181만 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00만 호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1,443만 호에 이르렀다(표 1-11). 주택 수 비중이 동부는 1975~2015년에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면부는 1975년 49.8%에서 2020년 11.4%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1-11. 동·읍·면부별 주택 수 변화(1960~2020년)

(단위: 천 호, %)

구분	전국	동부		읍부		면부	
1960	4,465	1,261	28.2	413	9.2	2,705	60.6
1970	4,434	1,398	31.5	395	8.9	2,567	57.9
1975	4,816	1,809	37.6	528	11.0	2,397	49.8
1980	5,434	2,468	45.4	677	12.5	2,174	40.0
1985	6,271	3,349	53.4	797	12.7	1,958	31.2
1990	7,357	4,646	63.2	702	9.5	1,812	24.6
1995	9,570	6,768	70.7	893	9.3	1,909	19.9
2000	11,472	8,393	73.2	1,094	9.5	1,985	17.3
2005	13,223	9,998	75.6	1,294	9.8	1,931	14.6
2010	14,677	11,263	76.7	1,460	9.9	1,954	13.3
2015	16,367	12,770	78.0	1,615	9.9	1,982	12.1
2020	18,526	14,428	77.9	1,993	10.8	2,105	11.4

주: 1) 1990년까지는 동부가 아닌 시부임.
2) 1960년은 거처수 기준으로 판잣집·천막·토막 등 비적정 주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3) 동부·읍부·면부 옆의 수치는 총 주택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4) 1960~1990년의 지역별 재고에는 빈집이 포함되지 않아 비율의 합계가 100%보다 작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70~2020년 사이 주된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하였다(표 1-12). 1970년에는 단독주택 비중이 93.7%였으나, 이후 극적으로 하락했다. 반대로 아파트 비중은 1970년 1% 미만이었으나 1990년 22.1%, 2000년 47.8%, 2020년 62.9%로 급격히 상승했다. 연립·다세대주택 비중도 1980년 3.0%에서 2000년 11.5%, 2020년 14.9%로 크게 상승했다.

표 1-12. 주택유형별 주택 수 변화(1970~2020년)

(단위: 천 호, %)

구분	총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970	4,434	4,155	93.7	33	0.7	146	3.3	25	0.6
1975	4,816	4,382	91.0	89	1.8	165	3.4	98	2.0
1980	5,434	4,652	85.6	374	6.9	162	3.0	131	2.4
1985	6,271	4,719	75.3	822	13.1	350	5.6	213	3.4
1990	7,357	4,727	64.3	1,628	22.1	603	8.2	202	2.7
1995	9,570	4,490	46.9	3,610	37.7	1,122	11.7	348	3.6
2000	11,472	4,269	37.2	5,480	47.8	1,322	11.5	401	3.5
2005	13,223	4,264	32.2	6,963	52.7	1,788	13.5	209	1.6
2010	14,677	4,089	27.9	8,576	58.4	1,851	12.6	161	1.1
2015	16,367	3,974	24.3	9,806	59.9	2,383	14.6	204	1.2
2020	18,526	3,898	21.0	11,662	62.9	2,752	14.9	214	1.2

주: 1970~1990년의 주택 유형별 재고에는 빈집이 포함되지 않아 비율의 합계가 100%보다 작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60~1970년대에 서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에 비해 주택이 공급되는 속도는 느렸다.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모여든 사람들은 도심에 판자촌 등 무허가정착지를 이루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집단이주정착지를 조성해 서울 도심 내 판자촌을 철거하고 철거민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집단이주시켰다. 1969년부터는 서울시가 경기도 광주에 단지를 조성하고 용두동, 창신동, 청계천변 등에 거주하던 판자촌 주민을 대규모로 집단 이주시켰는데, 열악한 주거환경과 대지불하

가격 등을 두고 광주대단지 사건[21]이 발생하기도 했다(김동춘, 2011). 1970~1980년대에는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1990년대에는 기존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1983년 「도시재개발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을 구체화해 나갔다. 강남의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택지가 부족해지자, 당시 외곽에 위치하던 집단이주정착지에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경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는 대규모 합동재개발을 촉진했다. 빠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세입자들은 다른 거주지역을 찾아가야 했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22]이 포함되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성남)·일산(고양)·평촌(안양)·중동(부천)·산본(군포) 5개 지역에 만들어졌는데, 서울 도심과 떨어진 곳에 조성되었다. 신도시와 도심의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가 확충되었고, 경기도의 인구 급증 및 지역 간 통근 양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수도권 개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자동차 보유 가구 증가와 함께 원거리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21) 정부의 무계획적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은 정확한 명칭 없이 '사건', '집단소요', '투쟁' 등으로 불리다 2021년 6월 성남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으로 명명했다.

22)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초가 되었는데, 합동재개발 과정의 세입자·철거민 운동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재개발과 택지개발,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 활황과 가구 수 증가는 도시 주택시장의 급성장을 견인했다. 개발은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는 반면 주거비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줄어드는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반지하·옥탑·고시원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적정 주거가 형성되었다.

2016년 이후 주택 수는 가구 수와 마찬가지로 연간 1.5~3.0% 범위에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표 1-13). 인구가 자연감소에 접어드는 가운데 주택이 계속 공급됨에 따라, 과거 공급에만 몰두했던 주거정책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이 계속되면서 농촌의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고령가구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택의 면적·설비·유형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표 1-13. 주택 수 변화(2016~2023년)

(단위: 천 호,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주택 수	16,692	17,123	17,633	18,127	18,526	18,812	19,156	19,546
변화율	2.0	2.6	3.0	2.8	2.2	1.5	1.8	2.0

주: 빈집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4. 맺음말

한국의 인구·가구·주택은 지난 100여 년간 역사적 격동을 거쳐 왔다. 호적에서 국세조사, 오늘날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이르기까지 센서스의 변화과정은 국가가 사회를 형성하고 통치하며 소통하는 과정이었다. 도시화와 산업화 및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해 왔다. 산업화·도시화 시대에는 인구증가억제 정책이 시행되다가,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인구구조가 변화하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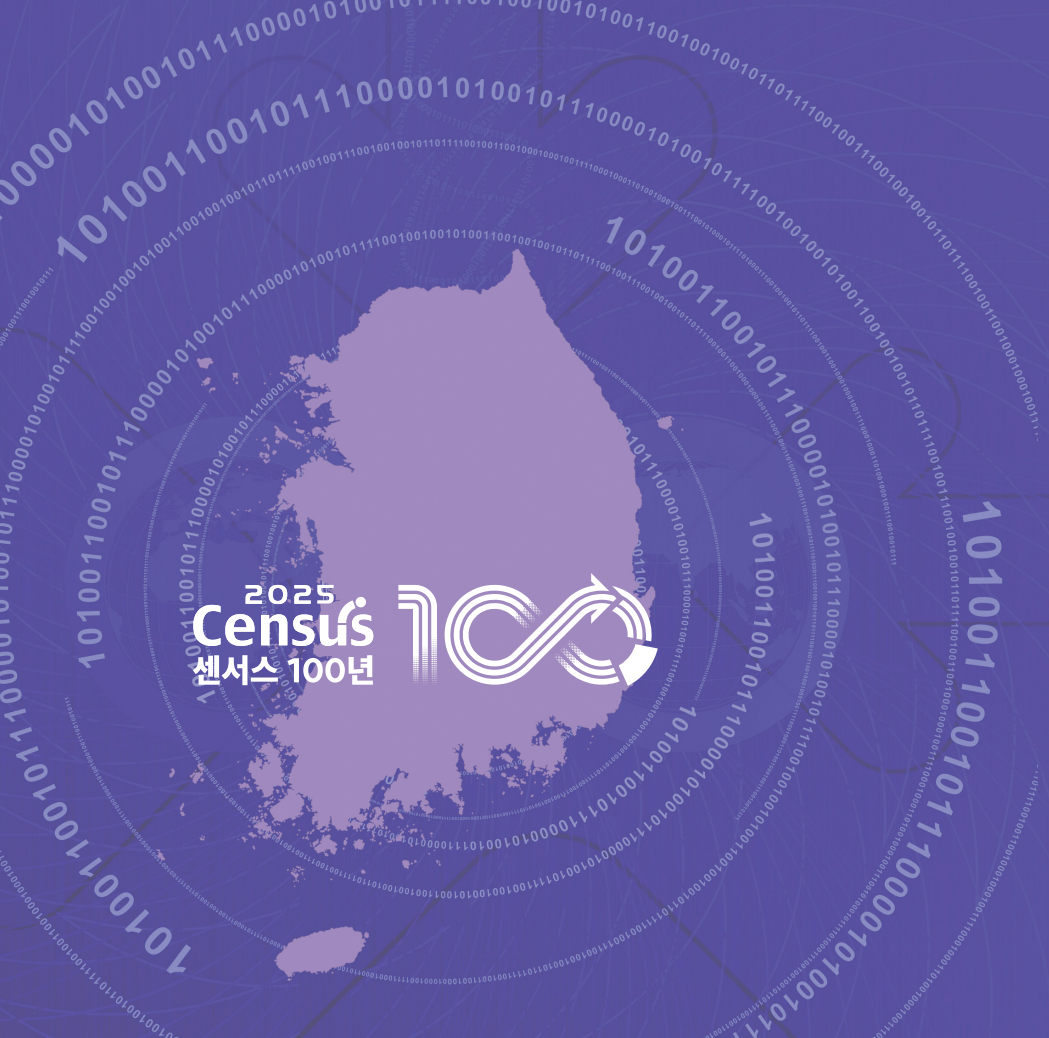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인구주택총조사는 결과뿐 아니라 구성과 실행에 있어서도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 조사항목, 자료 수집 방식의 변화는 기술적 전환만이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 시민들 삶의 양태나 사회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드러낸다. 인구 변화는 단지 숫자의 증감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누적해 온 공적 기록이다.

인구통계는 현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향후 인구감소에 이은 가구 수의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인구고령화와 부양비 증가, 지역소멸과 빈집 증가 등은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인구통계학적 불균형은 의료·연금시스템의 부담, 노동력 감소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소임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2장

인구주택 총조사 작성방법의 변화

김형석 · 김서영



1. 머리말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영토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가구를 형성하고 어떤 유형의 거처에 살며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 사람이 살아가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구에 관한 사항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인구통계(demographic statistics)라 한다. 인구통계는 크게 특정 시점에서의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정태(靜態, static statistics 또는 current population statistics)통계와 특정 기간에 인구구조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demographic event)을 집계하는 동태(動態, statistics of population change)통계로 구분한다. 인구정태통계는 인구 규모, 분포, 성 및 연령 구조,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통계로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등이 있다. 인구동태통계는 인구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즉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이동 등에 관한 통계로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록센서스(register-based census) 방식의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방식의 표본조사를 혼용한 결합센서스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2000년 전후로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방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전부터 행정자료 기반의 총조사를 실행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센서스는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기본통계로 중요도가 높을 뿐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에도 널리 사용된다. 이에 유엔은 센서스 실시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필수 요건은 다섯 가지이다(UN DESA, 2017). 첫째, 개별집계(individual enumeration)로 모든 사람을 집단이 아닌 개별 단위로 조사해야 한다. 둘째, 보편성(universality)으로 영토 내에 모든 지역

을 빠짐없이 포괄해야 한다. 셋째, 동시성(simultaneity)으로 조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기성(periodicity)으로 일정한 주기로 조사가 반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지역 통계(small area statistics)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은 물론 소지역[1] 단위로 사회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계획 수립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제1의 기본통계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라는 특징 때문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2-1). 첫째, 각종 인구 및 가구와 관련한 표본조사의 표본추출 틀(sampling frame)을 제공한다. 둘째, 다른 조사통계의 조사추정치 작성 및 검증에 필요한 모수 또는 벤치마크(benchmark)로 활용되거나 장래인구·가구추계와 같은 가공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조사문항의 개념, 자료수집방법, 현장조사방법 및 자료처리방법 등은 다른 통계조사에도 영향을 주어 당대의 통계조사 방법을 선도한다.

2025년에 100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한 세기 동안 조사설계, 조사항목,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결과 공표 및 자료제공에 이르기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인구주택총조사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의 통로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의 변화를 조망하는 것은 향후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인구총조사는 읍면동 수준 또는 그 이하인 집계구 수준의 인구통계작성이 가능한 유일한 조사통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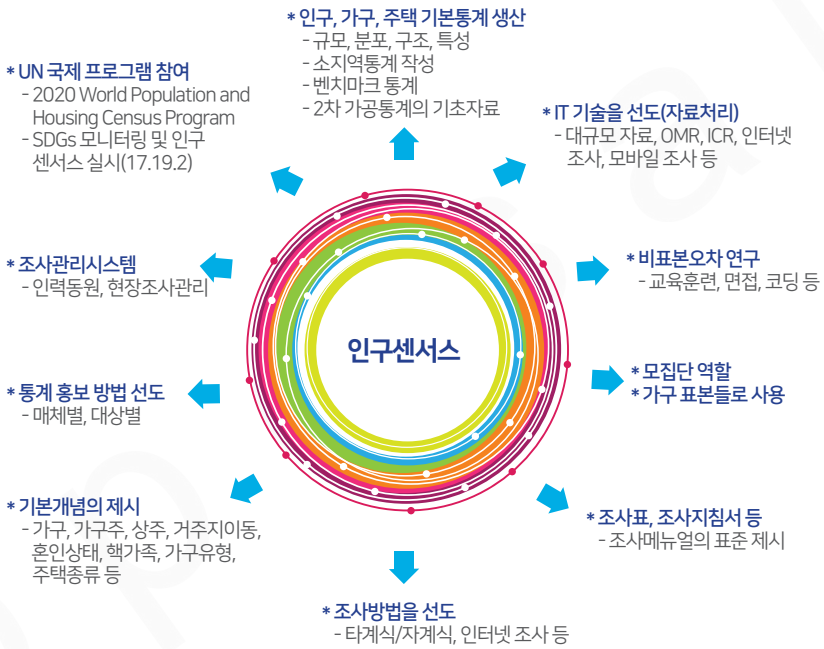


그림 2-1.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

출처: 김형석 외(2021).

2. 조사방법의 변화

1) 100년 간의 변화과정 개요

우리나라에서 성별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구를 포괄하여 실시한 근대적인 의미의 인구총조사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가 최초이다(표 2-1). 이후 인구주택총조사는 0과 5자로 끝나는 연도에 5년마다 실시되었는데, 1944년, 1949년, 1966년은 예외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일은 10월 1일(1925~1940년), 5월 1일(1944~1949년), 9월 1일(1955년)로 변경했다가, 1960~1975년에는 다시 10월 1일로 변경했다. 1980년에는 현장조사 환경의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해 11월 1일로 기준일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이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 인구주택총조사의 역사(1925~2020년)

기준일	명칭	특징
1925. 10. 01.	간이[2]국세조사	최초의 인구센서스
1930. 10. 01.	국세조사	최초로 직업항목 조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
1935. 10. 01.	국세조사	현주 개념으로 조사
1940. 10. 01.	국세조사	조사결과는 대외비
1944. 05. 01.	인구조사	일제 전시 인력 동원 목적으로 1년 앞당겨 실시, 조사결과는 대외비
1949. 05. 01.	총인구조사	1948년 정부 수립 및 1950년 민의원 선거일정(5월)에 따라 1년 앞당겨 실시, 한국전쟁으로 속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소실

2) 간이조사는 조사항목을 적게 조사하는 것이 목적으로 1950년까지는 5로 끝나는 해에 간이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9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간이 국세조사',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간이 총인구조사'로 명명했다. 그러나 이후 5로 끝나는 연도와 0으로 끝나는 연도의 조사항목 수가 차이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

기준일	명칭	특징
1955. 09. 01.	간이 총인구조사	내무부 산하 지방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실시
1960. 12. 01.	인구주택 국세조사	최초로 주택부문조사, 경제활동 및 출산력 사항에 대해 20% 표본집계
1966. 10. 01.	인구센서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재원 조달로 1년 후에 주택을 제외하고 인구만 조사, 최초로 10% 표본조사 도입
1970. 10. 01.	인구 및 주택센서스	10% 표본조사 병행
1975. 10. 01.	인구 및 주택센서스	5% 표본조사 병행
1980. 11. 01.	인구 및 주택센서스	15% 표본조사 병행
1985. 11. 0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전 항목 전수조사
1990. 11. 01.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 OMR 입력방식 도입
1995. 11. 01.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 래스터 지도사용, 최초 빈집조사
2000. 11. 01.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 수치지도사용, PC 입력 및 에디팅
2005. 11. 01.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도입
2010. 11. 01.	인구주택총조사	-
2015. 11. 01.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에서 등록센서스 최초 도입(이후 매년 실시), 표본조사는 20%로 확대
2020. 11. 01.	인구주택총조사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 조사에 활용

주: 1970~1975년에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와 '총인구 및 주택조사'라는 명칭을 혼용함.
자료: 김민경(2002)을 토대로 저자가 보완.

우리나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는 1960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당시 처음으로 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작성 과정에서 표본이론(20%)을 적용하였으며, 현주인구 대신 상주인구 개념을 사용하였다. 유엔 통계고문관의 기술 자문을 거쳐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사후조사(post enumeration survey)를 실시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사후조사 방법에는 조사원에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실제와 동일한지를 점검하는 종속방법과 기존 조사결과를 조사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독립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주로 종속방법이 사용되었다.

1966년에는 주택총조사 없이 인구총조사만 실시하였다. 최초로 10%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처리를 위해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주전산기(컴퓨터)인 IBM1401을 도입하였다. 197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주택 부문을 다시 통합하였으며,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문제로 인해 인구이동 항목이 추가되었다. 1985년에는 표본조사 없이 전수조사만 실시하였고, 1995년에는 빈집조사표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2005년에는 처음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인터넷 응답 비중은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총조사에서도 인터넷 응답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2020년 조사에서 인터넷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한 응답 비중은 44%까지 상승했다.

2015년 총조사를 기점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전수조사 항목의 경우 그간 현장조사에 의한 전통적인 총조사 방식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료수집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총조사 작성 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그간 현장조사 방식으로 5년마다 공표되던 전수부문 결과를 매년 공표함으로써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행정자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표본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 표본조사방법

근대에 센서스는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집계하는 전수조사라는 기본 개념이 확립되었다. 신속한 자료수집 및 결과 집계를 위해 표본조사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3] 1940년 미국 센서스에서 처음으로 표본조사기법이 적용되었다(Hauser, 1941). 우리

3) 통계 조사방법은 크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된다. 전수조사는 모집단(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표본조사는 모집단 중 일부(표본)를 대상으로 수집한 표본조사 결과를 통

나라에서 조사설계 과정에 표본기법이 적용된 것은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처음이다. 당시 표본기법은 조사설계 단계에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조사 완료 후 표본이론에 따라 조사대상의 20%를 추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당시 경제활동 및 출산력 사항에 대한 잠정결과를 보기 위해 최종 결과 공표 전에 조사완료 대상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를 작성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표본조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1966년에 비로소 조사설계 과정에서 표본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10% 표본조사구[4]를 추출하였다. 표본조사구에 포함된 모든 가구에는 많은 조사항목을 질문하였고, 나머지 90% 조사구 내 가구에는 기본항목만 질문하는 방식으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표본 규모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1970년 10%, 1975년 5%, 1980년 15%였다. 1985년에는 표본조사 없이 모든 항목을 전수조사하였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10%를 유지하였다. 2015년부터는 전수부문에 대해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자료 활용이 어려운 기존 전수항목인 교육과 혼인상태를 표본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표본규모를 20%로 확대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조사방법은 누가 조사표에 응답을 기입하느냐에 따라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과 조사원기입방식으로 분류된다. 면접조사와 전화조사는 조사원기입방식이며, 배포조사, 우편조사, 집합조사는 자기기입방식이다. 19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공무원, 공공단체 직원, 유지, 정회(町會) 직원 등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조사원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다. 193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일제강점기 면(面) 지역의 평균 호수가 800가구 정도 되었는데 지역을 조사구 당 80~90가구 정도가 되도록 지리적 경계를 통해 분할하였다. 준비조사 기간에 가구 명부를 작성하여 조사표를 배부하고, 본조사일에 조사표를 회수하였다.

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한다.

4) 조사구는 일정규모의 가구(40~80가구)가 포함되도록 지리적 경계로 구획한 공간 단위이다.

해방 이후에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때 가구에서 원하는 경우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고 나중에 조사원이 회수하는 방식도 사용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공식적인 조사방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사표 설계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원기입방식과 자기기입방식 조사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조사표를 설계해야 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수집방법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로 방문조사를 꺼리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적극적인 현장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료수집방법의 하나로 인터넷조사를 도입하여 가구방문 시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인터넷조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조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010년에는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에 원하는 경우 누구라도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였다.

2015년까지 현장조사에서 사용하던 종이조사표 대신 2020년에는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조사원이 면접조사 결과를 CAPI(컴퓨터활용대면조사,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시스템에 즉시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자료처리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3. 조사항목의 변화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인구규모, 분포,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사항목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이 핵심 조사항목이 된다. 여기에 시대상을 반영하여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수요가 있는 항목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한편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거나 의미가 축소된 항목들은 삭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변천과정에서 조사주기도 항목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표 2-2). 0자로 끝나는 해는 정규 총조사로 간주하여 보다 많은 항목을 조사표에 포함하였고, 5자로 끝나는 해는 간이 총조사 개념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항목 수가 적었다. 2015년부터는 등록센서스 도입으로 전수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면서 총항목 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보다 증가하였다.

1925년 조사에서는 성명, 성별, 생년월, 배우 관계, 본적(또는 국적) 5개 항목을 조사했다(표 2-3). 1930년에는 1925년 조사항목에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 출생지, 문맹 여부 4개 항목을 추가했다. 1935년에는 1925년 조사항목 5개에 상주지 1개 항목을 추가하여 6개 항목을 조사했다. 1940년 및 1944년에는 일제의 전쟁동원을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1940년에는 상주지를 제외하고 본적지, 직업, 병역 관계, 출생지 등 11개 항목을 조사했다. 1944년에는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지 등을 제외한 반면 종사상 지위 등을 추가하여 총 10개 항목을 조사했다.

표 2-2.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수의 변화(1925~2020년)

(단위: 개)

구분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항목	5	9	6	11	10	11	12	36	14	31	32	42	28	45	28	50	44	50	53	56
전수	5	9	6	11	10	11	12	36	8	15	12	24	28	33	17	20	21	19	12*	16*
표본	-	-	-	-	-	-	-	-	6	16	20	18	-	12	11	30	23	31	52	55

주: *은 등록센서스 항목임.
출처: 통계청 내부자료.

표 2-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변화(1960~2020년)

조사항목(최초조사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명(1925)												*	*
성별(1925)												*	*
가구주와의 관계(1930)												*	*
생년월일(1925)												*	*
교육 정도(1949)													
혼인상태(1925)													
경제활동(1960)													
산업(1960)													
직업(1930)													
종사상 지위(1944)													
총출생아 수(1960)													
출생지(1930)													
결혼 전 취업 여부(2015)													
여성의 경력단절(2015)													
입국 연월(2010)												*	*
국적취득 연월(2017)													
추가 계획 자녀 수(2005)													
근로 장소(2005)													
(고령자)생활비원천(2000)													

조사항목(최초조사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사회활동(2010)													
아동 보육(2000)													
1년 전 거주지(1980)													
5년 전 거주지(1970)													
통근통학 여부(1980)													
통근통학 장소(1980)													
이용교통수단(1980)													
통근통학 소요시간(1990)													
초혼연령(1975)													
현 직업 근무연수(2000)													
활동제약(1980)													
종교(1985)													
성씨 본관(1985)													
전공학과/교육영역(1980)													
남북 이산가족(2005)													
개인소득(1975)													
활동제약 지속시간(2020)													
활동제약 돌봄소요(2020)													
가구 구분(1955)												*	*
점유형태(1955)													
거처의 종류(1960)													
총방수(1970)													
주거시설형태(1960)													
건축 연도(1960)													
거주기간(1960)													
동거 가구 수(1960)													
지붕 재료(1960)													
외벽재료(1960)													

조사항목(최초조사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문화시설 및 가재(1970)													
취사 연료(1970)													
난방시설(1980)													
대지면적(1980)													
연면적(1970)													
임차료(1985)													
사용 방 수(1980)													
자동차/교통수단 보유 대수(2000)													
주차시설(2000)													
타지주택소유(2005)													
건물 및 거주층(2005)													
편익시설(1985)													
식수종류(1980)													
자녀 거주 장소(2000)													
컴퓨터 활용 상태(2000)													
인터넷 활용 상태(2000)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2000)													
난방 연료(1980)													
조명시설(1970)													
가구 소득(1990)													
거주 가능 가구 수(1985)													
1인 가구 사유(2020)													
혼자 산 기간(2020)													
반려(애완)동물(2020)													
소방시설 보유 여부(2020)													

주: 1) ( ) 안은 최초 조사연도임.
2) *표된 항목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동시에 작성함.
3) 주황색 표시된 항목은 등록센서스 항목임.
자료: 김형석 외(2021)를 토대로 보완함.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조사에서는 1944년에 빠졌던 가구주와의 관계를 다시 포함하는 한편 해방 당시 거주지, 군사 경험, 징용 경험 등 총 11개 항목을 조사하여 해방 당시 국내 귀환 실태와 일제강점기 징병 규모를 파악하였다. 1955년에는 장애 상태, 전입 시기 및 전 거주지, 주거상황, 농가 여부 등 12개 항목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가구에 관한 항목을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1960년에는 주택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주택항목이 대거 포함되었고, 경제활동과 출산력에 관한 문항도 신설하는 등 오늘날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주택에 대한 항목은 제외하고 인구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연령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세는 나이, 생년월일, 양·음력, 띠(12간지)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1970년에는 주택총조사를 다시 통합하면서 관련 항목을 복원했고, 인구이동(5년 전 거주지) 항목을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표본조사 없이 전수조사만 실시하였던 1985년 총조사에서는 성씨 및 본관, 종교 항목을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1995년에는 빈집조사표를 사용하여 빈집 여부 및 빈집 사유 등을 조사하였다.

2015년 등록센서스로 전환하면서 전수항목은 인구 7개(성명,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 연월, 본관), 가구 1개(가구 구분), 주택 4개(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등 총 12개 항목으로 2010년의 19개에 비해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표본조사 항목이었던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주거시설형태, 타지주택 소유 여부, 거처의 종류, 총방수, 주거시설 수 7개 항목이 행정자료로 대체되었다.

4. 자료처리 및 자료제공방법의 변화

1) 자료입력방법의 변화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체 인구·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자료처리량이 방대하여 통계작성에 수년이 걸리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기술과 장비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와 전산기술의 발전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30년부터 1955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는 PCS(천공카드시스템, Punched Card System)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1966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처리를 위해 1967년 도입한 IBM1401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전산기였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뿐만 아니라 컴퓨터 발전사에도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김민경, 2002).

자료처리 분야는 OMR(광학마크판독, Optical Marker Recognition), OCR(광학문자판독,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선진화되었다. OMR은 1990년 도입되었고, 2000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컴퓨터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조사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인적·물적 관리를 고도화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온라인 조사관리시스템 사용은 이후 다른 통계조사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웹과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5]을 통한 입력방법을 사용하였고, 2010년에는 ICR 방식, 2015년 이후에는 인터넷조사 방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조사방법별 응답비중을 보면, 2015

5) ICR은 손으로 입력한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술이다. 입출력 장치에서 필기체로 입력된 문자를 분석하여 컴퓨터 판독 언어로 변환하는 것으로 광문자인식(OCR)과 유사하다. 지능형 문자 인식(ICR)과 OCR 기술 개발 이전에는 타자기나 컴퓨터 문자, 수기 문자, 바코드, 서명 등 일정한 모양의 문자 처리 방식이었으나, 이후에는 스캐너, ICR, OCR을 포함한 자동 처리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모양의 문자를 처리한다.

표 2-4.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별 응답비중 변화(2015·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총계	응답								부재	불응
		계	인터넷			전화	면접				
			소계	모바일	PC		소계	태블릿	종이		
2015	3,598 (100.0)	3,470 (97.6)	1,750 (48.6)	–	1,750 (48.6)	–	1,760 (48.9)	–	1,760 (48.9)	40 (1.3)	88 (1.1)
2020	4,057 (100.0)	3,905 (96.3)	1,551 (38.2)	1,164 (28.7)	387 (9.5)	231 (5.7)	2,123 (52.3)	2,091 (51.6)	32 (0.8)	104 (2.6)	47 (1.2)

출처: 통계청 내부자료.

년에 인터넷조사가 48.6%로 면접조사(48.9%)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인터넷조사가 38.2%로 감소하고 면접조사가 52.3%로 소폭 증가하였다(표 2-4).

2) 자료처리방법의 변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처리 과정에서 자료입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내용검토(내검), 자료코딩, 무응답처리이다.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식에 의한 총조사의 내검단계는 사전내검(manual editing)과 기계내검(machine editing)으로 구분된다. 즉, 현장에서 수집된 결과는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단계별 수작업 내검을 거쳐 통계청으로 조사표가 제출되면 전산으로 입력하여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다. 조사항목 중 가구주와의 관계나 산업, 직업 등 항목은 전산으로 입력하기 전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조사표 내검이나 코딩에 관해 최초의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1970년 총조사이며, 이때 230여 명이 1년간 내검과 코딩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경, 2018).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산업 및 직업 항목에 대해 자동코딩시스템이 개발·적용되었다.

응답 결과 중 항목 무응답에 대해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무응답대체(imputation)기법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때 만 나이, 교육 정도, 혼인상태, 가구원 수 항목에 대해 핫덱(hot deck) 방식[6]을 이용하여 항목 무응답을 대체하였다. 2010년에는 계층적 핫덱(hierarchical hot deck) 방법을 적용하여 무응답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무응답 대체 방법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자동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처리를 하고자 하였다.

3) 자료제공방법의 변화

조사결과를 이용자에게 가장 널리 제공하는 방법은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속보, 전국, 지역, 특성항목(경제활동, 인구이동, 출산력, 임차료 등) 등으로 세분된다. 1925년에는 총조사 속보와 결과보고서 2종을 발간했다. 이후 1930년 5종, 1940년 1종, 1944년 2종, 1949년 1종, 1955년 12종, 1960년 25종, 1966년 13종, 1970년 18종, 1975년 17종, 1980년 17종, 1985년 19종, 1990년 24종을 발간했다. 1995년에는 24종을 발간했는데, 이때부터 보고서 표 내용을 이용자에게 CD로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보고서의 종류는 2000년 36종, 2005년 29종, 2010년 28종, 2015년 30종 등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다양하고 세분되어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집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되기 시작했다. 심층분석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도 제공되었다. 1993년 처음으로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는 1%와 5% 표본자료도 제공되었다. 2013년부터는 196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1% 표본자료를, 2016년부터는 2% 표본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6) 결측값을 처리하기 위한 통계적 방식으로, 연관된 변수들을 가지고 대체군을 형성한 후 대체군 내에서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한편 계층적 핫덱방식은 가장 유사성이 높은 집단에서 대체값을 찾고,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하위 집단으로 내려가면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5. 센서스 작성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1) 등록센서스 작성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총조사는 1925년 근대적 센서스를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였고 1960년에는 주택총조사 병행, 표본조사, 사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오늘날의 인구주택총조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식에 의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총조사는 2010년까지 유지되었다. 2015년부터 전수조사는 행정자료에 기반해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현장조사 방식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결합센서스 방식으로 센서스 작성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스는 2000년대 들어 국민의 응답 부담과 인적·물적 측면의 현장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행정자료를 통해 인구, 가구, 주택의 기본항목 즉 기존 전수조사 항목을 대체할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총조사에서 기존 전수조사 항목 대부분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표본조사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기존 전수항목 중 '학력'과 '혼인상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기 어려워 표본조사 항목으로 변경하여 현장조사하기로 하였다. 두 개의 전수조사 항목이 표본조사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읍면동 단위 제공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표본조사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하면서 두 항목에 대한 읍면동 통계를 5년 주기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본 확대는 2015년 처음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특히 주택에 관한 행정자료가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상황과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등록센서스 방식은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식에 비해 총조사 비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

에 다양한 행정자료를 통해 생산가능한 통계가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2020년에는 인구동태자료와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구, 한부모 가구 등에 관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적 활용성을 높였다. 2023년 등록센서스 결과 공표시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전수조사 항목에서 빠져 있었던 혼인상태별 전국 인구통계를 등록센서스를 통해 공표하였고, 5년 단위로만 제공하였던 읍면동 인구통계를 매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는 앞으로도 확장가능성이 크다. 2025년에는 이주배경인구통계도 새롭게 공표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등록센서스 작성 방법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센서스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있었다. 첫째,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품질의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둘째, 다양한 행정자료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 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통계목적의 고유키로 변환한 후 행정자료 간 연계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연계키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계키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입수·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셋째, 다양한 행정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등록센서스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구, 주택 수를 빠짐없이 세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된 기본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수집·관리하고 서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때 연계키로 활용하는 텍스트 정보

들이 행정자료마다 동일한 형태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동일한 포맷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표준화과정이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매칭테이블을 만들어 각 행정자료의 정보를 표준화한다. 예를 들어, 어떤 행정자료에서 개인의 이름이 '김 통계'로 입력되었는데, 동일한 사람이 다른 자료에서는 '김통계'로 입력되는 경우 이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인지하도록 이름을 '김통계'로 표준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넷째, 통계청은 현재 12개 기관 및 400여 개 대학으로부터 26종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등록센서스를 작성하고 있다. 개인 또는 건축물의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대장자료가 핵심자료이다. 여기에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대학생의 기숙사 명부, 시설거주자 명부, 출입국자료 등 다양한 행정자료들이 등록센서스 작성에 사용된다. 통계청은 매년 입수하는 자료의 연계키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행정자료의 건수나 내용에 변화는 없는지, 행정자료의 시계열이 안정적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자료의 품질을 점검하여 등록센서스에 활용하고 있다.

3) 등록센서스 DB 구축 및 통계생산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26종의 행정자료는 통계적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통계자료로 변환된다. 등록센서스 자료 구축 체계는 〈그림 2-2〉와 같다. 우선 인구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자료와 출입국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부와 출입국자료를 통해 작성한다. 출입국자료를 통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은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내국인과 외국인 자료에 기숙사 명부, 시설명부, 학적부 등을 사용하여 주 거주지를 확정하고 여기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를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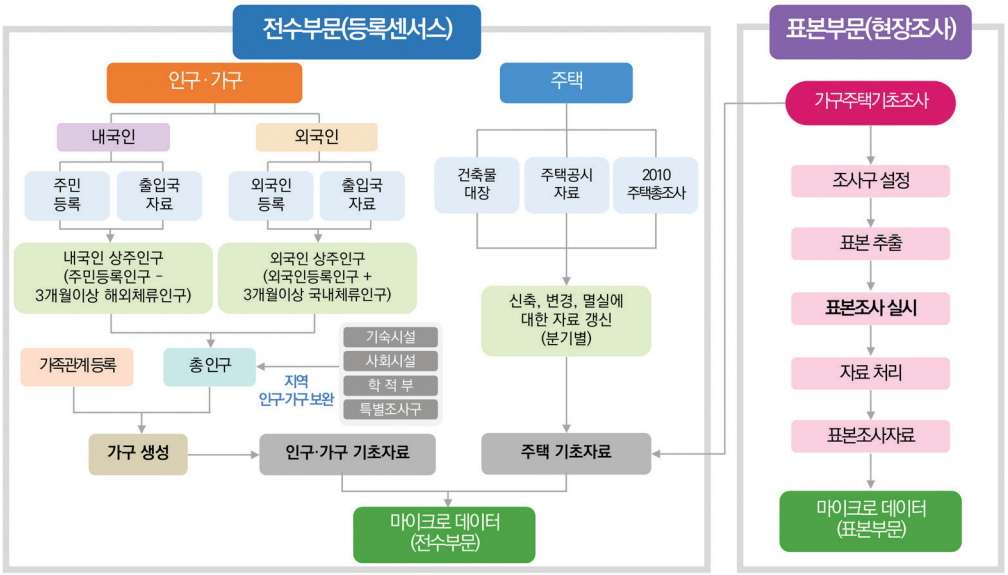


그림 2-2. 등록센서스 작성 체계

출처:통계청 내부자료.

주택통계는 건축물대장자료, 주택공시가격자료 등을 통해 기본적인 DB를 구축하고 여기에 신축, 재건축 및 말소 건물에 관한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등록정보가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와 다를 경우, 이들 정보도 주택등록센서스 작성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주택센서스 DB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주택관련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이처럼 등록센서스는 현장조사만큼이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등록센서스 실시로 우리나라의 센서스 통계의 품질은 상당히 높아졌다. 고품질의 등록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자료의 변동 가능성 등 자료수집 체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6.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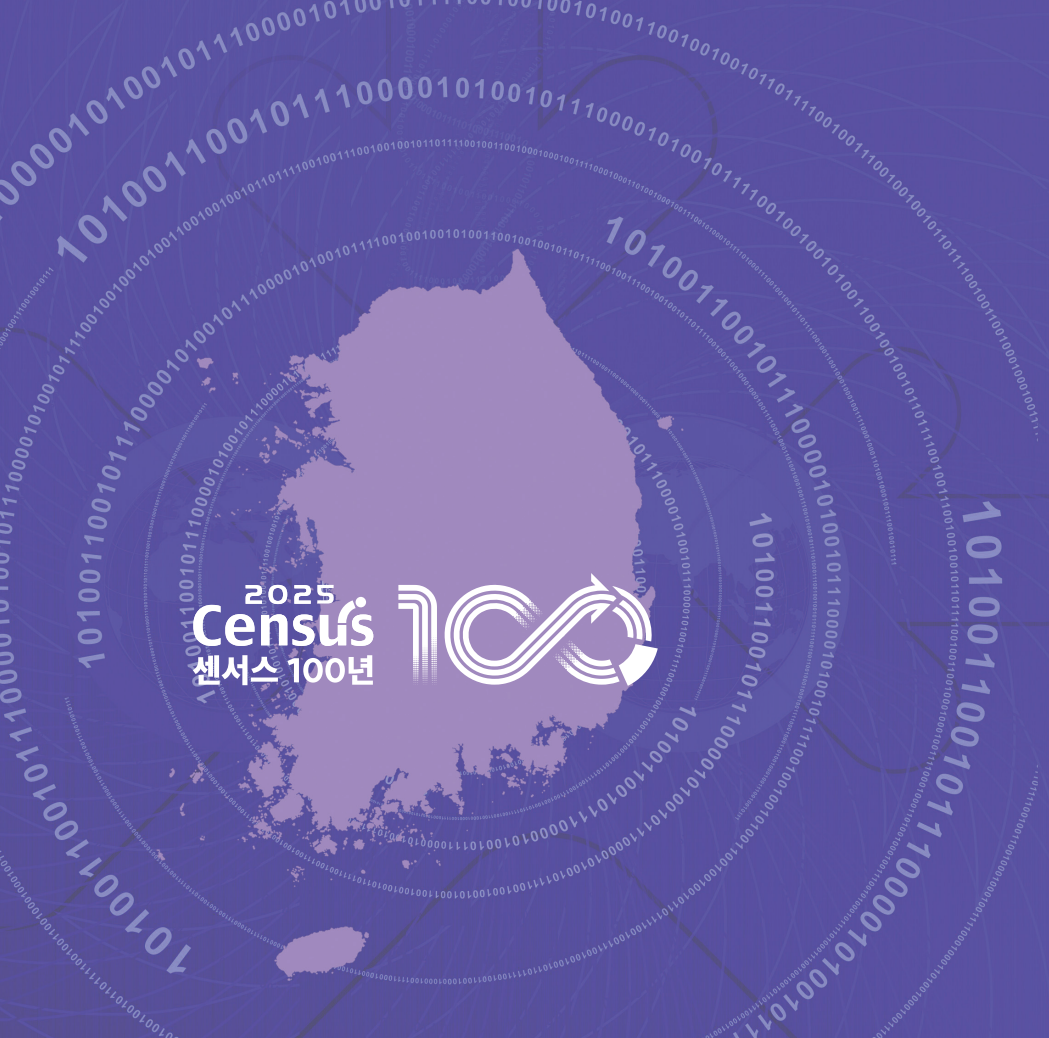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1925년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실시된 인구총조사는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로 식민통치와 전쟁동원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해방 이후 인구주택총조사는 정부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국가 제1의 기본통계조사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가족계획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었다. 1970~1990년대에는 수도권 집중과 인구이동, 교통 등 사회인프라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과 표본틀을 제공하였다. 2000년대에는 정보화와 국제화, 다문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는 정보통신 발달과 함께 인터넷조사 방식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항목을 등록센서스로 전환하면서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매년 등록센서스 결과를 작성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앞으로도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가 함께 인구주택총조사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자료제공 및 활용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3장

인구주택총조사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조대헌



1. 머리말

인구주택총조사는 일정 지역 내 모든 위치에 산재하는 총인구를 특정 시점에 동시에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인구의 총량뿐만 아니라 지리적 분포 양상을 파악해야 함은 물론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고려와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리적 속성은 조사의 기초가 된다. 특히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구역 체계, 즉 "센서스 지리(census geography)"는 데이터의 수집, 공표, 분석, 시각화 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센서스 지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행 및 결과 공표 등 전반에 관계되며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보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센서스 지리 관련 영역도 변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고 강력한 수단은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이다. GIS는 공간 정보와 실세계 객체의 속성 정보를 통합(연동)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리적 차원을 갖는 모든 종류의 공적, 사적 영역에서 지리정보의 취득, 입력 및 저장, 시각화, 분석, 서비스를 위해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국가 GIS(NGIS)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정부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GIS 활용 초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GIS 기반의 조사구 지도를 제작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수집된 데이터의 공표 및 서비스 부문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IS는 정보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데, 위치(지도)를 기반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GIS 활용으로 센서스 지리는 전통적인 구역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주택총조사 전반의 토대가 되는 공간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GIS 활용 동향을 살펴본 후, 인구주택총조사의 계획 및 실행, 집계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GIS의 활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GIS 활용 동향

미국은 센서스에서 GIS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50~1960년대까지 조사원 방문에 의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종이지도를 사용하여 조사지역의 범위와 특성을 나타냈다. 센서스 트랙(tract)과 조사구, 도로 및 조사 블록(block) 등이 표기된 지도와 별도의 주소 명부를 현장조사에서 활용했다. 현장조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각 조사구별로 개별 주택이 할당된 행정구역 및 센서스 트랙, 블록 목록 등을 정리한 지리 참조 파일(테이블)을 사용하기도 했다. 1970~1980년대에는 공간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 자동화를 시도하여, 위상구조를 활용해 도로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블록과 주소 범위 구축을 시도했다. 미국 센서스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DB를 게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영국 역시 센서스 지리를 활발히 연구하는 나라 중 하나로, 센서스 구역 자동 획정 방식 등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이건학·최은영, 2011). 1991년 센서스까지도 대축척 종이지도를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조사구 지도를 제작했으나, 2001년 센서스부터 주소기반 데이터와 함께 센서스 구역 지도 제작에 GIS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에는 조사구와 공표구역을 분리하여 우편 구역 기반의 새로운 공표구역(Output Areas, OA)을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Openshaw(1977)가 개발한 자동구획절차(Automated Zoning Procedure, AZP)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1)]

우리나라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하면서 래스터 지도(Raster Map)를 처음 사용하여 디지털 지도사용의 토대를 마련했다.[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구 설정에 수치 지도를 사용하면서 GIS 활용도가 높아졌다.

1) 자동구획절차는 목표 가구 수와 같이 일정 조건하에서 연접한 공간 단위를 자동으로 나누거나 합치는 절차를 의미한다.

2) 래스터는 격자를 구성하는 셀(혹은 픽셀)을 기본 단위로 하여 공간개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며, 벡터(vector)는 점, 선, 구역을 통해 공간개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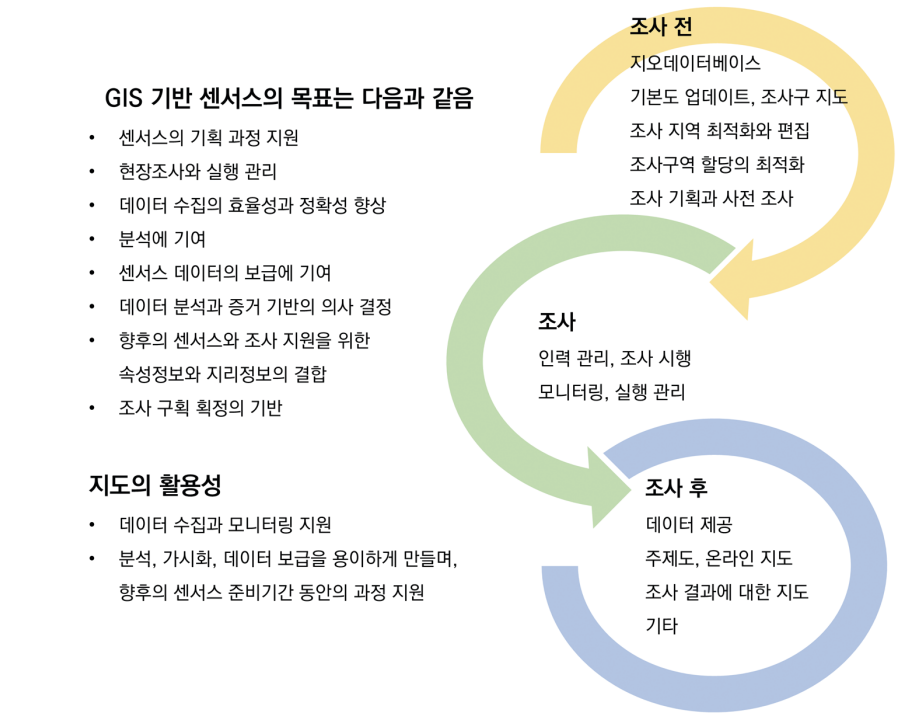


그림 3-1. 센서스 단계별 GIS의 활용

출처: Laaribi and Peters(2019).

오늘날 GIS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한 토대로 인식되고 있다(Peters and MacDonald, 2005). 일반적으로 GIS는 조사 시행을 위한 계획 및 준비, 시행, 시행 후 전체 단계에 걸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이건학·최은영, 2011; United Nations, 2008; Laaribi and Peters, 2019). Laaribi and Peters(2019)는 조사 전, 조사, 조사 후의 3단계 과정에서 GIS가 활용될 수 있는 바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3-1). GIS 활용은 총조사 계획 과정과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하며, 자료 수집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석 및 데이터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총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기초자료 및 지도의 갱신, 조사구역의 편집 및 설정(최적화), 지도화, 조사업무 할당(최적화) 등에 GIS가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조사구(및 공표구역) 설정 시에 경계 확인의 용이성, 행정 계층과의 일관성, 인구규모,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측

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GIS 구역 설정 기능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조사구에 대한 다양한 참조 정보(구역 경계, 도로, 건물, 주요 지형지물 등)와 함께 주소 정보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용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조사구역 내 조사대상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주소 및 참조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구 설정 과정과 결과, 그리고 조사용 지도는 GIS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로 설계되고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구축되어 유지·관리된다.

조사시행 단계에서 GIS는 조사원의 업무 관리, 현장조사 수행 지원, 결과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최근 모바일 GIS의 발전에 따라 조사현장에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소지하고 방문하여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총조사 실시 이후 단계에서는 자료 보급, 주제도 제작, 응답률 분석 등에 GIS가 활용될 수 있다.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 단위를 조직하여 집계하는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자료 집계는 최소 공간 단위인 조사구부터 시작해 행정구역 등 다양한 공간 단위로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GIS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정한 공간 단위로 집계된 자료는 다양한 방식의 주제도 및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주제별로 GIS 기반의 상호작용적 화면을 제공하거나 시각화 자료를 다양한 매체로 출판할 수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GIS 친화적인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술 연구, 도시계획이나 개발과 같은 공적 업무, 마케팅과 같은 민간 비즈니스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3. 인구주택총조사 계획 및 실행 과정과 GIS

1)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용 지도 제작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에 지도 및 GIS 도입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김설희(1993)는 센서스 지도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전 국토를 일정한 조사구로 구획할 때, 그리고 조사원이 조사대상 거처의 위치를 식별할 때, 관리자와 조사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업무 평가에 필요하다. 셋째, 조사 후 결과를 집계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넷째, 표본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와 시뮬레이션에 필요하다.

계획 단계에서 GIS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사구역의 설정 및 조사구에 대한 지도(조사구요도) 제작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통계청의 기본 지도를 바탕으로 읍면동에서 현지 정보를 통해 조사구를 가설정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심사하여 승인 후 조사구요도를 작성했다(김영표·한선희, 1999)(그림 3-2).

2000년대 들어 통계조사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변화가 있었다. 다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읍면동의 지원을 통한 현지 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당시 통계청은 행정자치부의 수치 지도를 바탕으로 GIS를 활용한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를 구축하고, 조사구 지도를 제작하여 이용했다(이건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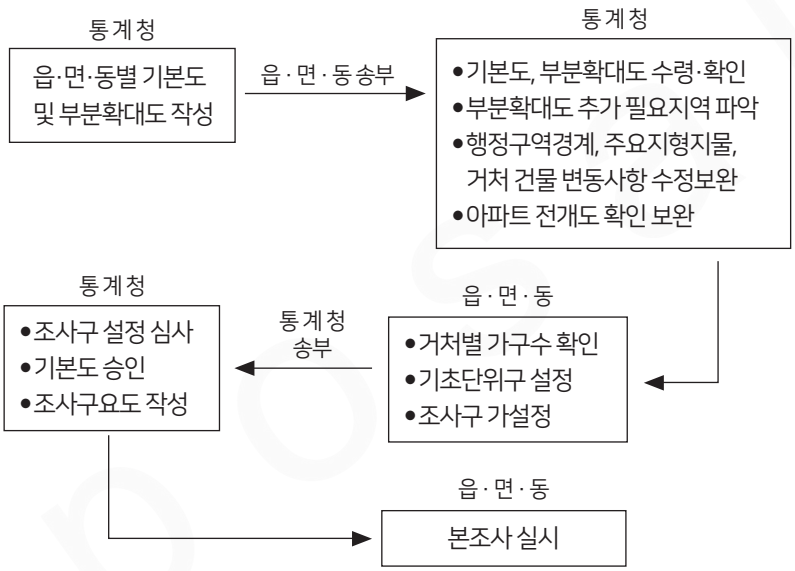


그림 3-2. 1990년대 조사구 설정 절차

출처: 김영표·한선희(1999).

그러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고, 통계청에서 조사구 설정부터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한 건물과 거처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조사구 설정을 위해 조사대상 가구 수 및 조사원의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으므로, 건물이나 도로 등이 표현된 지도가 필수적이었다. 2000년 이후 갱신된 행정자치부의 수치 지도, 건축물 인허가 대장 및 도면, 준비 조사(현장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조사구 경계 및 조사용 지도를 수정·보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GIS가 지도 제작 도구로 활용되었다(이건 외, 2006). 2000년대 초반에 도로명 주소 도입과 함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제작이 진행되면서 이를 수치 지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제작된 조사용 지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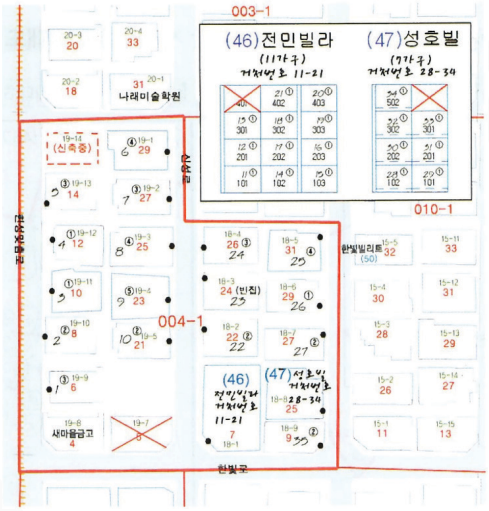


그림 3-3.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지도(조사구요도)

출처: 통계청(2005).

2000년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거치면서 조사 계획 단계에서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용 지도 제작과 관련한 GIS 활용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CAPI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위해 조사구 설정, 조사용 지도 제작, 출력을 위한 GIS 기반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 운영되었다. 이 시스템은 건물 및 도로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구역, 하천과 같은 주요 지형지물, 주소 DB(명부) 등을 통해 기본 지도 편집은 물론 조사구 설정도 가능하다. 구축된 조사구를 조회, 시각화(display)할 뿐만 아니라 가구 수 등의 정보를 통해 과대 조사구를 분할하거나 과소 조사구를 병합하는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조사용 기본도나 조사구요도 등을 제작·출력할 수도 있다(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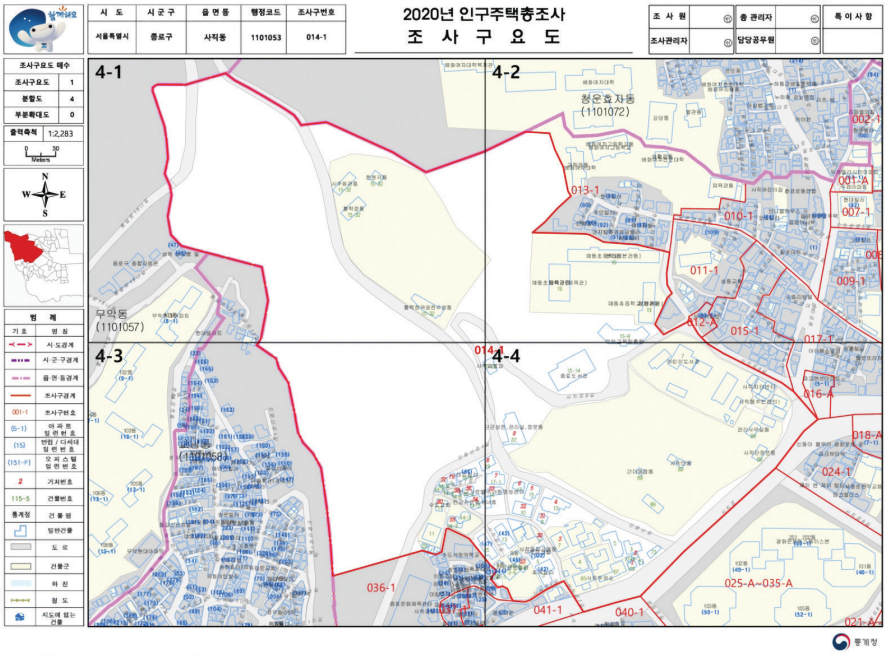


그림 3-4.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지도(조사구요도)

주: 붉은 선이 조사구 경계임.

출처: 통계청(2021a).

2) 집계구 및 다양한 통계구역 설정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통계 공표의 최소 공간 단위로 행정구역인 읍면동을 사용하였으나 소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 증대로 새로운 공간 단위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그림 3-5). 여러 선진국에서도 대체로 조사구역과 공표구역이 일치하다가 GIS 등의 발전으로 상호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강영옥 외, 2007).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집계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통계청, 2003), 조사 단위인 조사구와 준영구적인 통계 단위인 기초단위구[3]보다는 크면서 읍면동보다는 작은 집계구가 집계 및 공표를 위한 최소 단

3) 기초단위구는 집계구를 구성하는 세부 단위이자 토지 피복이나 지형 등 여러 면에서 동질적 기능을 가진 최소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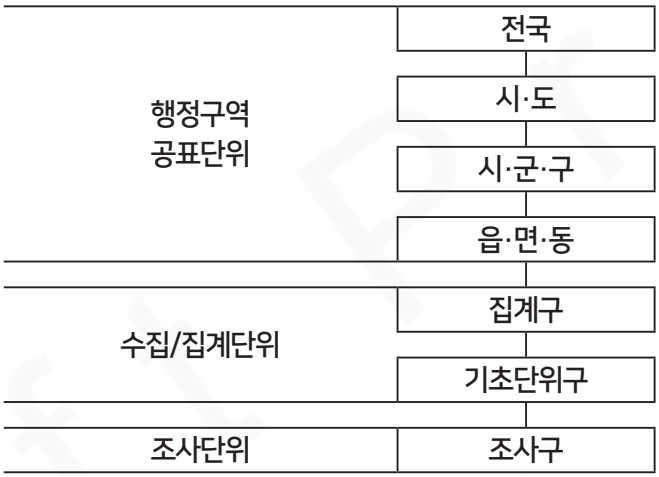


그림 3-5. 우리나라의 통계구역 체계

출처: 통계청(2017).

위로 설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조정된 GIS 기반 집계구 자동 설정 방법(AZP 알고리즘)을 활용해 집계구를 획정하였다(건설교통부, 2007; 강영옥 외, 2007; 강영옥·장세진, 2008). 집계구 획정 알고리즘은 개선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및 집계구 이외에도 통계 공개를 위한 다양한 통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공개용 단위 설정 및 통계 제공 시에도 GIS가 활용된다. 2023년 기준 통계청은 격자(최소 100m×100m), 집계구, 행정구역별 구역 경계와 통계뿐만 아니라 기초단위구 및 도시화 지역의 구역 경계를 별도 공개해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구역이나 집계구 경계와 무관하게 직각으로 교차하는 격자(grid) 단위의 통계를 제공한다. 시간에 따라 경계가 변화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나 집계구와 달리 격자는 고정된 단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시계열 변화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간 단위로 준항구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획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기초단위구의 구획 기준을 설정했고, 2002~2009년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제작 및 갱신했다. 기초단위구를 행정구역에 맞게 현행화한 결과 2016년 이후 전국에 약 40여만 개가 설정되어 있다(통계청, 2017).

행정구역이나 집계구에 비해 더 세밀한 수준에서 시각화나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통계청의 격자 설정은 국가지점번호 격자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격자를 구성하는 셀의 크기는 100m, 500m, 1km, 10km, 100km 단위이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이하 SGIS)에서는 행정구역을 비롯한 이들 통계구역의 경계에 대해 GIS 데이터 형식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인구주택총조사 실행에서의 GIS

인구주택총조사 실행 단계에서 GIS는 현장조사에서 파악된 새로운 정보를 조사구나 조사용 지도 DB에 반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표본조사에서 조사구 및 조사 지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정·보완한 내용을 GIS를 통해 입력했다.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조사구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종이 조사구요도 대신 CAPI 시스템에 지리정보를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서수희, 2019).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모바일 GIS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등록센서스가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 표본조사는 여전히 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2020년 대면조사에서는 태블릿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태블릿에 장착된 GIS 기반 지도와 GPS를 활용해 조사자와 조사 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했다(통계청, 2021a). 실시간 현장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현장조사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통계청, 2021b).

4.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집계 및 서비스

1)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집계 및 공간 DB 구축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를 바탕으로 인구를 집계한다.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도입으로 주민등록을 비롯해 다수의 행정자료를 종합하여 파악한 실제 거주 주소를 개인과 가구에 부여한다. GIS를 활용하면 주소와 집계구역 간 정보 연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당해연도 경계에 맞추어 재집계할 때도 효과적이다. 개별 인구나 가구의 주소가 지도상 위치(좌표)로 주어질 때, GIS를 활용해 시점별 경계 변동에 따른 집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GIS는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를 DB로 구축하고, 이를 다시 서비스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조사구 및 집계와 공표를 위한 경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구역 경계에 대해 집계된 통계 결과를 연계함으로써 GIS 기반의 인구주택총조사 DB가 구축된다(표 3-1). 통계청에서는 200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GIS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표 3-1. SGIS 공간 DB 구축 현황

자료명	세부내용	구축 기준년도	수량
센서스 지도DB	건물, 도로, 철도, 하천, 등고 등	2022년 6월	10,725,259건(건물 기준)
행정경계 DB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00~2022	○ 시도: 379건 ○ 시군구: 5,731건 ○ 읍면동: 80,715건
통계경계 DB	기초단위구, 집계구, 도시화지역, 인구 및 사업체 조사구 경계 등	2022년 2분기	○ 기초단위구: 544,050건 ○ 집계구: 104,292건 ○ 도시화: 899건
개별 위치정보DB	인구(거처), 사업체 개별 위치정보	2000~2021	○ 인구(거처) : 49,687,921건(2021) ○ 사업체 : 5,754,977건(2020)
사업체 전개도	사업체 전개도(정면도, 평면도)	2020	42,546매
소지역별 공간통계정보 DB	집계구 및 격자별 인구, 사업체, 농림어업관련 통계정보	2000~2021	(집계구별) 477,626,220건 (격자별) 491,716,283건
공공데이터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CCTV, 도서관 등 총 16종에 대한 공간정보	2013~2020	910,258건
지하철 승·하차 현황	역별, 일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수	2021	419,524건
학교 현황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2021	11,978건
버스정류소 위치정보	버스정류소 좌표	2021	184,436건
주택실거래가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거래현황	2013~2021	11,237,661건
공시지가	대지	2021	5,744,822건

출처: 통계청(2023a).

2) 인구주택총조사 온라인 서비스

인구주택총조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 비즈니스,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이다. 이를 공표할 때 GIS를 활용해 지도와 함께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SGIS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통계를 GIS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SGIS는 2006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양방향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발전 중이다.

SGIS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가운데 인터넷 GIS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다양한 공간 단위로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통계주제도와 대화형통계지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의 다양한 항목에 접근할 수 있다(그림 3-6). 통계주제도는 행정구역(읍면동, 시군구, 시도) 단위로 미리 지정된 항목을 단계구분도나 도형표현도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화형통계지도는 사용자가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지표 및 세부 지표(특정 연령 인구, 1인 가구 등)를 직접 선택하여 행정구역과 집계구, 격자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SGIS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총조사시각화지도, 도시화 분석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총조사시각화지도는 인구 및 가구 등에 대해 기본 주제도와 성별·연령별 인구 그래프, 통계표 등을 함께 제공해 방대한 통계에 대한 직관적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SGIS는 인터넷 GIS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기본 통계는 KOSIS를 통해 행정구역 단위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집계구와 격자 단위 통계자료는 SGIS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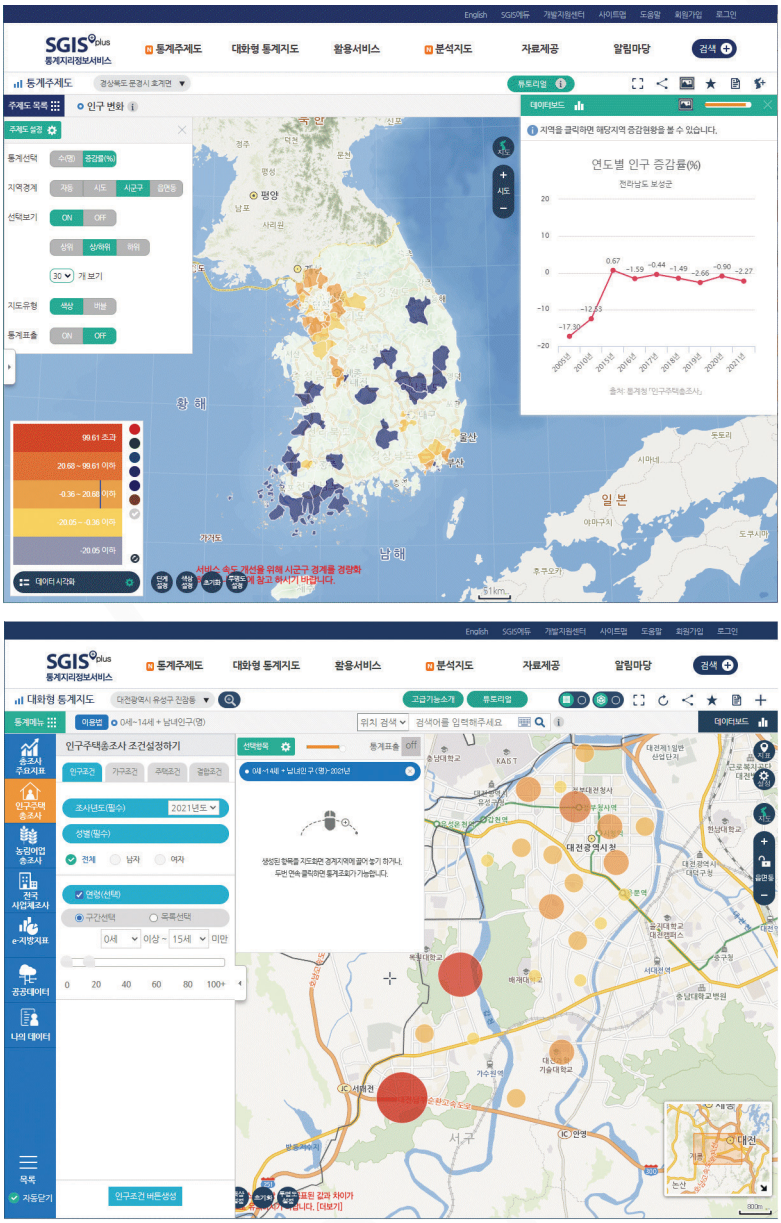


그림 3-6. SGIS의 주제도 서비스

주: 위는 통계주제도, 아래는 대화형 통계지도임.

출처: 통계청, SGIS(https://sgis.kostat.go.kr/).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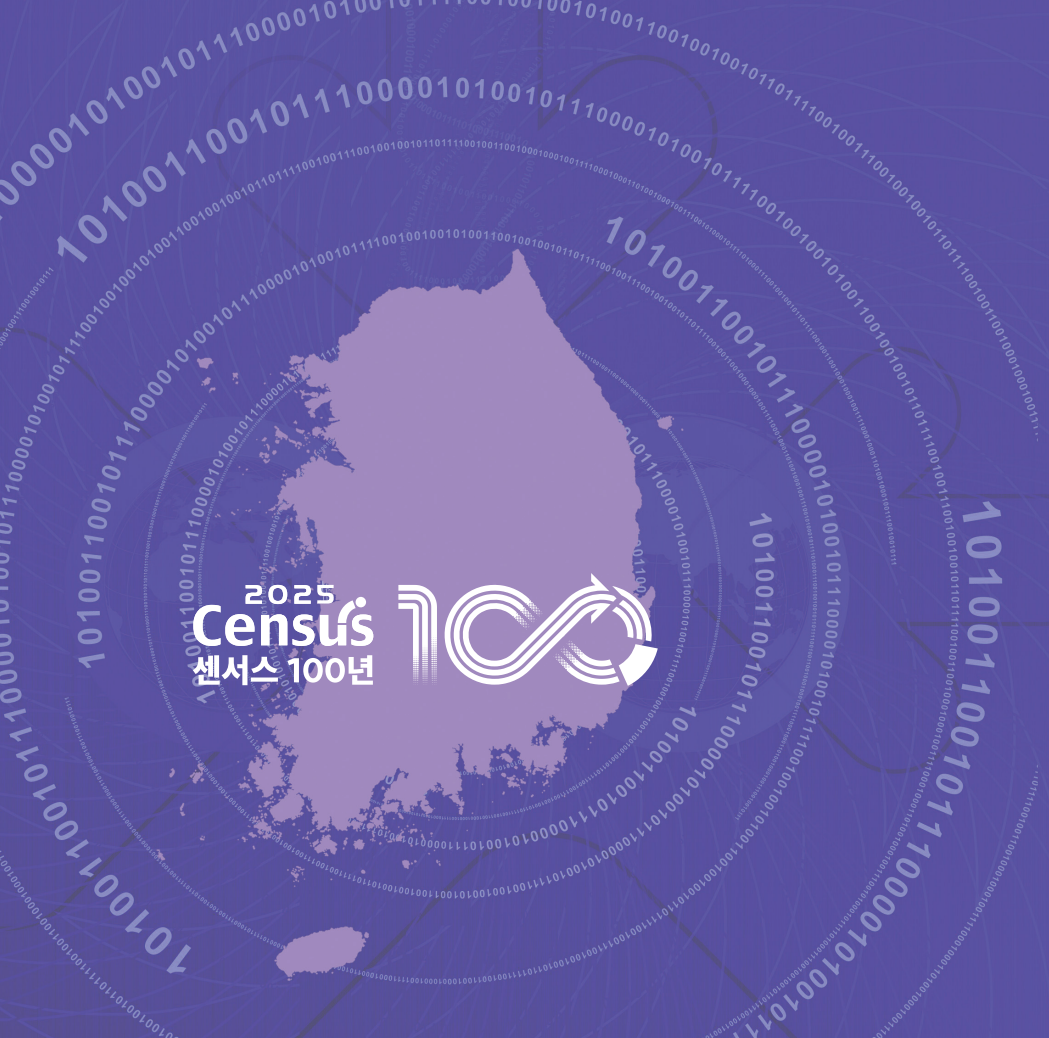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는 계획, 준비 및 서비스 등에서 높은 수준의 GIS 활용도를 보인다. 그러나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GIS의 역할은 아직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구역 정보 및 참조 정보의 유지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GIS 기반의 인구주택총조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조사대상(개별 인구 및 가구, 거처)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GIS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적인 GIS 환경 구축을 위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개별 인구 및 가구의 위치 정보는 주소 명부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도(좌표) 기반의 거처 및 주택과의 연결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주소와 연관되는 실제 위치(좌표),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건물(세부 주택 정보) 간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조사대상과 조사구 및 집계구를 체계적으로 연동해 경계 변경에 따른 조사대상도 원활히 관리해야 한다. 개별 조사대상부터 조사구역, 집계구역, 행정구역 등이 GIS 환경에서 일관성 있게 연계되면 등록센서스 실행 과정에서 경계 변동을 즉각 반영하는 GIS 기반의 집계가 가능해진다. 셋째, 효율적인 집계를 위해 대면조사를 통한 현장 정보 확인 및 입력에 있어 주소에 따른 좌표가 함께 사용될 때 집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최신 항공사진 등을 통해 거처의 신축이나 멸실 상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변경 내역을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시스템을 인구주택총조사 업무 관리 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지도를 기반으로 조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인구 성장과 변천

전광희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혼란기를 거쳐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과 국가관리형 가족계획사업의 결과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IMF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년) 등 사회경제적 불안을 경험하면서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했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추락했다. 사실상 무자화(無子化) 시기에 진입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할 만큼 극단적으로 낮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감소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인구폭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구증가'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고전적 인구변천이 끝나고 포스트 변천기에 진입해 인구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인구변동'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1] 인구변동은 인구의 총량(규모, 크기)과 함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을 포괄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지난 100년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근간으로 한국의 인구변천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한다(표 4-1). 전통적 성장기(1910년 이전), 초기 변천기(1910~1945년), 인구학적 혼란기(1945~1960년), 후기 변천기(1960~1985년) 그리고 포스트 변천기(1985년 이후)이다.

1)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사망률과 출생률이 동시에 높은 전통적인 인구안정에서 사망률과 출생률이 동시에 낮은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성장 시대와 일제강점기인 초기 변천기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인구 추정치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전통적 조사와 1925년 국세조사 간 인구 추정치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고전적 인구변천 단계가 언제 끝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보통 합계출산율이 2.1명, 곧 순재생산률이 1.0명에 도달하는 시점을 인구변천의 종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에 도달한 1980~1985년을 후기 변천기의 끝으로 본다.

유럽 선진국이 150~200년에 걸쳐 인구변천을 끝낸 데 반해, 우리나라는 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 채 초저출산 체제로 이행했다. '제2차 인구변천'이라 불리는 포스트 변천기는 인구감소 상황으로 이어졌다. 인구구조가 안정화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21세기 초반부터 전개되는 인구감소에 대해 고전적 인구변천이 끝나고 새로운 포스트 변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인구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인구의 성장과 변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와 포스트 변천 단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구학적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 단계에 대해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이동의 각종 지표와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특성을 살펴본다. 특히 자연증가,[2] 조출생률,[3] 조사망률[4] 및 합계출산율을 중심으로 인구변천을 살펴본다.

2) 자연증가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를 말하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으로 계산된다.
3) 조출생률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0명당 총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4) 조사망률은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0명당 총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표 4-1. 우리나라 인구변천의 시기별 주요 특성

구분		전통적 성장기	초기 변천기	인구학적 혼란기	후기 변천기	포스트 변천기
기간		1910년 이전	1910~1945년	1945~1960년	1960~1985년	1985년 이후
총성장		증감 반복, 거의 정체화된 성장	사망력 개선으로 성장률 급상승	급성장 계속, 1945~1955년 정체적 성장	성장률의 지속적 감소	성장률은 0에 근접하다 자연감소로 전환, 감소 속도 가속화 전망
인구 변동 요인	출산력	고출산, 증감 반복	고출산	고출산, 증감 반복	급감 후, 출산율은 대체수준 근접	대체출산율을 밑돌다 1.0명 이하로 감소
	사망력	고사망, 증감 반복	전반적 감소	1945~1955년에는 고사망, 이후 감소	사망률의 지속적 감소	기대수명 증가, 조사망률 증가
	국제 인구 이동	영향력 미미	일본과 북중국(만주)으로 이동	국내귀환, 한국전쟁 후 피란민 유입	1970년 이후 해외 이민 증가	외국인 유입 증가
정치적, 사회경제적 상황		농업사회, 전쟁·질병·기근 등 요인	일제강점기, 수탈정책, 예방접종, 보건의료시설 도입	해방, 국토분단, 한국전쟁, 군사독재, 원조경제와 경제적 불확실성	고도 경제성장, 도시화, 가족계획사업	안정성장,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사회발전, 교육팽창, 라이프스타일 변화, 코로나19 팬데믹(2020~2023년), 일자리 부족, 경제 불안 심화, 주거비 증가

2. 해방 이전의 인구변천

1) 변천 이전 전통적 성장기(1910년 이전)

전통사회의 인구성장이나 인구규모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근대적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전에 남아 있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 당시의 인구변천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관련 최초 기록은 1세기 중국 역사서 『한서(漢書)』의 '지리지(地理志)'다. 이 책에 따르면 기원전 108년경 고조선 중심부였던 낙랑 지역에 6.3만 호, 40.7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는 빈번한 전쟁, 재난, 특히 흉년과 기근으로 인구 변화가 컸다.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에도 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 나라현 동대사(東大寺)의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 촌락문서(村落文書)는 신라 통일기 서원경(西原京), 현 청주시 부근의 전통사회 인구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역사적 인구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호구조사는 조선왕조가 건국되는 1392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일제강점기 전까지 실시되었다. 이는 지방의 각 군현에서 3년마다 작성한 호적의 총수를 전국적으로 집계하는 방식이었다(손병규, 2015). 그러나 조선시대 호적은 국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지방관청에서 주민 일부만을 파악한 문서에 가까워, 근대적인 의미에서 인구·가구 총수를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5] 호적대장은 신분제가 조금씩 변화하는 속에서도 조선후기까지 계속 작성되었고, 대한제국기의 광무호적(光武戶籍)과 일제강점기의 민적(民籍)으로 이어졌다.

조선시대의 인구증가 속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마다 호

5) 최근 조선후기의 단성호적이 발굴되고 전산화되면서 호적의 성격, 조사방식, 내용, 변천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는 권내현(2006, 2020), 손병규(2015), 권기중(2015) 등이 있다.

구조사가 안정적으로 실시된 1678년부터 1789년까지이다. 하지만 당시의 호구조사에서 호구 개념은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호구조사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한 한계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와 인구증가 추세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추정만이 가능하다(김두섭, 2002). 조선시대의 인구현상은 맬서스의 법칙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조선 왕조 후반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기근, 질병, 전쟁, 내란 등 억제 요인이 발생한 후 인구감소가 확인된다.

2) 초기 변천기(1910~1945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는 1925년에 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다. 1910~1925년의 15년 동안에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구 파악의 정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에 이시 요시쿠니(石南国, 1972), 차명수(2014), 박경숙(2009), 박이택(2008), 권태환(1975) 등은 당시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율에 대한 가정치와 추정치를 연구했다.[6)]

우리나라의 근대적 보건의료체계 형성 시기는 의사학(醫史學)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지만, 대체로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본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서양의 보건의료와 공중보건(방역, 종두 접종 등)이 일제의 식민통치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1920년경부터 조사망률이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반면 조출생률은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920년대 초반까지 소폭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초기 변천기의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4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인구는 2,590만 명으로 1925년에 비해 32.7% 증가했다(표 4-2, 그림 4-1).

6) 연구 간 추정치 차이는 크다. 이시 요시쿠니(1972)는 1910년 총인구를 1,550만 명으로 추정한 반면 권태환(1975)은 1,740만 명으로 추정했다.

표 4-2. 한국의 인구성장과 변천(192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기준일자	총인구	연평균 증가율
일제강점기(1910~1945년) 남북한 지역			
1925	10월 1일	19,523	–
1930	10월 1일	21,058	1.5
1935	10월 1일	22,899	1.7
1940	10월 1일	24,326	1.2
1944	5월 1일	25,900	1.6
해방 이후–남한 지역			
1949	5월 1일	20,189	–4.9
1955	9월 1일	21,526	1.1
1960	12월 1일	24,989	3.0
1966	10월 1일	29,160	2.6
1970	10월 1일	30,882	1.4
1975	10월 1일	34,707	2.4
1980	11월 1일	37,436	1.5
1985	11월 1일	40,448	1.6
1990	11월 1일	43,411	1.4
1995	11월 1일	44,609	0.5
2000	11월 1일	46,136	0.7
2005	11월 1일	47,279	0.5
2010	11월 1일	48,580	0.5
2015	11월 1일	51,069	1.0
2020	11월 1일	51,829	0.3

주: 해방 이후 남한 지역의 인구 중 1949년은 38선 이남, 1955년 이후는 휴전선 이남 기준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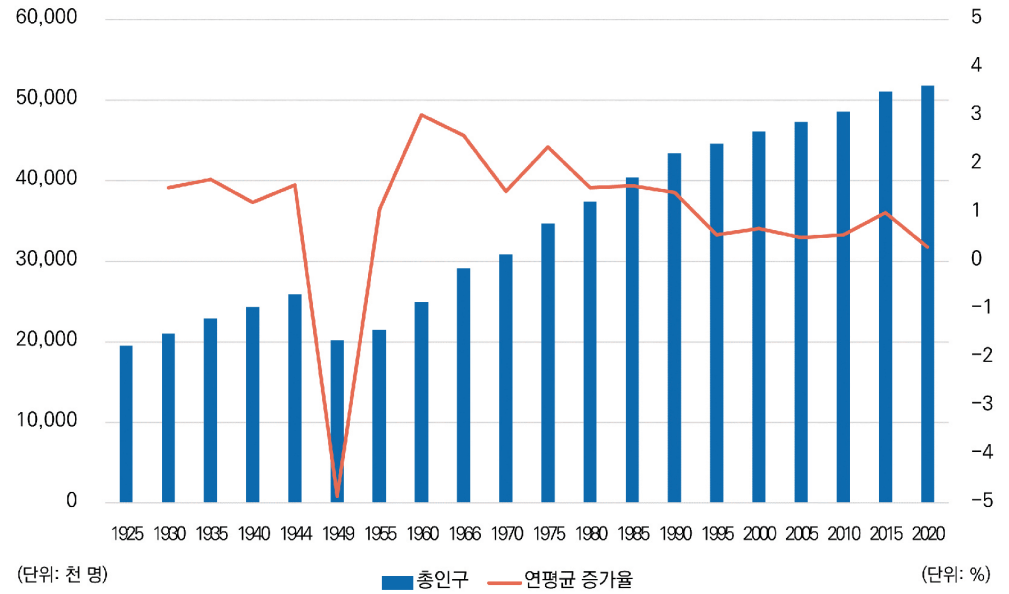


그림 4-1. 한국의 인구성장과 변천(1925~2020년)

주: 1) 좌축은 총인구(천 명), 우축은 연평균 증가율(%)임.
2) 해방 이전은 남북한 지역 인구, 해방 이후는 남한 지역 인구임.
3) 해방 이후 남한 지역의 인구 중 1949년은 38선 이남, 1955년 이후는 휴전선 이남 기준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초기 변천기 사망력 저하에 따른 인구의 빠른 자연증가는 토지에 대한 인구 압력을 가중시켜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경제정책에 따라 농촌 경제가 점점 악화되자 대규모 이농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도시 대부분은 산업화 수준이 낮아 이농 인구를 흡수할 여력이 부족했다. 이 시기에 이민의 목적지는 주로 만주와 일본이었다. 초기에는 함경도의 농민들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만주로 이동했고, 1920년 이후에는 일본으로의 노동이민이 이루어졌다. 1930년대 이후 만주로의 이동은 남한지역의 이농민이 주류를 이루었다(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해외이동은 1935~1940년에 가장 많았는데 남한지역 8개 도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발생했다. 이 기간 만주로의 순유출 규모는 51만 명에 달했다(김두섭, 1999). 1940년대 해외이동은 주로 일본의 태평양전쟁 개전과 함께 징병 및 징용의 형

태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대규모 해외이동은 사망력 저하와 함께 인구변동 수준과 추이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3. 해방 이후의 인구변천

1) 인구학적 혼란기(1945~1960년)

미군정(1945~1948년), 한국전쟁(1950~1953년), 4·19혁명(1960년), 5·16 군사정변(1961년) 등 해방 이후 15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인구 현상도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1945년 해방 당시 남한 인구는 약 1,6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945~1949년 사이 일본, 만주로부터의 귀환 인구가 많고, 남북한 사이 이동이 활발하여 정확한 인구를 추정하기 어렵다(Kwon, 1977).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혼란기(1945~1960년)에 남한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전쟁 중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이 대량 반입되고, 전쟁 후에도 의약품이 확산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사망률, 특히 영유아 사망률이 급감했다. 1955~1960년 조사망률은 16.1명으로 1950~1955년에 비해 51.2% 감소했다.

출산력은 1945~1960년 사이의 혼란기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전쟁 동안 부부 별거, 혼인 지연, 사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출산율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전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급등했다. 이는 전쟁 중 별거하던 부부들의 재결합과 연기된 혼인·출산의 동시적 발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45~1960년의 인구학적 혼란기는 1960년 이후의 인구성장, 국내 인구이동 및 사회경제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초혼연령이 여성은 1940년 17.8세에서 1960년 21.5세로, 남성은 같은 기간에 21.8세에서 25.4세로 상승했다.

2) 후기 변천기(1960~1985년)

일제강점기의 초기 변천기와 해방 이후 15년의 인구학적 혼란기가 끝난 후, 1960년대부터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나타났고, 후기 변천기로 전환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고전적 인구변천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시점으로 기록된다. 조출생률이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사망률도 계속 떨어졌다.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보다 훨씬 빨라 인구증가율도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후기 변천기 인구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인구 변화가 당시 경제성장을 지상 목표로 설정했던 국가의 인구관리정책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 베이비붐으로 상징되는 높은 출산율과 급감하는 사망률로 인구압력이 상당히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아제한(産兒制限)을 포함한 인구억제정책이 수립되었고, 1962년부터는 대규모의 국가관리형 가족계획사업이 착수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은 국가주도하에 강력히 추진되어 출산율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은 1970년 각각 31.2명과 4.53명을 기록하였으나, 1985년에는 16.1명과 1.66명으로 감소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사망률 감소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 남녀 기대수명은 1960~1965년에 각각 48.5세와 55.9세에서 1985년에는 65.9세와 72.7세로 증가했다(Kwon, 1977; 권태환·김두섭, 2002). 이 시기의 사망률 저하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 보건의료시설 확충, 국민건강보험 도입 등이 동시에 작용한 성과이다. 아울러 가족계획사업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유아사망률 및 여성의 출산 관련 사망률(모성사망률) 저하에 크게 기여했다.

후기 변천기 동안 국제인구이동은 제한적인 수준이었고, 자연증가가 인구변동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출산 연령기인 15~49세 여성인구 비중은 1960년 23.6%(589.7만 명)에서 1966년 22.6%(657.9만 명)로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1970년 23.6%(729.7만 명),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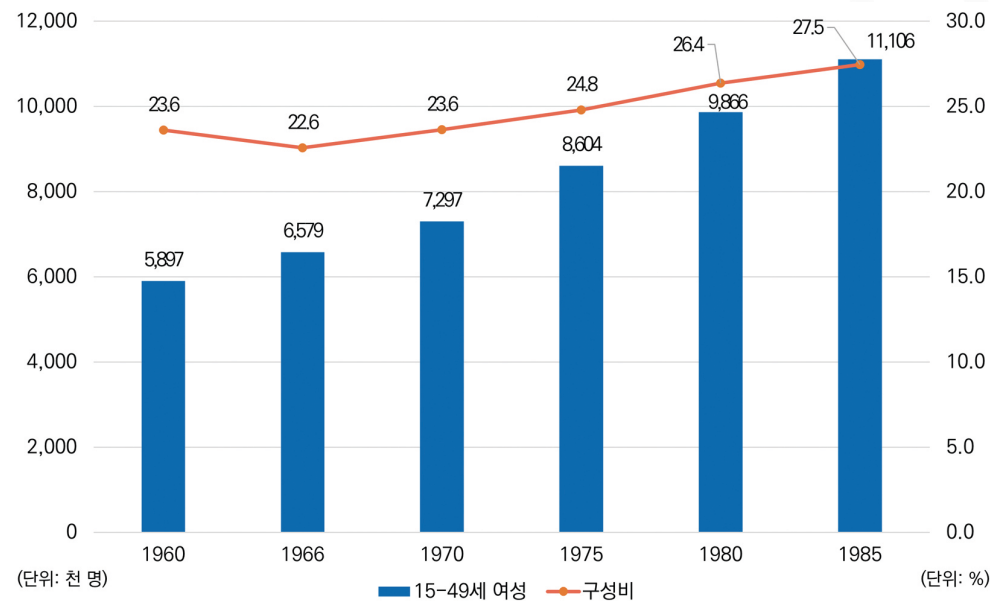


그림 4-2. 15~49세 여성인구와 총인구 대비 구성비 변화(1960~1985년)

주: 좌축은 15~49세 여성인구(천 명), 우축은 총인구 대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4.8%(860.4만 명), 1980년 26.4%(986.6만 명), 1985년 27.5%(1,110.6만 명)로 계속 증가했다(그림 4-2).

3) 포스트 변천기(1985년 이후)

포스트 변천 혹은 제2차 인구변천은 20세기 후반 이후 서구 사회에서 가족 구조와 인구의 주요 흐름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 가치관이 약화되고,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초혼연령 상승, 출산 연기, 비혼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 역시 빠른 산업화와 함께 출산율 감소 및 가족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으

며,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합계출산율은 2.0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1985년 이후 후기 변천기가 종료되고,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전후에 고전적 인구변천을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출산력과 사망력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고전적 인구변천 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한국의 포스트 변천기 인구변동은 유사사례를 찾기 불가능할 만큼 특이한 양상을 띠며, 특히 21세기 들어 심화하고 있다.

1985년 이래 우리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조출생률은 13.5명, 합계출산율은 1.48명을 기록했다. 생활수준 향상과 계층 상승 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저출산을 지향하는 가치관 및 태도가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정착되는 현상은 동아시아의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한국의 포스트 변천기는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약간 밑도는 저출산 시기, 2002년 이후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 시기를 거쳐, 2018년부터 1.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청년의 고용불안, 주거불안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초래한 인구체제이다. 게다가 출산 연령기 여성인구의 감소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인구는 자연감소로 전환했다.

조사망률은 1985년 5.9명에서 2005년 5.1명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 5.9명으로 다시 증가했는데, 25만 명 내외에서 증감을 보이던 사망자 수는 2010년부터 증가하여 2020년 30만 명을 초과했다(그림 4-3). 이는 고령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의 기대수명은 1985년 각각 64.6세와 73.2세에서 2000년에 각각 72.3세와 79.7세, 2020년 각각 80.5세, 86.5세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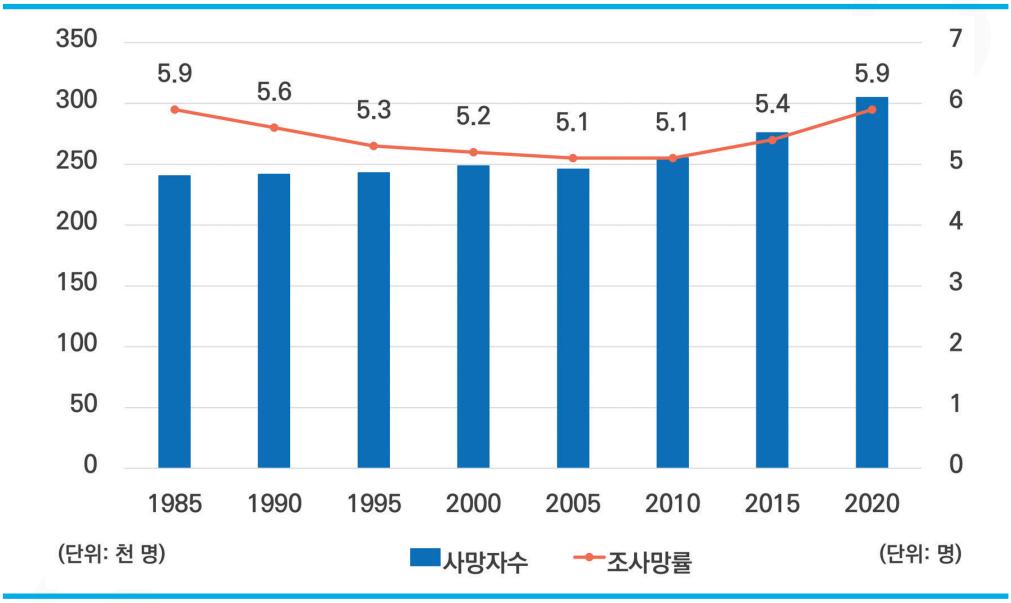


그림 4-3. 포스트 변천기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 변화(1985~2020년)

주: 좌축은 사망자 수(천 명), 우축은 조사망률(1,000명당 명)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포스트 변천기의 인구구조는 후기 변천기의 흐름에 이어 대변동하고 있다. 15~49세 여성인구 비중은 1985년 27.5%에서 1995년 28.8%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20년 23.0%까지 감소해 1960년대 후기 변천기 개시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했다(그림 4-4). 15~49세 여성인구의 구성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해도 출생아 수가 많아질 수 있지만, 포스트 변천기에는 점차 그 구성비가 줄어들고 있어 출생아 수가 많아지기 힘든 상태에 돌입했다. 포스트 변천기 35년간 조출생률은 1985년 16.1명에서 2020년 5.3명으로,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66명에서 0.84명으로 감소했다(그림 4-5). 출생아 수는 65.5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감소했다.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5~49세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이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인구감소는 가속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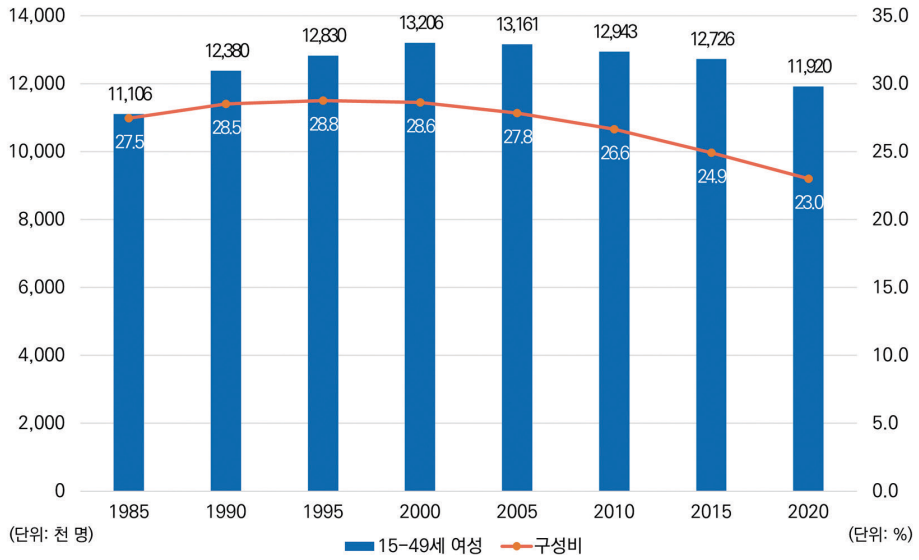


그림 4-4. 15~49세 여성인구와 총인구 대비 구성비 변화(1985~2020년)

주: 좌축은 15~49세 여성인구(천 명), 우축은 총인구 대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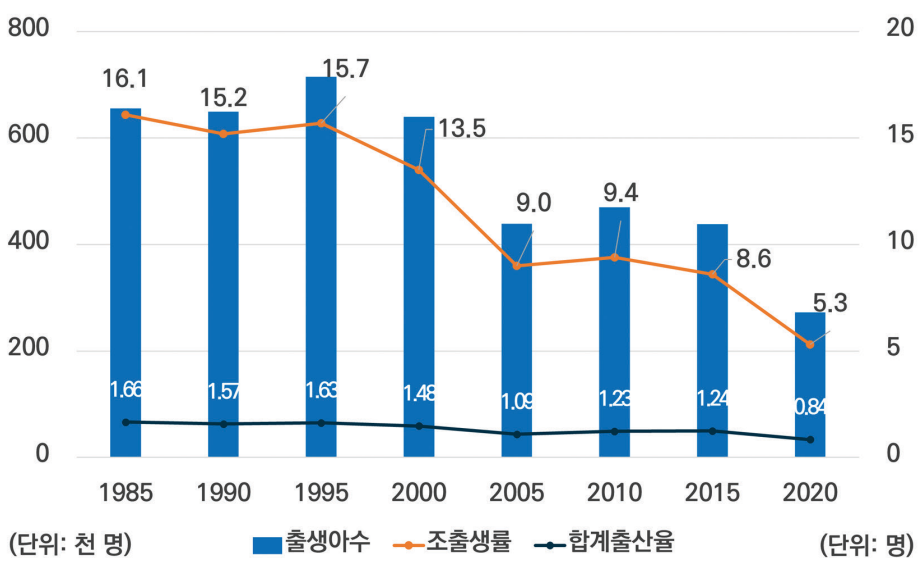


그림 4-5. 포스트 변천기 출생아 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변화(1985~2020년)

주: 좌축은 출생아 수(천 명), 우축은 합계출산율(명)과 조출생률(1,000명당 명)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4. 세계 속 한국의 미래

2020년 총인구는 5,182.9만 명으로, 223개 국가 중 26위에 해당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터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9번째로 인구가 많다.[7] 2020년 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7%를 차지한다(표 4-3).

한국은 1950년대 후반 베이비붐 시기에 기록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경험했지만, 1960년대 초반부터 증가율의 급격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에서 한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0.9%이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45년 0.5%, 2070년에는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970년 이후 인구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 정도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선진국의 인구구성비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초저출산 추이를 포함하여 대체수준을 밑도는 저출산 현상이 향후 50년 이상 지속된다면 선진국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선진국 인구 구성비는 1950년 32.3%에서 2020년에 16.3%로 낮아졌으며, 2045년 13.5%, 2070년 11.8%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후반이 되면, 세계 인구의 약 88%인 90억 명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거주하게 되는 셈이다.

7)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09.05.

표 4-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추세(1950~2070년)

(단위: 백만 명, %)

구분	1950	1975	2000	2020	2045	2070
세계	2,499	4,069	6,149	7,841	9,468	10,2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선진국	806	1,041	1,190	1,276	1,275	1,215
	32.3	25.6	19.4	16.3	13.5	11.8
개발도상국	1,693	3,029	4,959	6,565	8,193	9,082
	67.7	74.4	80.6	83.7	86.5	88.2
한국	20.4	35.3	47	51.8	48.8	37.2
	0.8	0.9	0.8	0.7	0.5	0.4

주: 2045~2070년의 한국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나머지는 유엔의 World Population Prospect 2022 Revision의 추계결과를 인용함.
자료: UN DESA(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KOSIS).

5. 맺음말

이 장에서는 한국 인구의 성장을 인구변천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초기 변천기와 인구학적 혼란기를 지나 후기 변천기에 접어들 때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3%로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형 인구정책인 가족계획사업으로 15년 만에 인구변천을 끝내면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을 밑돌기 시작했다. 이후 35년가량의 포스트 변천기를 보내면서 제로 성장에 접근하다가 인구감소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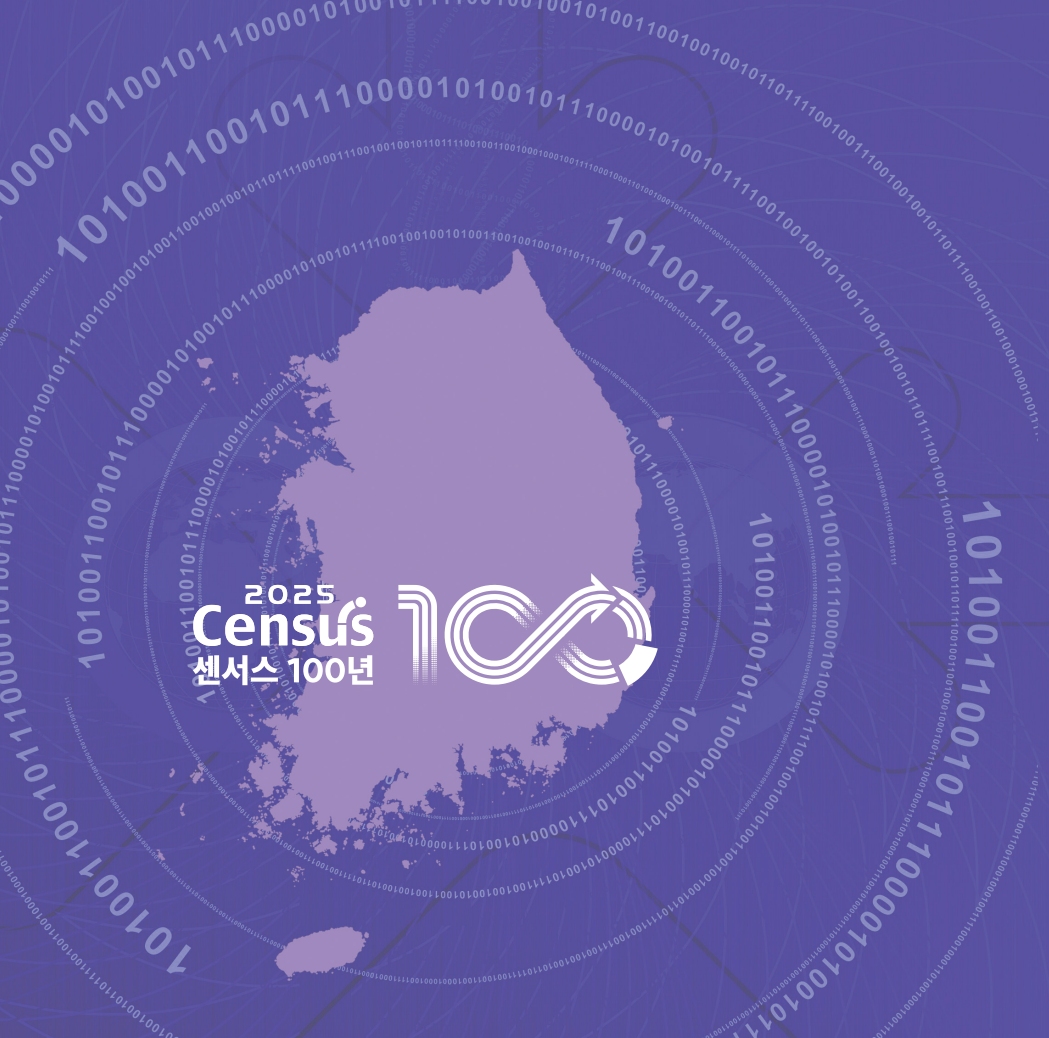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에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거쳤다. 사망률은 191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1960년대 경제발전과 국가관리형 가족계획사업에 의하여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2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하고, 2017년 이후에는 연이은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절대인구 감소는 여러 부문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이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급속한 인구변천에 따른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장

인구 성·연령 구조

이삼식 · 오경림



1. 머리말

인구현상은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현상은 출생과 사망 및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인구규모와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 과거 남아선호사상과 의료기술 발전은 출생성비와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를 초래하여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이래 10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실시되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회현상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이다. 이 장에서는 지난 100년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조 변화를 사회 변화와 연계하여 진단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개념과 범주

인구의 성별 구조는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성비(sex ratio), 연령 구조는 총인구 중 특정 연령계층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연령층은 기본적으로 5세 집단을 적용하며, 유엔에서 분류한 0~14세(유소년인구), 15~64세(생산연령인구), 65세 이상(고령인구)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조사범위의 변화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난 100년간 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조를 비교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 자료의 상한연령이 1949년은 60세 이상, 1955년은 75세 이상으로 설정되었고, 하한연령은 1949년 10세 이하로 제공되어 일관된 기준으로 연령구조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960년 연령별 자료는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공표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1910~194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북한까지 포함했다. 해방 이후 실시된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는 38선을 경계로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는 한국전쟁(1950~1953년)으로 만들어진 휴전선 이남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1925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기준에 따른 시계열 분석을 위해 1925년부터 1949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현재의 영토에 맞게 경계를 조정했다. 1925년, 1935년,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연령별 자료를 시(또는 부)와 군의 하위 행정구역 단위까지 제공하고 있어 현재 기준의 한국 영토에 따라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 1940년, 194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연령별 자료를 시도 단위로만 제공하고 있어 현 영토 기준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성별·연령별 구조는 1930년, 1940년, 1944년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했다. 또한 2010년 이전은 내국인 기준, 2015년 이후는 총인구 기준으로 분석했다.

3. 성별 구조

1) 전체 인구의 성비

1925년 이래 100년 동안 전체 인구의 성비는 출생성비, 남녀 간 사망률 격차, 국제이동의 성 선택성(sex selectivity) 등 크게 세 가지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성비는 주로 국제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만주로의 이주는 주로 농업노동력의 유출이었고, 일본으로의 이주는 강제징용과 징병에 의한 것으로 남성 선택성이 강해 성비는 1925년 105.2에서 1935년 103.7로 낮아졌다(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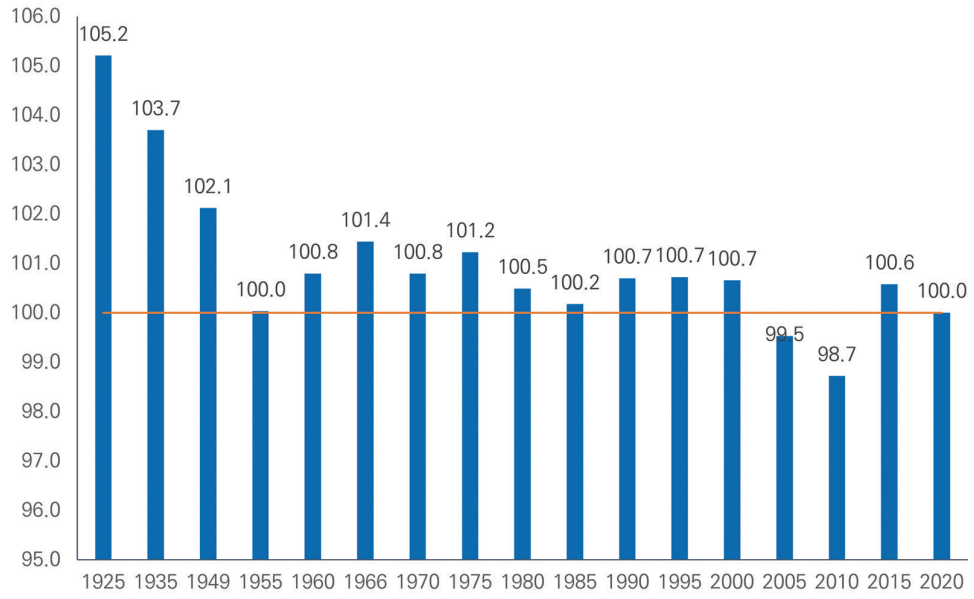


그림 5-1. 인구의 성비 변화(192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해방 직후 격동기에 발생한 해외동포 귀환이라는 강한 남성 선택성은 20~40대의 성비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대규모로 징집된 20대 남성의 인명 손실을 야기하였고 1955년에 실시된 총조사에서 전체 인구 성비는 100.0까지 낮아졌다.

1960년대에는 한국전쟁의 피해가 컸던 20대 코호트의 성비가 연령 진행에 따라 일부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의 성비도 1960년 100.8, 1966년 101.4로 다소 높아졌다. 1970년대의 성비는 1970년 100.8, 1975년 101.2로 196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이주 규모가 작았고, 한국전쟁과 같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만한 역사적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성비가 1980년 100.5, 1985년 100.2로 다시 낮아졌다. 이는 여성사망률이 남성사망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1980년 2.82명에서 1983년부터 인구대체수준(2.06명)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모성사망률이 감소한 영향이며, 고연령층에서도 성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성비는 1990년에 들어 소폭 높아진 후 1990년부터 1995년, 2000년까지 100.7을 유지했다. 이 시기에는 저연령층 성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초음파 기기가 상용화되면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하며 출생성비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국제이주의 영향이 적고, 출생성비가 자연수준에서 안정화된 상황에서 여성 사망률이 남성 사망률에 비해 더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전체 인구의 성비는 2005년 99.5, 2010년 98.7 등 100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100 이상을 회복해 2015년 100.6, 2020년 100.0을 기록했다. 여성 사망률이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해 추가적인 개선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반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남성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어 고연령층 성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출생성비를 포함한 연령별 성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2) 연령별 성별 구조의 변화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비율은 신생아의 성비인 출생성비, 남녀 간 사망률, 국제이주자의 성별 차이, 즉 성 선택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1) 출생성비의 영향

학술적으로는 105 내외를 자연적인 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로 간주한다(한국인구학회, 2006). 출생성비는 출생 직후 시점의 성비이고, 0~4세 성비는 이보다 후속시기의 생존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 둘은 개념상 구분된다. 하지만 0~4세 성비는 출생 성비와 영유아기 사망률을 포함한 인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해 0~4세 성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1925년과 1935년 0~4세 인구의 성비는 각각 103.9, 103.7로 자연 출생성비 수준보다 낮았다(표 5-1). 강한 남아선호 사상에도 불구하고 남아를 선택적으로 낳기 위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의료인과 의료시설 부족, 여성의 과중한 노동, 신생아를 둘러싼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영아사망률이 아주 높았다(구병준, 2020). 0~4세 인구 성비는 1955년 106.7, 1960년 105.3, 1966년 107.2, 1970년 106.8, 1975년 107.4, 1980년 107.3 등 106~107 수준으로 자연 출생성비를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0~4세 인구의 성비는 1985년 108.0, 1990년 111.2에서 1995년에 고점인 113.4를 기록할 때까지 상승했다. 하락세가 시작된 후에도 2000년 110.2, 2005년 108.1로 높았으며 2010년부터는 자연 출생성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추이는 출생성비가 1981년 107.1에서 1990년 116.5에 정점을 이룬 후 2000년대 초까지 108 수준을 상회한 추세와 일치한다. 출생성비의 급격한 상승은 당시의 여아 임신중절 현상과 관련된다. 1980년대 초에 초음파 검사 기기를 도입하고 1980년대 후반 상용화하면서 출생 전에 태아의 성별을 감별할 수 있게 되었다(전효숙·서홍관, 2003). 의료기술 발달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

하는 경향과 남아선호와 맞물리며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에서 1990년 1.57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심화하였다.

표 5-1. 연령별 성비 변화(1925~2020년)

구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1925	103.9	108.1	109.0	107.7	105.5	104.8	109.3	110.1	112.9	110.0	107.3	96.2	88.2	80.0	75.9	67.2	60.7	45.5
1935	103.7	105.7	106.6	107.7	103.4	101.1	103.1	104.6	107.5	106.9	107.7	101.7	97.6	86.5	79.4	69.0		58.1
1949		103.7	104.0	103.7	101.1	103.3	106.3	106.8	106.4	103.5	100.0	91.3						82.3
1955	106.7	109.1	109.8	110.4	85.4	79.0	95.6	100.4	101.2	110.0	98.6	92.5	82.6	76.8	73.1			64.6
1960	105.3	107.4	110.3	110.1	106.5	92.0	87.7	94.3	101.7	100.4	100.9	92.2	83.3	75.6	68.5	65.4	60.3	51.2
1966	107.2	107.6	107.2	106.9	109.9	98.9	99.2	89.7	95.9	100.6	96.6	91.3	81.9	71.8	64.7	56.9	52.1	45.5
1970	106.8	107.6	107.3	103.8	106.1	99.0	102.3	97.4	89.7	95.9	97.8	91.2	83.3	71.6	62.1	53.2	45.8	39.8
1975	107.4	107.0	107.8	105.0	106.6	102.9	103.5	103.1	96.8	86.8	92.9	91.7	83.0	73.4	61.0	50.2	40.7	33.4
1980	107.3	106.8	106.8	106.5	104.1	100.0	105.5	102.8	102.8	95.1	85.0	86.5	83.2	72.5	61.5	47.8	36.4	26.9
1985	108.0	107.1	106.7	106.6	106.1	99.2	104.2	105.4	102.8	99.7	91.4	79.3	77.7	73.7	61.3	49.6	35.6	25.0
1990	111.2	107.3	106.0	103.9	109.1	99.5	103.8	106.1	107.4	102.3	97.9	88.3	74.7	71.6	64.5	51.3	39.1	24.9
1995	113.4	110.7	106.4	105.9	108.3	100.9	103.0	103.6	105.9	104.9	99.4	93.3	82.0	67.5	62.6	54.4	40.7	27.4
2000	110.2	113.6	111.4	107.7	111.4	100.9	102.1	102.3	103.2	102.8	101.7	95.1	87.8	75.9	61.1	54.3	44.9	29.8
2005	108.1	109.2	112.2	110.3	109.7	102.5	101.2	100.9	102.0	101.2	99.9	97.9	90.5	81.8	69.6	54.5	46.3	33.7
2010	106.1	108.0	109.0	113.3	113.7	103.8	102.0	101.0	100.6	100.8	98.8	96.8	93.9	85.1	75.3	61.0	45.4	34.8
2015	105.4	106.5	108.4	109.4	114.9	112.5	108.9	106.2	104.6	102.1	102.0	99.1	95.7	92.1	81.3	68.3	51.5	33.9
2020	105.3	105.2	106.4	107.9	110.0	114.8	111.8	107.4	104.6	103.1	100.8	100.4	97.0	92.6	87.6	74.7	59.7	37.8

주: 1935년은 80세 이상, 1949년은 60세 이상, 1955년은 75세 이상 성비를 통합하여 제시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010년 이후 0~4세 인구의 성비는 2010년 106.1, 2015년 105.4, 2020년 105.3 등으로 105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정부가 '인구자질 향상' 정책 기간(1996~2004년)에 출생성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1987년에 「의료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성감별 행위를 금지했으며, 1994년 「의료법」 제67조를 개정하여 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1985년에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출가 여성의 직계존속을 포함했다. 1989년에는 「가족법」을 개정하여 여성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속에서 평등한 권리를 인정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남아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출생성비는 점차 자연수준을 회복했다(Yoo et al., 2017; Lim et al., 2021).

0~4세 인구 성비의 변화는 연령 증가에 따라 이후 연령층의 성별 구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0~4세 인구의 성비는 1995년 113.4로 가장 높았는데, 5년이 경과한 2000년 5~9세 인구의 성비도 113.6으로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10~14세 인구의 성비는 2005년 112.2, 15~19세 인구의 성비는 2010년 113.3, 20~24세 인구의 성비는 2015년 114.9에서 정점을 기록했다.

(2) 국제이동의 영향

국제이동이 인구의 성별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 시기는 일제강점기(1910~1945년)와 1945년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1950~1953년) 직후까지이다. 일제강점기 초 국제이동은 주로 만주로 향했는데, 특히 농업경제가 악화되던 1935~1940년에 절정을 이루었다(박경숙, 2009). 만주 거주 한인은 1910년 20만 명으로 추정되나, 1938년에는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이상의, 2003). 또한 일제강점기에 상당수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동했다.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1937~1945년)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일본 본토의 부족한 노동력을 한국인으로 보충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위기에 몰리자 1944년 「국민징용령」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다. 그 결과 1944년에 한국 인구의 11.6%에 달하는 인구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이상호, 2005). 1925~1944년 사이 만주나 일본

으로의 이주는 노동력 이동과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남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이상의, 2003). 이에 따라 193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25년에 비해 20대에서 40대까지 성비가 모두 낮아졌다.

해방 후 남한으로의 국제이동은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해외동포의 귀환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분단에 따른 북한으로부터의 귀환자와 난민 이동이다(정기원 외, 199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260만 명이 남한으로 유입되었다. 이중 해외에서 송환된 인구는 180만 명, 북한에서 온 귀환자와 난민은 74만 명으로 추산된다(Kwon, 1977). 이들 이주자는 청·장년층에 집중되며, 성비는 144에 이를 정도로 남성이 월등히 많았다(이상호, 2005). 일본이나 만주 등에 거주한 해외동포 중 대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부분 해외에 잔류했고, 남성 노동연령층에서 선택적으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1945년 38선 남북 분단에 따른 북한으로부터의 난민과 이주민은 가족 단위 이주가 우세하여 성별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귀환 해외동포들이 20~30대의 성비를 높이는 작용을 했다. 1935년과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25~29세 인구의 성비는 101.1에서 103.3으로, 30~34세 인구의 성비는 103.1에서 106.3으로 그리고 35~39세 인구의 성비는 104.6에서 106.8로 각각 높아졌다.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24세 인구의 성비는 85.4, 25~29세는 79.0, 30~34세는 95.6으로 낮았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20~30대 남성이 동일 연령층 여성보다 더 많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남성은 20~29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면 여성은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1955년에 20~34세 코호트의 성비 불균형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이후 연령대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197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5~39세 인구의 성비는 97.4, 40~44세는 89.7, 45~49세는 95.9로 낮으며,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55~59세 인구의 성비는 88.3, 60~64세는 74.7, 65~69세는 71.6으로 다른 코호트의 동일 연령층에 비해 낮다.

한국전쟁 이후 국제순이동자 수는 1985년 2.5만 명, 1990년 1.6만 명, 1996년 6천 명, 2000년 8천 명으로 규모가 작으며, 2010년 8.2만 명, 2020년 11.3만 명으로 증가했

으나 인구의 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이삼식 외, 1999).[1)]

(3) 성별 사망률 차이의 영향

성별 사망률에는 질병이나 생활습관 등의 개인적·의학적 요인에 더해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전쟁과 같은 역사적·사회적 사건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전쟁은 남성 사망률을 증가시켜, 1949~1955년 20~30대 초반 성비의 극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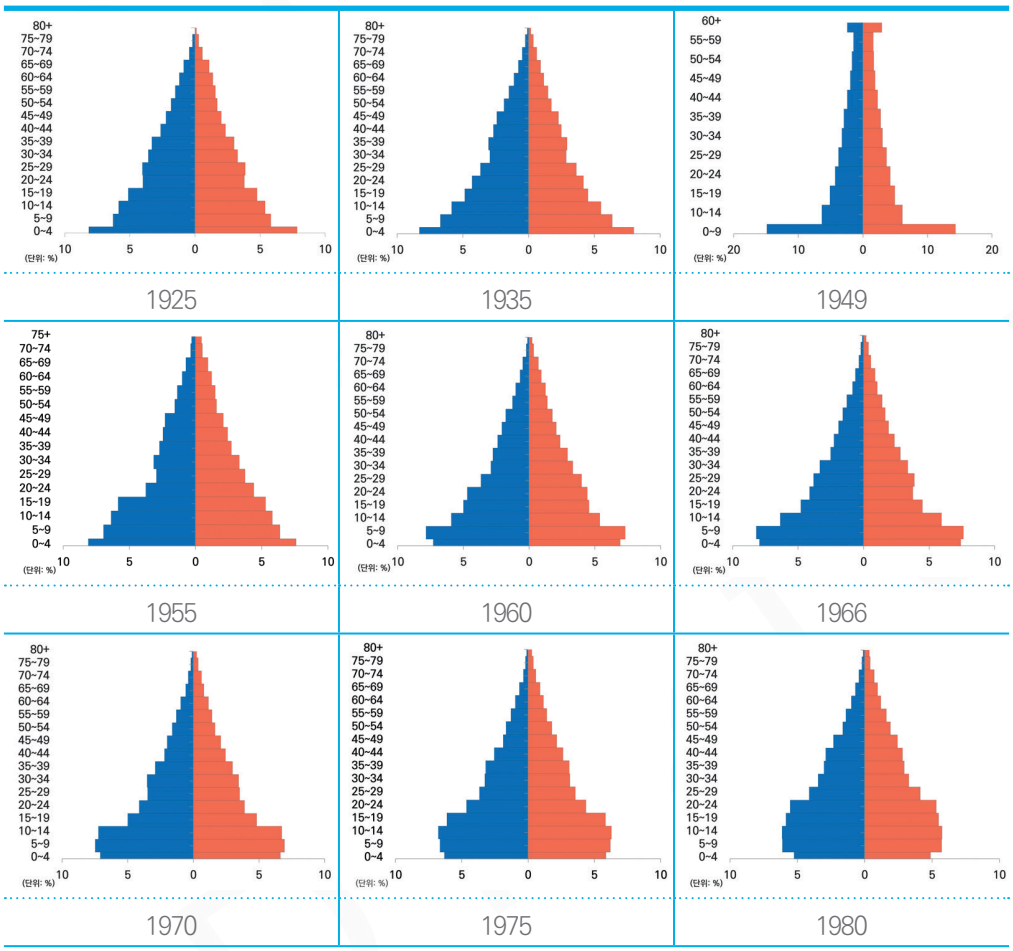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심혈관질환, 악성종양 등 만성질환과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하다. 남성은 흡연 및 음주, 불규칙한 식사와 같은 건강에 유해한 생활습관에 더 많이 노출된 반면 여성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와 의료기술 발달로 여성의 출산 관련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였다(Lee et al., 2005; Yang et al., 2012).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며, 고령층일수록 성비가 낮아진다.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연령별 성비는 고령층일수록 낮아, 85세 이상에서 51.2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는 고연령층의 성비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성 사망률이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남성 사망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 노인의 수가 남성 노인의 수를 초과하는 노인인구 여성화(feminization)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성비는 65~69세 92.6, 70~74세 87.6, 75~79세 74.7, 80~84세 59.7, 85세 이상 37.8로 여전히 낮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노인에 대한 지원과 부양은 중요한 사회과제로 볼 수 있다(김정석, 2005).

1) 통계청,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3.07.13.

4. 연령 구조

인구피라미드는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성별에 따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의 성별 및 연령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70년대까지 피라미드형을 띠며, 1980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다소 정체되는 종형(bell form)으로 변화하고, 2020년에는 전형적인 항아리형(pot form) 형태를 띤다(그림 5-2, 표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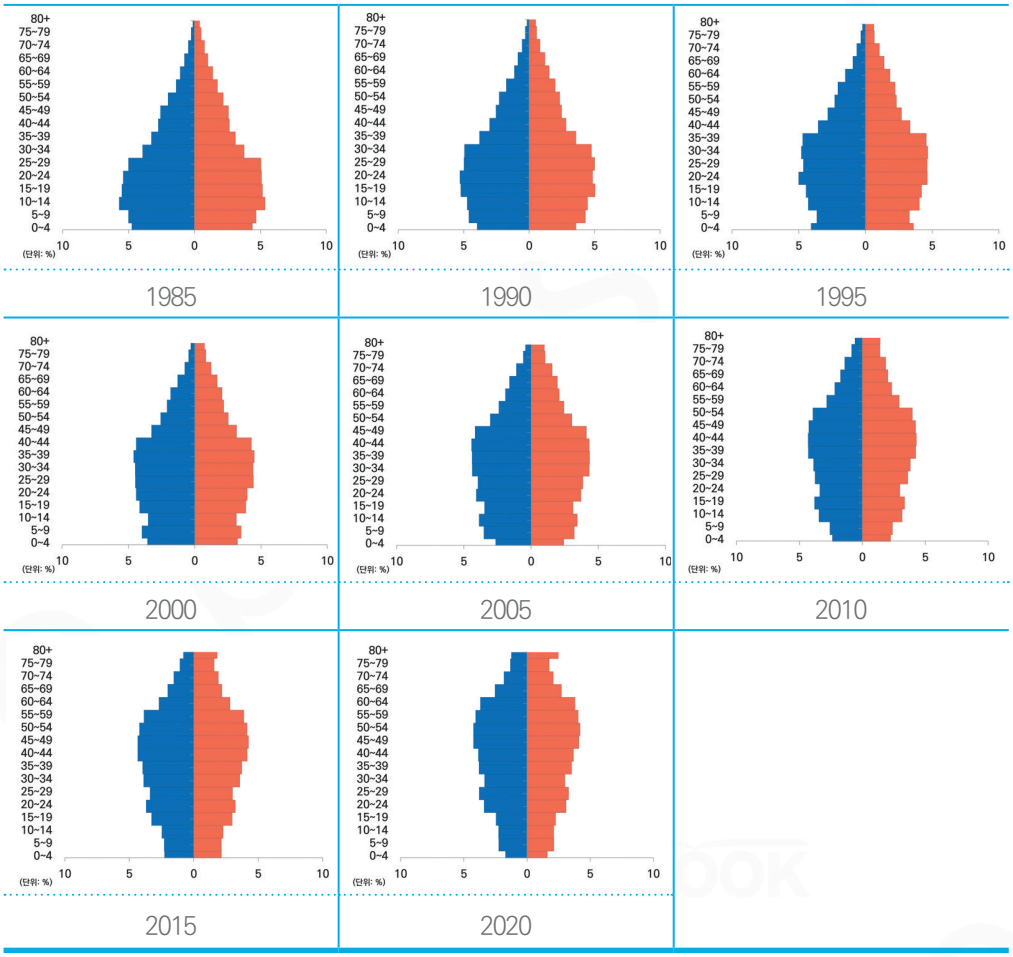


그림 5-2. 인구피라미드 변화(1925~2020년)

주: 파란색은 남성, 주황색은 여성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5-2.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1925~2020년)

(단위: %)

구분	전체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1925	100.0	39.3	57.1	3.6
1935	100.0	40.7	55.6	3.7
1949	100.0	41.7		58.3
1955	100.0	41.2	55.5	3.3
1960	100.0	40.7	55.6	3.7
1966	100.0	43.5	53.2	3.3
1970	100.0	42.1	54.6	3.3
1975	100.0	38.1	58.4	3.5
1980	100.0	33.8	62.3	3.9
1985	100.0	29.9	65.7	4.3
1990	100.0	25.7	69.4	5.0
1995	100.0	23.0	71.1	5.9
2000	100.0	21.0	71.7	7.3
2005	100.0	19.1	71.6	9.3
2010	100.0	16.2	72.5	11.3
2015	100.0	13.6	73.4	13.0
2020	100.0	12.1	71.9	16.0

주: 1949년은 자료의 한계로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 구성비를 통합하여 제시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 1925~1970년대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1925~1955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으로 아래 세대(코호트)일수록 점차 비중이 커진다. 이는 많이 태어나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많이 사망하는 이른바 다산다사(多

産多死)의 동태적 결과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20~24세, 1935년에 30~34세의 비중이 낮은데, 이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것이다. 1925년부터 한반도 남부의 미성년자들이 북부의 탄광과 공장으로 동원되어(Trewartha&Zelinsky, 1955), 1925~1930년 전체 이민자 중 15~34세 비중이 62%로 높았다(Kwon, 1977).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인 1925~1945년간 인구 감소율은 북부에 비해 남부에서 약 4배 더 컸다. 당시 고출산 경향에 힘입어 유소년인구(0~14세)는 1925~1935년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청장년층이 포함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해외 유출로 인해 연평균 2.3% 증가한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39.3%에서 40.7%로 높아진 반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7.1%에서 55.6%로 낮아졌다. 일제강점기에는 미흡한 보건의료와 열악한 영양상태 등의 이유로 오래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시 요시쿠니(石南国, 1970)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26~1930년 남성 32.4세, 여성 34.9세, 1931~1935년 남성 36.3세, 여성 38.5세, 1936~1940년 남성 40.6세, 여성 44.7세로 낮았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925~1935년간 연평균 2.7% 증가한 데 그쳤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5년 3.6%, 1935년 3.7%로 낮은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해방 후인 1949년 인구구조는 해외동포의 귀환, 북한 주민 남하의 영향을 받는다. 일본 정부가 1939년부터 일본의 사업주에게 한국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이래 1945년까지 동원된 조선인은 약 648만 명에 이른다. 1942년 이후 본격화된 일본으로의 주요 징용 대상은 젊은 남성이었다. 특히 1943~1945년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은 대부분 16~22세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국민동원계획으로 30세 이상 인구의 해외 이민도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1940~1945년 사이 해외 이주는 연령 선택성과 성 선택성이 강했다.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체류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상당수는 해방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귀환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9년까지 해외에서 귀환한 180만 명과 북한에서 귀환하거나 이주한 74만 명은 주로 단신으로 이동했던 청·장년층이었다(이상호, 2005). 전체 이민자 중 15~34세 인구의 비율이 1935~1940년 47%,

1940~1945년 64%로 높았다. 가족을 이룬 경우에는 대부분 이주한 지역에 잔류했기 때문에 남한으로 귀환한 이주 동포는 독신 비율이 높고, 20~40대 남성에 집중되었으며, 15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비중은 낮았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한 인구 가운데 해방 이후 복귀한 인구가 주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1949년 10세 이상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형에 가깝다.

1935년과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 간 유소년인구는 고출산 경향으로 연평균 2.4%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41.7%로 다소 높아졌다. 15~59세 인구도 해외로부터 귀환 등으로 연평균 2.2% 증가했다(표 5-3). 그러나 60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1.7%에 증가한 데 그쳤고,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1935년 5.7%에서 1949년 5.3%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시 요시쿠니(石南国, 1970)는 1942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남성 42.8세, 여성 47.1세로 1936~1940년 남성 40.6세, 여성 44.7세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낮아진 이유는 1945년 해방 직후 남한으로 유입된 해외동포나 북한 주민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젊고, 높은 출산율이 유지된 영향 때문이다.

표 5-3. 인구구조의 변화(1935·1949·1955년)

(단위: 천 명, %)

구분	1935	1949	1955	1935~1949 연평균 증가율	1949~1955 연평균 증가율
전체	14,839	20,167	21,502	2.2	1.1
0~14세	6,042	8,392	8,865	2.4	0.9
15~59세	7,914	10,663	11,443	2.2	1.2
60세 이상	844	1,076	1,194	1.7	1.8
60세 이상 비율	5.7	5.3	5.6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일제강점기에 만주 등으로 이주했던 인구의 귀환으로 대부분의 연령층은 복원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20~30대 남성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24.5만 명으로 남성은 16.6만 명, 여성은 7.9만 명에 달했다(내무부 통계국, 1953). 한국군 사망자 수는 13.8만 명으로 추정되며, 20~30대 초반 남성이 주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1949~1955년 15~59세 인구는 연평균 1.2% 증가한 데 그쳤다. 또한 전쟁 중 조출생률이 1952년 5.5명, 1953년 8.7명으로 급락하여 1949~1955년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55년에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41.2%로 1949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955~1960년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하였음에도, 60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1.8% 증가한 데 그쳐 전쟁이 고령층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유소년인구와 15~59세 인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 5.3%에서 1955년 5.6%로 다소 높아졌다(石南国, 1970).

196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는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소득의 향상이었고, 당시 높은 인구증가율은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2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수단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75년 3.43명으로 급격하게 낮아졌다(경제기획원, 1976). 그러나 가임여성인구(15~49세)가 많아 출생아 수는 1971년까지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1955~1974년에 태어난 인구를 일컫는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 비중은 1960년 40.7%, 1966년 43.5%로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1960년 55.6%, 1966년 53.2%로 점차 낮아졌다(그림 5-3). 1970년에는 첫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유소년인구 비중은 42.1%로 낮아지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4.6%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편 기대수명이 1970년 남성 58.7세, 여성 65.8세로 높아졌으나 고출산 지속에 따라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인구 비중은 1966년과 1970년 각각 3.3%로 역대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연도 중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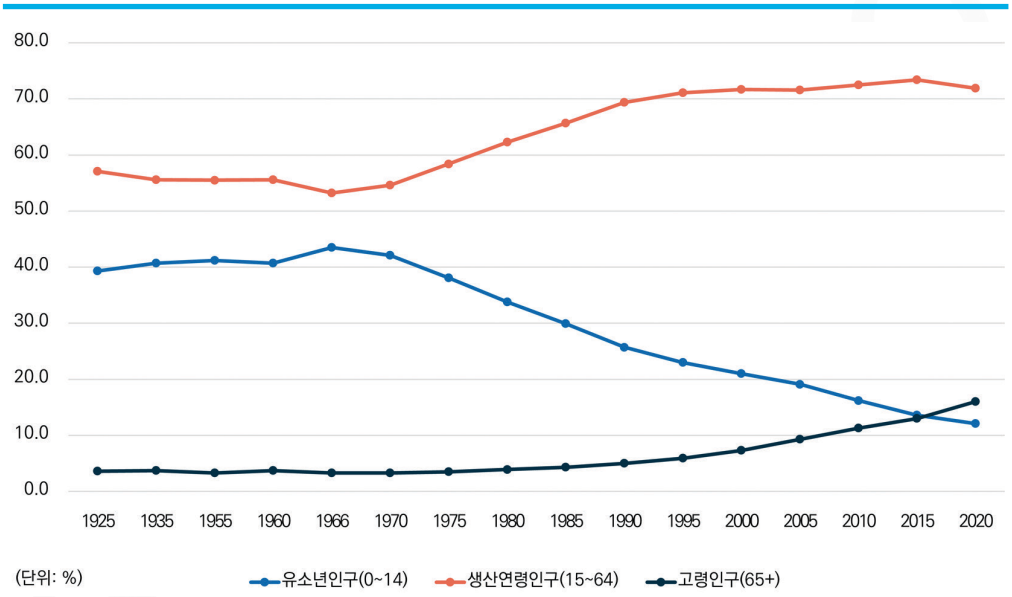


그림 5-3.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192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장기간 지속된 산아제한정책의 효과로 출생아 수는 197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면서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하부가 침식하기 시작했다. 유소년인구 비중은 1975년 38.1%, 1980년 33.8%로 감소했고, 동기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8.4%에서 62.3%로 증가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기대수명은 1975년에 60대로, 여성은 1980년에 70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등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중도 1980년에 3.9%까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인구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점차 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었다.

2) 1980~2010년대의 종형 인구구조

종형 인구구조는 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고 기대수명 증가로 사망률도 낮아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등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 역시 빠르게 감소해 1980년대부터 인구구조의 침식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인구구조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 인구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종형으로 전환했다.

1996년 8월 정부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출산율 감소 추이는 계속되었다.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영향으로 점차 하부가 불안정해져 고연령층을 지지하기 어려워지는 인구구조로 전환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95년부터 중장년층(40~64세)에 진입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가 중장년층이 되며 종형 인구구조가 본격화되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1985년 65.7%에서 2015년 73.4%로 높아졌다.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 인구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1985년 29.9%로 처음으로 30%를 하회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15년 13.6%에 그쳤다. 당시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노년층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기대수명이 1985년 남성 64.6세, 여성 73.2세에서 2015년 남성 78.0세, 여성 85.2세로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상회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3) 2020년 이후의 항아리형 인구구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20년 만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2]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dead-cross)가 시작되면서 항아리형 인구구조가 나타났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유소년인구 비중은 12.1%로 낮아졌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16.0%에 이르렀다. 같은 해 기대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80세를 초과했다.

2)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5년 3,750만 명에서 2020년 3,729만 명으로 감소했고, 비중도 73.4%에서 71.9%로 낮아졌다. 항아리형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 구조로의 이행 과정이며, 저출산과 고령화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항아리형 인구구조의 전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5. 맺음말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출산과 사망 및 국제이동에 의해 변화했다. 성비는 100 내외에서 변화하여 커다란 불균형을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층별로 변화 양상이 상이했다. 일제강점기 성별 구조는 20~30대 남성 중심으로 강한 성·연령 선택성을 보인 국제이동의 영향을 받았다. 1945년 해방 이후, 남성 중심의 해외동포 귀환으로 20~30대 성비가 복원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특히 20대 남성의 사망자가 많아 성비가 낮아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성별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전 기간에 걸쳐 여성과 남성의 사망률 개선 정도가 성별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연령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종형, 항아리형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1960년대까지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사의 시기로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농업노동자의 만주 이주, 강제징용과 징병으로 인한 일본 이주 등 국제이동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에는 해외동포, 북한 주민의 남하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망 등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전히 피라미드형을 유지했다. 1960년대 이후 인구구조는 국제이동의 영향이 줄고, 출생과 사망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전쟁 직후 시작된 베이비붐 현상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공고하게 했다. 1971년을 정점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며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하부가 침식되기 시작했고, 인구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연령층에 진입하면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점차 높아졌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노년층의 비중도 높아졌다. 1980년대에 들어 저출산사회에 진입하여 저연령층 비중이 더욱 줄어들면서 전형적인 종형 인구구조를 보였다. 2020년에는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띠기 시작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나타난 지난 100년간 인구구조는 정치, 사회, 경제적 변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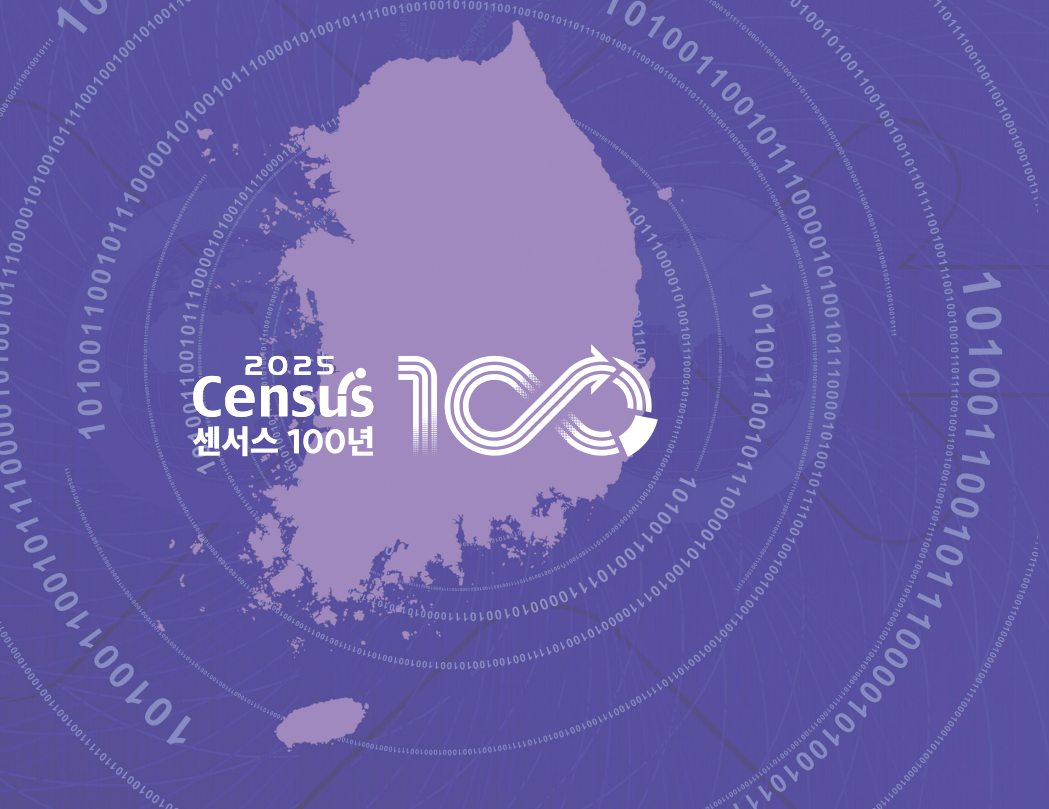
깊이 연관되어 변화했다. 과거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라지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당시 20대 남성의 초과 사망 등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영향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의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은 한동안 남아 있을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항아리형 인구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에는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지출,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

향후 인구주택총조사는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의 궤적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미래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

6장

인구분포

이삼식



1. 머리말

인구이동은 현재 거주지의 불리한 환경을 떠나 더 유리한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Ravenstein, 1885; 이상림, 2009).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측면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부분 국가는 개발 초기에 농업 기반 사회에서 농촌의 과잉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며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루는 양상을 띤다(Lewis, 1954). 인구이동을 유인하는 지역적 요인은 크게 흡입요인(pull factor)과 배출요인(push factor)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배출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저소득, 고용기회 부족 등이며, 흡입요인은 고소득, 풍부한 고용기회, 교육 및 복지 시설 등이다. 이 요인들은 개인의 특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동을 촉발하는데, 특히 연령 등의 선택성과 결합하여 이동 수준 및 이동 행태를 결정한다.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뿐 아니라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도 지역 인구의 규모 및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구학적 요소이다. 출생, 사망, 이동으로 인해 인구과밀지역이나 인구과소지역이 생기고 지역 간 인구균형이 무너지기도 한다.

출생, 사망, 인구이동은 일제강점, 해방, 한국전쟁, 경제발전 등을 거치면서 인구분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구분포 변화는 사회 변화가 투영된 결과이다. 지역 간 인구분포는 국토계획과 같은 국가계획은 물론 지역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구현상이다. 지역 간 인구분포는 공장입지 선정,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인구분포 변화를 파악하여 인구분포가 한국 사회 변화에서 의미하는 함의를 도출한다.

2. 개념과 범주

인구분포는 지역별 총인구의 구성비로 측정된다.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인구분포를 측정한다. 서울은 1946년에 특별자유시(1949년에 특별시로 개편)가 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고, 부산은 1963년에 경상남도 산하에서 내무부 직할로 변경(1981년에 직할시로 명명)되었다. 뒤이어 대구와 인천은 1981년, 광주는 1986년 그리고 대전은 1989년에 각각 직할시로 승격되어 도에서 분리되었다. 직할시는 1995년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울산은 1997년에 바로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광역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부산은 경남 양산군 일부(현 기장군)를 편입하였으며 대구는 경북 달성군, 인천은 경기도 옹진군과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을 각각 편입했다. 광주는 전남 송정시와 광산군을, 대전은 충남 대덕군을 통합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충남 연기군 남면과 금남면,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일대 등을 통합했다. 제주도는 1946년에 전남에서 분리되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도의 인구 각각은 개편 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부터 관련 도(道)와 분리되어 조사되었다.

광역자치단체보다 넓은 지역 단위로서 권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으로 구분했다. 또한 전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도시화율을 측정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도시 범주는 1925~1949년에는 '부', 1955~1990년에는 '시부', 1995년 이후에는 '동부'를 적용했다. 이 장에서 도시화율은 전국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 산정했다.

인구분포 분석의 범위는 1925년부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이다.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의 남북한 전체를 조사하였으며, 해방 후 실시된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는 38선을 경계로 이남 지역을 조사했다. 따라서 이들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경계를 현재 한국 영토의 경계를 기준으로 재설정했다. 경계 변경이 있었

던 군(郡)의 추정 인구를 경계가 변경되지 않은 군의 인구에 더하거나 빼서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의 경계와 일치시켰다. 194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부(시)·군별 인구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경기도와 강원도 및 황해도에서 남한 지역만을 특정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했다. 자료의 한계로 남한 영토 내의 시도별 경계 변화는 시계열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

3. 지역별 인구분포

1) 시도별 인구분포

(1) 일제강점기(1910~1945년)

19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남한 8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도는 경북(18.1%)으로, 이어서 전남(16.8%), 경남(15.7%), 경기(14.5%), 전북(10.6%), 충남(10.0%), 강원(7.7%), 충북(6.6%) 순이었다(표 6-1, 표 6-2).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경북, 전남, 경남, 전북 등 남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제강점기에 지역 간 인구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구이동은 크게 해외 이주와 국내 이동의 두 흐름이었으나 당시 농촌의 과잉인구를 모두 흡수할 만큼 도시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된 이동지는 해외였다(문소정, 2003). 많은 한국인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만주로 이동하거나 일본 및 태평양 군도로 징용·징병되었다. 초기 만주로의 이주는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농촌경제 붕괴가 심화되면서 상당수의 남부 지역 농민들도 만주로 이주했다(박경숙, 2009).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은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다(이상호, 2005).

당시 국내 인구이동은 농촌경제의 붕괴와 맞물려 새로운 고용기회를 찾기 위한 경제

적 이주의 영향이다(Trewartha&Zelinsky, 1955). 이에 따라 인구의 주된 이동 방향은 농업 중심의 남부에서 인구 밀집도가 낮고 산업화가 진행 중인 북부로 향했다.

표 6-1. 시도별 인구 변화(1925~2020년)

(단위: 만 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25	1,285									186	98	85	128	137	216	233	202	
1930	1,376									201	108	90	138	150	233	242	214	
1935	1,488									229	118	96	153	161	251	256	225	
1944	1,638									291	137	98	167	167	275	261	242	
1949	1,962	145								218	114	115	203	205	304	321	313	25
1955	2,150	157								236	150	119	222	212	313	336	377	29
1960	2,499	245								275	164	137	253	240	355	385	418	28
1966	2,916	379	143							310	183	155	290	252	405	447	318	34
1970	3,088	543	184							330	184	145	281	239	393	448	306	36
1975	3,471	689	245							404	186	152	295	246	398	486	328	41
1980	3,744	836	316							493	179	142	296	229	378	495	332	46
1985	4,045	964	351	203	139					479	172	139	300	220	375	301	352	49
1990	4,341	1,061	380	223	182	114	105			616	158	139	201	207	251	286	367	51
1995	4,461	1,023	381	245	231	126	127			765	147	140	177	190	207	268	385	51
2000	4,614	990	366	248	248	135	137	101		898	149	147	185	189	200	272	298	51
2005	4,728	982	352	246	253	142	144	105		1,042	146	146	189	178	182	261	306	53
2010	4,858	979	341	245	266	148	150	108		1,138	147	151	203	178	174	260	316	53
2015	5,107	990	345	247	289	150	154	117	20	1,248	152	159	211	183	180	268	333	61
2020	5,183	959	335	241	295	148	149	114	35	1,351	152	163	218	180	179	264	333	6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6-2.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1925~2020년)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25	100.0									14.5	7.7	6.6	10.0	10.6	16.8	18.1	15.7	
1930	100.0									14.6	7.9	6.5	10.0	10.9	16.9	17.6	15.5	
1935	100.0									15.4	7.9	6.4	10.3	10.8	16.9	17.2	15.1	
1944	100.0									17.8	8.3	6.0	10.2	10.2	16.8	15.9	14.8	
1949	100.0	7.4								11.1	5.8	5.8	10.3	10.4	15.5	16.3	16.0	1.3
1955	100.0	7.3								11.0	7.0	5.5	10.3	9.9	14.5	15.6	17.5	1.3
1960	100.0	9.8								11.0	6.5	5.5	10.1	9.6	14.2	15.4	16.7	1.1
1966	100.0	13.0	4.9							10.6	6.3	5.3	10.0	8.6	13.9	15.3	10.9	1.2
1970	100.0	17.6	6.0							10.7	5.9	4.7	9.1	7.7	12.7	14.5	9.9	1.2
1975	100.0	19.9	7.1							11.6	5.4	4.4	8.5	7.1	11.5	14.0	9.5	1.2
1980	100.0	22.3	8.4							13.2	4.8	3.8	7.9	6.1	10.1	13.2	8.9	1.2
1985	100.0	23.8	8.7	5.0	3.4					11.9	4.3	3.4	7.4	5.4	9.3	7.4	8.7	1.2
1990	100.0	24.4	8.7	5.1	4.2	2.6	2.4			14.2	3.6	3.2	4.6	4.8	5.8	6.6	8.5	1.2
1995	100.0	22.9	8.6	5.5	5.2	2.8	2.9			17.1	3.3	3.1	4.0	4.3	4.6	6.0	8.6	1.1
2000	100.0	21.4	7.9	5.4	5.4	2.9	3.0	2.2		19.5	3.2	3.2	4.0	4.1	4.3	5.9	6.5	1.1
2005	100.0	20.8	7.5	5.2	5.4	3.0	3.1	2.2		22.0	3.1	3.1	4.0	3.8	3.8	5.5	6.5	1.1
2010	100.0	20.2	7.0	5.0	5.5	3.0	3.1	2.2		23.4	3.0	3.1	4.2	3.7	3.6	5.4	6.5	1.1
2015	100.0	19.4	6.8	4.8	5.7	2.9	3.0	2.3	0.4	24.4	3.0	3.1	4.1	3.6	3.5	5.2	6.5	1.2
2020	100.0	18.5	6.5	4.7	5.7	2.9	2.9	2.2	0.7	26.1	2.9	3.1	4.2	3.5	3.5	5.1	6.4	1.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국내외 인구이동의 흐름에 따라 경북의 인구 비중은 1925년 18.1%에서 1944년 15.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경남의 인구 비중도 15.7%에서 14.8%로 감소했지만 경북에 비해 감소 규모는 작았다. 1937년 이후 경남 특히 부산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의 임시 기착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Kwon, 1977). 해외로의 이주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전라도는 경상도에 비해 인구 비중의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전북 인구의 비중은 1925년 10.6%에서 1944년 10.2%로 소폭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남 인구의 비중은 16.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남한 내 북부 지역의 인구증가는 부분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인구이동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경기 인구의 비중은 1925년 14.5%에서 1944년 17.8%로 높아졌고, 강원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7.7%에서 8.3%로 높아졌다. 한편 중부 지역 인구 비중의 변화폭은 크지 않았다. 충북 인구의 비중이 1925년 6.6%에서 1944년 6.0%로 소폭 감소하는 동안 충남 인구의 비중은 10.0%에서 10.2%로 소폭 증가했다.

(2) 해방기(1945~1949년)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했던 동포들은 해방 이후 고향으로 귀환했다. 이와 함께 남북 분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1945~1949년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사망) 규모가 125.3만 명인 데 비해 해외 및 북한 동포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277.8만 명에 달했다(김두섭, 1999).

이 시기 인구증가는 서울에서 가장 뚜렷했고 다음으로 경남, 경기 순이었다.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들의 대다수는 징용·징병 이전 고향이었던 경상도와 전라도로 이동한 반면 북한과 만주로부터 유입된 동포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정착하였다. 만주에서 귀환한 동포는 일본으로 징용된 동포보다 먼저 이주하여 약 50%가 서울을 비롯한 경기의 도시 지역에 정착했다(김두섭, 1999; Kwon, 1977). 남북 분단에 따른 북한에서의 귀환 및 피란 이동은 38선에 인접한 서울, 경기, 강원 등에 대거 집중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북한 주민들의 제1목적지는 서울이었다. 다만 강원 이북 출신 이주민은 서울과 경

기, 강원 이남에 고르게 분포되었고 황해 출신 이주민은 경기와 서울에 집중되었다(Yoon, 1992). 황해와 강원 이북 이주민의 경우, 경기와 강원 이남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연고자 등 정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 월남민으로 인하여 시도 간 인구분포에 변동이 발생했다.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구의 비중은 7.4%, 경기 인구의 비중은 11.1%이다. 일본에서 귀환한 해외동포의 주요 귀환 지역인 경남의 인구 비중은 1944년 14.8%에서 1949년에는 16.0%로 증가해 1935년(15.1%)보다 높아졌다. 경북 인구 비중도 1944년 15.9%에서 1949년 16.3%로 증가했다. 한편 일본 해외동포의 주요 귀환 지역 중 하나인 전남의 인구 비중은 1944년 16.8%에서 1949년 15.5%로 낮아졌다. 충남과 충북 및 전북의 인구분포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강원 인구의 비중은 1944년 8.3%에서 1949년 5.8%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3) 한국전쟁~경제개발기 이전(1950~1960년)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 그리고 남한 내 지역 간 대규모 인구 재배치를 유발했다. 1950년 6월 전쟁 초기에는 서울에서 북한군의 비점령 지역인 경상도로 인구이동이 일어났으나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이후 유엔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수복하였으나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1950년 12월~1951년 1월 사이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난민 이동과 남한 내부의 난민 이동이 전개되었다. 2차 피란 당시 서울 주민의 절반이 서울을 떠나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피란민이 증가했다.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쟁 중 북한에서 온 난민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원과 경기에 집중되어 서울에 정착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서울에 피란 온 난민 중 상당수가 전쟁 중 경남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홍두승 외, 1996).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주로 인한 인구유출이 발생했다. 북부 지방(서울, 경기, 강원)의 인구 손실은 전쟁 사상자의 발생 외에도 다른 지방으로 이동한 내부 난민에 기인한다. 북한 피란민의 상당한 유입에도 불구하고 강원에서 경기, 충남 등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상당수

의 난민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구증가가 미미했다.

한국전쟁 당시 동남부 지역으로의 피란, 사망과 납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서울 인구 비중은 1949년 7.4%에서 1955년 7.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난민이 집중된 강원의 인구 비중은 1949년 5.8%에서 1955년 7.0%로 높아졌다. 내부 피란민들의 주요 피란지였고 전쟁 후에도 일부가 정착한 영향으로 경남의 인구 비중은 1949년 16.0%에서 1955년 17.5%로 높아졌다. 전쟁 중 사망률이 증가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인구 비중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전쟁에 따른 귀환 이동은 1960년까지 이어졌다. 1955~1960년 피란민의 늦은 귀환과 해외동포의 영구 귀국으로 인해 경남의 인구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게다가 경남에서 분리되기 전 부산은 전쟁 당시 국가의 임시수도였으며 피란과 전후 번영으로 이주민이 집중되던 곳이었다(김종한 외, 2006). 해외 및 북한 동포의 이주를 통해 인구가 늘어난 3개 시도 중 경기와 강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만큼의 인구 유입이 없었다. 강원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상당했는데, 전쟁 당시 큰 손실이 있었고 대피한 피란민들도 대부분 타지로 이동한 결과이다. 서울에서만 유입이 손실을 훨씬 초과했는데, 전국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이주로 손실이 발생한 지역들도 고출산으로 출생아가 급증하면서 1955~1960년 대부분의 시도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인구의 비중이 1955년 7.3%에서 1960년 9.8%로 높아졌다. 나머지 도의 인구 비중은 큰 변화가 없거나 다소 낮아졌다.

(4) 산업화 시대(1960~1980년대)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계기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고, 198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이 지속되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 자본과 결합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촌향도의 강한 연령 선택성으로 인하여 젊은 층이 대도시

로 집중하면서 지역 간 출생아 수의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도 인구분포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부터 대규모 이주가 중단되고, 국내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 간 인구 재분배는 국내 이동과 출생 및 사망에 의해 결정되었다.

1960~1966년 서울에 대규모로 유입된 인구의 상당수는 경기로부터 유입되었다. 그 결과 서울 인구의 비중은 1960년 9.8%에서 1966년 13.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했으나 인구 비중은 1960년 11.0%에서 1966년 10.6%로 오히려 낮아졌다. 1960~1966년 경남 인구는 전후 난민의 귀환과 재정착이 완료되고, 다른 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감소했다.[1] 부산은 서울에 이은 두 번째 대도시로서 경남 등에서 인구를 흡입하였지만, 서울로의 인구유출은 계속되었다. 부산과 경남의 인구 비중은 1960년 16.7%에서 1966년 15.8%로 낮아졌다. 나머지 도의 인구 비중은 1960~1966년 큰 변화가 없다.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서울로의 인구이동은 점차 증가하고, 대도시의 인구 비중도 점차 높아졌다. 서울 인구 비중은 1966년 13.0%에서 1975년 19.9%, 1985년 23.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부산 인구 비중도 1966년 4.9%에서 1985년 8.7%로 상승했다. 서울 인구의 분산으로 인천을 포함한 경기 인구 비중은 1966년 10.6%에서 1980년 13.2%로 높아졌다. 1985년에는 경기와 인천 인구를 합해 15.3%(경기 11.9%, 인천 3.4%)로 증가했다. 이외 지역에서는 대도시 및 인접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1966~1985년간 지역별 인구 비중이 강원은 6.3%에서 4.3%, 충북은 5.3%에서 3.4%, 충남은 10.0%에서 7.4%, 전북은 8.6%에서 5.4%, 전남은 13.9%에서 9.3%로 감소했다.[2] 제주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 비중이 1.2%로 큰 변화가 없었다.

1) 1966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부산이 경남에서 분리되어 조사되었다.
2) 대구와 경북을 합한 인구 비중도 1966년 15.3%에서 1985년 12.4%로 감소했다.

(5) 후기 산업사회(1990년~현재)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끈 노동집약적 산업은 1990년대 이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선진국은 기술 개발 및 독점, 지역경제 블록화, 신보호주의 정책 등을 채택했고, 후발 개발도상국은 저임금을 앞세워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한국은 이중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들어 산업사회에서 첨단정보산업과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후기 산업사회로 변모했다(박재규, 1996).

한국의 인구이동은 1990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1990년 이전에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증가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인구증가를 특징으로 한다(김창환, 2015). 그러나 1990년대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둔화하고 있다.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1990년까지 지속되다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울 인구 비중은 1990년 24.4%로 정점에 도달 후 2020년에 18.5%로 낮아졌다(그림 6-1). 반면 경기 인구 비중은 1985년 11.9%에서 2020년 26.1%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인구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1990년 이후 경기에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가 개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대도시도 인구분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부산은 1990년까지, 대구는 2000년까지, 광주와 대전 그리고 울산은 2015년까지 인구가 집중된 이후 분산되기 시작했다. 부산은 1990년 8.7%에서 2020년 6.5%로, 대구는 1985년 5.0%에서 2020년 4.7%로, 광주는 2010년 3.0%에서 2020년 2.9%로, 대전은 2010년 3.1%에서 2020년 2.9%로, 울산은 2015년 2.3%에서 2020년 2.2%로 인구 비중이 각각 낮아졌다. 반면 인천 인구 비중은 1985년 3.4%에서 2020년 5.7%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약화되고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분산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인구의 분산으로 경기의 인구 비중은 증가한 반면 대도시를 둘러싼 도의 인구 비중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과 인접한 충남 인구의 비중도 1985년 7.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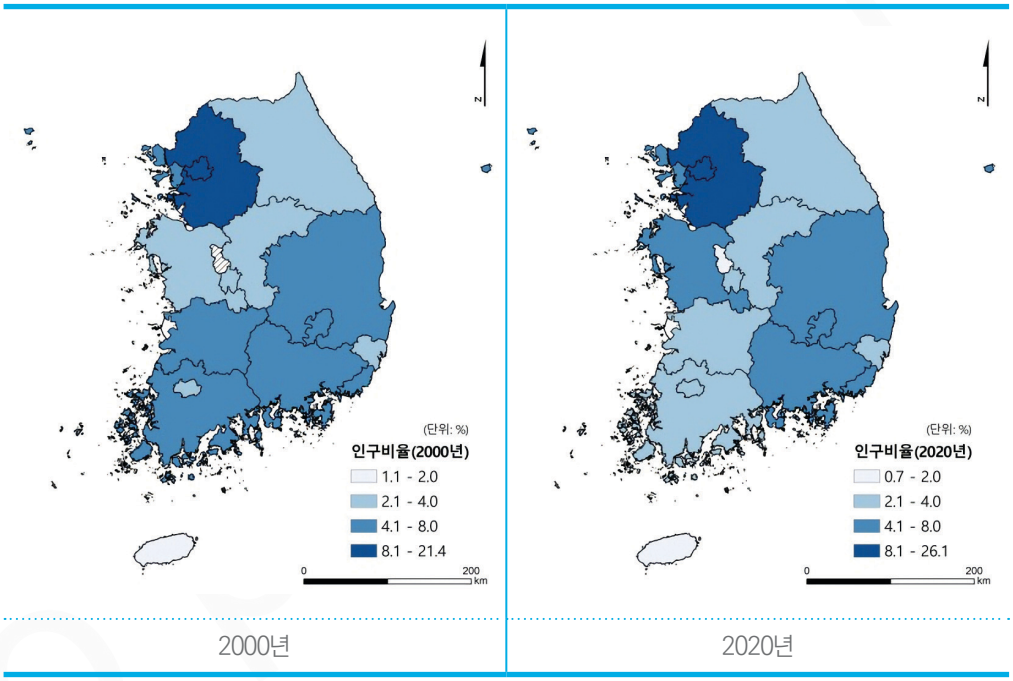


그림 6-1. 전국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서 1995년 4.0%까지 낮아졌으나 2020년에 4.2%로 소폭 증가했다. 대구와 인접한 경북은 1985년 7.4%에서 2020년 5.1%로, 부산과 인접한 경남은 같은 기간 8.7%에서 6.4%로 낮아졌다. 전남 인구 비중 역시 광주의 인구분산 효과에도 불구하고 1990년 5.8%에서 2020년 3.5%로 낮아졌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했기 때문이다. 대도시와 거리가 있는 도의 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강원은 1985년 4.3%에서 2020년 2.9%로, 충북은 같은 기간에 3.4%에서 3.1%로, 전북은 5.4%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

2) 권역별 인구분포

시도 간 경계 변화를 고려하여 총 4개 권역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6-2).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25년 14.5%에서 1944년 17.8%로 높아졌고, 해

방 이후 1949년 18.5%로 높아졌다가 1955년 18.3%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한국전쟁 기간 북한 주민이 서울과 경기로 대거 유입되었으나 전쟁 중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난민 상당수가 다른 지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60년대 초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6년 23.6%, 1970년 28.3%, 1980년 35.5%, 1990년 42.8%로 계속 높아졌다. 특히 1975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영남권 인구 비중을 상회하면서 권역 중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 2010년 49.1%, 2020년 5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으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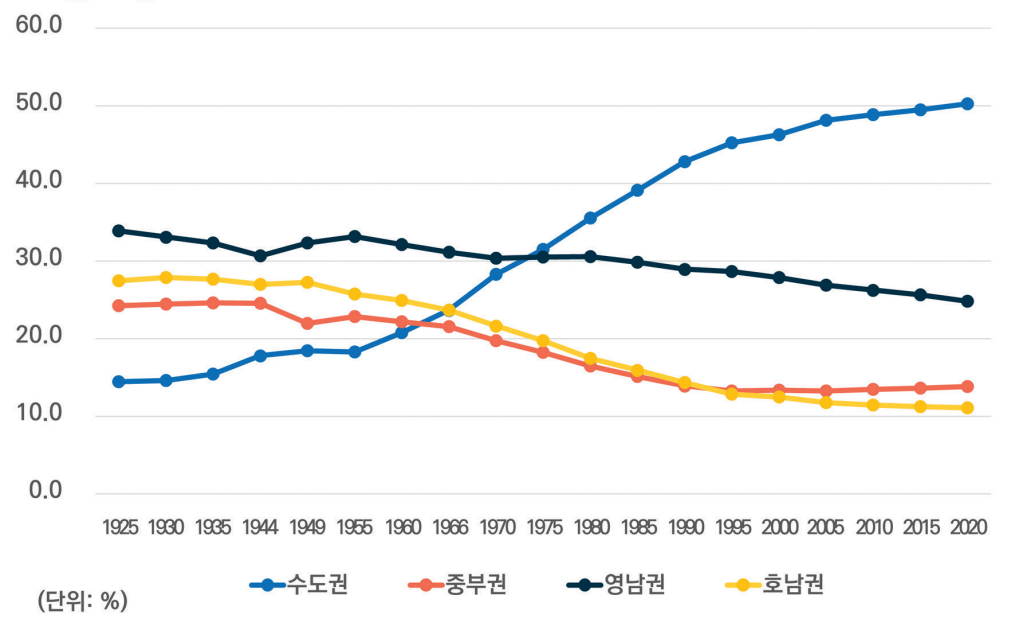


그림 6-2. 권역별 인구분포 변화(192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중부권 인구 비중은 일제강점기 동안 1925년 24.3%에서 1944년 24.5%로 큰 변화가 없었다. 남북 분단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귀환자와 피란민이 강원으로 이동하였으나 강원 남부에서 타 지역으로의 국내 이동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부권 인구 비중은 1949년 21.9%, 1955년 22.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 영남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강원과 충북·충남에서 인구가 계속 유출되었다. 중부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2.1%에서 1966년 21.6%, 1970년 19.7%, 1980년 16.5%, 1990년 13.8%로 빠르게 낮아졌다. 후기 산업사회에 강원과 충북 지역의 교통 발달, 산업단지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중부권 인구 비중은 감소 추세를 벗어나 2005년 13.3%, 2010년 13.4%, 2015년 13.6%, 2020년 13.8%로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남권 인구 비중은 일제강점기 동안 1925년 33.8%에서 1944년 30.7%로 다소 낮아졌으나 4대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당시 한국은 농업 기반 사회로 영남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1937년 이후에는 경남, 특히 부산이 조선 전역에서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인구의 임시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며 인구가 다소 증가했다. 해방을 맞이하여 1945~1949년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들의 대다수가 고향이었던 경상도 등으로 이동했다(김종한 외, 2006; 김대래, 2019). 이에 1949년 영남권 인구 비중은 32.3%로 높아졌다.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피난한 난민 유입 등으로 경남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영남권 인구 비중은 1955년 33.1%로 높아졌다. 1955~1960년 한국전쟁 피란민의 늦은 귀환과 해외동포의 영구 귀국으로 인해 경남 인구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당시 번영한 부산으로 이주민들이 집중되어 영남권 인구 비중은 1960년 3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1960년 이후에는 난민의 귀환과 재정착이 완료되어 영남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서울과 경기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영남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0년 28.9%로 감소했다. 부산 인구가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경남 인구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그 영향으로 영남권 인구 비중은 2020년에 24.9%까지 낮아졌다.

호남권 인구 비중은 1925년 27.4%에서 1944년 27.0%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호남권 역시 농업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어 영남권 다음으로 인구 비중이 높았다. 다만 전

라도에서도 일본으로의 강제징용이 발생한 영향으로 인구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이상호, 2005). 1945~1949년 동안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들은 경상도 다음으로 전라도로 이동하였으나 이촌향도 현상으로 서울로 이동한 인구가 증가해 호남권 인구 비중은 1949년 27.2%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전쟁 기간 뚜렷한 인구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호남권 인구 비중은 1955년 25.7%로 낮아졌다. 1955~1960년 해외나 북한 등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은 크지 않은 반면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어 호남권 인구 비중은 1960년에 24.9%로 더 낮아졌다. 호남권 역시 산업화의 영향으로 서울 등으로 인구유출이 계속되면서 인구 비중은 1970년 21.6%, 1980년 17.4%, 1990년 14.4%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5년부터 4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호남권 인구 비중은 2020년에 11.2%까지 낮아졌다.

4. 도시화

도시의 개념은 국가나 시기마다 다르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도시의 개념이나 범주도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고, 다른 하나는 시, 군, 구이다. 시는 대부분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이다. 읍은 대부분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지역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을 도시로, '읍'과 '면'을 농촌으로 구분했다.

남한의 도시 거주 인구 비중 즉, 도시화율은 1925년까지 5.1%에 불과했다(그림 6-3). 1930년대에는 많은 도시에서 행정구역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도시화는 도시 인구의 성장보다 행정구역 확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손정목, 1996).

도시의 성장은 일제강점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도시화율은 1935년 7.3%에서 1944년에 13.4%로 높아졌다. 도시화는 중일전쟁(1937년) 발발로 일본의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도시는 해외 이민의 거점으로 발전하면서 경남과 전남에서 항구 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김흥순, 2011). 이후 철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륙 도시도 농촌 인구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해방 초기(1945~1950년) 도시 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11.0%를 기록했다. 1949년과 1955년 사이 도시화율은 16.9%에서 24.5%로 높아졌다. 이 시기의 도시화는 행정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시의 형성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구이동에 그 원인이 있다. 이 시기에는 부산, 대구, 마산과 같은 영남권 도시들이 급격히 성장한 반면 서울은 성장하지 못했다(이동원, 1993). 한국전쟁 중 출산력 저하와 사망률 급상승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도시인구 증가율은 피란민들로 인하여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었다(문현상 외, 1992). 한국전쟁 당시 많은 국내 피란민은 영남권, 특히 부산과 대구로 이주했다. 19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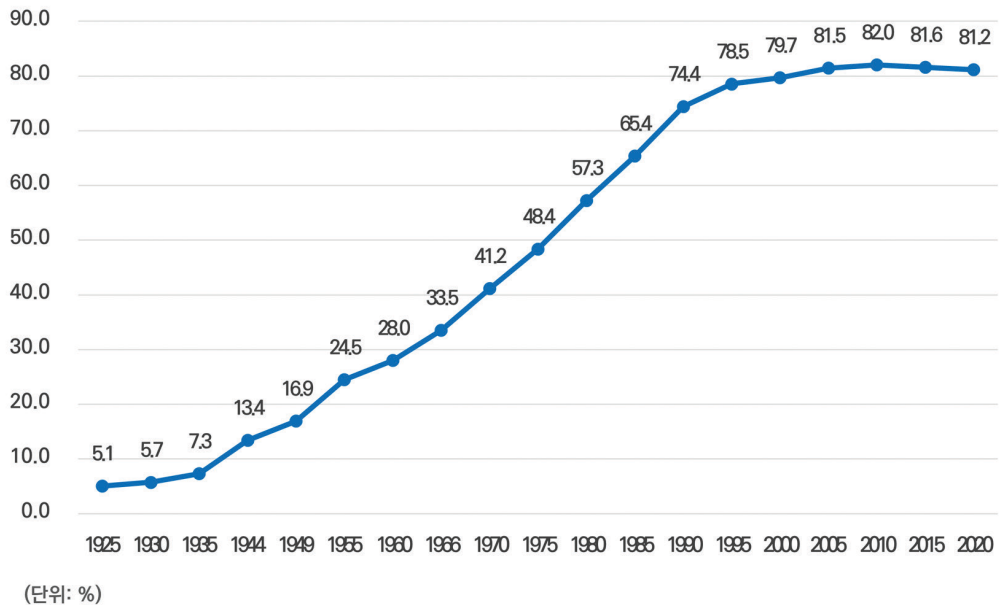


그림 6-3. 한국의 도시화율 변화(192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부산에는 약 30만 명의 국내 피란민이 거주했으며, 이는 당시 부산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김대래, 2019).

1955~1960년 농촌-도시 간 이주,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발생했다. 1953년 휴전과 함께 피란민들의 귀환이동이 증폭했고, 피란민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 정착하게 되면서 도시화율이 증가했다(이동원, 1993). 1960년 인구총조사 결과 도시화율은 28.0%로 높아졌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가속했다. 전후 복구를 위한 4차례 경제개발계획이 서울과 대도시를 최우선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집중되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집중되었다(최병선, 1982). 1970년 도시화율은 41.2%로 1960년(28.0%)에 비해 13.2%p 증가했다. 1980년은 57.3%로 10년 전에 비해 16.1%p 증가하여 전국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74.4%로 전국 인구의 약 4분의 3이 도시에 거주했

다. 후기 산업화 시기에 대도시 인구의 분산화 및 역이주(농촌으로의 귀환 이동,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의 정착)가 진행되면서 도시화율은 2010년 82.0%를 정점으로 2015년 81.6%, 2020년 81.2%로 소폭 낮아졌다.

5. 맺음말

인구이동은 개인적인 결정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징용 등 비자발적 이유로 국내외 이동이 발생했고, 한국전쟁 시기에도 피란 등으로 인구 재배치가 발생했다. 산업화 이후에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인구분포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기반 사회로 대다수 인구가 농촌,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했던 많은 한국인이 해방 후 귀환했고,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됨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거 남하하면서 시도 간, 도시-농촌 간 인구 재배치가 활발해졌다. 한국전쟁은 수도권과 영남권 인구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중 국내 피란민이 대거 부산과 경남으로 이주했고, 북한 피란민들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 및 인천에 정착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증가(출생-사망)와 사회증가(전입-전출)가 인구분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시 지역의 인구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국토가 빠르게 도시화되었다. 비수도권, 특히 농촌의 많은 인구가 서울 등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더욱 커지고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도시 인구의 분산이 시작되었다. 그 영향으로 서울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수도권 인구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도시화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 도시화율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사회의 지역 간 인구분포 불균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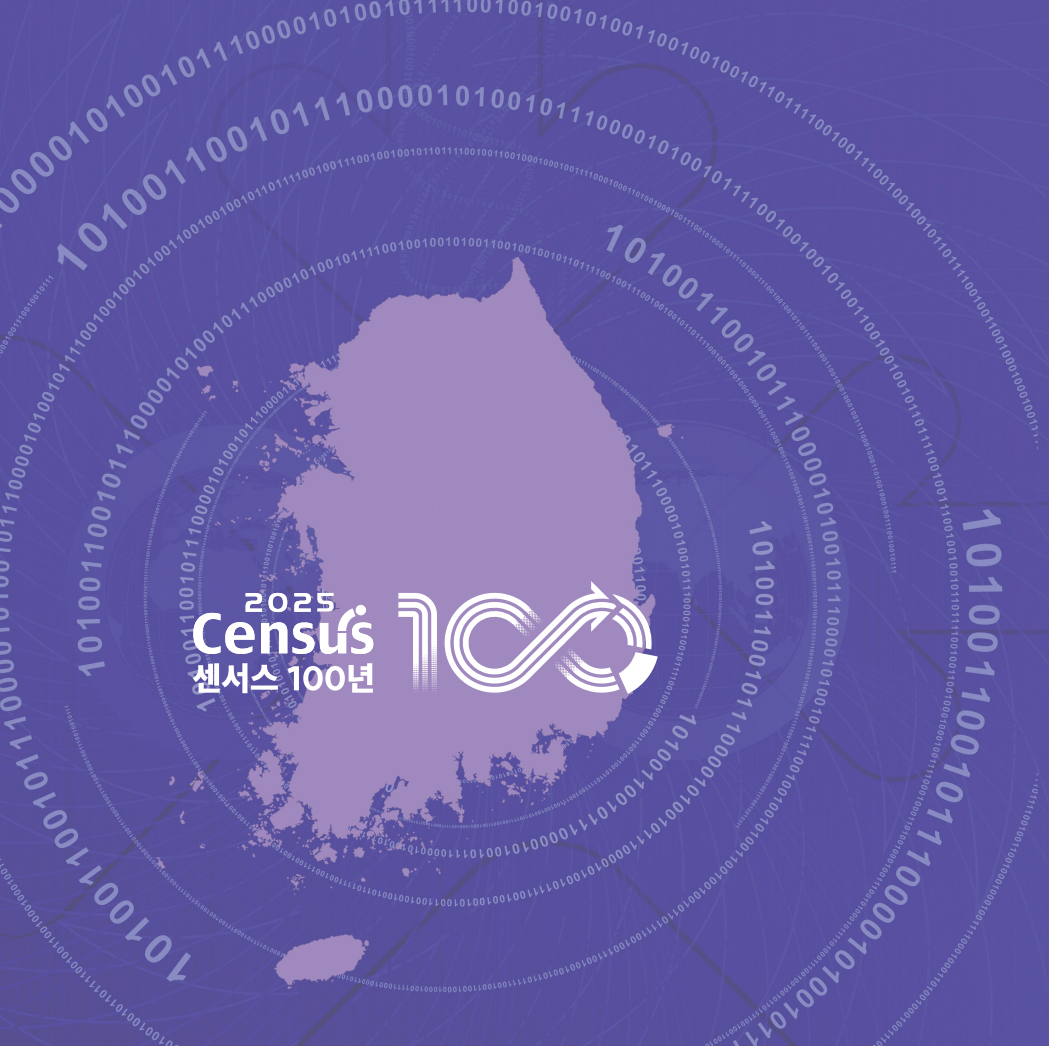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 직업,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대거 지방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했고, 지방은 '지방소멸'이라고 불릴 만큼 인구가 고갈되고 있으며, 남아 있는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인구집적 효과는 오래전부터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환되었다.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도 인구집적의 부정적인 효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현상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특히 미래 사회경제적 현상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지역 간 인구분포는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각종 사회경제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인구현상이다. 인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교육과 고용 기회, 문화인프라,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의 자원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앞으로 지역 간 인구분포를 지역사회 요인들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7장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

이창원



1. 머리말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국제이주자저량(international migrant stock)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인구 중 국제이주자는 3.6%이다. 이 통계는 주로 각국의 센서스 자료 등을 수집하여 작성하는데, 국제이주자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여 3~12개월 이상 자국 거주 외국출생자(foreign-born) 혹은 외국국적자(foreign national) 등으로 설정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는 등록센서스 자료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5.8만 명으로 총인구의 4.4%를 차지한다.[1] 이 수치는 세계 평균(3.6%)보다 높아 한국은 국제이주자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 자료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한국국적 취득자와 이들의 국내 출생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 유엔의 국제이주자 정의에 비해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자'로 범위를 좁힐 경우 국제이주자 수는 175.2만 명으로 총인구의 3.4%로 줄어든다. 그러나 유엔의 국제이주자 통계에서 일부 국가가 해외 출생 국적취득자를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제이주자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인 유입에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인구유출국이었으나, 2006년 이후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를 상회하는 추세로 변화했다.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하여 입

1)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2023.11.08.

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순이동은 2001~2005년 순유출을 보이다 2006~2020년에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순유출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순유입을 기록했다. 최초 통계작성 연도인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제순이동 누적 규모는 94.8만 명이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본격화하였다. 2002년에는 영주자격(F-5)이 신설되었고,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었고, 결혼이민자도 증가하였다.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20여 년 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2] 현재 국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자료가 대표적이다. 두 행정자료 기반 통계는 외국인의 국적별, 지역별, 체류자격별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교육수준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사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대표적 승인통계로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있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15세 이상 국내 상주인구 중 외국국적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 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또는 귀화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3]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된다. 가구 단위로 현황을 파악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국국적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통계와 조사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

2) 국내 이주민 대상 행정통계와 조사통계 현황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주영·허정원(2020)을 참고할 수 있다.

3)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1인 가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에는 포함된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한 자료이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는 내외국인을 같은 조사틀(frame)로 조사하기 때문에 내외국인 비교가 용이하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조사에 포함되는 방식은 통계 생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예를 들어 OECD는 3년마다 회원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를 작성하는데, 자국의 결과를 보고하는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민자 대상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단일한 조사틀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

2. 외국인 인구구조

1) 국내 외국인 인구규모 동향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상주하는 외국국적자로 정의된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또는 출장 등의 이유로 3개월 미만으로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규모와 동향은 196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66년부터 2010년까지는 현장조사에 의한 전수조사 자료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행정자료에 의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국내 외국인[4] 인구는 10만 명을 넘지 않았다(표 7-1). 외국인 인구는 1995년에 5.5만 명에서 2000년에 15.1만 명으로 증가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과 2015년 사이에는 59.0만 명에서 136.4만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77.4만 명) 증가하였다.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는 국내 총인구의 0.1% 내외였으나 2010년 1.2%, 2022년 3.4%로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인구는 연평균 11.8%씩 증가하였다. 동기간 내국인 인구가 연평균 0.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외국인 인구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인구는 2000년부터 2019년에 걸쳐 연평균 13.9%씩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2019~2021년 동안에는 약 15만 명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3.7% 감소했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외국인 총수는 175.2만 명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

4) 이하에서 외국인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장기체류자, 내국인은 한국국적자를 의미한다.

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유형은 외국인근로자(40.3만 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39.8만 명), 유학생(18.9만 명), 결혼이민자(17.6만 명) 순이다.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외국인은 58.6만 명이다. 전년도(2021년) 대비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10.2만 명(6.2%)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학생(3.3만 명)과 외국국적동포(2.9만 명)가 많이 증가하였다.

2022년부터 점차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되어 2023년에는 외국인 인구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외국인 고용 등 다양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 인구 증가율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표 7-1. 외국인 인구구조의 변화(1966~2022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1966	33,122	13,600	18,574	948	0.11
1970	30,402	15,510	14,583	303	0.10
1975	27,648	7,983	18,603	1,062	0.08
1980	29,500	6,799	21,536	1,165	0.08
1985	28,834	7,362	20,356	1,116	0.07
1990	20,525	4,810	14,824	891	0.05
1995	55,016	5,651	48,344	1,021	0.12
2000	150,812	7,999	138,061	2,755	0.33
2005	237,517	7,737	222,736	7,044	0.50
2010	589,532	19,245	560,656	9,631	1.23
2015	1,363,712	47,606	1,267,810	48,296	2.67
2016	1,413,758	53,875	1,308,443	51,450	2.76
2017	1,479,247	50,990	1,372,396	55,861	2.88

구분	전체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2018	1,651,561	62,927	1,527,600	61,034	3.20
2019	1,778,918	80,229	1,627,261	71,428	3.44
2020	1,695,643	78,211	1,535,697	81,735	3.27
2021	1,649,967	84,223	1,479,110	86,634	3.19
2022	1,752,346	89,698	1,562,260	100,388	3.39
연평균 증가율 (2000~2022)	11.8	11.6	11.7	17.8	-
- 코로나19 이전 (2000~2019)	13.9	12.9	13.9	18.7	-
- 코로나19 기간 (2019~2021)	-3.7	2.5	-4.7	10.1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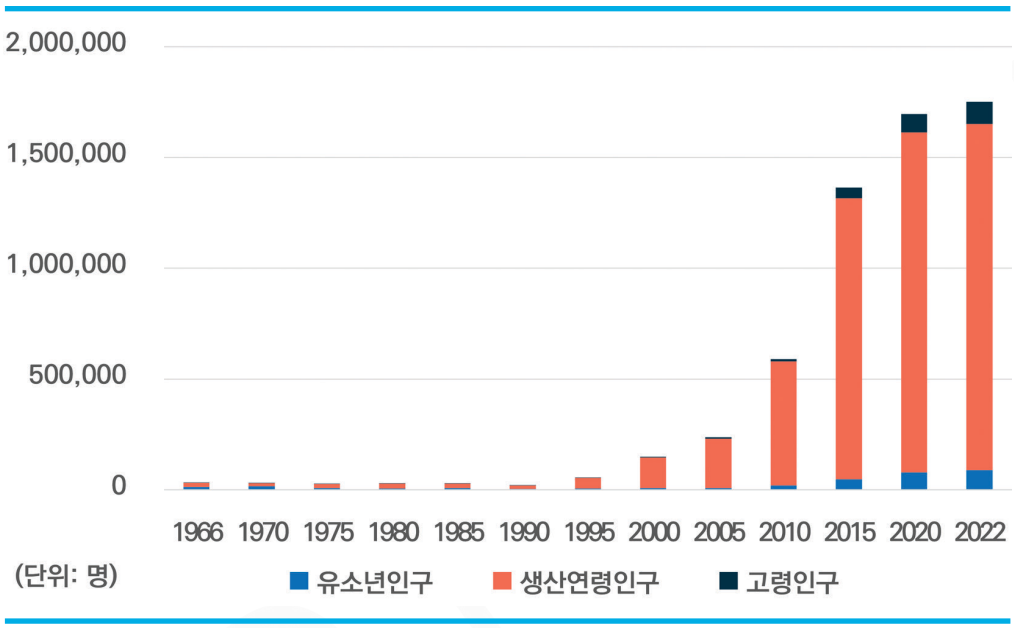


그림 7-1. 외국인 인구구조의 변화(1966~2022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외국인 인구의 연령을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966년 이후 인구증가 규모가 가장 큰 연령층은 생산연령인구였다(그림 7-1). 코로나19 시기에 인구가 감소한 연령층도 생산연령인구뿐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4.7% 감소하였다. 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등 취업을 위한 신규입국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였을 유소년인구는 2000~2019년 연평균 12.9%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5%로 낮아졌다. 유소년인구가 코로나19 시기에도 적게나마 증가세를 보인 것은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출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의 경우 2000~2019년 연평균 18.7% 증가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19~2021년에도 연평균 증가율이 10.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외국인 인구의 연령 구조와 부양비

외국인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90%를 초과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표 7-2). 2000년대 이후 내국인의 생산연령인구가 70~73% 수준임을 감안하면, 외국인이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0년에 95.1%를 고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절대 규모의 감소보다 유소년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유소년인구 비율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하다 2015년부터 반등세에 접어들어 2022년에는 5.1%를 차지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유소년인구 비율은 내국인(11.6%)에 비해 낮다. 최근 내국인 유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소년인구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내외국인 간 유소년인구 비율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현재 외국인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은 5.7%이다. 이는 내국인 고령인구 비중(18.1%)에 비해 낮지만 2010년 이후

표 7-2. 외국인과 내국인 인구구조의 변화(1966~2022년)

(단위: %)

구분	외국인			내국인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1966	41.1	56.1	2.9	43.5	53.2	3.3
1970	51.0	48.0	1.0	42.1	54.6	3.3
1975	28.9	67.3	3.8	38.1	58.4	3.5
1980	23.0	73.0	3.9	33.8	62.3	3.9
1985	25.5	70.6	3.9	29.9	65.7	4.3
1990	23.4	72.2	4.3	25.7	69.4	5.0
1995	10.3	87.9	1.9	23.0	71.1	5.9
2000	5.3	91.5	1.8	21.0	71.7	7.3
2005	3.3	93.8	3.0	19.1	71.6	9.3
2010	3.3	95.1	1.6	16.2	72.5	11.3
2015	3.5	93.0	3.5	13.9	72.9	13.2
2020	4.6	90.6	4.8	12.3	71.3	16.4
2022	5.1	89.2	5.7	11.6	70.3	18.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022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감소와 유소년 및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비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표 7-3). 외국인 인구의 총부양비는 2000년 7.8명에서 2022년에는 12.2명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외국인 인구의 총부양비는 내국인(42.2명)에 비해 적지만, 외국인 인구에서도 총부양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부양비를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내국인의 경우에 유소년부양비는 줄어들고 노년부양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외국인 인구의 경우 유소년부양비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유소년부양비는 2010년 3.4명에서 2022년 5.7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자녀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인구 중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었고, 자녀와 동반 거주가 허용되는 재외동포(F-4)나 유학생(D-2) 등 다른 체류자격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표 7-3. 외국인과 내국인 인구 부양비의 변화(1966~2022년)

(단위: 명)

구분	외국인				내국인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1966	78.3	73.2	5.1	7.0	88.0	81.8	6.2	7.6
1970	108.4	106.4	2.1	2.0	83.2	77.2	6.1	7.8
1975	48.6	42.9	5.7	13.3	71.1	65.2	6.0	9.1
1980	37.0	31.6	5.4	17.1	60.5	54.3	6.2	11.4
1985	41.7	36.2	5.5	15.2	52.1	45.5	6.6	14.5
1990	38.5	32.5	6.0	18.5	44.2	37.0	7.2	19.4
1995	13.8	11.7	2.1	18.1	40.6	32.3	8.3	25.8
2000	7.8	5.8	2.0	34.4	39.5	29.2	10.2	35.0
2005	6.6	3.5	3.2	91.0	39.6	26.7	13.0	48.6
2010	5.2	3.4	1.7	50.0	38.0	22.4	15.6	69.7
2015	7.6	3.8	3.8	101.5	37.2	19.1	18.1	95.1
2020	10.4	5.1	5.3	104.5	40.2	17.3	23.0	132.9
2022	12.2	5.7	6.4	111.9	42.2	16.4	25.8	156.8

주: 1) 유소년인구는 0~14세,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임.
2)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100;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100;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유소년인구)×1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외국인 인구의 노년부양비는 1966~1990년까지 1970년을 제외하면 5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1995년 2.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010년 1.7명을 저점으로 2022년 6.4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고점을 기록했다.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유소년부양비 증가와 달리 체류자격의 다양화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국내 이민정책에서 부모를 초청 또는 동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고령화 이슈는 아직까지는 한국계 중국인 등 동포 집단에 국한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 노년부양비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를 토대로 외국인 인구도 추후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하기에는 섣부르다. 한국 사회에 가족으로 정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외국인의 경우 고령이 되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지만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부양비가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인구의 노령화지수는 2015년부터 100명을 초과하여 2022년에는 111.9명을 기록했다. 이는 내국인 인구의 2022년 노령화지수(156.8명)만큼 높진 않지만, 외국인의 고령화 추세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

2022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은 남성 96.9만 명, 여성 78.4만 명으로 남성이 18.5만 명 더 많다(표 7-4). 연령층별로 25~54세는 남성이 많으며, 15~24세 및 55세 이상은 여성이 많다. 1966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인구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11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표 7-5). 이는 줄곧 남성이 여성보다 10% 이상 많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내국인의 성비는 외국인과 다른데, 내국인은 100에 근접한 수치를 유지하다 2005년부터 100 이하를 기록해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다.

표 7-4. 외국인의 성별·연령별 분포(2022년)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성-여성
전체	1,752,346	968,784	783,562	185,222
0~4세	33,269	16,993	16,276	717
5~9세	35,064	17,601	17,463	138
10~14세	21,365	10,832	10,533	299
15~19세	36,466	17,220	19,246	-2,026
20~24세	175,207	87,098	88,109	-1,011
25~29세	238,434	142,940	95,494	47,446
30~34세	255,970	156,734	99,236	57,498
35~39세	227,166	137,500	89,666	47,834
40~44세	163,930	96,594	67,336	29,258
45~49세	122,871	68,834	54,037	14,797
50~54세	132,498	70,409	62,089	8,320
55~59세	121,104	60,383	60,721	-338
60~64세	88,614	42,347	46,267	-3,920
65~69세	58,006	27,418	30,588	-3,170
70~74세	24,056	10,322	13,734	-3,412
75세 이상	18,326	5,559	12,767	-7,20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외국인 유소년인구의 성비는 내국인 인구 전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외국인의 유소년인구 성비는 102~113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여 전체 연령대보다 낮다. 유소년 연령대의 경우 국제이주에서 선택(selection) 기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연령인구의 성비는 매우 높아 1966~2022년 동안 12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05년에 207.2로 가장 높았고, 2010년 이후에는 1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성비는 1966년(235.0명)을 고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2015년 이후에는 80 미만으로 감소했다. 2022년 생산연령인구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약 30%가량 많은데, 고령인구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0% 이상 적다.

2022년 외국인의 성별·연령별 인구피라미드는 내국인과 비교해 생산연령인구에 해당하는 가운데가 옆으로 퍼진 모습을 보인다(그림 7-2). 외국인은 20~44세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높은 반면 60세 이상 그리고 10~19세의 학령기 구간대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외국인이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5. 외국인의 연령계층별 성비 변화(1966~2022년)

구분	외국인				내국인
	전체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1966	118.4	104.4	125.7	235.0	101.4
1970	112.0	104.2	120.0	170.5	100.8
1975	137.3	108.6	149.8	182.4	101.2
1980	154.2	105.6	174.1	164.2	100.5
1985	128.2	106.6	136.6	140.0	100.2
1990	120.9	102.8	126.9	130.8	100.7
1995	138.7	113.4	142.4	125.9	100.7
2000	149.6	104.0	153.2	147.3	100.7
2005	199.8	107.7	207.2	136.1	99.5
2010	123.9	112.0	124.7	103.1	98.7
2015	137.1	105.5	141.5	79.4	99.7
2020	125.2	103.4	130.0	73.9	99.3
2022	123.6	102.6	129.0	75.8	99.2

주: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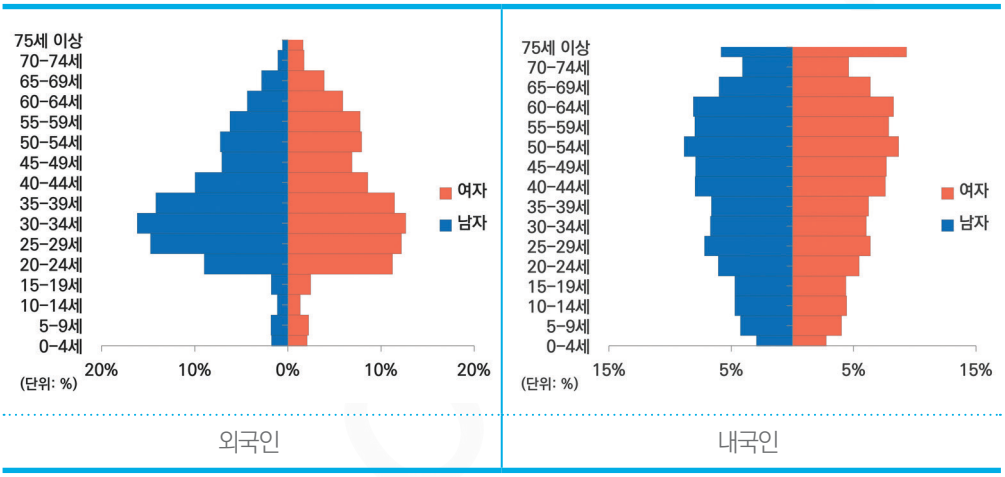


그림 7-2. 외국인과 내국인의 성별·연령별 인구피라미드(2022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4) 외국인 인구의 지역별 분포

국내 상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를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살펴본 결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표 7-6, 그림 7-3). 2022년 기준으로 60.1만 명(34.3%)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다음으로 서울 36.1만 명(20.6%), 인천 11.0만 명(6.3%) 순으로 많아 수도권 시도가 1~3위를 차지하였다. 외국인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61.2%로 내국인(50.2%)보다 높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내국인은 2022년 처음으로 50%를 넘었으나, 외국인은 1970년대부터 이미 5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7-4).

표 7-6. 외국인과 내국인의 거주 지역(2022년)

(단위: 명, %)

구분		외국인		내국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국		1,752,346	100.0	49,939,926	100.0
수도권	소계	1,072,073	61.2	25,052,348	50.2
	서울	360,947	20.6	9,056,522	18.1
	인천	110,201	6.3	2,878,924	5.8
	경기	600,925	34.3	13,116,902	26.3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소계	187,517	10.7	9,910,834	19.8
	부산	55,973	3.2	3,239,787	6.5
	대구	38,849	2.2	2,328,003	4.7
	광주	32,863	1.9	1,436,109	2.9
	대전	26,283	1.5	1,447,379	2.9
	울산	26,352	1.5	1,084,164	2.2
	세종	7,197	0.4	375,392	0.8
비수도권 도 지역	소계	492,756	28.1	14,976,744	30.0
	강원	27,633	1.6	1,500,404	3.0
	충북	61,617	3.5	1,563,376	3.1
	충남	108,619	6.2	2,084,595	4.2
	전북	44,728	2.6	1,729,520	3.5
	전남	49,558	2.8	1,721,873	3.4
	경북	78,148	4.5	2,542,225	5.1
	경남	96,303	5.5	3,184,526	6.4
	제주	26,150	1.5	650,225	1.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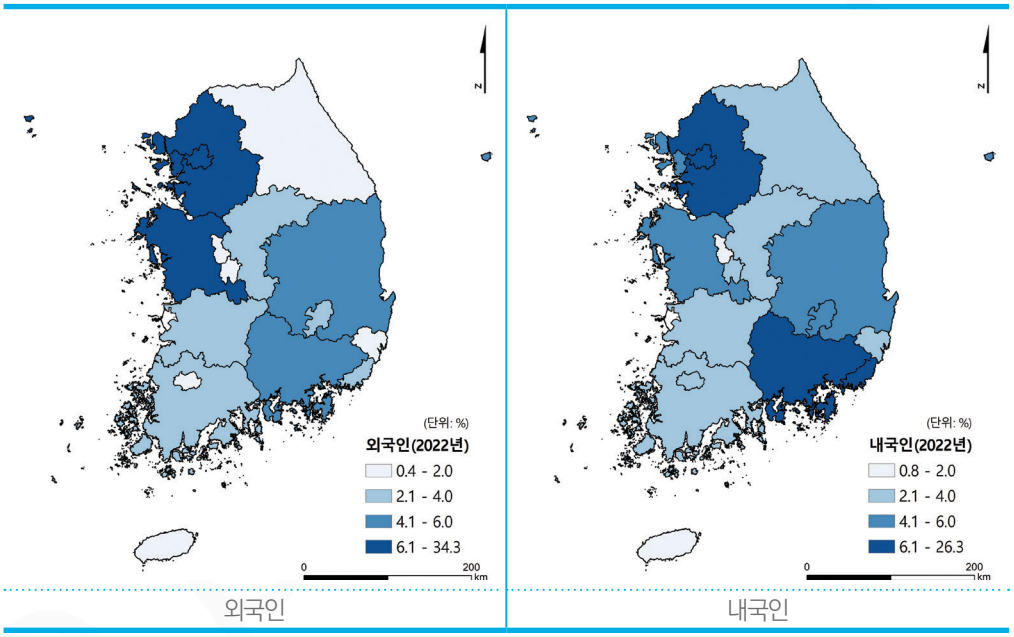


그림 7-3. 외국인과 내국인의 전국 시도별 인구분포(2022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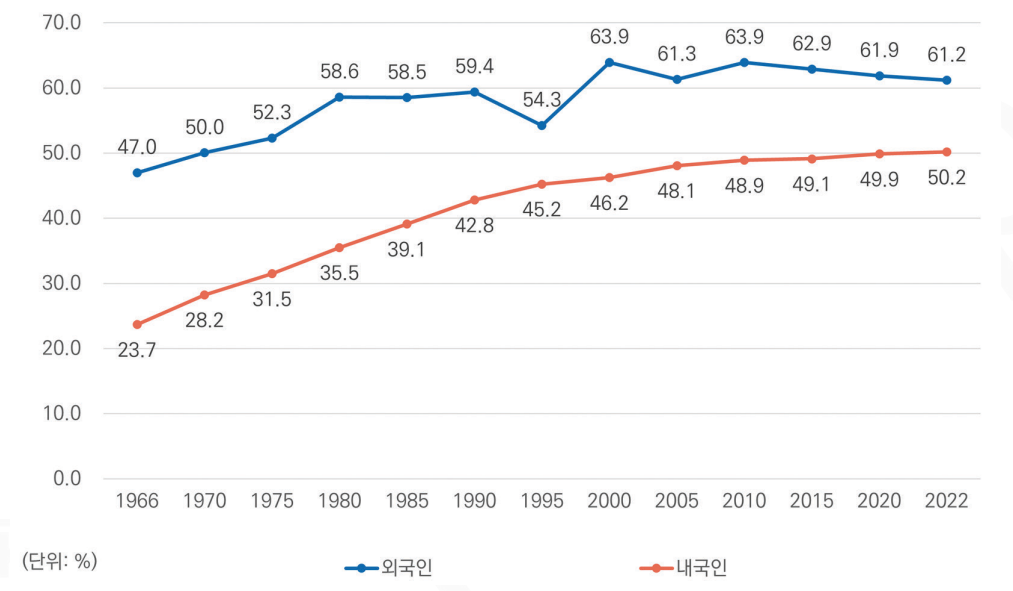


그림 7-4. 외국인과 내국인의 수도권 거주 비율 변화(1966~2022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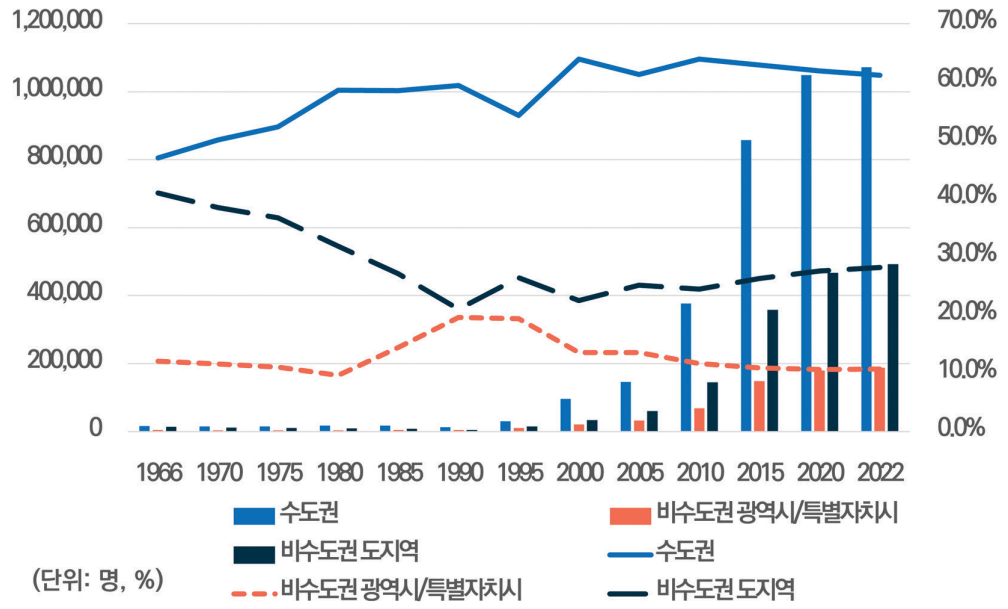


그림 7-5. 거주지별 외국인의 규모와 비율 변화(1966~2022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다음으로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의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비수도권의 도 지역으로 유형화하여 외국인의 규모와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7-5). 2022년 기준 비수도권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8만 명(10.7%)이며, 비수도권 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9.3만 명(28.1%)이다. 2000년부터 비수도권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거주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 도 지역은 증가세에 있다.

2005~2022년 외국인의 도시(동부) 거주 비율은 72~78% 정도로[5] 내국인(81~82%)에 비해 낮다(표 7-7). 외국인 생산연령인구의 도시 거주 비율은 2005년 73.9%에서 2022년 71.0%까지 감소했다(표 7-8).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나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농촌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외국인의 읍·면·동부 거주 현황은 2005년부터 파악이 가능하다.

표 7-7. 외국인과 내국인의 도시 거주 비율 변화(2005~2022년)

(단위: 명, %)

구분	외국인			내국인 동부 거주 비율
	읍·면부 거주 인구	동부 거주 인구	동부 거주 인구 비율	
2005	60,463	177,054	74.5	81.5
2010	130,258	459,274	77.9	82.0
2015	377,463	986,249	72.3	81.9
2020	465,041	1,230,602	72.6	81.5
2022	481,974	1,270,372	72.5	8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7-8. 외국인과 내국인의 연령계층별 도시 거주 비율 변화(2005~2022년)

(단위: %)

구분	외국인			내국인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2005	91.4	73.9	76.3	83.4	83.4	62.9
2010	93.2	77.2	86.7	83.5	84.1	66.7
2015	88.9	71.2	86.3	83.6	83.6	70.6
2020	84.9	71.2	87.4	83.1	83.2	72.7
2022	82.7	71.0	86.9	83.5	83.5	73.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외국인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1) 교육수준

국내에 상주하는 25세 이상 외국인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교육수준과 직업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5~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내국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비교하였다. 현재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연령 기준은 2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대학교 졸업 이상에는 전문대 졸업을 포함하여 분석했다.

외국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2015년과 2020년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표 7-9). 고졸 학력 비율은 2015년에는 49.1%, 2020년에는 51.7%이었다. 대졸 이상 비율은 2015년에는 23.6%, 2020년에는 26.3%인데, 내국인은 대졸 이상 비율이 2015년(40.3%)과 2020년(43.4%) 모두 40% 이상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다.

표 7-9. 외국인과 내국인의 교육수준 변화(2015·2020년)

(단위: %)

구분	외국인						내국인					
	2015			2020			2015			2020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고졸 미만	27.3	24.9	30.7	22.0	20.9	23.4	23.6	17.3	29.6	19.0	14.0	23.9
고졸	49.1	52.1	44.8	51.7	55.1	47.3	36.1	37.6	34.7	37.6	38.7	36.6
대졸 이상	23.6	23.0	24.5	26.3	24.0	29.3	40.3	45.1	35.7	43.4	47.3	39.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은 20% 표본(원자료), 내국인은 KOSIS.

외국인의 교육수준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 2020년 기준으로 여성은 대졸 이상이 29.3%로 남성(24.0%)에 비해 높다.

2) 경제활동

2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외국인의 70.1%가 일하였으며, 약 3명 중 1명(29.9%)은 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10). 같은 해 내국인은 63.5%가 일하였고 36.5%가 일하지 않았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높은 외국인의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이다. 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외국인은 남성 83.5%, 여성 53.1%였으며, 내국인은 남성 74.8%, 여성 52.5%였다. 남성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유사하다. 외국인의 성별 취업률 격차가 내국인보다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외국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이민 등 비취업 이민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업 중인 25세 이상 외국인은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다(표 7-11). 2020년 기준으로 93.1%가 임금근로자(남성 95.0%, 여성 89.3%)이고, 자영업자는 5.2%(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낮다. 내국인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76.4%이며, 20.3%는 자영업자로 종사하고 있어 외국인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7-10.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2015·2020년)

(단위: %)

구분		외국인						내국인(2020)		
		2015			2020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일하였음	주로 일하였음	70.6	82.4	54.0	65.6	79.6	47.7	58.6	71.2	46.3
	틈틈이 일하였음	1.4	0.7	2.4	2.5	1.9	3.3	3.1	1.9	4.3
	일시 휴직	0.7	0.7	0.7	2.0	1.9	2.0	1.8	1.8	1.9
	소계	72.8	83.9	57.2	70.1	83.5	53.1	63.5	74.8	52.5
일하지 않았음		27.2	16.1	42.8	29.9	16.5	46.9	36.5	25.2	47.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표 7-11. 외국인과 내국인의 종사상 지위 변화(2015·2020년)

(단위: %)

구분	외국인						내국인(2020)		
	2015			2020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임금근로자	94.0	95.7	90.7	93.1	95.0	89.3	76.4	75.5	77.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9	2.6	3.6	3.8	3.1	5.1	15.0	16.9	12.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	1.5	1.6	1.4	1.2	1.6	5.3	6.1	4.1
무급가족종사자	1.5	0.2	4.2	1.7	0.6	3.9	3.4	1.5	5.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표 7-12. 외국인과 내국인의 직업 변화(2015·2020년)

(단위: %)

구분	외국인						내국인(2020)		
	2015			2020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관리자	0.3	0.4	0.2	0.3	0.4	0.2	0.8	1.1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8	7.5	8.5	7.3	6.4	9.1	20.1	18.2	22.7
사무 종사자	3.7	3.3	4.6	8.8	7.4	11.7	20.3	18.8	22.4
서비스 종사자	10.6	4.0	24.3	11.0	4.8	23.5	12.1	7.1	18.9
판매 종사자	3.4	2.2	6.0	5.0	3.4	8.1	11.1	9.8	1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1	3.0	3.3	4.9	5.2	4.2	4.4	4.6	4.1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18.1	23.8	6.3	17.1	22.5	6.2	9.1	13.3	3.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9.9	35.0	19.5	29.1	34.8	17.7	12.2	17.4	5.1
단순노무 종사자	23.0	21.0	27.3	16.4	15.1	19.2	9.4	8.9	1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외국인의 직업은 내국인과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인다(표 7-12, 그림 7-6). 2020년 내국인은 '사무 종사자(20.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0.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2.2%)' 순으로 직업군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외국인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7.1%)', '단순노무 종사자(16.4%)' 등의 직업이 주를 이룬다.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 남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4.8%)'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2.5%)'에 절반 이상이 종사한다. 외국인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23.5%)',

'단순노무 종사자(19.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7.7%)' 순으로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 분포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내국인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7%)', '사무 종사자(22.4%)', '서비스 종사자(18.9%)' 순으로 비율이 높다.

2020년 외국인이 종사하는 주요 산업은 제조업(40.6%), 건설업(12.6%), 숙박 및 음식점업(10.8%) 순이다(표 7-13, 그림 7-7). 도매 및 소매업은 외국인(7.1%)이 종사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지만 내국인(13.3%)에 비해 비율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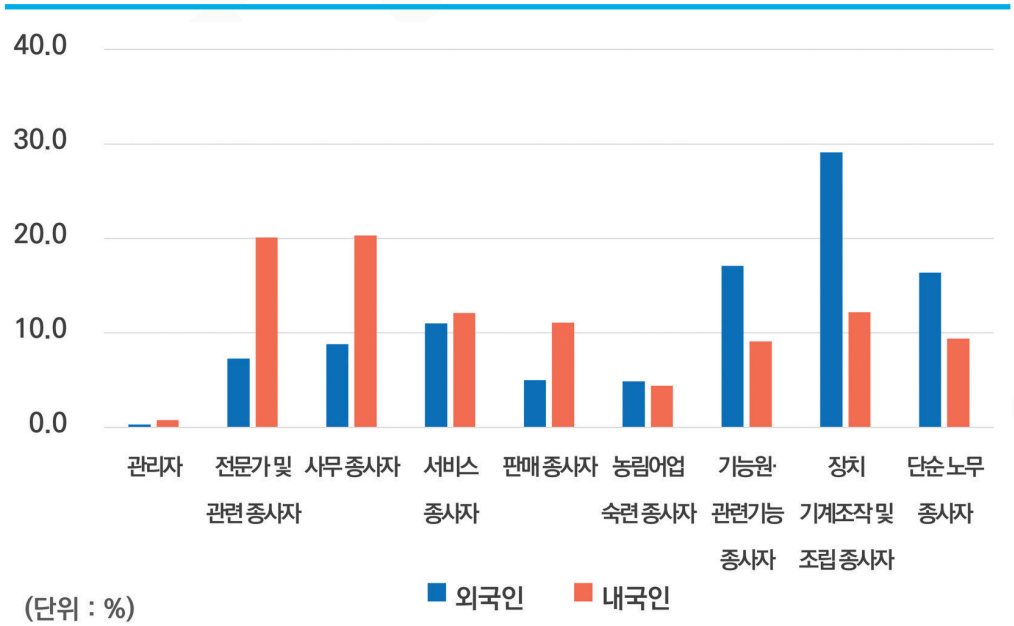


그림 7-6. 외국인과 내국인의 직업(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표 7-13. 외국인과 내국인의 종사 산업 변화(2015·2020년)

(단위: %)

구분	외국인						내국인(2020)		
	2015			2020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제조업	42.6	49.9	27.8	40.6	47.4	27.0	17.6	22.2	11.4
건설업	12.1	17.1	1.9	12.6	17.4	2.8	6.7	10.1	2.0
숙박 및 음식점업	13.4	4.5	31.7	10.8	4.6	23.4	7.5	5.0	11.0
도매 및 소매업	5.4	4.3	7.6	7.1	5.6	10.1	13.3	12.6	14.3
농업, 임업 및 어업	4.4	4.2	4.7	5.9	6.1	5.5	4.4	4.6	4.2
기타	22.1	20.1	26.3	23.0	18.9	31.3	50.4	45.6	57.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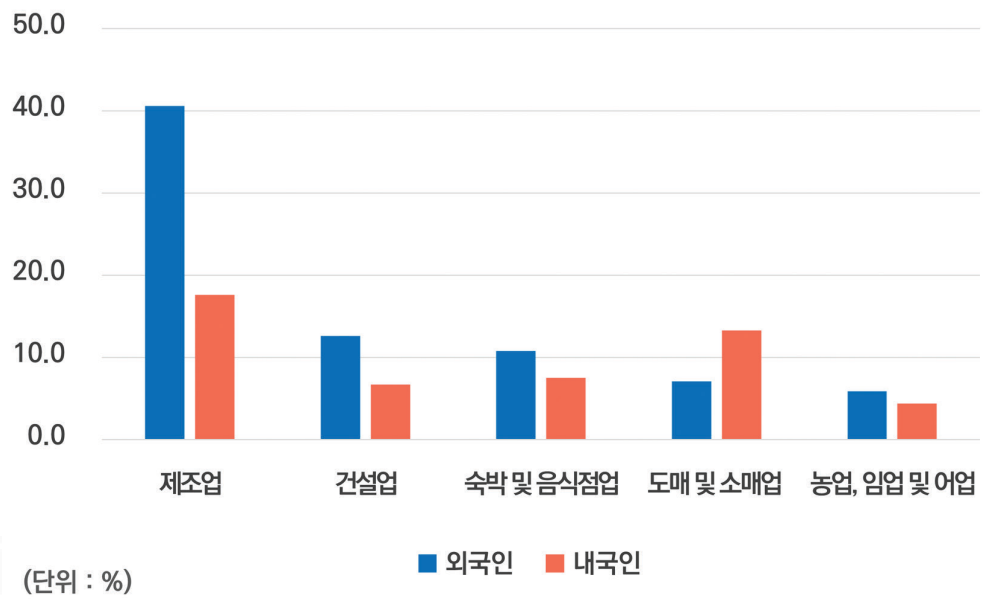


그림 7-7. 외국인과 내국인의 종사 산업(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외국인 남성은 제조업(47.4%)과 건설업(17.4%)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특히 외국인 남성의 제조업 종사 비율은 내국인 남성(22.2%)의 두 배가 넘는다. 외국인 여성은 제조업(27.0%)과 숙박 및 음식점업(23.4%)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위 2개 산업 종사자의 합이 50.1%로 특정 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남성에 비해 약한 편이다.

4. 다문화 가구의 특성

이 절에서는 국내 다문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다문화 가구를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정의한다. 국내 다문화 가구의 규모와 거주지 분석은 2010년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와 2015년, 2020년 및 2022년 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가구의 구성에 대해서는 2020년과 2022년 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7-14. 시도별 다문화 가구 수 변화(2010~2022년)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5		2020		2022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전국	386,977	100.0	299,241	100.0	367,775	100.0	399,396	100.0
동부	315,069	81.4	229,482	76.7	283,544	77.1	309,057	77.4
읍부	30,779	8.0	32,523	10.9	44,908	12.2	49,296	12.3
면부	41,129	10.6	37,236	12.4	39,323	10.7	41,043	10.3
서울특별시	115,043	29.7	64,013	21.4	69,790	19.0	72,949	18.3
부산광역시	14,550	3.8	12,826	4.3	15,158	4.1	16,202	4.1
대구광역시	9,759	2.5	8,560	2.9	10,919	3.0	11,868	3.0
인천광역시	19,388	5.0	18,394	6.1	25,449	6.9	28,657	7.2
광주광역시	5,353	1.4	6,185	2.1	7,742	2.1	8,455	2.1
대전광역시	6,839	1.8	6,116	2.0	7,407	2.0	7,957	2.0

구분	2010		2015		2020		2022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울산광역시	7,023	1.8	6,076	2.0	7,079	1.9	7,402	1.9
세종시	-	-	919	0.3	1,656	0.5	1,908	0.5
경기도	118,455	30.6	84,295	28.2	110,592	30.1	122,458	30.7
강원도	6,675	1.7	7,304	2.4	8,934	2.4	9,841	2.5
충청북도	10,010	2.6	9,347	3.1	12,002	3.3	13,194	3.3
충청남도	16,091	4.2	14,722	4.9	18,514	5.0	20,658	5.2
전라북도	8,834	2.3	11,292	3.8	13,207	3.6	14,056	3.5
전라남도	9,366	2.4	12,747	4.3	14,626	4.0	15,666	3.9
경상북도	14,960	3.9	14,268	4.8	17,241	4.7	18,691	4.7
경상남도	22,044	5.7	18,238	6.1	22,044	6.0	23,476	5.9
제주도	2,587	0.7	3,939	1.3	5,415	1.5	5,958	1.5
수도권	252,886	65.3	166,702	55.7	205,831	56.0	224,064	56.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다문화 가구 수는 2010년 38.7만 가구에서 2015년 29.9만 가구로 줄었다가 2022년 39.9만 가구로 증가하였다(표 7-14). 2010~2015년의 급격한 감소는 당시 한국 정부가 결혼이민 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과 연관이 있다.

다문화 가구의 도시(동부) 거주 비율은 2010년 81.4%에서 2022년 77.4%로 감소했다(그림 7-8). 다문화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2010년 65.3%에서 2015년 55.7%로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56.1%로 소폭 증가했다. 다문화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외국인 가구보다 낮고, 일반가구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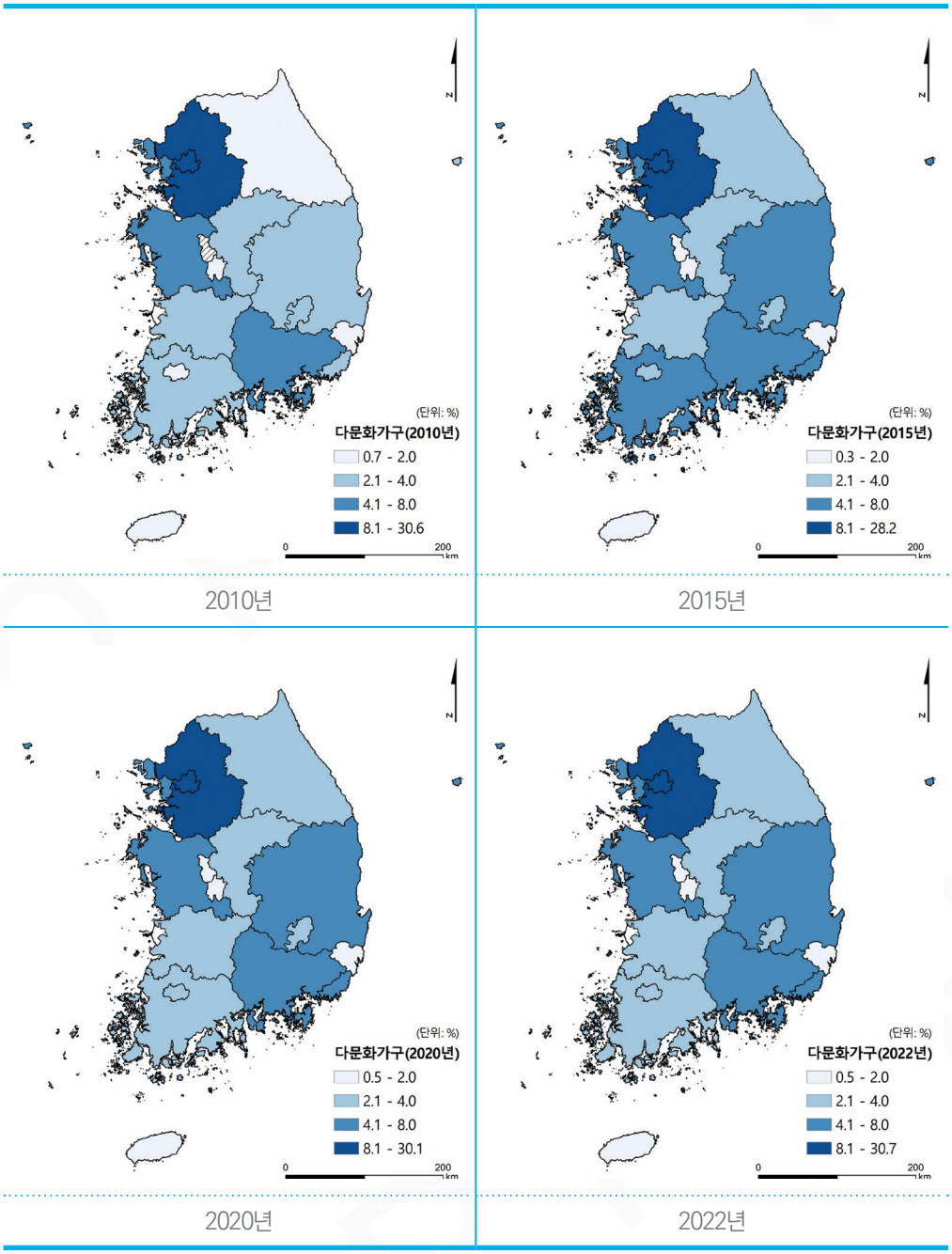


그림 7-8. 시도별 다문화 가구 분포 변화(2010~2022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7-15. 다문화 가구 구성 변화(2020·2022년)

(단위: 가구, %)

구분	2020		2022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전체	367,775	100.0	399,396	100.0
1인 가구(귀화 등 내국인)	44,719	12.2	55,669	13.9
2인 이상 가구	323,056	87.8	343,727	86.1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 등)	163,160	44.4	183,649	46.0
내국인(출생·귀화 등)+외국인	151,910	41.3	148,421	37.2
기타	7,986	2.2	11,657	2.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국내 다문화 가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7-15). 2022년 기준으로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 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46.0%(18.4만 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국인(출생, 귀화 등)+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37.2%(14.8만 가구)를 차지한다.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된 '1인 가구'는 13.9%(5.6만 가구)다. 2020년과 비교해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 등)'으로 구성된 가구는 2만 가구 이상, 1인 가구는 1만 가구 이상 증가하였다.

5. 맺음말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급성장하였다. 외국인의 유형도 동포와 취업이민자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 장기 거주를 선택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외국인의 정주에 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규모와 동향,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외국인 인구는 1990년대까지 10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하여 2022년 175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총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은 2000년 이전 0.1%에서 2022년 3.4%로 커졌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국내 총인구 감소를 지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인구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90% 내외로 매우 높은데, 이는 외국인 인구가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외국인 생산연령인구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넷째, 외국인 인구의 총부양비는 내국인에 비해 낮지만, 2010년 이후로 외국인 인구도 총부양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외국인 인구는 내국인과 달리 남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내국인은 2022년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지만, 외국인 인구는 1966년부터 2022년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10% 이상 많다. 여섯째, 외국인 인구의 약 61%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약화되고 있다. 일곱째, 외국인의 약 73%가 도시에 거주하지만, 생산연령인구의 도시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한 농어촌에 외국인 인구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덟째,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취업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크게 높다. 아홉째, 다문화 가구는 2015년을 저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도권 거주 비율은 일반가구와 유사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지방 정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인구가 농어촌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의 지방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이 취업 및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정주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 완화, 취업 지원 강화, 지원센터 설립, 모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 고령자와 외국인 청장년 간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둘째, 이민정책 대상을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인구는 다문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다문화가족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6] 대상을 확장하여 국내 정주 외국인을 사회통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련 인구주택총조사 문항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정주 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문항에 이주배경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의 이주 관련 문항은 응답자의 출생 시 국적, 현재 국적, 그리고 입국 시점 3가지이다. 여기에 부모의 출생지 또는 귀화 여부 등 부모의 이주배경을 묻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의 사회통합 정도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귀화한 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이주배경 관련 문항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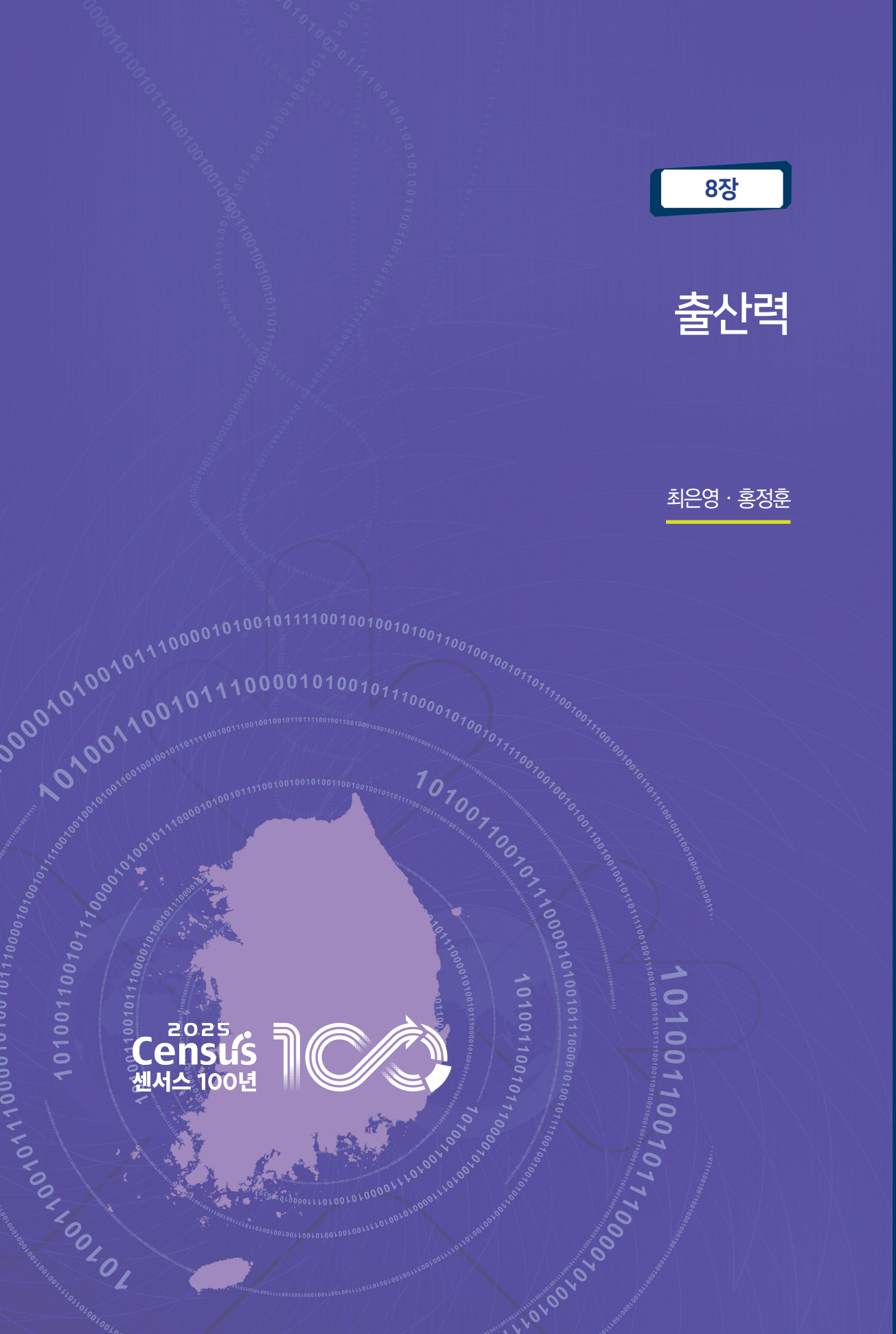
6)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까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가족보다 외국인의 증가가 더욱 빠름에 따라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비다문화가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과를 별도 신설하였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구 단위 분석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표본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에도 외국인가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지만 외국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8장

출산력

최은영 · 홍정훈



1. 머리말

통계청에서 1970년 인구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2020년에 연간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나타났다.[1]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전되면서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 이후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총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2021년 5,174만 명, 2022년 5,169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5,177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지만 2020년 총인구보다는 적다. 2023년의 총인구 증가는 외국인의 순유입에 의한 것으로 내국인의 자연감소는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32년 5,114만 명으로 감소하고,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3,622만 명, 2122년에는 1,936만 명이 될 것이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자연증가 규모는 2022년 -11.4만 명에서 2032년 -16.0만 명, 2060년 -59.0만 명, 2072년 -5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수는 2022년 24.6만 명에서 2072년 16.0만 명으로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2022년 36.0만 명에서 2072년 69.2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만(David Coleman)은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인구감소로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일찍 소멸할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이다. 합계출산율의

1) 월간 기준으로는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에 사망자 수(2.7만 명)가 출생아 수(2.5만 명)보다 많았다.

급격한 감소는 이러한 인구 현상의 핵심 원인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인구정책과 출산의 변천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본 후 1970~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기혼여성의 출산력 변화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분석집단을 20~59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로 통제하여, 2005년 10% 표본 원자료, 2020년 20% 표본 원자료에 기반해 차별출산력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본다.[2] 연령에 따라 출생아 수, 학력 등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 연령대를 제한했다.

2) 2005년은 최은영·박영실(2009)이 수행한 10% 표본 원자료 분석결과, 2020년은 통계청이 RAS에서 제공한 20% 표본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 인구정책과 출산

1960~1980년대에 국가는 인구증가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해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전쟁 후 군인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베이비붐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해방, 6·25전쟁 이후 높은 출산율이 이어졌다.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둘도 많다'는 표어를 내세우며 사적인 의사결정인 출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그림 8-1). 셋째 아이부터는 의료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극단적인 정책이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되었다.



그림 8-1. 시대별 인구 포스터의 변화

출처: 한겨레신문, "21세기에 '60년대식' 출산 캠페인", 2016.10.20.

1997년 외환위기는 모든 분야에 상처를 남겼지만, 특히 저출산의 고착화로 인구 재생산 구조가 붕괴되는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콩나물교실이라 불린 과밀 학급, 교실이 부족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등교하던 2부제 수업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폐교 문제가 농촌에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사라지고 있다. 그 여파로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2001년 1.31명을 기록한 후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의 기준이 되는 1.3명을 밑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정부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급선회하였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되는 등 정권에 따라 그 위상에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 인구문제가 심화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이후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범정부 부처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은 확대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2023)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 예산은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 51.7조 원까지 증가한 후 2023년 48.2조 원으로 감소하였다(그림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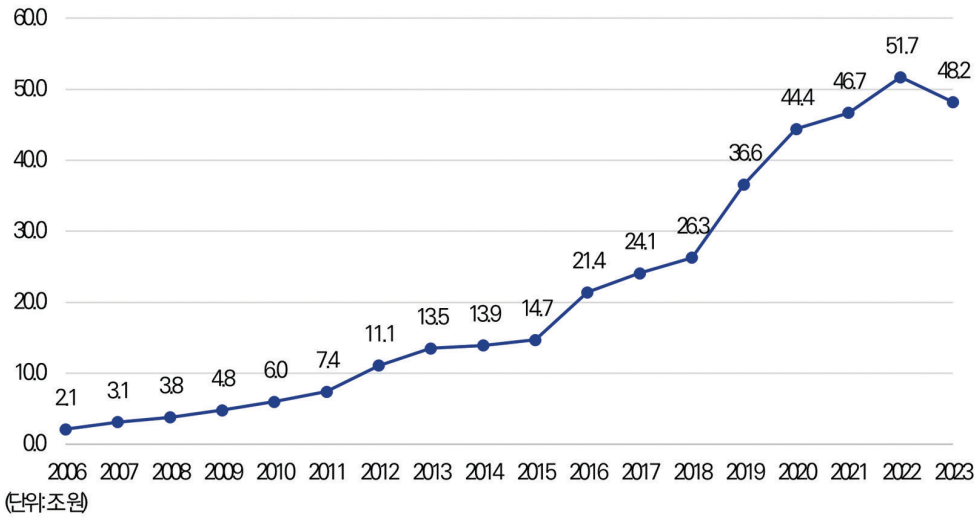


그림 8-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에 따른 대응 예산 변화(2006~2023년)

주: 2006~2020년은 결산 기준, 2021~2023년은 시행계획상 예산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인구정책과 더불어 출산은 1960년 이래 약 65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출산에 관한 역사적인 흐름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상세하게 읽어 낼 수 있다. 기혼여성[3]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출산 관련 항목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8-1). 1960년부터 총출생아(출산 자녀) 수를 조사한 데 이어 1966년에는 사망 자녀 수, 1975년에는 초혼연령, 출생아의 성별, 동거 자녀 수, 2005년에는 추가계획 자녀 수, 2015년에는 첫째 자녀와 마지막 자녀의 출산시기 항목을 추가하였다. 시기에 따라 조사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1995년에는 출산 관련 항목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동거 자녀 수는 2010년 이후 조사하지 않고 있다.

3) 인구주택총조사의 출산력 관련 항목은 기혼여성이 조사대상인데,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여성 외에 이혼, 사별한 여성도 포함한다.

표 8-1. 인구주택총조사의 출산 관련 항목 변화(1960~2020년)

구분	초혼연령	총출생아 수	출생아 성별	사망 자녀 수	동거 자녀 수	추가계획 자녀 수	출산 시기
1960		○					
1966		○		○			
1970		○		△			
1975	○	○	○	○	○		
1980	○	○	○	○	○		
1985		○	○	○			
1990	○	○	○	○			
1995							
2000		○	○				
2005	○	○	○	○	○	○	
2010	○	○	○	○		○	
2015	○	○	○	○		○	○
2020	○	○	○	○		○	○

주: 1970년에는 생존 자녀 수를 문항에 포함하여 사망 자녀 수를 계산할 수 있었으므로 세모로 표시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3.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변화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75년 3.43명, 1980년 2.82명, 1985년 1.66명, 2000년 1.48명, 2005년 1.09명으로 급감하였다(표 8-2, 그림 8-3).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 1971년 102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부터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7년부터 30만 명대에 진입하였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970년 대비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8-2.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변화(1970~2023년)

(단위: 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출생아 수	1,006,645	874,030	862,835	655,489	649,738	715,020	640,089	438,707	470,171	438,420	272,337	230,028
합계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8	1.09	1.23	1.24	0.84	0.7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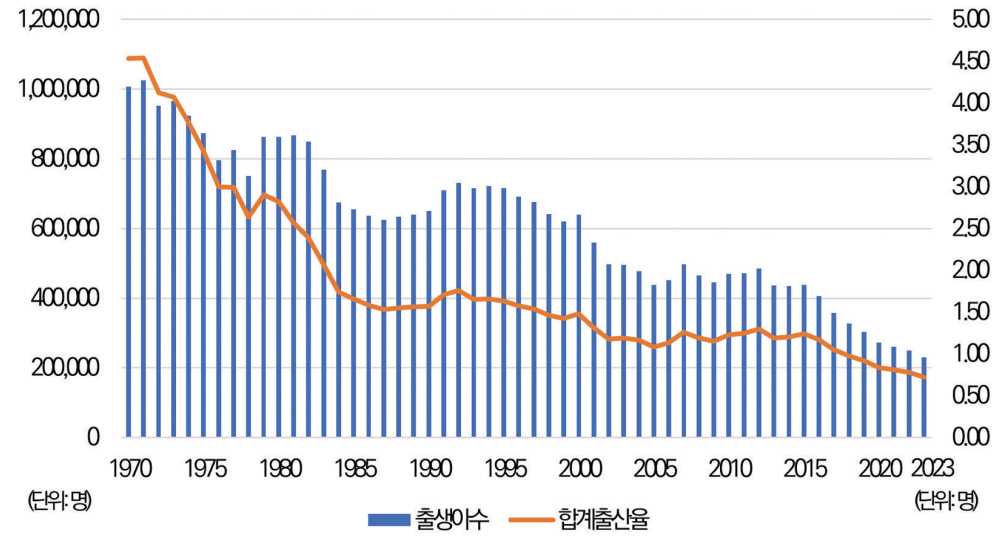


그림 8-3.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변화(1970~2023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1980년에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았으나, 2020년 이후 유일하게 1.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표 8-3, 그림 8-4).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5년부터 일본보다 낮아졌고, 2005년부터는 유럽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이탈리아와 독일에 비해서도 낮아졌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프랑스에 비해 약 1.0명 낮다.

표 8-3.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변화(1980~2021년)

(단위: 명)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OECD 평균	2.25	2.03	1.98	1.77	1.70	1.67	1.75	1.68	1.56	1.58
한국	2.82	1.66	1.57	1.63	1.48	1.09	1.23	1.24	0.84	0.81
일본	1.75	1.76	1.54	1.42	1.36	1.26	1.39	1.45	1.33	1.30
미국	1.84	1.84	2.08	1.98	2.06	2.06	1.93	1.84	1.64	1.66
스웨덴	1.68	1.73	2.14	1.74	1.55	1.77	1.98	1.85	1.66	1.67
이탈리아	1.68	1.45	1.36	1.19	1.26	1.33	1.44	1.36	1.24	1.25
프랑스	1.95	1.81	1.78	1.71	1.87	1.92	2.02	1.93	1.79	1.80
독일	1.56	1.37	1.45	1.25	1.38	1.34	1.39	1.50	1.53	1.58

주: 한국 자료의 출처는 인구동향조사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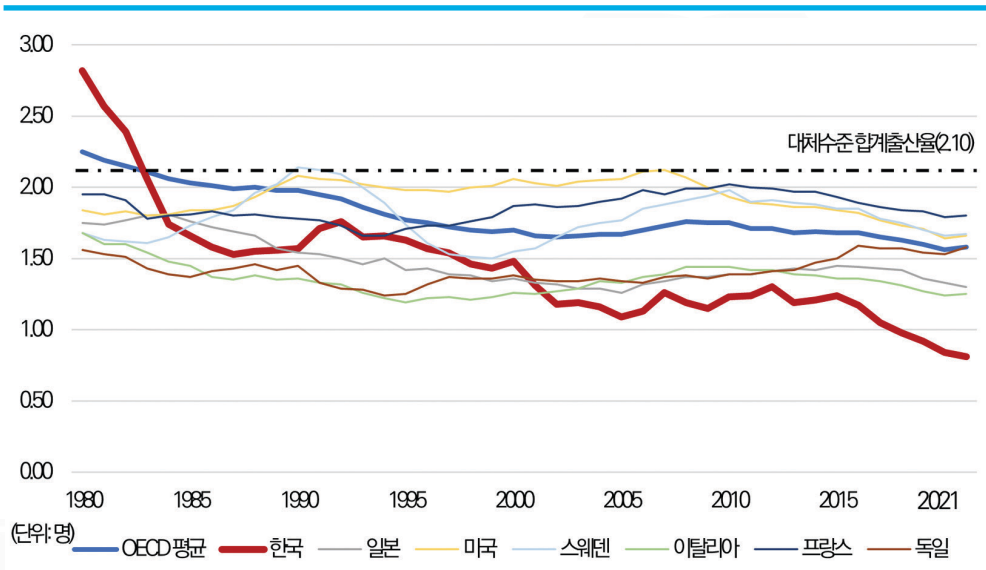


그림 8-4.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변화(1980~2021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인구동향조사에 의한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은 1995년 26.5세에서 2021년 32.6세로 꾸준히 상승했다(표 8-4, 그림 8-5). 2021년 기준 OECD 주요 7개국 중 한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이 가장 높다.

한국 출생아의 성비는 1981년 107.1에서 1990년 116.5까지 증가하였다(그림 8-6). 남아선호 사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초음파로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이 보급되었고 여아에 대한 임신중절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후에는 등락을 거쳐 2000년 110.1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가 나타났는데, 2013년이 되어서야 자연성비 수준인 105로 떨어졌고, 2023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남아선호 사상의 쇠퇴를 의미한다.

표 8-4. OECD 주요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 변화(1980~2021년)

(단위: 세)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OECD 평균	-	-	-	25.8	26.4	-	-	-	29.2	29.4
한국	-	-	-	26.5	27.7	29.1	30.1	31.2	32.3	32.6
일본	26.4	26.7	27.0	27.5	28.0	29.1	29.9	30.7	30.7	30.9
미국	22.7	23.7	24.2	24.5	24.9	25.2	25.4	26.4	27.1	27.3
스웨덴	-	-	26.3	-	27.9	28.7	28.9	29.2	29.7	29.8
이탈리아	25.1	25.9	26.9	28.1	-	-	-	30.8	31.4	31.6
프랑스	-	-	-	-	27.8	28.5	-	28.5	28.9	29.1
독일	-	-	-	-	-	-	28.9	29.5	29.9	30.1

주: 한국 자료의 출처는 인구동향조사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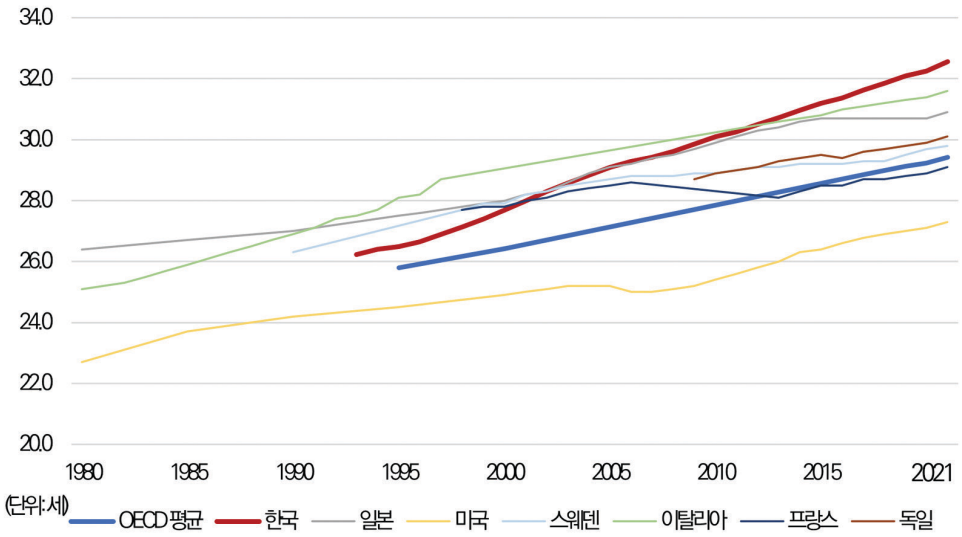


그림 8-5. OECD 주요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 변화(1980~2021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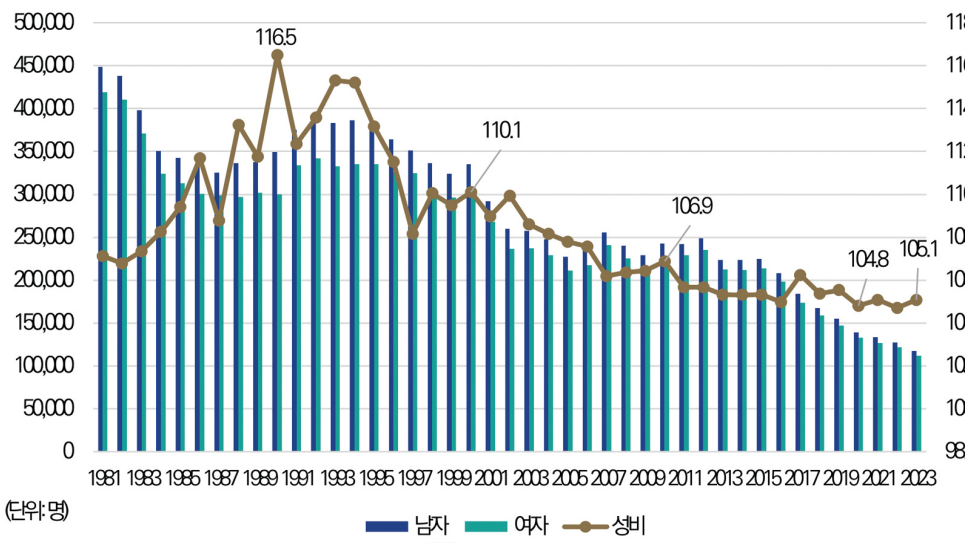


그림 8-6. 출생아의 성비 변화(1981~2023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4. 유배우 비율과 기혼여성의 출산력 변화

1) 초혼연령과 유배우 비율의 변화

인구동향조사에 의한 혼인연도별 평균 초혼연령은 1990~2020년간 꾸준히 상승하였다(그림 8-7). 1990년에는 남성 27.8세, 여성 24.8세로 여성의 경우 25세 전에 결혼하는 것이 평균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남성 33.2세, 여성 30.8세로 30세가 넘어 결혼하는 것이 평균인 것으로 바뀌었다.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폭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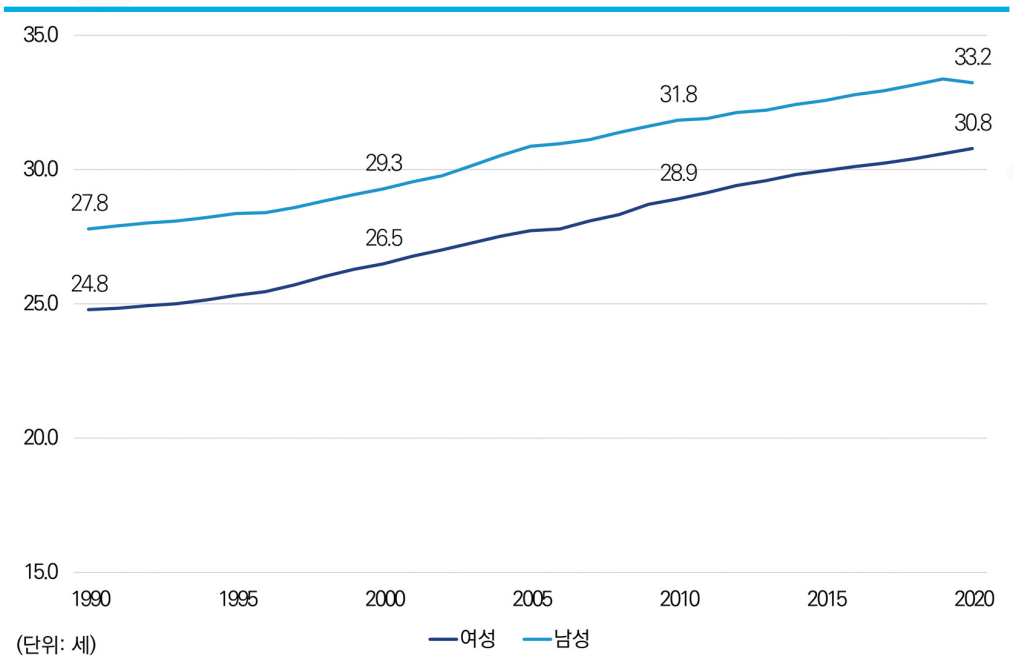


그림 8-7. 성별·혼인연도별 평균 초혼연령 변화(199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1970~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혼인상태 중 유배우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5). 20~24세, 25~29세, 30~34세 여성은 1970~2020년간 유배우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였다(그림 8-8). 특히 25~29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1970년 88.4%에서 2020년 17.3%까지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한편 35~39세 여성은 1980년, 40~44세 여성은 1985년을 정점으로 2020년까지 유배우 비율이 감소했다.

남성은 20~24세, 25~29세, 30~34세에서 여성에 비해 유배우 비율이 꾸준히 낮았는데, 2005년부터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에 비해 유배우 비율이 낮아졌다(그림 8-9). 30~34세 남성은 유배우 비율이 1970년 92.5%에서 2020년 32.9%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70~2020년 40~44세 유배우 비율이 여성은 84.8%에서 77.8%로, 남성은 97.5%에서 68.1%로 감소하여, 남성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낮은 유배우 비율은 합계출산율 감소의 핵심 원인이다.

표 8-5. 성별·연령대별 유배우 비율 변화(1970~2020년)

(단위: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여성	20~24세	42.3	37.2	33.7	27.8	19.5	16.7	10.7	6.2	3.9	2.9	1.9
	25~29세	88.4	86.8	84.9	80.9	77.3	69.9	59.1	40.1	30.0	22.0	17.3
	30~34세	94.6	94.4	94.3	93.3	92.4	91.4	86.9	78.2	68.5	60.5	51.8
	35~39세	92.0	93.2	93.4	93.3	92.8	92.2	90.7	86.8	81.6	76.1	72.3
	40~44세	84.8	88.2	90.1	90.4	90.3	90.1	88.9	87.3	84.0	79.2	77.8
남성	20~24세	7.2	7.0	6.8	5.5	3.5	3.6	2.4	1.8	1.1	1.0	0.7
	25~29세	56.0	52.6	54.4	48.9	42.4	35.3	28.5	17.9	14.3	9.8	7.2
	30~34세	92.5	92.1	91.8	89.6	85.1	79.6	70.6	57.2	48.6	43.2	32.9
	35~39세	97.3	97.3	96.7	95.7	94.2	91.1	86.4	78.0	69.9	64.5	59.6
	40~44세	97.5	97.7	97.3	96.7	95.6	93.8	90.4	85.7	79.4	72.1	68.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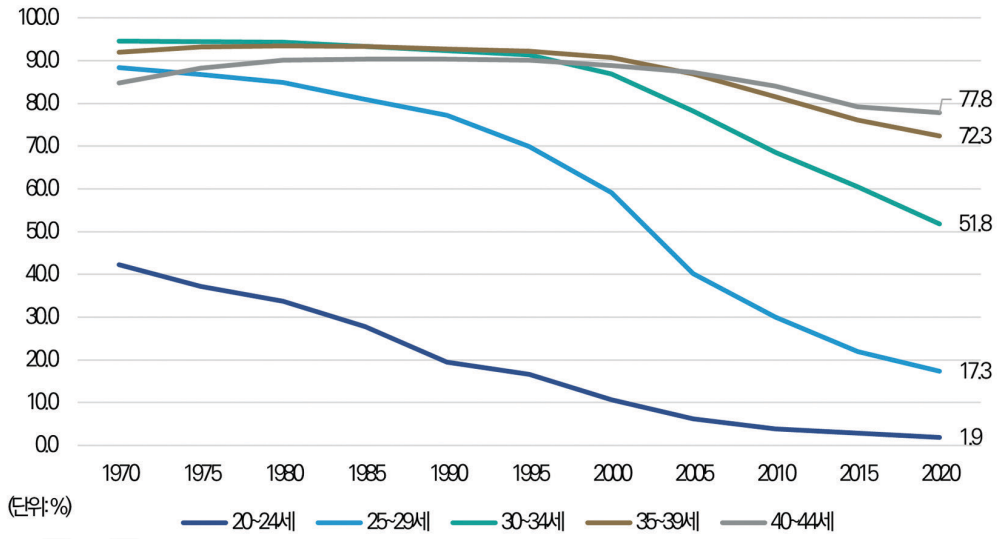


그림 8-8. 여성의 연령대별 유배우 비율 변화(197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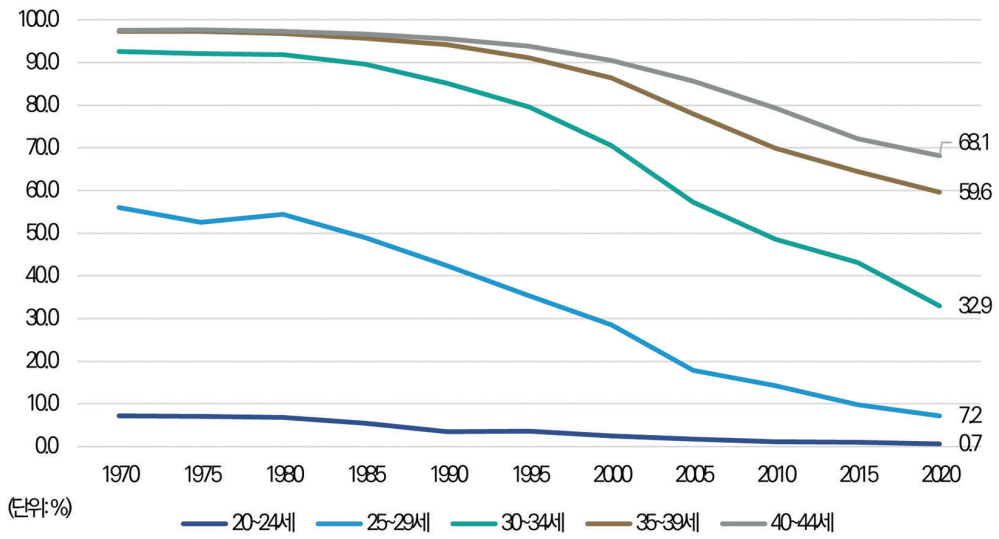


그림 8-9. 남성의 연령대별 유배우 비율 변화(197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 변화

혼인연도별 초혼 후 첫 출산까지 소요된 평균기간은 1980년 2.0년에서 1991년 1.4년까지 대체로 감소했다가, 2000년 1.9년으로 증가한 후, 2005년 1.8년, 2010년 1.7년, 2015년 1.5년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그림 8-10).[4)]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1970~2020년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감소했다(표 8-6, 그림 8-11). 지난 50년간 평균 출산 자녀 수의 감소폭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큰 경향을 보여, 45~49세는 5.63명에서 1.77명으로 3.86명 감소하였다. 25~29세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1970년 2.15명으로 20~24세(1.03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는데, 2020년 0.72명까지 감소하면서 20~24세(0.71명)와 유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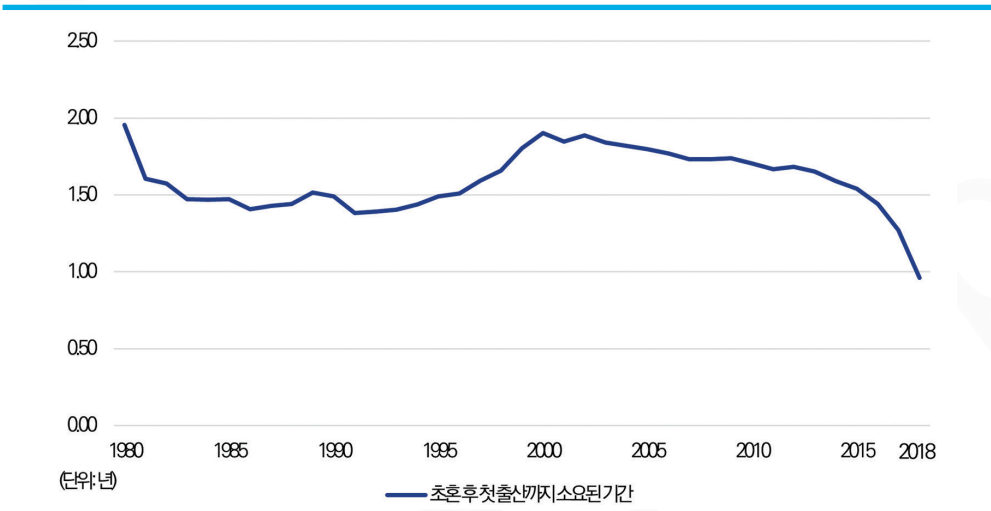


그림 8-10. 혼인연도별 초혼 후 첫 출산까지 소요된 평균기간 변화(1980~2018년)

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집계하였고, 출산이 초혼보다 빠른 경우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4) 2020년에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조사기준일 출산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한 분석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8-6.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1970~2020년)

(단위: 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세	1.03	1.00	0.92	0.86	0.70	0.70	0.65	0.84	0.77	0.71
25~29세	2.15	1.97	1.75	1.54	1.28	1.11	0.91	0.99	0.82	0.72
30~34세	3.53	3.18	2.67	2.29	1.89	1.71	1.52	1.42	1.21	1.03
35~39세	4.55	4.11	3.43	2.80	2.35	1.92	1.87	1.78	1.64	1.47
40~44세	5.28	4.79	4.16	3.44	2.83	2.01	1.94	1.94	1.79	1.70
45~49세	5.63	5.23	4.69	4.07	3.43	2.31	2.00	1.97	1.89	1.7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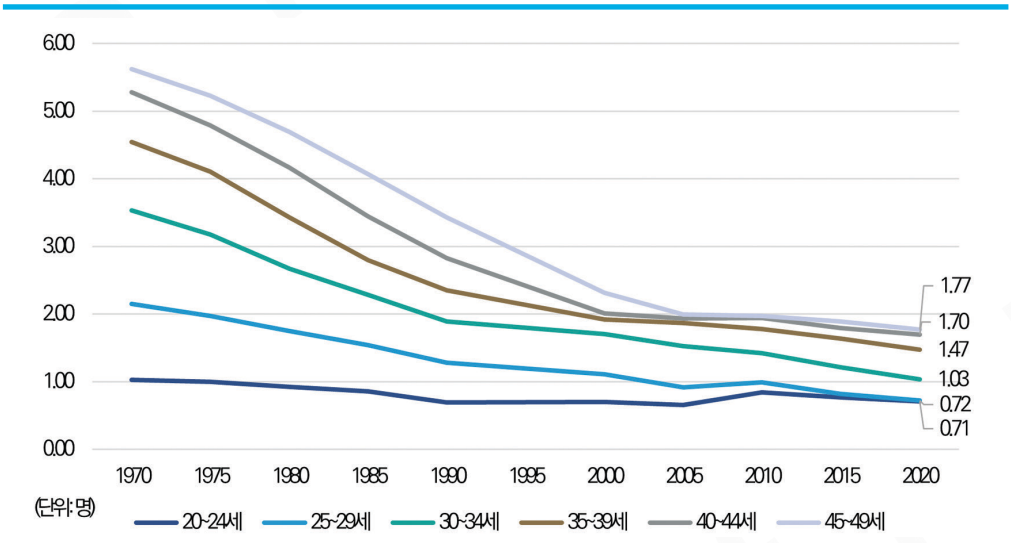


그림 8-11.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197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70~2020년간 25~44세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무자녀와 1명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3명 이상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표 8-7, 그림 8-12). 2명 비율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00년을 고점으로 2020년까지 감소하였다. 출산 자녀 수별 구성비가 1970~1985년에는 3명 이상, 2명, 1명, 무자녀 순이었는데, 2000~2010년에

는 2명, 1명, 3명 이상, 무자녀 순으로 변화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기혼여성 비율은 1970년 71.6%, 1980년 56.8%, 1990년 25.2%, 2000년 11.2%로 급격히 낮아졌는데, 2000년 이후에도 2005년 10.2%, 2015년 9.5%, 2020년 8.7%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무자녀 비율은 2010년까지 10% 미만에 머물렀으나, 2015년 13.7%, 2020년 17.9%로 상승해 2015~2020년에는 무자녀 비율이 3명 이상의 자녀 비율보다 높아졌다.

표 8-7. 25~44세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별 비율 변화(1970~2020년)

(단위: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무자녀	4.0	4.2	4.7	5.4	6.4	7.9	9.6	7.4	13.7	17.9
1명	9.4	9.8	11.8	15.6	21.1	22.4	23.2	29.4	29.4	32.6
2명	15.0	18.3	26.7	38.3	47.2	58.4	56.9	53.0	47.4	40.9
3명 이상	71.6	67.6	56.8	40.8	25.2	11.2	10.2	10.3	9.5	8.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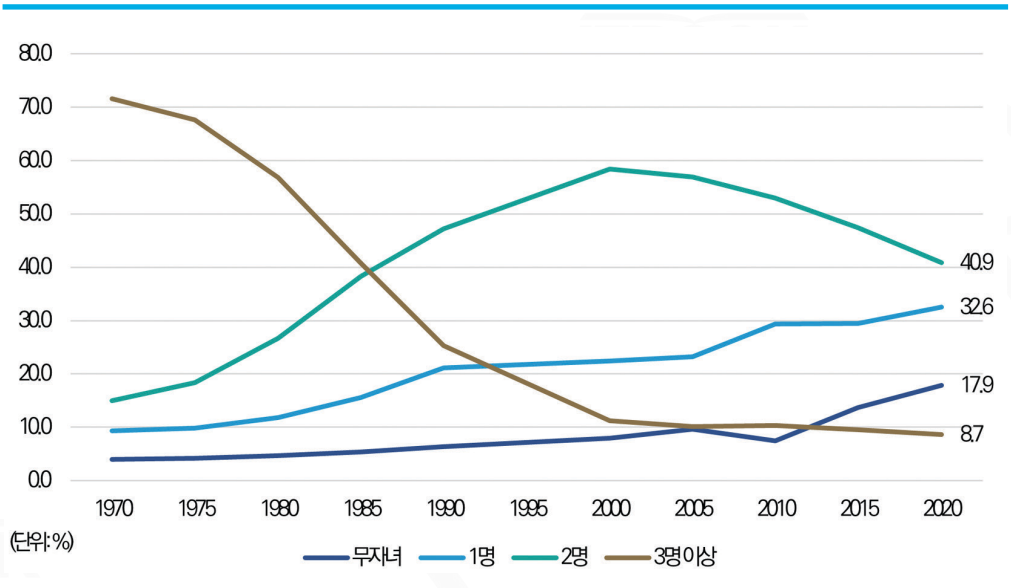


그림 8-12. 25~44세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별 비율 변화(197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5.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도별 차별출산력 변화

특정한 시간·장소·조건이라는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는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조건 하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도별 차별출산력 분석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59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를 분석집단으로 통제했던 최은영·박영실(2009)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가구 수가 2005년은 983,765가구, 2020년은 1,956,459가구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표 8-8). 미혼여성을 제외하고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표에서는 모(母), 미혼여성까지 포함한 분석표에서는 여성으로 표기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미혼여성에게는 출산 자녀 수가 없다고 가정하여 분석했다.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과 2020년 모의 연령대별 출산 자녀 수를 비교한 결과, 1명인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표 8-9). 특히 30~34세는 1명 비율이 34.3%에서 57.3%로 23.0%p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

출산 자녀 수가 2명인 비율은 49세 이하에서 감소하고, 5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다. 30~34세는 2명 비율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55~59세는 2명 비율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출산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비율은 30세 이상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하였는데, 55~59세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3명 이상 비율이 2005년에는 45~49세 19.3%, 50~54세 35.8%, 55~59세 53.8%로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2020년에는 45~49세 12.8%, 50~54세 13.0%, 55~59세 13.7%로 거의 차이가 없다.

표 8-8. 차별출산력 변화 분석 대상 집단

(단위: 가구)

구분	전체	20세 미만 자녀 있음		20세 미만 자녀 없음	
		여성 가구주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남성 가구주
2005	983,765	49,383	481,464	159,103	293,815
2020	1,956,459	183,911	611,165	598,350	563,03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표 8-9. 모의 연령대별 출산 자녀 수별 비율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2005			2020		
	1명	2명	3명 이상	1명	2명	3명 이상
20~24세	77.4	21.3	1.3	78.6	19.6	1.8
25~29세	61.7	35.2	3.1	67.0	29.1	4.0
30~34세	34.3	58.2	7.6	57.3	36.9	5.8
35~39세	17.4	69.0	13.7	39.2	50.2	10.6
40~44세	15.5	69.2	15.3	28.9	57.1	14.0
45~49세	15.5	65.2	19.3	25.1	62.2	12.8
50~54세	10.9	53.3	35.8	20.2	66.8	13.0
55~59세	9.5	36.7	53.8	18.5	67.7	13.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다음으로 2005년 대비 2020년 부모(남녀)[5]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상태, 시도별 평균 출산 자녀 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여성의 혼인과 출산 선택을 미혼, 기혼+무자녀(혼인했으

5) 여성(모)이 포함된 가구와 남성(부)이 포함된 가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나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자녀(혼인하여 자녀를 둔 경우)로 구분하여 2005년 대비 2020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수준별 차별출산력의 변화

2005~2020년 남녀 모두 중학교 졸업에서 평균 출산 자녀 수 감소폭이 가장 크다(표 8-10). 평균 출산 자녀 수가 여성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는 2.16명에서 1.65명으로 감소하였고, 남성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는 2.20명에서 1.70명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여성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가구는 1.48명에서 1.19명으로, 남성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가구는 1.74명에서 1.67명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과 2020년 모두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출산 자녀 수가 적다. 이 추세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큰 변화가 관찰된다(표 8-11). 2005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 수가 적지만 2020년에는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에서 중학교 졸업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에서 출산 자녀 수가 많다. 이는 2020년 해당 연령대의 출산 자녀 수가 2명인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에서 중학교 졸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표 8-10. 남녀의 교육수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단위: 명)

구분	2005		202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중학교 졸업	2.16	2.20	1.65	1.70
고등학교 졸업	1.81	1.85	1.54	1.71
대학교 졸업	1.61	1.71	1.28	1.59
대학원 졸업 이상	1.48	1.74	1.19	1.6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표 8-11. 여성의 교육수준별·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2005	중학교 졸업	1.33	1.72	1.98	2.00	2.08	2.32	2.56
	고등학교 졸업	1.03	1.63	1.92	1.95	1.95	2.11	2.31
	대학교 졸업	0.63	1.34	1.80	1.91	1.88	2.00	2.17
	대학원 졸업 이상	0.48	1.07	1.65	1.83	1.85	1.97	2.09
2020	중학교 졸업	0.83	1.13	1.15	1.28	1.49	1.71	1.83
	고등학교 졸업	0.46	0.94	1.31	1.58	1.71	1.81	1.83
	대학교 졸업	0.19	0.71	1.29	1.56	1.63	1.74	1.79
	대학원 졸업 이상	0.08	0.52	1.10	1.33	1.39	1.52	1.6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2020년에 35~39세, 40~44세, 45~49세인 모는 고등학교 졸업에서 중학교 졸업에 비해 출산 자녀 수가 2명인 비율이 높고, 1명인 비율이 낮다(표 8-12). 2005년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자녀 수가 2명인 비율이 60% 이상으로 크게 높았다. 2020년에는 2명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인 30~34세, 35~39세, 40~44세 모는 1명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다만 2005년에 이어 2020년에도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에 비해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가 적고,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비율이 높다.

표 8-12. 모의 교육수준별·연령대별 출산 자녀 수 구성비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2005	중졸	28.0	54.4	17.7	16.4	61.9	21.7	15.9	64.3	19.8	14.1	63.3	22.7
	고졸	29.8	61.5	8.7	15.6	70.0	14.4	15.1	70.5	14.3	16.9	68.5	14.6
	대졸	45.6	50.6	3.7	22.0	68.9	9.1	16.5	72.1	11.4	18.1	71.0	11.0
	대학원졸 이상	60.5	37.4	2.1	29.5	63.3	7.3	20.6	68.8	10.6	19.6	69.4	11.0
2020	중졸	50.5	38.9	10.6	48.4	38.2	13.5	43.9	41.1	15.0	36.8	49.3	13.8
	고졸	49.1	41.0	10.0	36.7	48.4	15.0	27.3	55.6	17.1	22.9	62.5	14.6
	대졸	60.0	35.9	4.2	39.1	51.7	9.2	28.7	58.8	12.5	25.9	63.1	11.0
	대학원졸 이상	68.9	28.4	2.7	47.2	46.7	6.1	35.7	55.1	9.2	31.9	59.2	8.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여성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가운데, 연령대가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2005년 대비 2020년의 기혼+자녀 비율이 감소하고 미혼 및 기혼+무자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표 8-13). 2005~2020년 대학교를 졸업한 25~29세 여성은 미혼 비율이 43.0%에서 66.9%로 증가한 반면 기혼+자녀 비율은 45.8%에서 14.5%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대학교를 졸업한 30~34세 여성의 기혼+자녀 비율은 81.9%에서 49.2%로 감소한 반면 미혼 비율은 9.7%에서 27.5%로 증가했고, 기혼+무자녀 비율은 8.4%에서 23.2%로 증가했다.

표 8-13. 여성의 연령대별·교육수준별 혼인과 출산 선택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2005			2020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자녀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자녀
25~29세	중학교 졸업	20.0	8.8	71.2	27.9	16.5	55.6
	고등학교 졸업	24.0	9.6	66.4	51.9	16.7	31.4
	대학교 졸업	43.0	11.2	45.8	66.9	18.6	14.5
	대학원 졸업 이상	47.3	13.3	39.4	75.3	17.5	7.2
30~34세	중학교 졸업	7.2	7.3	85.5	16.4	13.8	69.8
	고등학교 졸업	6.7	5.5	87.8	24.6	17.6	57.8
	대학교 졸업	9.7	8.4	81.9	27.5	23.2	49.2
	대학원 졸업 이상	15.2	12.8	72.1	34.3	26.8	38.9
35~39세	중학교 졸업	3.0	4.7	92.4	14.4	17.2	68.5
	고등학교 졸업	3.2	3.1	93.7	14.2	13.4	72.4
	대학교 졸업	4.8	3.3	91.9	13.1	11.3	75.6
	대학원 졸업 이상	9.1	5.4	85.4	18.0	13.1	68.9
40~44세	중학교 졸업	1.3	3.4	95.3	12.6	14.4	73.1
	고등학교 졸업	1.8	2.5	95.7	8.8	8.8	82.3
	대학교 졸업	3.5	2.1	94.4	8.8	7.0	84.3
	대학원 졸업 이상	7.8	3.3	89.0	14.6	9.0	76.4
45~49세	중학교 졸업	0.9	2.6	96.5	6.7	10.5	82.8
	고등학교 졸업	1.6	2.4	96.0	5.4	6.1	88.5
	대학교 졸업	3.2	2.6	94.2	7.0	5.5	87.5
	대학원 졸업 이상	9.3	3.8	86.9	14.4	7.7	77.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2) 경제활동 상태별 차별출산력의 변화

여성이 취업한 가구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2005년 1.93명에서 2020년 1.37명으로 감소하여, 같은 기간 1.88명에서 1.65명으로 감소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감소폭이 크다(표 8-14). 2005년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각각 1.61명과 1.88명이었는데, 2020년 미취업[6]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1.50명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에는 25~39세에서 경제활동 상태별 평균 출산 자녀 수가 비경활, 취업, 실업 순으로 많았고, 40~59세에서는 취업, 비경활, 실업 순으로 많았다. 2020년에는 45세 미만 연령대에서 미취업 여성이 취업한 여성에 비해 평균 출산 자녀 수가 많다(표 8-15). 취업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2005년에는 30세 이상부터 1명을 초과하였는데, 2020년에는 35세 이상부터 1명을 초과하였다.

2005년에는 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 자녀 수가 2명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0년에는 30~34세에서 1명인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표 8-16). 취업한 30~34세 모의 출산 자녀 수별 비중은 2005년 2명(55.6%), 1명(37.8%), 3명 이상(6.6%) 순이었는데, 2020년 1명(59.5%), 2명(35.3%), 3명 이상(5.2%) 순으로 변화했다.

표 8-14.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단위: 명)

구분		2005		202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취업		1.93	1.88	1.37	1.65
미취업	실업	1.61	1.83	1.50	1.59
	비경활	1.88	1.9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6) 2015년부터 경제활동 상태 관련 문항 구조가 변경되어 2020년은 2005년처럼 미취업 인구를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로 세분하여 집계할 수 없다.

표 8-15.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별·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2005	취업	0.62	1.42	1.88	1.98	2.07	2.42	2.86
	실업	0.30	0.91	1.57	1.69	1.81	2.04	2.30
	비경활	1.10	1.62	1.91	1.95	1.98	2.23	2.53
2020	취업	0.16	0.60	1.17	1.51	1.65	1.78	1.83
	미취업	0.59	1.10	1.47	1.63	1.65	1.75	1.7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표 8-16. 모의 경제활동 상태별·연령대별 출산 자녀 수 구성비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2005	취업	37.8	55.6	6.6	17.6	69.1	13.3	15.1	68.9	16.0	14.5	63.8	21.7
	실업	40.1	55.5	4.4	24.6	65.9	9.5	24.3	67.9	7.8	23.3	63.7	13.0
	비경활	32.4	59.5	8.1	17.0	69.0	14.0	15.8	69.6	14.6	16.2	66.6	17.1
2020	취업	59.5	35.3	5.2	40.1	50.0	9.9	28.5	57.9	13.6	24.3	62.9	12.8
	미취업	54.8	38.7	6.5	38.0	50.4	11.6	29.8	55.6	14.6	26.6	60.7	12.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여성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연령대가 낮고 취업한 여성일수록 2005년 대비 2020년의 기혼+자녀 비율이 감소하고 미혼과 기혼+무자녀 비율이 증가하였다(표 8-17). 2005~2020년 25~29세 취업 여성의 기혼+자녀 비율은 35.3%에서 11.7%로 감소한 반면 미혼 비율은 52.6%에서 70.5%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30~34세 취업 여성의 기혼+자녀 비율은 75.7%에서 40.7%로 감소한 반면 미혼 비율은 15.5%에서 34.7%로 증가하였고, 기혼+무자녀 비율은 8.8%에서 24.6%로 증가하였다.

표 8-17. 여성의 연령대별·경제활동 상태별 혼인과 출산 선택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2005			2020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자녀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자녀
25~29세	취업		52.6	12.2	35.3	70.5	17.8	11.7
	미취업	실업	71.2	16.6	12.2	39.2	18.7	42.0
		비경활	9.5	8.2	82.2			
30~34세	취업		15.5	8.8	75.7	34.7	24.6	40.7
	미취업	실업	36.8	21.3	41.9	11.3	16.5	72.2
		비경활	2.3	4.7	93.0			
35~39세	취업		5.8	3.7	90.5	18.2	13.4	68.4
	미취업	실업	16.8	10.9	72.3	6.3	10.0	83.8
		비경활	1.6	2.8	95.6			
40~44세	취업		2.8	2.6	94.7	11.4	8.0	80.6
	미취업	실업	8.2	7.1	84.7	5.3	7.8	87.0
		비경활	1.1	2.7	96.2			
45~49세	취업		1.9	2.4	95.7	7.4	5.7	86.9
	미취업	실업	5.4	5.3	89.4	4.8	7.0	88.1
		비경활	1.1	2.7	96.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3) 시도별 차별출산력의 변화

2020년 서울(1.55명), 경기(1.62명), 세종(1.63명), 인천(1.64명), 부산(1.65명) 거주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전국(1.66명)에 비해 적다(표 8-18). 40~44세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전체 연령대(20~59세)에 비해 평균 출산 자녀 수가 많은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적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005~2020년 25~44세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가 감소했고, 감소폭은 30~34세에서 가장 크다. 2020년 30~34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가 1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서울(0.76명)이 유일하다. 2005년에는 25~2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가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서 1명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전남에서만 1명 이상이다.

표 8-18. 시도별·기혼여성의 연령대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변화(2005·2020년)

(단위: 명)

구분	2005					2020				
	전체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국	1.92	0.91	1.52	1.87	1.94	1.66	0.72	1.03	1.47	1.70
서울	1.79	0.70	1.32	1.76	1.86	1.55	0.46	0.76	1.27	1.55
부산	1.91	0.85	1.45	1.81	1.89	1.65	0.70	1.01	1.44	1.65
대구	1.92	0.87	1.54	1.87	1.92	1.70	0.68	1.05	1.50	1.72
인천	1.83	0.91	1.54	1.84	1.88	1.64	0.73	1.04	1.46	1.66
광주	2.08	1.00	1.66	2.02	2.11	1.79	0.76	1.14	1.57	1.82
대전	1.91	0.93	1.54	1.92	1.99	1.71	0.76	1.07	1.52	1.77
울산	1.90	0.95	1.60	1.91	1.93	1.70	0.74	1.12	1.57	1.73
세종	-	-	-	-	-	1.63	0.70	1.04	1.59	1.75
경기	1.80	0.89	1.51	1.84	1.89	1.62	0.68	1.01	1.44	1.67
강원	2.05	1.07	1.62	1.90	1.97	1.68	0.81	1.16	1.53	1.74
충북	2.03	1.06	1.66	1.96	1.99	1.72	0.86	1.20	1.59	1.78
충남	2.10	1.08	1.69	1.99	2.05	1.70	0.83	1.20	1.60	1.80
전북	2.23	1.16	1.74	2.07	2.12	1.80	0.92	1.26	1.65	1.86
전남	2.38	1.23	1.82	2.14	2.24	1.82	1.00	1.33	1.67	1.90
경북	2.05	0.99	1.62	1.90	1.98	1.71	0.88	1.22	1.56	1.75
경남	1.98	0.97	1.63	1.90	1.96	1.72	0.83	1.17	1.58	1.77
제주	2.11	0.99	1.67	2.01	2.15	1.73	0.83	1.13	1.56	1.81

주: 전체 연령대는 20~59세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집계 기준은 다르지만,[7]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시도별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의 차이는 시도별 합계출산율의 차이에 비해 작다(표 8-19). 2020년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가장 높고, 서울은 가장 낮아 세종(1.277명)이 서울(0.642명)의 약 2배인데, 세종(1.63명)과 서울(1.55명)의 평균 출산 자녀 수 차이는 0.08명에 그친다.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 차이에 비해,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유배우 비율의 시도별 차이가 합계출산율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20~49세 여성의 미혼율은 서울(46.5%)이 세종(29.4%)에 비해 크게 높다.

7) 합계출산율은 20~49세 여성의 각 세별 출산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표 8-19. 시도별 합계출산율 변화(2005~2023년)

(단위: 명)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3
전국	1.085	1.226	1.239	0.837	0.721
서울	0.932	1.015	1.001	0.642	0.552
부산	0.887	1.045	1.139	0.747	0.664
대구	1.001	1.109	1.216	0.807	0.702
인천	1.075	1.214	1.216	0.829	0.694
광주	1.105	1.223	1.207	0.811	0.706
대전	1.107	1.205	1.277	0.805	0.787
울산	1.186	1.369	1.486	0.984	0.814
세종	-	-	1.893	1.277	0.971
경기	1.183	1.309	1.272	0.878	0.766
강원	1.188	1.313	1.311	1.036	0.893
충북	1.195	1.402	1.414	0.983	0.886
충남	1.267	1.479	1.480	1.029	0.842
전북	1.184	1.374	1.352	0.909	0.780
전남	1.290	1.537	1.549	1.145	0.972
경북	1.173	1.377	1.464	1.003	0.860
경남	1.189	1.413	1.437	0.945	0.799
제주	1.310	1.463	1.477	1.021	0.82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6. 맺음말

1970년 이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빠른 속도로 감소해 왔다.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이 1.5명을 하회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대 후반 여성, 30대 초반 남성의 유배우 비율은 지난 5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1970년까지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는 3명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이 빠르게 낮아졌고, 반대로 자녀 수 1명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 수가 적은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한 30대 여성의 미혼 또는 기혼+무자녀 비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2005~2020년간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와 합계출산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청년 세대로부터 '내 아이를 태어나게 해도 될 만큼 세상이 살 만하다'는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대책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라 불릴 만큼 지역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종합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위기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대응하거나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해온 기본계획을 넘어서는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개인과 가족에게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희생과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여전히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다양한 장벽에 부딪히는 현실을 마주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장에 집중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는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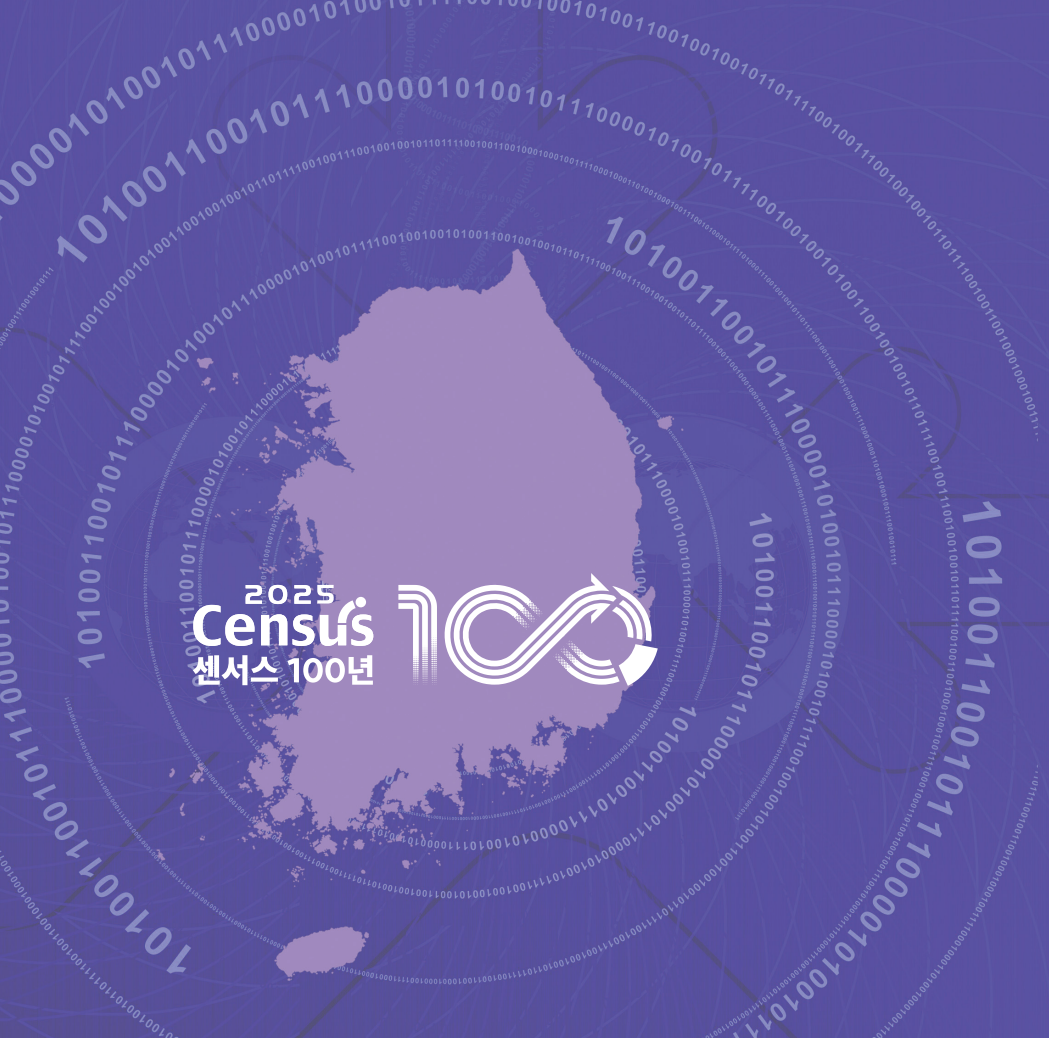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교훈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개인과 가족에게 쏠린 재생산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구조는 사회 변화의 동력이며, 사회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의 동력이다.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저출산 정책을 증거 기반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화하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 단위인 시군구별 출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라는 점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는 중요하다. 향후 전국, 시도, 시군구별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자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해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9장

사망력

이삼식 · 오경림



1. 서론

인구변동의 3대 요인은 출산, 사망 그리고 이동이다. 이중 사망은 출산과 함께 자연증가(natural increase)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출산은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국가나 지역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사망력(mortality)을 사용한다. 사망력은 보건위생 수준, 의료기술 발달, 영양상태, 생활습관 변화 등 의료 및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위생관리 개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켰다(Sharma Waddington et al., 2023). 많은 연구는 영양상태 개선이 사망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Wabo et al., 2022; Kamyari et al., 2021).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치아를 잃는 것은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Hulsegge et al., 2016; Foster et al., 2023; White et al., 2018). 지역사회의 사망률은 사회경제적·환경적 특성, 의료자원, 건강한 생활방식 실천 등 다차원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지태근 외, 2015).

이 장에서는 한국의 사망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분석한다. 인구동향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망률, 연령별사망률, 기대수명, 사망원인별 사망률 등 다양한 사망력 지표를 분석한다.

2. 사망수준

1)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

사망자 수는 인구규모 변화와 사망률 변화가 결합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사망자 수는 인구가 증가하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연간 24~27만 명,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24만 명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망률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령인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는 2010년 25.5만 명, 2023년 35.3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그림 9-1).

사망자 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변화했다. 사망수준이 높았던 1970년 조사망률은 8.0명으로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2006~2009년 5.0명을 기록했으며, 이후 사망자 수 증가로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23년 6.9명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망률 역시 높아졌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는 조사망률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다(Fernandes et al., 2001). 이에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1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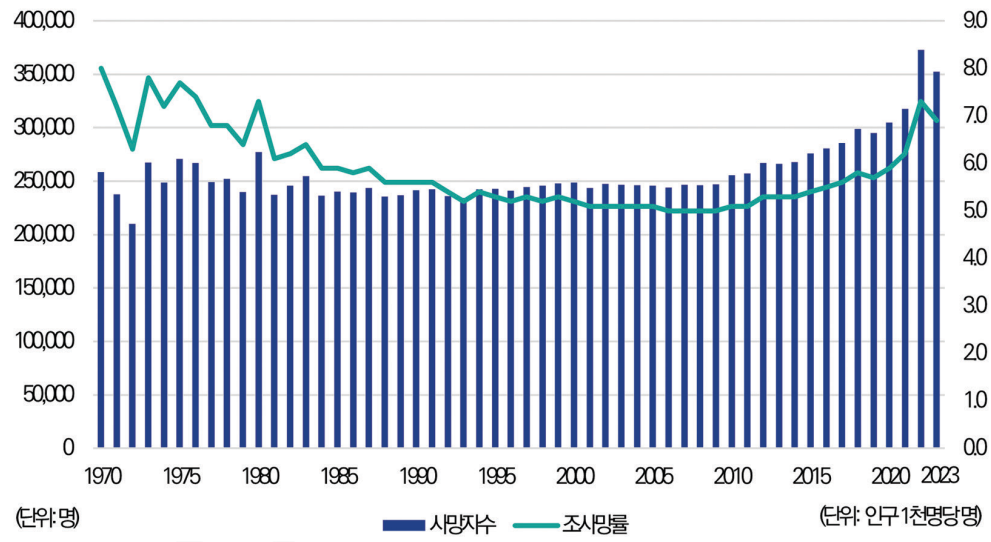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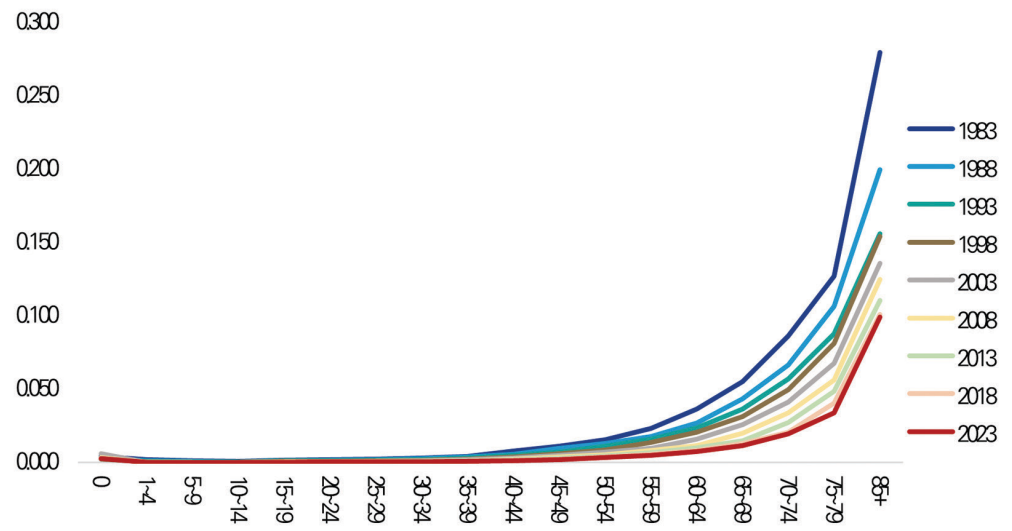
그림 9-1.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변화(1970~2023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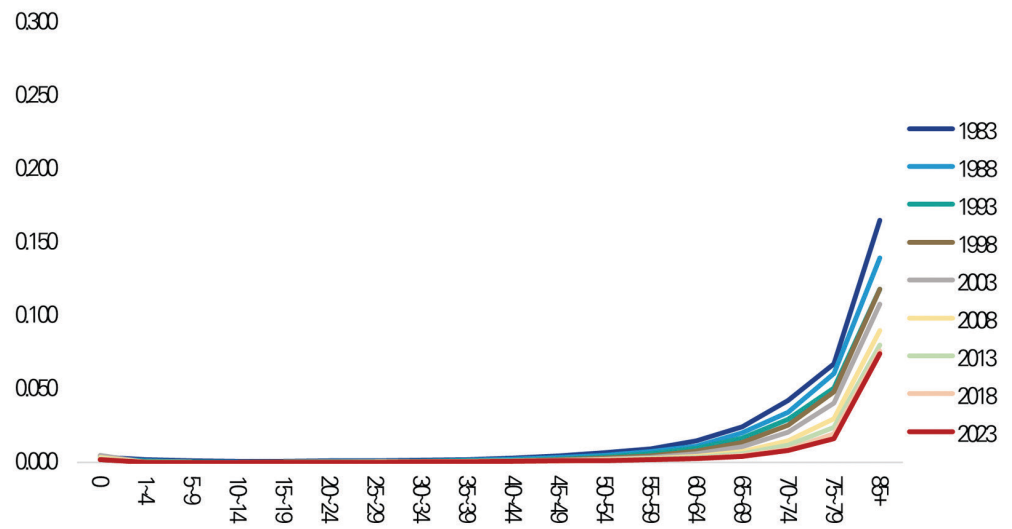
2) 연령별 사망률

사망신고서에 의한 사망자 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구한 사망률은 연령별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그림 9-2〉는 1983~2023년 성별·연령별 사망률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남녀 공통으로 사망률이 영아기에서 다소 높은 가운데 과거에는 10~14세, 최근에는 5~9세를 최저점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과거 남성 사망률은 40대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으나(이삼식, 1990), 점차 그 연령대가 높아져 2023년에는 6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성 사망률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연령층은 과거 50대였으나 점차 높아져 2023년에는 70대부터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다.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변곡 연령층은 갈수록 늦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망률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연령대가 계속 늦추어지는 경향은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상승과 연관된다. 한국에서 남녀 사망률은 특정 연령층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해당 연령대를 지나면 급속하게 높아진다.



남성



여성

그림 9-2. 성별·연령별 사망률 변화(1983~2023년)

자료: 통계청, 생명표(KOSIS).

3) 기대수명

국가나 지역 인구의 사망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대수명이 있다. 기대수명은 연령별 사망률에 생명표 기법이라는 복잡한 함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통계청은 1980년 인구동태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978~1979년 생명표를 작성했으며, 1990년부터는 사망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생명표를 작성했다. 작성 주기는 2년이었으나 2006년부터 1년으로 단축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0세에서의 기대여명)은 1970년 남성 58.7세, 여성 65.8세에서 2023년 80.6세, 86.4세로 50여 년 동안 각각 21.9세, 20.6세 증가했다(그림 9-3). 기대수명은 1987년 처음으로 70대로 진입했으며, 2009년에는 처음으로 80대로 진입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이 감소하였는데, 감염병 확산 초기인 2020년에는 83.5세(남자 80.5세, 여자 86.5세)였으나 2022년에는 82.7세(남자 79.9세, 여자 85.6세)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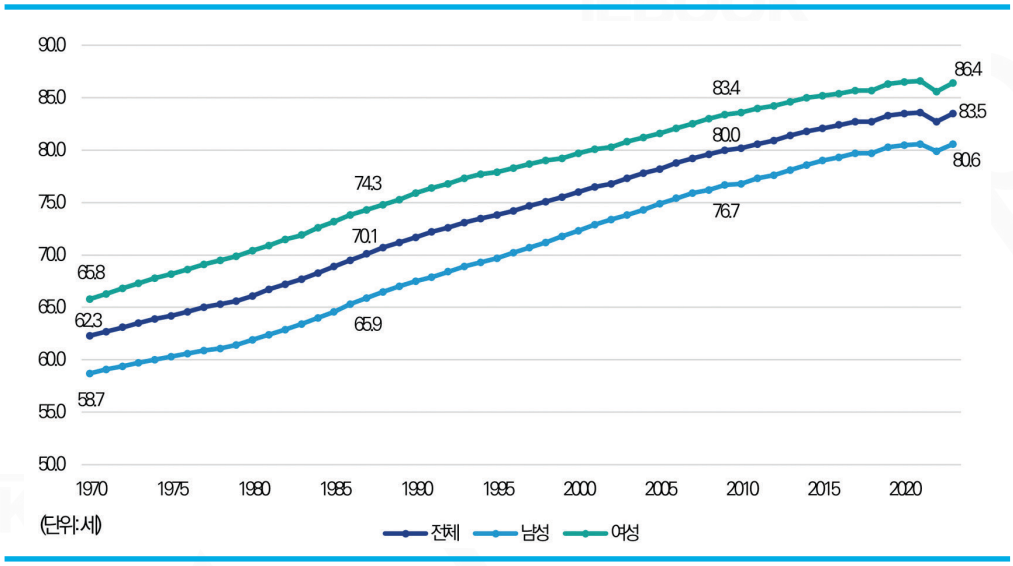


그림 9-3. 성별 기대수명 변화(197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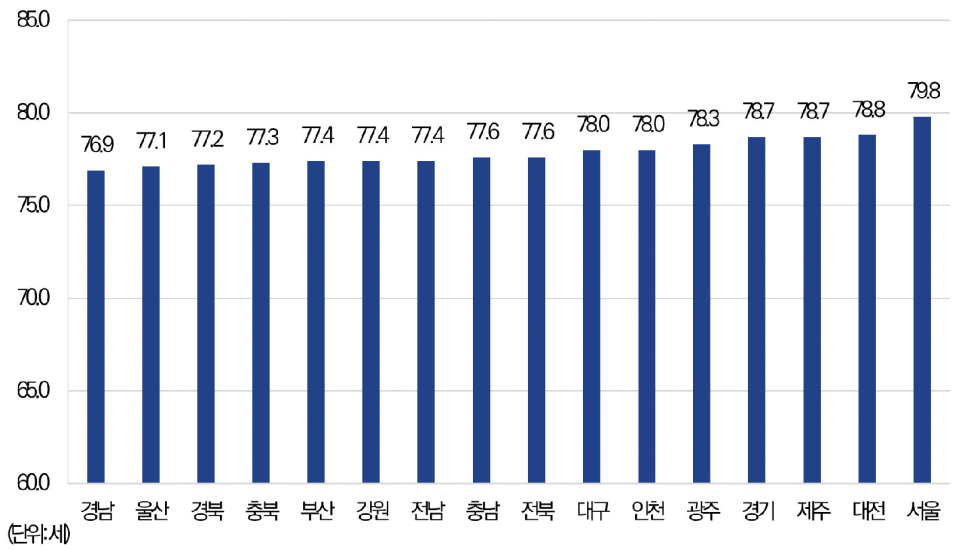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명표(KOSIS).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긴 이유는 생물학적, 면역학적, 행동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남성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여성보다 일관되게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이는 성별 기대수명 격차로 이어진다(Holden, 1987). 남성과 여성 간 기대수명 격차는 특정 남성 하위 집단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사망률에 의해 주도되기도 한다(Luy&Gast, 2014). 남녀 간 차이의 원인을 안드로겐(남성호르몬)의 생식외 효과에서 찾기도 한다. 안드로겐은 면역체계를 억제하여 감염과 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혈전 형성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생리적 메커니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에서 더 높다는 것이다(Schooling,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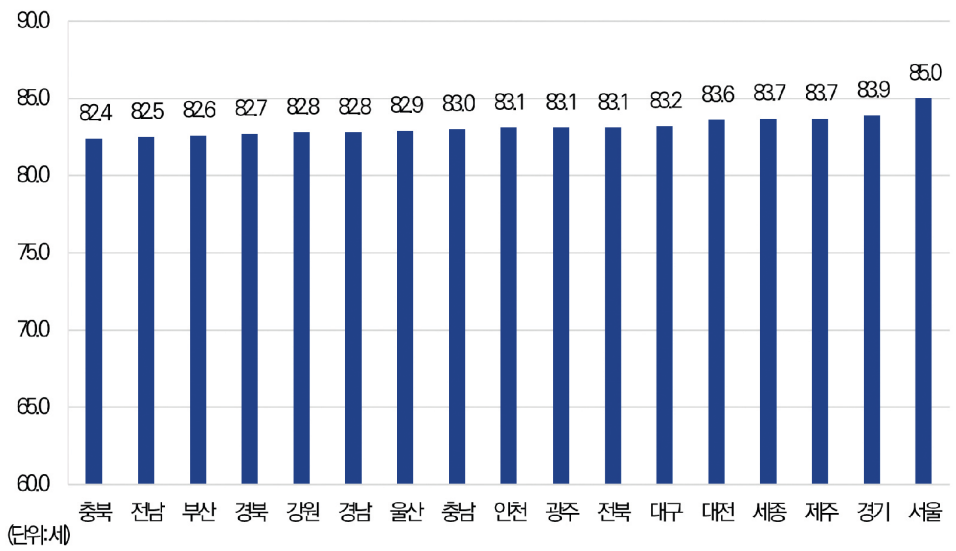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70년 여자가 남자에 비해 7.1년 더 오래 살았다. 이러한 차이는 1985년 8.6년으로 더 커졌다. 이후 남성 사망률의 개선 정도가 여성에 비해 빨랐기 때문에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2023년에 5.8년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자연환경과 인문지리 환경에 따른 기대수명의 차이가 존재한다(김두섭·이삼식, 2004). 대체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와 수도권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의 기대수명은 상대적으로 낮다. 2005년 기준으로 시도별 기대수명은 서울(79.8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78.8세), 제주(78.7세)·경기(78.7세) 순이었다(그림 9-4). 반면 경남(76.9세), 울산(77.1세), 경북(77.2세)은 기대수명이 낮았다. 예외적으로 제주는 도 지역임에도 기대수명이 높으며,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기대수명이 낮은 편에 속한다.

2023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높은 시도는 서울(85.0세), 경기(83.9세), 세종(83.7세), 제주(83.7세) 순이며, 충북(82.4세), 전남(82.5세), 부산(82.6세) 순으로 낮다. 제주는 2005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높다.



2005년



2023년

그림 9-4. 시도별 기대수명 변화(2005·2023년)

자료: 통계청, 생명표(KOSIS).

시도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다(박경애, 1988; 2003). 일반적으로 대도시일수록 보건위생 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 영양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 접근성도 높다. 반면 농촌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영양상태가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도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망률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Lantz, et al., 1998). 그럼에도 시도 간 기대수명에서 주목할 점은 그 차이가 2005년 최대 2.9세(최고 서울 79.8세, 최저 경남 76.9세)에서 2023년 최대 2.6세(최고 서울 85.0세, 최저 충북 82.4세)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보건·의료 인프라 접근성 확대, 보건복지정책(건강검진, 건강보험 보장성 등)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사망원인

통계청에서는 사망원인 통계를 사망신고서에 기반해서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1983~1996년 통계는 지연신고 누적분이 포함된 결과이며, 이후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시계열 비교를 하기 위해 당해연도 신고분만 집계하고 있다. 사망신고의 법적 기한은 사망발생 후 1개월 이내이지만 다음 해 4월까지 접수된 지연신고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사망원인 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인분류 지침에 따라 원사인(사망에 이르게 한 근원 요인)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이하에서는 KOSIS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분류별로 분석하였다.

1) 10대 사망원인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악성신생물(암)(166.7), 심장질환(64.8), 폐렴(57.5), 뇌혈관질환(47.3), 자살(27.3), 알츠하이머병(21.7), 당뇨병(21.6), 고혈압성 질환(15.6), 패혈증(15.3), 코로나19(14.6) 순이다(그림 9-5).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 4대 사망원인은 전체 사망의 48.8%를 차지하며, 10대 사망원인은 전체 사망의 65.6%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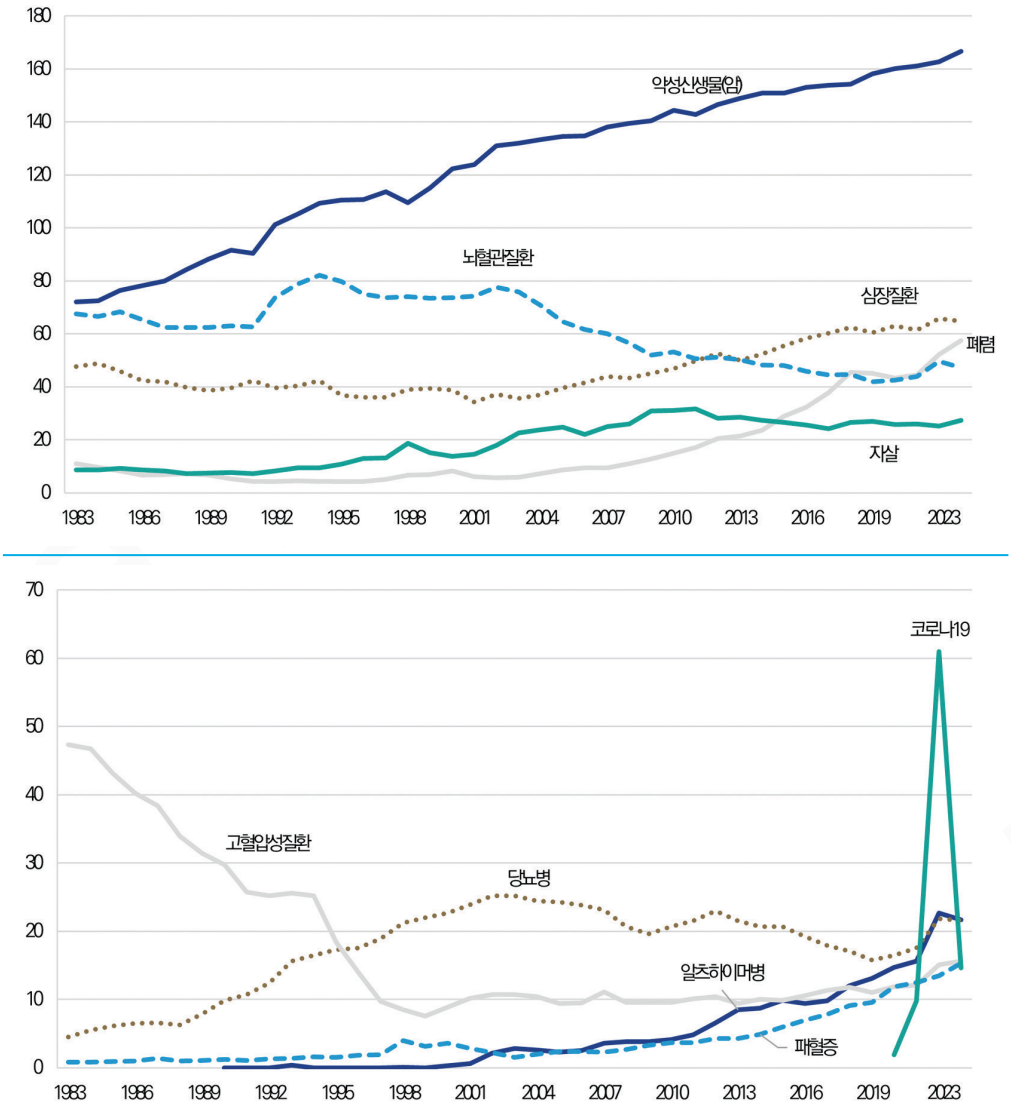


그림 9-5. 10대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변화(1983~2023년)

주: 10대 사망원인은 2023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KOSIS).

10대 사망원인별 추이를 보면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폐렴, 패혈증,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1983~2023년 동안 증가했다. 뇌혈관질환과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각각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

세로 돌아섰다.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10년대 초까지 증가한 후 최근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고혈압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급격하게 감소한 후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최근 고혈압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등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고령화 추이에 따라 계속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한 후 최근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사망원인은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의 인구사회학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령화로 면역체계가 약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폐렴이나 패혈증에 의한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률도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연령대·사망원인별 사망률

2023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1~9세는 악성신생물(암), 선천 기형 및 변형, 타살, 익사, 운수사고 순으로 높다(표 9-1). 10대에서 30대까지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대부터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50대까지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두 번째로 높은데, 60대부터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높다.

모든 연령층에서 암이 5대 사망원인으로 나타나는데, 10~30대에서 2순위이며,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1순위로 높다. 심장질환은 0~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5대 사망원인 중 하나다. 고령층에서 암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데, 두 사망원인은 전연령대에서도 1~2순위를 차지한다. 폐렴은 70대에서 4순위, 80세 이상에서 2순위이며,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70대 이상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많기 때문에 전연령대에서는 3순위를 차지한다. 폐렴은 만성질환(심혈관질환, 암)의 기저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대로 만성질환의 증가가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기도 한다. 뇌혈관질환은 20대부터 5순위에 포함되는 가운데, 60~70대에는 3순위를 차지한다.

자살은 10~30대에 1순위, 40~50대에서는 2순위, 60대에서는 4순위로 높다. 전체적으로 자살은 5순위로 높은 사망원인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정신 건강 문제(우울증, 불안), 대인 관계 갈등(가족 및 동료 문제), 재정적 불안정(취업난, 부채 등), 신체 질환(만성질환, 신체적 고통)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사망원인 중 타살은 1~9세에서 3순위, 10대에서 5순위로 높다. 타살은 불안정한 가족구조, 생명 경시 풍조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다. 간질환은 30~60대에서 5순위 내 주요 사망원인이다. 당뇨병은 70대, 알츠하이머병은 80세 이상에서 5순위이다.

표 9-1. 연령별 5대 사망원인과 사망률(2023년)

(단위: 10만 명당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악성신생물 166.7	심장질환 64.8	폐렴 57.5	뇌혈관질환 47.3	고의적 자해 27.3
1~9세	악성신생물 1.4	선천 기형, 변형 0.9	가해(타살) 0.7	우발적 익사 0.6	운수사고 0.4
10대	고의적 자해 7.9	악성신생물 2.2	운수사고 1.3	심장질환 0.4	가해(타살) 0.4
20대	고의적 자해 22.2	악성신생물 3.7	운수사고 3.0	심장질환 1.6	뇌혈관질환 1.0
30대	고의적 자해 26.4	악성신생물 10.6	심장질환 3.6	간질환 2.8	뇌혈관질환 2.5
40대	악성신생물 34.9	고의적 자해 31.6	간질환 11.3	심장질환 10.0	뇌혈관질환 7.5
50대	악성신생물 100.7	고의적 자해 32.5	심장질환 23.8	간질환 22.4	뇌혈관질환 16.8
60대	악성신생물 251.8	심장질환 52.0	뇌혈관질환 40.1	고의적 자해 30.7	간질환 24.5
70대	악성신생물 610.1	심장질환 156.2	뇌혈관질환 132.5	폐렴 130.7	당뇨병 65.6
80세 이상	악성신생물 1317.0	폐렴 949.5	심장질환 869.5	뇌혈관질환 599.3	알츠하이머병 421.2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KOSIS).

4. 맺음말

사망은 인구변동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이나 인구이동만큼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래 산다는 것이 인구학적인 관심보다는 보건 내지 건강의 차원에서 더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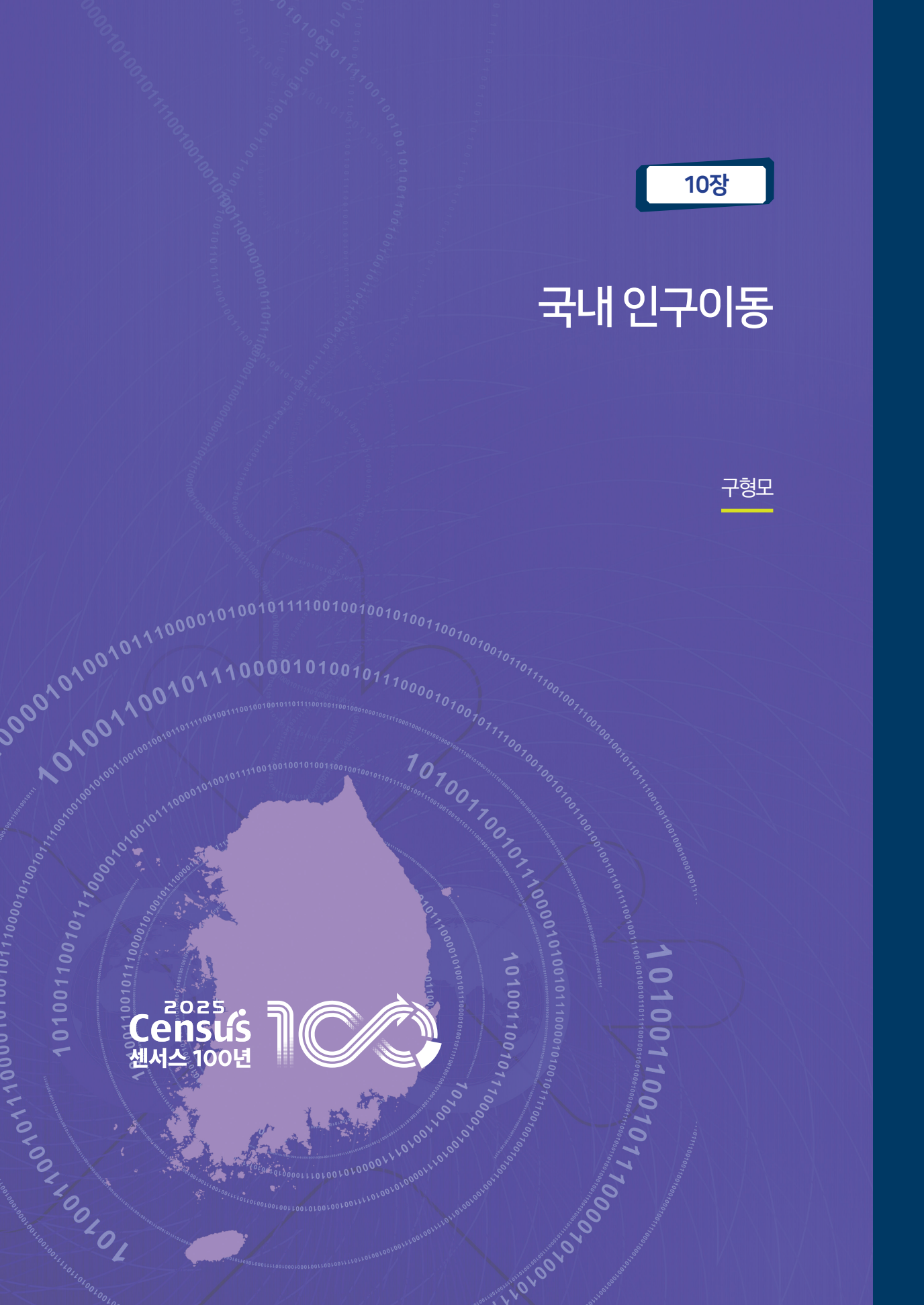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사망수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지체되어 있던 사망이 고령화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사망률은 한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사망률이 급상승하는 연령대는 점차 늦추어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되는 연령구조의 고령화는 인구동향조사에서의 사망수준이나 패턴의 변화와 연동된다.

사망력을 대표하는 지표는 주로 인구동향조사(사망신고서)에 기반해서 측정된다. 과거 인구동태통계가 부실하던 시기에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인구를 이용하여 생잔율을 계산하고 사망수준을 추정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인구주택총조사는 사망력을 측정하는 자료로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해서 인구변동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망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의 연계에 기반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10장

국내 인구이동

구형모



1. 머리말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은 인구변동의 3대 요인인데, 인구이동은 다른 두 요인과 다르게 사회적 증감을 결정한다. 인구이동은 단순히 출발지와 목적지의 인구뿐 아니라 두 지역의 인구·사회·경제 구조를 변화시킨다(구형모, 2018). 인구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가속되지만, 동시에 주거, 교통, 환경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인구유출이 많은 지역은 노동력 부족, 경제 쇠퇴, 지역소멸의 문제가 나타난다.

인구이동은 크게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나뉘며, 국내 인구이동은 한 국가 내의 지역 간 이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내 인구이동의 양상은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왔다. 인구이동의 변화는 지역 간 자원 분배와 경제적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강은택 외, 2016).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국내 인구이동의 흐름을 탐색하고자 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과거 거주지 정보를 묻는 문항을 통해 국내 인구이동을 파악한다. 조사 시기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1960년 인구총조사에서는 출생지 문항을 통해 국내 인구이동을 조사했다가 1970년부터는 5년 전 거주지, 1980년부터는 1년 전 거주지 문항을 추가하였다(최진호, 2002). 2020년부터는 5년 전 거주지는 20% 표본조사로, 1년 전 거주지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다.[1)]

1) 1년 전 거주지는 2016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20년까지의 5년 단위 장기시계열 변화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국내 인구이동의 변화를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의 5년 전 거주지 문항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먼저 총이동자 수와 시도 내와 시도 간 이동을 통해 국내 인구이동의 추이를 요약한다. 다음으로 시도별 전입과 전출, 그리고 순이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인구이동의 변화를 살펴본다.

2. 국내 인구이동 추이

196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인구이동은 각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표 10-1〉의 총이동자 수 변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먼저 인구이동은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전입)와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전출)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서 주거지를 변경한 것을 인구이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같은 시군구 내에서 다른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이동자 수는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를 합한 개념이다. 총이동자 수는 시도 내 이동과 시도 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도 내 이동은 같은 시도 내에서 다른 시군구로 주거지를 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총이동자 수는 시도 내와 시도 간 이동 외에 기타 이동자도 포함하는데, 이는 대부분 이전 거주지가 해외 또는 미상인 경우이다. 총이동률과 시도 내 및 시도 간 이동률은 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이동자 수를 의미한다.

먼저 총이동자 수와 총이동률은 1965년부터 199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 총이동자 수는 1965~1970년 439만 명에서 1990~1995년에는 1,01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주요 대도시로의 이동이 많아졌고, 1990년대에는 교외화로 인해 도시의 외곽이 개발되어 총이동이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인구이동 규모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총이동자 수는 1995~2000년 971만 명에서 2010~2015년 775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총이동률도 21.1%에서 16.4%로 감소했다. 특히 시도 내 이동률이 1995~2000년 9.1%에서 2010~2015년 5.5%로 감소하였다. 2015~2020년에는 전에 비해 시도 내 이동(9.9%)과 시도 간 이동(11.4%)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총이동률(23.2%)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10-1. 국내 인구이동 변화(196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총이동자 수	시도 내 이동	시도 간 이동	총이동률	시도 내 이동률	시도 간 이동률
1965~1970	4,394	1,918	2,477	14.0	6.1	7.9
1970~1975	5,209	2,361	2,840	17.6	8.0	9.6
1975~1980	7,658	3,879	3,765	20.8	10.5	10.3
1980~1985	8,402	3,654	4,721	20.8	9.0	11.7
1985~1990	9,871	4,379	5,437	23.1	10.3	12.9
1990~1995	10,183	4,397	5,690	23.2	10.0	13.2
1995~2000	9,711	4,191	5,386	21.1	9.1	11.7
2000~2005	9,141	3,730	5,238	20.8	8.5	11.9
2005~2010	8,498	2,969	5,083	18.8	6.6	11.2
2010~2015	7,748	2,613	4,651	16.4	5.5	9.9
2015~2020	11,238	4,813	5,526	23.2	9.9	11.4

주: 시도 간 이동에서는 기타 이동을 제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시도 간 인구이동

다음으로 시도 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전출자 수와 전출률 변화이다. 전출자 수와 전출률은 각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수와 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을 나타내며, 시도별 인구이동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서울의 전출자 수와 전출률은 1990~199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표 10-2). 1990~1995년 서울의 전출자 수와 전출률은 193만 명과 19.2%를 고점으로 2010~201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꾸준히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0~1995년 전출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55만 명 증가하여 이 시기에 신도시 등 서울 주변 개발로 많은 수의 전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그 후 서울의 전출자 수와 전출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5~2020년 다시 증가하여 전출자 수는 146만 명, 전출률은 16.2%로 꾸준히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시의 전출자 수와 전출률 역시 대체로 고점 이후 2010~2015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만 고점을 기록한 시기는 광역시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부산은 서울과 유사하게 1990~1995년 전출자 수 46만 명을 고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구와 인천은 전출률이 2000~2005년을 고점으로 감소하였다. 광주, 대전, 울산은 2015~2020년 가장 높은 전출률을 보였다.

비수도권 도 지역은 광역시와 다르게 1990년대 이전에 가장 높은 전출자 수를 보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충북과 경남은 1975~1980년 각각 21만 명과 39만 명으로 가장 많은 전출자 수를 보였고, 충남과 경북은 그보다 늦은 시기인 1980~1985년에 각각 35만 명과 51만 명으로 전출자 수가 가장 많았다. 도별 전출률을 살펴보면 강원, 전남, 경북은 가장 높은 전출률을 보인 시기의 전출률이 15% 이상으로 인구유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0-2. 시도 간 전출자 수와 전출률 변화(196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00	00~05	05~10	10~15	15~20
전국	2,457 (7.8)	2,790 (9.4)	3,739 (10.2)	4,711 (11.7)	5,437 (12.7)	5,690 (13.0)	5,386 (11.7)	5,238 (11.9)	5,083 (11.2)	4,651 (9.9)	5,526 (11.4)
서울	248 (4.5)	524 (8.9)	753 (9.2)	1,081 (11.2)	1,377 (13.2)	1,928 (19.2)	1,655 (16.8)	1,471 (16.0)	1,349 (14.7)	1,312 (14.4)	1,455 (16.2)
부산	127 (6.8)	169 (8.1)	221 (7.1)	332 (9.4)	348 (9.3)	460 (12.3)	400 (10.9)	380 (11.5)	342 (10.6)	287 (8.8)	328 (10.3)
대구	–	–	–	185 (9.1)	214 (9.7)	226 (9.4)	248 (10.0)	244 (10.6)	240 (10.5)	208 (9.0)	229 (10.0)
인천	–	–	–	136 (9.8)	174 (9.7)	236 (10.4)	278 (11.3)	312 (13.3)	290 (11.7)	259 (9.7)	308 (11.2)
광주	–	–	–	–	122 (10.9)	129 (10.5)	144 (10.7)	144 (11.0)	138 (10.0)	128 (9.1)	162 (11.6)
대전	–	–	–	–	97 (9.3)	100 (8.0)	152 (11.1)	163 (12.2)	176 (12.6)	181 (12.6)	242 (17.1)
울산	–	–	–	–	–	–	111 (11.0)	96 (9.8)	108 (10.7)	92 (8.6)	125 (11.7)
세종	–	–	–	–	–	–	–	–	–	12 (6.3)	40 (12.2)
경기	321 (9.6)	332 (9.7)	437 (9.0)	542 (11.3)	727 (12.0)	754 (10.0)	908 (10.2)	892 (9.3)	1,003 (9.6)	979 (8.6)	1,052 (8.4)
강원	185 (9.9)	195 (12.5)	275 (15.6)	267 (15.5)	299 (19.3)	240 (16.7)	179 (12.0)	178 (13.0)	174 (12.7)	144 (10.1)	179 (12.4)
충북	164 (11.1)	148 (11.3)	208 (14.9)	204 (14.7)	190 (13.9)	151 (11.0)	143 (9.8)	152 (11.2)	146 (10.4)	131 (8.9)	174 (11.4)
충남	308 (10.8)	281 (11.2)	332 (11.4)	349 (11.6)	326 (16.5)	256 (14.8)	199 (10.8)	217 (12.3)	208 (11.1)	186 (9.6)	260 (12.9)
전북	206 (8.5)	199 (9.6)	274 (12.2)	274 (12.5)	268 (13.2)	204 (11.0)	169 (9.0)	182 (11.0)	158 (9.5)	121 (7.0)	169 (9.9)
전남	278 (6.9)	318 (9.4)	429 (11.5)	425 (11.4)	438 (17.9)	330 (16.3)	227 (11.4)	225 (13.2)	189 (11.5)	137 (8.1)	187 (11.1)
경북	302 (6.6)	293 (7.0)	400 (8.2)	509 (16.9)	454 (16.2)	330 (12.6)	281 (10.4)	295 (12.1)	274 (11.3)	215 (8.6)	294 (11.8)
경남	307 (9.8)	296 (10.6)	385 (11.8)	374 (10.6)	372 (10.3)	314 (8.3)	261 (8.8)	254 (8.9)	250 (8.6)	229 (7.5)	274 (8.8)
제주	12 (3.3)	34 (10.0)	25 (5.4)	32 (6.6)	33 (6.6)	30 (6.1)	31 (6.0)	34 (7.0)	37 (7.5)	31 (5.6)	46 (7.4)

주: 전출률은 조사연도 5세 이상 인구 대비 전출자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전입자 수와 전입률은 각 시도로 유입된 인구와 비율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적 매력과 생활 여건을 반영한다. 먼저 서울의 전입자 수는 1970년부터 198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980~1985년 13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10-3). 이후 전입자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입률은 1965~1970년에 2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후 1995~2000년 9.9%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광역시에서도 대체로 서울과 유사하게 전입자 수와 전입률 모두 일정 기간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산은 서울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1975~1980년에 54만 명으로 가장 많은 전입자를 보인 후 2000~200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대구와 광주는 전입자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천과 대전은 1990~1995년에 각각 44만 명과 26만 명으로 전입자가 가장 많았다. 이 시기는 서울이 가장 많은 전출자 수를 보인 때와 맞물린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지정된 이후 매우 높은 인구유입을 보인다. 도 단위에서 전입자 수는 경기가 1980년 이후 꾸준히 100만 명 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2015~2020년 전입률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 전입자 수는 서울 전출자가 가장 많았던 1990~1995년 19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은 2005~2010년 31만 명으로 가장 많은 전입자를 기록하였다. 전북과 전남은 대체로 전입률이 낮았다. 제주로의 전입률은 대체로 상승하여 2015~2020년 14.0%를 기록하여 세종 다음으로 높았다.

표 10-3. 시도 간 전입자 수와 전입률 변화(196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00	00~05	05~10	10~15	15~20
전국	2,457 (7.8)	2,790 (9.4)	3,739 (10.2)	4,711 (11.7)	5,437 (12.7)	5,690 (13.0)	5,386 (11.7)	5,238 (11.9)	5,083 (11.2)	4,651 (9.9)	5,526 (11.4)
서울	1,183 (21.4)	1,053 (17.9)	1,232 (15.0)	1,345 (14.0)	1,299 (12.4)	1,003 (10.0)	972 (9.9)	1,015 (11.0)	966 (10.6)	741 (8.1)	1,010 (11.3)
부산	308 (16.4)	376 (18.1)	538 (17.3)	424 (12.1)	371 (9.9)	229 (6.1)	216 (5.9)	198 (6.0)	205 (6.4)	208 (6.4)	219 (6.9)
대구	–	–	–	331 (16.3)	291 (13.3)	245 (10.2)	200 (8.1)	179 (7.8)	161 (7.0)	143 (6.2)	171 (7.5)
인천	–	–	–	325 (23.4)	411 (22.9)	438 (19.2)	339 (13.8)	290 (12.3)	316 (12.7)	324 (12.1)	342 (12.4)
광주	–	–	–	–	186 (16.5)	188 (15.2)	164 (12.2)	143 (10.9)	137 (10.0)	105 (7.5)	125 (9.0)
대전	–	–	–	–	196 (18.9)	259 (20.7)	210 (15.3)	196 (14.6)	185 (13.2)	168 (11.7)	163 (11.5)
울산	–	–	–	–	–	–	110 (10.9)	94 (9.7)	91 (9.1)	100 (9.4)	86 (8.0)
세종	–	–	–	–	–	–	–	–	–	107 (57.5)	157 (48.2)
경기	344 (10.3)	588 (17.1)	900 (18.5)	1,095 (22.8)	1,452 (23.9)	1,901 (25.2)	1,680 (18.8)	1,787 (18.6)	1,561 (14.9)	1,322 (11.6)	1,735 (13.9)
강원	103 (5.5)	85 (5.4)	104 (5.9)	126 (7.3)	123 (7.9)	140 (9.8)	164 (11.1)	148 (10.8)	154 (11.2)	160 (11.2)	170 (11.7)
충북	56 (3.8)	68 (5.2)	73 (5.2)	102 (7.3)	121 (8.9)	165 (12.0)	169 (11.5)	148 (10.9)	171 (12.1)	164 (11.1)	173 (11.4)
충남	97 (3.4)	123 (4.9)	164 (5.7)	187 (6.2)	136 (6.9)	182 (10.5)	262 (14.2)	263 (14.9)	310 (16.5)	279 (14.4)	272 (13.5)
전북	54 (2.2)	66 (3.2)	65 (2.9)	85 (3.9)	81 (4.0)	116 (6.2)	134 (7.1)	99 (5.9)	122 (7.3)	119 (6.9)	123 (7.2)
전남	57 (1.4)	65 (1.9)	88 (2.4)	127 (3.4)	140 (5.7)	135 (6.7)	171 (8.6)	113 (6.6)	127 (7.7)	142 (8.5)	172 (10.2)
경북	144 (3.2)	200 (4.8)	262 (5.4)	203 (6.8)	244 (8.7)	257 (9.8)	276 (10.2)	246 (10.1)	255 (10.5)	250 (10.0)	241 (9.7)
경남	97 (3.1)	146 (5.2)	293 (9.0)	337 (9.6)	358 (9.9)	401 (10.6)	283 (9.5)	284 (10.0)	288 (9.8)	264 (8.6)	281 (9.0)
제주	15 (4.0)	20 (5.8)	20 (4.3)	25 (5.1)	29 (5.7)	31 (6.2)	36 (7.1)	35 (7.2)	34 (6.8)	55 (9.7)	87 (14.0)

주: 전입률은 조사연도 5세 이상 인구 대비 전입자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순이동은 전입한 인구에서 전출한 인구를 뺀 값이다. 최근 인구의 자연 증감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동은 지역의 인구 증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 먼저 서울의 순이동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양의 순이동, 즉 전입 초과를 보이다 1985~1990년 이후 꾸준히 음의 순이동, 즉 전출 초과가 나타난다(표 10-4). 서울의 전입 초과 규모는 1965~1970년 94만 명에서 1980~1985년 26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출 초과 규모는 1990~1995년 93만 명으로 고점을 기록했고, 1995~2000년 이후에는 50만 명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이는 1990년대에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인구가 이동하였고, 그 후에도 과밀화와 높은 주거비로 전출 초과 양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시에서도 대체로 전입 초과를 보이다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 전출 초과가 나타난다. 부산은 서울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인 1990~1995년부터, 대구는 1995~2000년부터, 광주는 2000~2005년부터, 대전은 2010~2015년부터 전출 초과가 관찰된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2005~2010년까지 전출 초과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인천은 2000~2005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서 전입 초과를 보이는데, 이는 서울의 전출 초과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은 조사 기간 모두 전입 초과를 보였고, 2015~2020년에 12만 명의 전입 초과가 확인되었다.

도별로는 전입과 전출 초과 양상이 상이하다. 먼저 경기는 지속적인 순유입을 보이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의 전입 초과 규모는 꾸준히 큰데, 서울에서 가장 큰 전출 초과를 기록하였던 1990~1995년에 115만 명으로 고점을 기록했다. 그 후 전입 초과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2015~2020년에도 60만 명 이상의 전입 초과가 관찰된다. 경남은 1990~1995년부터, 충남은 1995~2000년부터 꾸준한 전입 초과가 확인된다. 반면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은 2010~2015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서 음의 순이동을 보여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10-4. 시도 간 순이동과 순이동률 변화(196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00	00~05	05~10	10~15	15~20
서울	935 (16.9)	529 (9.0)	479 (5.8)	264 (2.7)	−78 (−0.7)	−925 (−9.2)	−684 (−6.9)	−456 (−5.0)	−384 (−4.2)	−571 (−6.3)	−445 (−5.0)
부산	180 (9.6)	207 (10.0)	317 (10.2)	93 (2.6)	23 (0.6)	−231 (−6.2)	−184 (−5.0)	−182 (−5.5)	−137 (−4.2)	−78 (−2.4)	−110 (−3.4)
대구	–	–	–	146 (7.2)	77 (3.5)	19 (0.8)	−48 (−1.9)	−64 (−2.8)	−79 (−3.5)	−65 (−2.8)	−58 (−2.6)
인천	–	–	–	189 (13.6)	237 (13.2)	202 (8.9)	61 (2.5)	−23 (−1.0)	26 (1.1)	65 (2.4)	34 (1.2)
광주	–	–	–	–	64 (5.7)	58 (4.7)	20 (1.5)	−1 (−0.1)	0 (−0.0)	−23 (−1.6)	−37 (−2.6)
대전	–	–	–	–	99 (9.6)	159 (12.7)	58 (4.2)	33 (2.5)	8 (0.6)	−13 (−0.9)	−79 (−5.6)
울산	–	–	–	–	–	–	−1 (−0.1)	−2 (−0.2)	−16 (−1.6)	8 (0.8)	−39 (−3.7)
세종	–	–	–	–	–	–	–	–	–	95 (51.1)	117 (36.0)
경기	24 (0.7)	256 (7.4)	463 (9.5)	552 (11.5)	724 (11.9)	1,148 (15.2)	772 (8.6)	896 (9.3)	557 (5.3)	343 (3.0)	682 (5.5)
강원	−82 (−4.4)	−111 (−7.1)	−171 (−9.7)	−141 (−8.2)	−176 (−11.4)	−100 (−6.9)	−14 (−1.0)	−29 (−2.2)	−20 (−1.4)	16 (1.1)	−10 (−0.7)
충북	−108 (−7.3)	−80 (−6.1)	−135 (−9.7)	−102 (−7.4)	−69 (−5.0)	14 (1.0)	26 (1.8)	−4 (−0.3)	24 (1.7)	32 (2.2)	−1 (−0.1)
충남	−211 (−7.4)	−159 (−6.3)	−168 (−5.8)	−163 (−5.4)	−190 (−9.7)	−74 (−4.3)	63 (3.4)	46 (2.6)	102 (5.4)	93 (4.8)	12 (0.6)
전북	−152 (−6.2)	−133 (−6.4)	−209 (−9.3)	−189 (−8.6)	−186 (−9.2)	−88 (−4.7)	−36 (−1.9)	−83 (−5.0)	−36 (−2.1)	−1 (−0.1)	−45 (−2.7)
전남	−220 (−5.5)	−253 (−7.5)	−341 (−9.2)	−298 (−8.0)	−298 (−12.2)	−194 (−9.6)	−56 (−2.8)	−112 (−6.6)	−62 (−3.8)	5 (0.3)	−15 (−0.9)
경북	−159 (−3.5)	−93 (−2.2)	−138 (−2.8)	−306 (−10.2)	−209 (−7.5)	−74 (−2.8)	−5 (−0.2)	−49 (−2.0)	−19 (−0.8)	35 (1.4)	−53 (−2.1)
경남	−210 (−6.7)	−150 (−5.3)	−93 (−2.8)	−37 (−1.1)	−14 (−0.4)	87 (2.3)	22 (0.7)	30 (1.1)	38 (1.3)	35 (1.1)	7 (0.2)
제주	2 (0.7)	−14 (−4.2)	−5 (−1.1)	−8 (−1.5)	−5 (−0.9)	0 (0.0)	6 (1.1)	1 (0.2)	−3 (−0.7)	23 (4.2)	41 (6.6)

주: 순이동률은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수치를 조사연도 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4. 수도권의 인구이동

다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인구이동의 변화를 살펴본다(표 10-5). 먼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를 살펴보면 1965~1970년 115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0~1985년에는 153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정점으로 수도권으로의 전입 인구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0~2015년에는 전입 인구가 77만 명으로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5~2020년에는 다시 11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의 수도권 내 목적지도 큰 변화를 보인다. 1965~1970년에는 수도권 전입 인구 115만 명의 80% 이상인 93만 명이 서울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전입 인구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0~2005년부터는 서울보다 경기로 전입하는 인구규모가 더 커졌다. 2000~2005년 서울과 경기의 전입 인구는 각각 48만 명, 56만 명이었다. 경기로의 전입 규모가 더 큰 경향은 2015~2020년까지도 계속되어 이 시기에는 수도권 전입 인구의 절반가량인 58만 명이 경기로 전입하였다.

수도권의 인구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인구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65~1970년에는 수도권에서 20만 명이 전출하였으나,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1995~2000년에는 88만 명의 전출 규모를 보였다. 이후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로 80만 명 이상의 전출 규모를 보인다. 전출 인구의 수도권 내 출발지 비중도 2000~2005년 전에는 서울이 더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경기가 더 높아졌다.

표 10-5. 수도권의 인구이동 변화(1965~2020년)

(단위: 천 명)

구분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00	00~05	05~10	10~15	15~20
수도권 내 이동	373	541	747	1,235	1,656	2,125	1,961	1,953	1,805	1,617	1,949
서울→경기	122	299	436	603	825	1,295	1,098	1,058	912	816	996
서울→인천	–	–	–	120	160	178	126	93	99	107	101
인천→서울	–	–	–	52	64	65	65	68	61	48	65
인천→경기	–	–	–	50	65	99	119	167	135	117	162
경기→서울	251	242	311	341	440	360	432	465	466	383	488
서울→경기	–	–	–	69	102	129	122	103	132	146	138
비수도권에서의 전입	1,154	1,101	1,386	1,530	1,505	1,217	1,030	1,139	1,037	770	1,137
서울	931	811	922	952	794	579	475	482	439	310	457
인천	–	–	–	136	149	131	92	94	85	70	104
경기	222	290	465	442	562	508	463	563	514	389	576
비수도권으로의 전출	195	316	443	525	621	793	881	722	837	932	867
서울	126	226	317	359	392	456	432	320	337	389	358
인천	–	–	–	34	44	72	94	78	94	94	82
경기	69	90	126	132	185	265	355	324	406	450	427
수도권 순이동	958	785	943	1,005	884	424	149	417	200	−163	271
서울	805	585	605	593	402	122	44	162	101	−78	99
인천	–	–	–	102	105	59	−3	16	−9	−23	22
경기	153	200	338	310	376	243	108	239	108	−61	150

주: 수도권 순이동은 비수도권에서의 전입 인구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 인구를 뺀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다음으로 비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를 뺀 수도권 기준 순이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시기에 수도권은 양의 순이동을 보인다. 그 규모는 1985~1990년까지 약 100만 명에 달했으나 1990~1995년 이후 50만 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수도권 중심 국내 인구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수도권 내 이동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규모 증가와 더불어 서울 주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이동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내에서 시도 간 인구이동 규모는 1965~1970년 37만 명에서 1990~1995년 21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0~1995년에는 서울 인구 중 130만 명이 경기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이동이 서울과 경기에 각각 가장 큰 규모의 음의 순이동과 양의 순이동을 나타나게 하였다. 수도권 내 인구이동 증가 경향은 유지되어 2015~2020년에도 전고점과 큰 차이가 없는 195만 명을 기록하였다.

수도권 전입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 시기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표 10-6). 수도권 전입 인구규모가 가장 컸던 1985~1990년에는 20대 전입 인구도 64만 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전입 인구 비중은 모든 시기 35%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30대 전입 인구 비율은 1975~1980년 13.6%에서 2015~2020년 24.7%로 꾸준히 증가해, 1995~2000년 이후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수도권 전출 인구 역시 20대와 30대 비중이 높은 가운데 40대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30대 전출 인구는 1995~2000년 2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시기부터 30대 전출 인구가 20대를 초과하여 연령대별 전출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0대 전출 인구 비율은 1975~1980년 39.2%에서 2015~2020년 16.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40대 전출 인구 비율은 같은 시기 6.5%에서 16.3%로 크게 증가하여 20대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표 10-6. 연령대별 수도권 인구이동 변화(197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75~80	85~90	95~00	05~10	15~20
수도권 전입	1,386 (100.0)	1,505 (100.0)	1,030 (100.0)	1,037 (100.0)	1,137 (100.0)
19세 이하	489 (35.3)	391 (25.9)	213 (20.7)	174 (16.7)	101 (8.9)
20~29세	556 (40.1)	641 (42.6)	426 (41.3)	368 (35.5)	431 (37.9)
30~39세	189 (13.6)	281 (18.6)	227 (22.0)	243 (23.5)	281 (24.7)
40~49세	72 (5.2)	84 (5.6)	86 (8.3)	118 (11.4)	126 (11.1)
50~59세	40 (2.9)	50 (3.4)	29 (2.9)	59 (5.7)	83 (7.3)
60세 이상	39 (2.8)	58 (3.9)	50 (4.8)	75 (7.3)	116 (10.2)
수도권 전출	443 (100.0)	621 (100.0)	881 (100.0)	837 (100.0)	867 (100.0)
19세 이하	112 (25.3)	144 (23.2)	222 (25.2)	162 (19.3)	101 (11.6)
20~29세	174 (39.2)	212 (34.2)	203 (23.0)	198 (23.6)	145 (16.7)
30~39세	103 (23.2)	185 (29.8)	270 (30.7)	221 (26.4)	213 (24.6)
40~49세	29 (6.5)	40 (6.5)	103 (11.7)	119 (14.2)	141 (16.3)
50~59세	12 (2.8)	19 (3.0)	36 (4.1)	71 (8.4)	112 (12.9)
60세 이상	13 (3.0)	21 (3.3)	47 (5.3)	67 (8.0)	155 (17.9)
순이동	943	884	149	200	271
19세 이하	377	247	-9	12	0
20~29세	383	429	223	170	286
30~39세	86	95	-43	22	68
40~49세	43	43	-17	-1	-15
50~59세	28	32	-6	-12	-29
60세 이상	26	38	3	8	-39

주: ( ) 안의 숫자는 연령대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수도권의 연령대별 순이동을 살펴보면, 20대의 초과 전입이 수도권의 전입 초과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은 전체 연령대를 기준으로는 양의 순이동을 보이지만, 개별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음의 순이동 경향이 확인된다. 순이동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던 1985~1990년까지는 모든 연령대에서 양의 순이동이 확인된다. 하지만 그 후 수도권 전체에서 양의 순이동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더불어 40대 이상에서는 음의 순이동 경향이 확인된다. 20대의 초과 전입 규모는 감소 추세이지만, 2015~2000년에도 29만 명이 초과 전입하여 전 연령대에서의 순이동 규모인 27만 명을 상회한다.

5. 맺음말

지난 50여 년간 국내의 인구이동 경향은 도시화, 교외화,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이전에는 대도시로의 집중이 주요 흐름이었다.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양의 순이동을 보였고, 비수도권 도에서는 음의 순이동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에는 교외화로 인해 수도권 외곽과 광역시 주변으로 인구가 확산되어 대도시가 형성되었다. 대체로 이 시기부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의 대도시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졌고, 대도시의 배후 지역인 경기와 경남에서 전입 초과의 양상이 확인되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구이동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과 광역시 인구는 2000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의 이동이 다양한 지역으로 고르게 분산된 것은 아니다. 서울의 인구감소도 인천·경기 인구증가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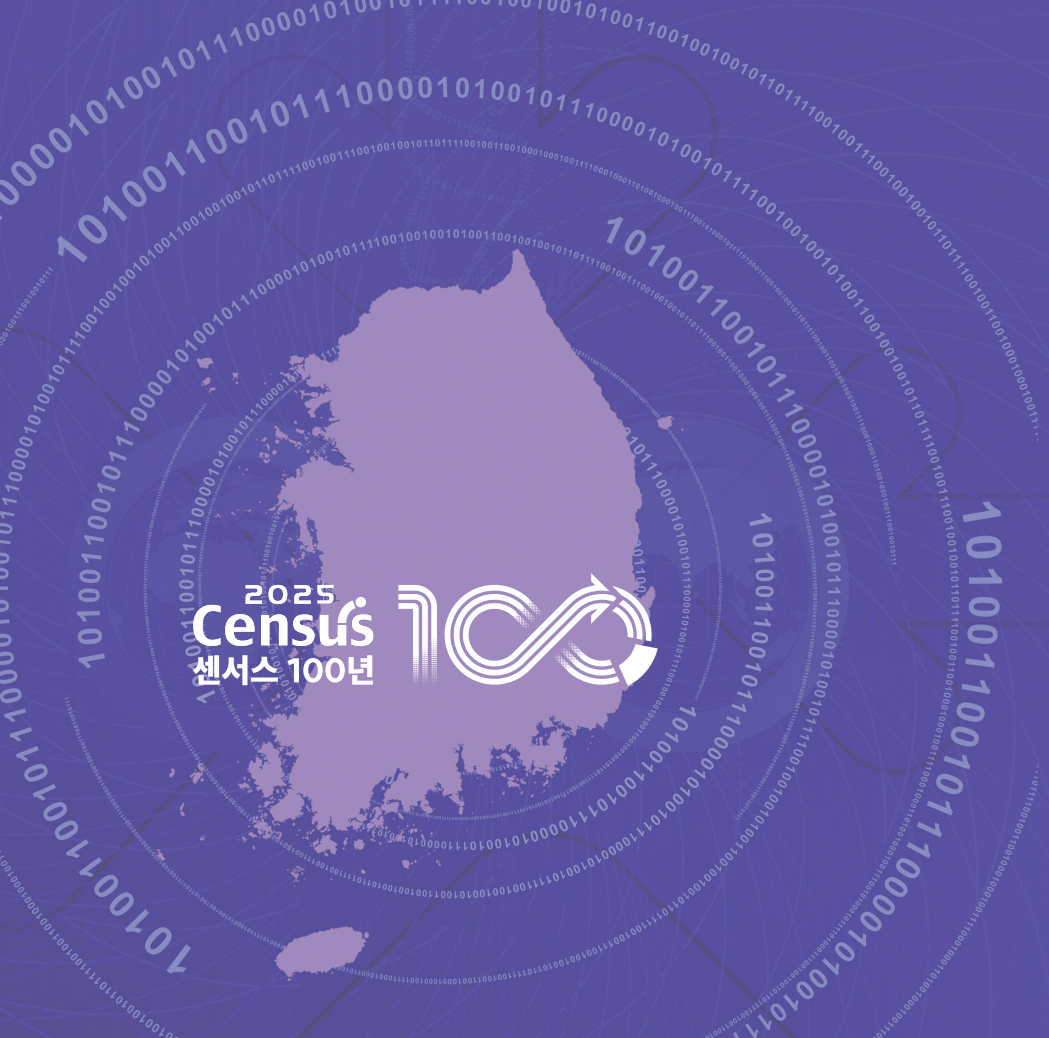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비수도권에서는 세종과 충남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에서는 꾸준한 인구유출을 보인다. 특히 인구유출이 심각한 강원, 전북, 경북 등에서는 자연감소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심각한 인구소멸의 위기가 우려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및 취업 기회의 격차는 지역의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인구이동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특히 지방소멸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지역 단위 인구이동의 특성과 장기 시계열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국내 인구이동 연구에 있어 핵심 기반을 제공해 왔다. 지방소멸의 양상을 진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국내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장

경제활동과 산업 및 직업

박성재



1. 머리말

인간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주된 수단이며, 노동자의 연령이나 일자리 유형은 산업과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는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노동에 참여하였으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는 추세다. 또한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가구 형태가 변화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점 역시 점차 늦춰지고 있다.

하지만 일하고자 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 둔화나 기업 인력 수요 변화로 인해 일자리와 노동자의 능력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mismatch)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실업이나 구직포기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한때 완전 고용수준에 도달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일의 종류와 성격이 변모했고 직업별 종사자의 특성도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압축 성장을 경험하면서 산업·직업구조가 짧은 기간에 급변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였지만, 불과 60년 만에 첨단 제조국가로 발전하였다.

직업구조는 산업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이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직업구조는 분화되고 전문화된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되면서 미래의 직업구조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196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취업자의 변화를 살펴보고, 취업자의 직업구조를 성,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민경희(2002)와 은기수(2002)에서 200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2005년 이후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경제활동참가율

1) 개념 및 정의

노동력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지칭한다. 노동력은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로 측정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즉시 하려고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1] 반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국가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사용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차례 개정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1954년에 경제활동인구를 '보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로 정의했고. 1966년에는 '경제적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공급한 모든 남녀 인구'로 재정의했다. 1993년에는 '유엔의 국민계정체계가 규정하는 경제적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공급한 남녀 인구'로 정의했다.

국제적인 경제활동인구 개념이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조작적 정의 또한 계속 바뀌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으나 조사 시점별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 기준, 준거 기간, 경제활동 최소 기준시간 등이 상이하다(김민경, 1996). 이 결과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경제활

1) 인구센서스에서 사용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정의는 1980년 이후 계속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1980년과 1985년에는 연령 기준이 14세 이상이었지만, 1990년에는 만 15세 이상, 1995년에는 세는 나이 16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부터 1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경제활동 최소기준 시간도 조사시점마다 상이해 시계열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동참가율의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일하고 있거나 틈틈이 일하고 있는 경우, 직장이 있으나 잠시 쉬고 있는 경우, 그리고 구직활동 중인 경우를 경제활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구직자에게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면서, 취업자와 즉시 일할 수 있는 구직자가 경제활동인구로 제한되었다. 2015년부터는 미취업자의 구직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어, 경제활동인구는 파악하기 어렵고, 취업인구(취업자)만 파악할 수 있다.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부터는 조사기준일 이전 일주일로 변화가 없지만, 그 이전까지는 불규칙했다.[2] 2010년부터는 응답항목이 ①주로 일하였음, ②가사, 학업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③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④일하지 않았음으로 나뉜다.

이에 이 장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산출하였다. 1995년까지는 취업자와 구직자를 합해 경제활동인구로 파악하였다. 2000년과 2005년은 취업자는 그대로 두되, 구직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 (a)는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 일이 있다면 즉각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한 값, (b)는 구직활동을 한 사람 모두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한 값을 의미한다. 2010년[3]부터는 취업자만이 포함된 값이어서 경제활동참가율보다 고용률에 가깝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두 조사는 조사 목적 및 방법이 달라 추정값에 차이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취업, 실업 등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항목 중심으로 전문조사원에 의해 실시된다. 반면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인구와 주택의 총수와 기본적 특성을 파악

2) 1995년은 지난 1개월, 1990년은 1년 중 30일 이상, 1980년은 1주일, 1985년은 기준일이 조사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3) 2010년 이후의 취업자에는 주로 일한 자, 틈틈이 일한 자, 일시휴직자가 포함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에는 구직자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KOSIS에서는 미취업자의 구직 여부, 즉각적 취업 가능 여부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항목이 제한적이며,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이처럼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이 다르고, 무응답에 대한 처리 기준 등이 달라 두 조사 간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경제활동인구 실태는 1930년부터 직업 또는 종사상 지위 문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인 중 유업자(有業者) 비율은 남자 59.5%, 여자 32.6%였다. 1940년과 1944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는 유업자 비율이 하락해 남자는 각각 53.7%, 52.9%, 여자는 각각 21.9%, 29.0%로 나타났다. 1940년대 유업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중일전쟁 이후 미국이 일본에 대해 철광석·석유 등 군수 물품 수출을 금지한 경제 봉쇄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목축업 종사자가 1930년 86.6%, 1940년 80.7%였고, 광공업 종사자는 1930년 1.6%, 1940년 3.8%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인구가 농림어업에 종사했다(통계청, 1995). 1955년 14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 76.6%, 여자 48.0%였다.[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1년 전인 1944년(28.9%)에 비해 약 20%p 상승했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결과였다. 1960년 13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 73.4%, 여자 26.8%였다.

1966년 이후 198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은 조사시점별로 변동폭이 크다(표 11-1). 시점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크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김태홍, 2000). 성별로 살펴보면 1985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지만, 남성은 '역 U자'형 구조를 보여준다.

4) 해방 이후 실시된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전쟁으로 자료가 소실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분석하였다.

표 11-1.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66~2020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1966	78.6	31.5
1970	72.5	37.6
1975	77.8	45.7
1980	72.4	38.4
1985	71.5	32.1
1990	68.3	32.6
1995	71.6	36.6
2000	70.9(a) 74.4(b)	39.2(a) 46.0(b)
2005	68.8(a) 71.8(b)	39.9(a) 44.3(b)
2010	66.9	45.6
2015	67.5	45.3
2020	68.5	49.4

자료: 2000년까지는 민경희(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표 11-2), 1980년 대비 2020년에 남녀 모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다. 1980년에는 19세 이하 청소년 남성인구의 21.4%가 경제활동에 참여한 데 비해 2020년에는 5.3%로 하락하였다. 청소년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1980년 25.1%[5]에서 2020년 7.2%로 급감했다. 1980년대까지 청소년 노동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참여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많은 청소년들이 취업보다는 교육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5) KOSIS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1980년 여성 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0%로(14~19세는 29.3%), 이하에서 인용한 2002년 한국의 인구 보고서의 수치와 격차가 크다.

표 11-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80~2020년)

(단위: %)

구분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20~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남자	1980	21.4	85.8	71.0	94.1	96.4	92.1	75.9	40.5
	1985	12.7	85.5	61.5	94.3	97.9	94.3	75.5	40.0
	1990	12.4	84.1	53.3	93.8	97.6	93.4	74.8	37.0
	1995	10.6	86.1	58.4	94.6	98.2	95.0	78.6	40.5
	2000(a)	6.5	78.6	38.8	86.0	93.9	89.3	69.0	39.0
	2000(b)	11.1	82.0	45.8	89.2	95.9	92.3	73.4	42.9
	2005(a)	3.2	75.0	32.4	81.2	92.4	88.6	68.1	35.1
	2005(b)	6.0	78.1	38.2	84.6	94.5	91.2	71.8	38.3
	2010	4.8	73.1	29.9	78.0	88.9	87.5	72.0	34.3
	2015	5.7	72.7	30.6	77.6	90.3	88.6	75.6	34.2
	2020	5.3	72.2	36.3	77.9	90.5	89.0	76.8	36.2
여자	1980	25.1	40.1	51.2	31.9	46.0	50.2	38.3	12.4
	1985	13.9	35.7	49.4	28.1	38.8	46.3	35.2	10.7
	1990	16.1	36.9	57.2	31.2	39.2	44.2	34.8	11.5
	1995	11.9	42.0	61.3	39.2	44.4	46.7	40.2	16.8
	2000(a)	7.8	42.5	48.9	44.2	49.6	47.7	37.5	18.9
	2000(b)	12.9	49.5	57.0	51.9	57.1	54.6	43.6	23.5
	2005(a)	5.2	42.8	46.3	51.8	49.7	47.5	33.9	17.9
	2005(b)	8.0	47.3	51.1	56.8	55.1	51.7	38.0	21.0
	2010	6.6	49.0	43.5	61.7	58.4	59.0	41.7	18.5
	2015	6.5	48.2	41.6	63.7	58.7	61.5	43.8	15.9
	2020	7.2	51.8	43.8	71.3	64.6	66.8	51.2	18.2

자료: 2000년까지는 민경희(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20세 이상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상이하다. 남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85.8%에서 2020년 72.2%로 감소한 데 반해 여성은 40.1%에서 51.8%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20대 초반 연령대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2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71.0%에서 2020년 36.3%로 하락했다. 과거 90%를 상회하던 25~34세 연령집단의 참가율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1980년 대비 2020년에 25세 이상 모든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25~44세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남녀 모두 20~24세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는데, 이는 대학 교육 참여 증가의 영향이 크다.

연령별로 남녀 모두 55세 이후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는데, 이는 50대 중후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5~54세 남성 89.0%, 여성 66.8%에서 55~64세 남성 76.8%, 여성 51.2%로 남녀 모두에서 하락폭이 10%p 이상으로 크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36.2%, 여성 18.2%로 하락폭이 매우 크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하락폭이 크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결혼·출산 등의 연령대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M자 곡선을 띠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결혼 전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지만, 결혼·출산·양육 등을 경험하는 시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재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혼인 및 출산이 지연되고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그 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예컨대 198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 51.2%에서 25~34세 31.9%로 약 20%p 감소한 뒤, 35~44세에 46.0%로 상승하는 곡선을 그렸다. 반면 2020년에는 20~24세 43.8%에서 25~34세 71.3%로 상승한 뒤 35~44세 64.6%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45~54세에 66.8%로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상승하면서 M자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증감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20년 남녀 모두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표 11-3).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초급대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고 있다. 1980년에는 남녀 모두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남성 34.6%, 여성 21.1%로 하락해 불취학자 다음으로 낮다. 불취학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해 1980년 남성 69.9%, 여성 41.8%에서 2020년 남성 16.1%, 여성 10.4%로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은퇴 영향이 크다.

중학교 졸업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은 1980년 66.7%에서 2020년 48.4%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1980년 28.6%에서 2020년 34.5%로 상승해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산업구조가 저임금·저기술 노동력에 의존하던 분야에서 고기술 분야로 전환되면서, 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다.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표 11-3. 성별·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80~2020년)

(단위: %)

구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	대학 이상	
					인문고	실업고		대학	대학원 이상
남자	1980	69.9	88.5	66.7	62.1	67.1	66.9		72.4
	1985	63.2	87.3	68.2		69.2	70.6		67.0
	1990	55.5	81.2	78.6		71.5	76.1		73.5
	1995	54.7	78.7	78.0		78.9	80.0		77.0
	2000a	49.4	68.3	67.6		72.2	71.5		73.6
	2000b	53.9	72.7	71.4		75.5	75.5		76.5
	2005a	38.9	59.4	61.5		70.2	74.1	69.3	85.8
	2005b	42.9	63.4	65.3		73.3	77.4	72.0	87.0
	2010	33.5	54.3	55.9		65.7	75.4	69.6	85.1
	2015	23.0	47.8	52.4		66.0	77.8	71.0	83.2
	2020	16.1	34.6	48.4		65.7	79.7	73.7	83.1
여자	1980	41.8	47.5	28.6	26.4	36.3	43.0		25.6
	1985	34.1	43.9	24.7		28.2	38.3		24.7
	1990	29.8	43.4	31.4		31.9	41.6		32.7
	1995	31.2	46.3	37.8		36.8	47.2		39.8
	2000a	28.7	43.3	40.7		37.4	45.0		41.7
	2000b	33.8	49.4	47.6		44.8	52.3		48.1
	2005a	23.8	37.0	38.1		39.7	49.7	42.9	60.8
	2005b	27.3	40.9	42.5		44.6	54.3	46.8	63.8
	2010	20.8	36.3	40.6		45.9	55.8	51.5	69.5
	2015	14.3	29.3	35.9		45.5	57.1	52.5	68.9
	2020	10.4	21.1	34.5		48.8	62.3	59.5	73.0

자료: 2000년까지는 민경희(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3)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우리 사회의 성 역할 변화를 잘 보여준다. 1980~2020년 남성은 유배우자, 여성은 이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다(표 11-4). 이는 남성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이혼한 여성은 본인이 가구 부양자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유배우 남녀를 비교하면, 1980년에는 남성(90.3%)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36.2%)에 비해 54.1%p 높았지만 이후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성별 격차는 크게 감소하였다. 1995년까지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배우 여성보다 높았으나, 2000년 이후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여성의 성 역할 인식 변화와 경제적 부담 증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 모두 사별한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데, 이는 사별한 인구의 고연령층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표 11-4 성별·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80~2020년)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80	74.7	90.3	45.5	84.8	50.0	38.5	36.2	32.1	63.3	46.0
1985	74.1	91.4	43.8	85.1	45.6	33.1	31.1	28.5	60.9	39.2
1990	73.8	90.4	42.7	86.2	44.7	34.2	31.0	28.4	70.7	42.9
1995	77.6	91.0	46.7	88.1	51.3	38.9	36.8	30.3	70.2	47.2
2000(a)	71.2	85.2	39.0	75.6	43.3	39.3	40.9	27.5	60.3	39.8
2000(b)	74.7	87.5	44.7	83.2	48.9	46.1	47.7	33.6	72.3	46.7
2005(a)	68.8	82.7	35.2	71.5	44.4	40.0	40.4	24.6	61.0	43.8
2005(b)	71.8	84.7	39.8	78.2	49.1	44.3	44.9	28.5	68.7	47.8
2010	66.9	79.8	33.7	69.4	45.7	45.6	49.4	23.4	61.7	45.5
2015	67.5	79.9	32.6	68.8	48.5	45.3	48.1	22.9	61.5	47.0
2020	68.5	77.7	33.2	66.9	55.5	49.4	52.0	23.0	62.7	53.0

자료: 2000년까지는 민경희(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3) 취업자의 성별·연령별 구조

1980년 이후 취업자의 성별·연령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1-5). 전체 노동력에서 20세 미만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하락해 2020년에는 1.0% 미만에 그쳤다. 1980년에는 전체 여성 노동력 중 19세 이하 청소년 비중이 13.8%로 높았으나, 저출산과 고등교육 보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80년에는 25~34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00년에는 35~44세, 2020년

에는 45~54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 역시 2000년 35~44세에서 2020년 45~54세로 변화하였다.

표 11-5. 성별·연령별 취업자의 분포 변화(1980~2020년)

(단위: %)

구분		19세 이하	20세 이상						
			소계	20~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남자	1980	5.9	94.1	11.1	30.6	25.3	16.3	8.2	2.6
	1985	2.2	97.8	8.1	35.2	25.2	18.5	8.0	2.7
	1990	1.8	98.2	6.6	35.8	26.6	17.9	8.5	2.8
	1995	1.1	98.9	6.2	31.7	29.9	17.8	10.1	3.2
	2000	0.8	99.2	4.0	28.7	32.5	19.8	10.1	4.1
	2005	0.3	99.7	3.2	24.9	31.1	24.4	11.1	5.0
	2010	0.6	99.4	2.8	22.0	28.5	26.7	13.5	5.9
	2015	0.7	99.3	3.1	19.1	26.2	26.7	17.6	6.7
	2020	0.4	99.6	3.4	18.1	23.2	25.7	20.4	8.7
여자	1980	13.8	86.2	20.2	17.5	20.5	17.2	8.5	2.4
	1985	5.9	94.1	20.2	22.0	19.9	19.8	9.7	2.6
	1990	6.9	93.1	20.4	23.2	19.7	17.1	9.9	2.9
	1995	3.4	96.6	17.5	24.0	23.8	15.8	11.2	4.2
	2000	2.2	97.8	12.3	25.0	27.7	17.3	10.2	5.4
	2005	0.9	99.1	10.0	25.7	26.7	20.9	9.5	6.3
	2010	1.1	98.9	6.8	23.8	25.8	24.9	11.3	6.4
	2015	1.0	99.0	6.8	21.2	23.7	26.2	15.0	6.1
	2020	0.8	99.2	6.1	20.2	21.4	25.5	18.4	7.6

자료: 2000년까지는 민경희(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변화 정도가 더 크다. 전체 여성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4세의 경우 1980년 20.2%에서 2020년 6.1%로 감소하였으나, 25세 이상 모든 연령집단에서는 증가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45~54세 이상의 비율은 17.2%에서 25.5%로 약 8.7%p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은 20~44세 연령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크다.

성별 변화 양상이 현저히 다른 연령은 25~34세이다. 남성의 경우 1980년 30.6%에서 2020년 18.1%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17.5%에서 20.2%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연령층 남성에서 감소한 것은 고등교육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 연령층 여성에서 증가한 것은 만혼, 출산율 하락, 여성 노동력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3. 산업구조

산업구조는 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을 의미하며,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산업화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차츰 기술력과 자본이 축적되면서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가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경험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된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이 농림어업 16.4%, 광업 및 제조업 23.6%이었고,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이 16.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숙박음식업(6.4%), 교육서비스업(5.3%) 순이었다(표 11-6). 2020년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1995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제조업도 17.4%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표 11-6.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1995~2020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95~2015	2020						
농업, 임업 및 어업		16.4	13.8	10.9	7.9	6.6	4.3
광업		0.2	0.1	0.1	0.1	0.1	0.1
제조업		23.4	20.7	19.7	17.3	17.7	17.4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5	0.5	0.4	0.4	0.5	0.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	-	0.3	0.4	0.6
건설업		8.6	7.2	7.5	7.0	6.3	6.5
도매 및 소매업		16.9	15.7	15.0	14.2	13.7	13.4
운수업	운수 및 창고업	4.6	4.8	4.6	4.9	4.9	5.2
숙박 및 음식점업		6.4	7.5	7.7	7.8	8.0	8.2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업	0.8	1.2	1.2	2.8	2.9	3.2
금융 및 보험업		3.6	3.7	3.3	3.6	3.4	3.5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	1.5	1.7	2.4	2.4	2.6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3.9	4.4	4.4
사업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9	4.3	5.8	4.0	4.4	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	3.9	3.8	4.1	4.0	5.3
교육서비스업		5.3	6.0	6.8	7.4	7.2	6.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	2.3	3.6	5.3	6.5	8.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	1.8	2.0	1.6	1.7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	4.3	4.4	4.6	4.3	3.9
가구 내 고용 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0.3	0.4	0.3	0.5	0.4	0.1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0	0.1	0.1	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2000년은 2% 표본자료, 2005년 이후는 10%·20% 표본(원자료).

서비스업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0년 도소매업 취업자는 13.4%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5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 유통채널의 변화 때문이다. 교육서비스업은 1995년 5.3%에서 2010년 7.4%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6.7%이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995년에 1.7%에서 2020년 8.3%로 증가했는데, 소득 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식 지출 증가로 인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비율도 증가했다.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는 1995년 4.6%에서 2020년 5.2%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취업자 비율이 낮았던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6]의 비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은 1995년 0.8%에서 2020년 3.2%, 사업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2.9%에서 4.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최근에는 정보통신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사업서비스업은 고용알선과 인력 공급 등의 고용 지원 서비스업, 경비·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의 보안 서비스업,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업, 문서 작성·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데 분야별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4. 직업구조

1) 직업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는 직업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55년부터 2020년까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중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전문직 등 다른 직업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표 11-7). 1955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79.5%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였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어 2020년에는 4.3%에 그쳤다. 생산직 비중은 1955년 8.7%에서 1990년 31.6%까지 증가했지만, 탈공업화의 영향으로 1995년 27.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28.8%, 2005년 29.1%, 2010년 31.5%, 2015년 32.5%로 다시 완만한 증가세로 반전되다가 2020년에는 30.6%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직 비중은 1980년 4.5%에서 1995년 10.5%, 2020년 20.0%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관리직은 1955년 1.2%에서 2000년 4.6%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직종코드 변경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사무 종사자 비중은 1970년 5.9%에서 1990년 15.4%로 급증하였다. 이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의 규격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증가율이 둔화되어 2020년에는 20.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직과 판매직 비중이 1960년 13.5%에서 2020년 24.0%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표 11-7. 직업구성의 변화(1955~2020년)

(단위: %)

구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관리자	1.2	1.3	0.9	1.0	0.8	1.1	1.5	2.1	4.3	4.6	3.6	2.8	1.5	0.8
전문가	1.6	2.4	2.8	3.2	3.3	4.5	5.8	7.4	10.5	16.3	19.0	19.4	20.9	20.0
사무 종사자	2.4	2.6	4.3	5.9	6.7	9.5	11.5	15.4	14.5	14.3	16.5	16.3	17.4	20.4
판매 종사자	4.5	8.3	10.7	10.2	10.5	12.1	15.5	14.0	15.8	12.7	11.1	12.3	11.9	11.3
서비스 종사자	2.1	5.2	5.4	6.7	6.5	7.1	10.8	8.8	11.8	9.7	9.8	10.0	10.6	12.7
생산 종사자	8.7	13.4	19.2	21.8	23.0	28.1	30.3	31.6	27.0	28.8	29.1	31.5	32.5	3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9.5	66.7	56.8	51.2	49.2	37.6	24.6	20.7	16.1	13.6	10.8	7.6	5.2	4.3

주: 2002년 한국의 인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따르기 위해 기능원, 조립원 단순노무 종사자를 생산 종사자로 정의함.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2) 성별 직업구조

직업 구성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표 11-8). 2020년 남성 종사자 비중은 생산직(39.9%), 사무직(18.8%), 전문직(18.0%), 판매직(10.0%) 순으로 높다. 생산직 비중은 201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전문직 및 사무직의 증가세도 2000년대 들어 둔화되었다. 여성은 2020년 전문직(22.6%), 사무직(22.4%), 서비스직(19.3%), 생산직(18.2%) 순으로 비중이 높다. 특히 전문직 비중은 1990년 8.3%에서 2000년 15.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2.6%에 이르렀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중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급감하였다.

표 11-8. 성별 직업구성의 변화(1955~2020년)

(단위: %)

구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자	관리자	1.9	1.5	1.2	1.4	1.3	1.6	2.3	3.0	6.3	6.9	5.3	4.2	2.1	1.1
	전문가	2.3	2.8	3.3	3.8	4.1	5.2	5.9	7.0	9.9	16.7	18.3	18.0	18.2	18.0
	사무 종사자	3.8	3.5	5.6	7.6	8.5	10.0	12.4	15.3	13.7	13.0	15.3	15.6	16.0	18.8
	판매 종사자	5.3	7.8	10.1	10.5	11.1	12.3	13.6	13.6	14.8	10.4	9.3	10.4	10.5	10.0
	서비스 종사자	1.8	3.4	3.4	4.5	4.6	5.4	6.9	6.4	8.5	5.8	5.8	5.7	6.7	7.6
	생산 종사자	12.5	15.9	21.6	25.7	27.4	32.9	36.0	37.0	33.9	35.9	36.8	39.0	41.4	39.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2.4	65.2	54.7	46.3	43.0	32.5	22.7	17.5	13.0	11.4	9.2	7.0	5.1	4.6
여자	관리자	0.1	0.8	0.0	0.0	0.0	0.0	0.1	0.2	0.6	0.9	1.0	1.0	0.7	0.4
	전문가	0.6	1.5	1.8	2.1	2.1	3.5	5.3	8.3	11.8	15.7	20.2	21.3	24.7	22.6
	사무 종사자	0.4	0.5	1.5	2.8	4.0	8.6	10.2	15.5	16.0	16.4	18.4	17.3	19.3	22.4
	판매 종사자	3.2	9.7	11.8	9.6	9.5	11.6	18.3	14.6	17.7	16.7	14.1	14.8	13.7	13.1
	서비스 종사자	2.4	9.7	9.5	10.8	9.3	9.9	17.0	13.3	17.8	16.1	16.1	15.8	16.2	19.3
	생산 종사자	3.1	7.2	14.0	14.7	16.2	19.9	21.3	21.0	14.2	17.2	16.8	21.3	19.9	18.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0.2	70.5	61.4	59.8	58.8	46.4	27.6	27.0	21.5	17.0	13.4	8.5	5.5	3.9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우리나라는 성 역할 인식과 기회 불균형으로 성별 직종 분리가 뚜렷하다. 2020년 현재 서비스직은 남성 100명당 여성 192.1명이 취업해 여성 비율이 100%를 넘는 유일한 직종이다(표 11-9). 나머지 직종은 모두 남성 비율이 높은데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 판매직(99.6%), 전문직(95.4%), 사무직(90.4%)은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 90%를 넘지만, 관리직(29.8%), 생산직(34.6%)은 여전히 남성 비율이 높아 성비 불균형이 크다.

세부 업종별 성비를 살펴보면 관리직은 대표적인 남성우위 직종이다. 관리직은 1980년에는 남성 100명당 여성 취업자가 1.5명에 불과했다. 이후 여성 비중이 증가했지만,

표 11-9. 직종별 여성 비 변화(1955~2020년)

(단위: %)

구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66.6	40.8	46.8	54.3	64.7	57.7	63.8	50.7	54.9	60.8	62.4	73.3	70.2	75.4
관리자	2.6	23.0	2.0	3.6	3.9	1.5	3.8	3.7	5.3	8.1	11.9	18.0	23.8	29.8
전문가	18.0	21.6	25.5	29.6	33.8	38.6	54.7	60.4	65.7	57.1	96.7	86.5	95.7	95.4
사무 종사자	6.6	11.8	12.3	20.4	30.4	49.8	52.7	51.6	64.0	76.6	74.8	81.2	85.4	90.4
판매 종사자	39.8	50.7	54.5	50.2	56.4	54.4	86.2	54.7	65.7	97.8	94.8	104.1	92.2	99.6
서비스 종사자	84.8	116.4	128.8	131.5	132.8	105.1	157.5	105.5	115.1	169.3	171.5	201.5	169.6	192.1
생산 종사자	16.6	18.4	30.2	31.5	38.8	35.0	37.9	29.0	23.0	29.2	28.6	39.9	34.0	3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3.1	43.9	52.5	70.8	89.6	82.2	77.6	78.7	92.3	90.5	90.9	89.1	76.3	63.9

주: 여성 비란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여전히 29.8명으로 낮다. 관리직의 낮은 여성 비율은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보여준다. 반면 판매직, 전문직, 사무직은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직의 여성 취업자는 1990년 남성 100명당 54.7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04.1명, 2020년 99.6명으로 증가하였다.

3) 성별·연령별 직업구조

남성의 직종별 중위연령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특히 200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표 11-10). 전체 남성 취업자의 중위연령은 1980년 35세에서 2000년 40세, 2020년 47세로 상승하였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의 중위연령이 1980년에는 30대 중반, 2000년에는 30대 후반이었지만 2020년에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40~50대로 상승해 고령 취업자 비중의 빠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고령화된 직업군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로 중위연령이 1980년 42세에서 2000년 57세로 15세 증가하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랐으나, 2020년에는 62세로 지난 20년 동안 5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사망 및 은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관리직의 중위연령은 1980년 42세에서 2000년 43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52세로 9세 증가해 2000~2020년 사이 고령화 속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빨랐다. 생산직은 1980년 31세에서 2000년 39세, 2020년 50세로 중위연령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생산직 고령화는 탈산업화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 아웃소싱 확대와 자동화 설비투자로 국내의 신규 인력 유입이 억제된 결과이다. 청년들이 3D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대다수 중소 제조업체 공장이 고령자에 의존하게 된 것도 큰 원인이다. 사무직은 1980년 33세에서 2000년 35세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0년 44세로 상승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판매직과 서비스직 또한 중위연령이 1980년 30대 중반에서 2020년 40대로 상승했다.

여성의 직종별 중위연령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표 11-11). 여성 취업자의 중위연령은 남성보다 소폭 낮지만 2000년 39세에서 2020년 45세로 20년 동안 6세가량 증가해 고령화 속도는 비슷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종별 고령화 속도의 편차가 크다. 2000년 이후 사무직은 13세, 전문직, 관리직, 생산직은 각각 10세 증가해 전체 직종 평균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특히 혼인·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결과 중위연령 상승 폭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직과 사무직의 중위연령은 1980년 각각 27세와 22세에서 2020년에는 각각 39세와 40세로 증가하였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중위연령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로 중위연령이 1980년 43세에서 2000년 58세로 15세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63세로 20년 동안 5세가량 증가했다. 여성 생산직의 중위연령도 1980년 21세에서 2000년 42세로 20년간 20세 이상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52세로 10세가량 다시 상승했다. 이는 농림어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고령 여성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1-10. 남성 직업별 연령 중앙값 변화(1955~2020년)

(단위: 세)

구분	1955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35	34	34	34	35	36	37	37	40	42	43	44	47
관리자	31	42	42	42	42	44	43	43	43	46	45	48	52
전문가	32	35	35	36	36	36	36	36	37	38	39	41	42
사무 종사자	27	36	34	34	33	34	35	35	35	38	40	42	44
판매 종사자	37	37	36	36	36	38	42	42	39	41	42	43	45
서비스 종사자	30	30	31	33	35	37	39	39	38	39	40	41	42
생산 종사자	36	27	31	31	31	33	34	34	39	42	45	48	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5	35	33	37	42	46	50	50	57	59	61	61	62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표 11-11. 여성 직업별 연령 중앙값 변화(1955~2020년)

(단위: 세)

구분	1955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33	33	33	33	34	36	35	37	39	40	42	42	45
관리자	30	39	35	42	42	42	39	35	41	43	40	45	51
전문가	23	26	26	26	27	27	27	28	29	31	34	36	39
사무 종사자	22	23	22	22	22	22	23	24	27	30	33	36	40
판매 종사자	37	39	38	37	37	38	36	36	39	41	43	45	47
서비스 종사자	21	22	22	24	32	37	38	40	41	43	45	48	50
생산 종사자	28	24	22	20	21	30	29	38	42	44	48	51	5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7	36	37	39	43	47	51	55	58	61	62	63	63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생산직 다음으로 여성 중위연령이 높은 직종은 관리직과 서비스직이다. 관리직은 직무 특성상 평균 연령이 높으며 2000년 41세에서 2010년 40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51세로 짧은 기간 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비스직은 1980년 32세에서 2000년 41세, 2020년 50세로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자의 중위연령은 남성에 비해 2세 낮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직종별 성별 편차가 크다. 서비스직의 경우 남성 취업자의 중위연령이 42세인 반면 여성은 50세로 여성 취업자가 남성에 비해 8세 높다. 사무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4세 높으며, 전문직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3세 높다. 상대적으로 직업 위세가 높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은 남성의 중위연령이 높고 직업 위세가 낮은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에서는 여성의 중위연령이 높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별, 연령별 직종 분리가 여전히 공고함을 보여준다.

4) 교육수준별 직업구조

1980년대에 대학교육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면서 1990년대부터 취업자의 학력이 빠르게 변모하였다. 1960년에는 불취학자(44.7%)와 초등학교 졸업자(39.5%)를 합한 저학력자가 전체 취업자의 84.2%에 달했으나, 이후 중등학교 진학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0년 저학력자는 3.3%에 불과하다(표 11-12). 초등학교 졸업자(초졸자) 비율은 1980년까지 30% 중반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2.9%에 불과하다. 중학교 졸업자(중졸자) 비율은 1990년 18.2%에서 2020년 5.6%로 감소하여 고등학교 졸업 미만 저학력자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고졸자) 비율도 1995년 41.5%까지 증가한 후 하락해 2020년에는 33.9%로 나타났다. 반대로 초급대학 이상 졸업자(초대졸) 비율은 1980년 7.9%에서 2020년 57.3%로 증가했다.

표 11-12. 취업자의 학력별 분포 변화(1960~2020년)

(단위: %)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불취학	44.7	32.8	23.8	19.1	14.8	37.7	6.4	4.6	4.0	2.6	1.7	0.9	0.4
초등학교	39.5	42.7	43.6	43.0	34.3		18.5	15.1	12.1	9.0	7.5	5.4	2.9
중학교	7.3	20.1	26.4	31.4	43.1	21.1	18.2	14.2	12.1	9.6	8.4	7.0	5.6
고등학교	6.2					30.9	38.1	41.5	40.1	38.0	35.3	33.9	33.9
초급대학	2.4	4.4	6.1	6.5	7.9	10.3	4.7	5.1	10.9	12.8	15.7	16.3	17.0
대학 이상							14.1	19.5	20.7	27.9	31.3	36.5	40.3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표 11-13. 전문·관리직 종사자 학력 구성의 변화(1960~2020년)

(단위: %)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불취학	7.3	1.7	1.3	0.9	0.6	4.3	0.2	0.1	0.1	0.1	0.1	0.0	0.0
초등학교	19.0	6.8	7.4	5.7	2.4		1.3	0.9	1.0	0.6	0.4	0.1	0.0
중학교	12.3	45.0	39.3	34.1	31.3	5.3	3.0	2.3	2.1	1.4	0.8	0.1	0.1
고등학교	35.8					28.8	20.4	24.4	21.7	17.0	11.4	10.4	7.9
초급대학	25.7	46.5	52.0	59.2	65.7	61.6	11.9	10.5	18.5	17.1	18.5	18.2	17.2
대학 이상							63.2	61.9	56.6	63.8	68.8	71.3	74.8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취업자의 교육수준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 종사자 중 초대졸 이상 비율은 2020년 92.0%다(표 11-13). 1980년대 초대졸 이상 비율은 60%대였으나, 1990~2000년 70%대로 상승했고 2005년에는 80%대, 2015년부터는 약 90%로 상승했다. 전문·관

리직 중 고졸 비율은 1985년 28.8%에서 2020년 7.9%로 줄었으며, 중졸 이하 비율은 1985년 9.6%에서 2020년 0.1%로 급감하였다.

사무·판매·서비스직 취업자의 학력 구성에서도 중졸 이하 비율은 급감하고, 초대졸 이상 비율은 급증하였다(표 11-14). 중졸 이하 비중은 1960년 79.4%에서 2020년 5.6%로 급감했다. 1980년만 하더라도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27.7%가 초졸 이하자였고,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60.7%였으나, 2020년에는 각각 1.5%, 38.4%로 급감했다. 초대졸 이상은 1985년까지 10%대였지만, 1990년 24.4%, 2020년에는 60.1%로 급증하였다.

생산직 종사자의 학력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최근에는 고학력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표 11-15). 중졸 이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 생산직의 고졸자 비율이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생산직에서도 초대졸 이상 비율은 1985년 2.1%에서 2020년에는 34.7%로 증가하여,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표 11-14.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 학력 구성의 변화(1960~2020년)

(단위: %)

<table>
<tr><th>구분</th><th>1960</th><th>1966</th><th>1970</th><th>1975</th><th>1980</th><th>1985</th><th>1990</th><th>1995</th><th>2000</th><th>2005</th><th>2010</th><th>2015</th><th>2020</th></tr>
<tr><td>불취학</td><td>24.8</td><td>15.9</td><td>9.0</td><td>7.2</td><td>4.9</td><td rowspan="2">24.1</td><td>1.8</td><td>1.4</td><td>1.1</td><td>0.7</td><td>0.4</td><td>0.2</td><td>0.1</td></tr>
<tr><td>초등학교</td><td>41.7</td><td>38.1</td><td>35.0</td><td>31.1</td><td>22.8</td><td>10.4</td><td>9.1</td><td>6.5</td><td>4.3</td><td>3.6</td><td>2.5</td><td>1.4</td></tr>
<tr><td>중학교</td><td>12.9</td><td rowspan="2">36.2</td><td rowspan="2">43.5</td><td rowspan="2">49.0</td><td rowspan="2">60.7</td><td>19.0</td><td>14.5</td><td>12.7</td><td>10.3</td><td>7.6</td><td>6.1</td><td>4.8</td><td>4.1</td></tr>
<tr><td>고등학교</td><td>15.0</td><td>43.8</td><td>49.0</td><td>50.0</td><td>49.0</td><td>43.6</td><td>38.8</td><td>35.0</td><td>34.3</td></tr>
<tr><td>초급대학</td><td rowspan="2">5.6</td><td rowspan="2">9.8</td><td rowspan="2">12.5</td><td rowspan="2">12.8</td><td rowspan="2">11.6</td><td rowspan="2">13.0</td><td>6.5</td><td>6.0</td><td>13.7</td><td>15.7</td><td>19.2</td><td>18.8</td><td>18.6</td></tr>
<tr><td>대학 이상</td><td>17.9</td><td>20.9</td><td>19.5</td><td>28.1</td><td>31.8</td><td>38.8</td><td>41.5</td></tr>
</table>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표 11-15. 생산직 종사자 학력 구성의 변화(1960~2020년)

(단위: %)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불취학	26.2	17.3	9.0	5.9	3.8	32.4	2.1	1.3	1.9	1.4	1.4	1.0	0.6
초등학교	53.9	50.6	48.1	44.9	34.6		16.1	13.6	12.8	9.8	9.8	8.3	4.3
중학교	11.6	30.2	39.9	46.3	59.3	33.6	28.9	22.4	19.9	16.1	14.5	12.5	9.7
고등학교	6.9					32.0	47.3	54.3	53.8	54.3	51.7	50.3	50.6
초급대학	1.1	1.8	3.0	2.8	2.2	2.1	2.8	3.4	6.4	9.5	12.1	13.6	15.8
대학 이상							2.9	4.9	5.2	8.9	10.5	14.3	18.9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5) 고용형태별 직업구조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비임금근로자의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표 11-16). 임금근로자는 1960년 21.6%에 불과했지만 1985년에는 50%를 넘었으며, 계속 증가해 2020년에는 77.2%에 달한다. 고용주는 등락이 큰 편으로, 1980년 4.0%에서 2010년 7.7%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해 2020년에는 5.1%이다. 자영업자는 1970년에는 33.0%에 달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에 20%대 아래로 하락했고 2020년에는 14.3%로 1970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무급 가족종사자는 1980년 21.1%에서 2020년 3.4%로 급감했다. 무급 가족종사자의 급감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기업규모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자영업의 경영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제조업 비중은 줄고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지만, 우리나라는 생계형 개인 서비스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보존·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11-16. 종사상 지위 구성비의 변화(1960~2020년)

(단위: %)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고용주	47.5	40.5	1.8	2.8	4.0	31.3	5.4	7.3	6.8	6.7	7.7	6.6	5.1
자영업자			33.0	28.0	31.4		24.2	22.1	22.5	20.9	17.0	16.6	14.3
가족종사자	30.9	27.3	26.2	28.5	21.1	14.6	10.6	10.7	9.1	7.4	7.0	4.3	3.4
임금근로자	21.6	32.2	39.0	40.7	43.4	54.1	59.7	59.9	61.6	65.0	68.4	72.4	77.2

주: 미상은 제외함.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1-17. 직종별 임금근로자 비중의 변화(1960~2020년)

(단위: %)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21.6	32.2	39.0	40.7	43.4	54.1	59.7	59.9	61.6	65.0	68.4	72.4	77.2
관리자	23.1	59.4	-	38.8	37.2	20.2	13.4	39.7	51.0	38.0	73.0	74.8	73.2
전문가	85.7	86.2	-	84.6	85.6	85.8	86.1	85.8	83.1	81.9	80.3	83.6	84.5
사무 종사자	97.8	96.7	-	97.5	97.2	97.9	98.5	95.4	90.9	89.6	88.2	89.7	96.8
판매 종사자	8.6	13.5	-	20.7	17.7	21.3	35.2	43.8	39.5	43.3	47.9	57.0	57.0
서비스 종사자	86.5	78.9	-	66.8	58.3	56.0	55.3	54.5	50.4	54.8	58.3	63.2	67.0
생산 종사자	57.3	74.1	-	96.2	78.6	85.6	86.2	79.4	77.2	76.1	75.4	74.3	7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6	9.2	-	8.8	3.1	10.8	3.3	3.6	4.1	3.8	6.4	5.0	10.8

자료: 2000년까지는 은기수(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는 모든 직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2020년 임금근로자 비중은 77.1%로, 1960년 대비 50%p 이상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표 11-17). 하지만 직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임금근로자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전문직·사무직·생산직 등은 1960년부터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직은 1960년에 임금근로자 비중이 6.6%로 매우 낮았고, 2020년에도 10.8%로 낮다. 1960~2020년 임금근로자 비중이 급증한 직종은 관리직과 판매직으로, 각각 23.1%에서 73.2%, 8.6%에서 57.0%로 상승했다.

직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직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1960년 이래로 8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 83.1%, 2010년 80.3%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20년 84.5%로 회복되었다. 관리직은 연도별로 변동폭이 크다. 1960년 23.1%에서 1966년 59.4%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975년에는 40% 미만으로 하락한 뒤 1990년에는 13.4%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39.7%로 급증하였으며, 이후에도 조사마다 변동폭이 컸다. 대체로 1995년까지 40%를 넘지 않던 관리직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2010년 이후로는 73~7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무직은 대다수가 임금근로자이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0년 이후 1990년까지 96~98%대를 유지했으나 1990년 이후 하락해 2010년에는 88.2%를 기록했다.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0년에는 사무직의 96.8%가 임금근로자이다. 생산직 또한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연도별 변동폭이 크다. 1960년 생산직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57.3%에 그쳤으나 1975년 96.2%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지속하다 1995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고 2015년 74.3%로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후 소폭 상승해 2020년에는 79.8%로 나타났다.

판매직은 1960년 임금근로자 비율이 8.6%에 불과했지만 1975년 20.7%로 증가한 후 1995년에는 43.8%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39.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다시 증가해 2020년에는 57.0%가 임금근로자였다. 서비스직은 1960년 전체 취업자의 86.5%가 임금근로자였으나 2000년에는 50.4%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고용구조의 선진화를 의미한다. 직종별 임금근로자 비율의 변동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 형태의 외주화나 특수고용의 확대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종에서 시점별로 큰 변동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5. 맺음말

이 장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산업화로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군이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다. 이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혼인·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에 따른 M자 곡선 현상이 과거에 비해 둔화하고 있다.

학력 측면에서는 저학력자의 감소와 고학력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학력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 취업자의 학력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감소는 고연령층의 취업률 하락과 관련이 있다.

취업자의 직업구조는 산업화, 경제발전,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 등의 영향으로 변화했다. 과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문직과 사무직 비중이 증가하였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각 직업군의 연령구조 역시 고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직종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다. 교육수준별 직업구조를 살펴보면, 대학교육의 확대로 모든 직종에서 대졸자 비중이 높아졌고, 생산직에서도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졌다. 경제발전으로 비공식 부문이 감소하며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관리직과 판매직에서 이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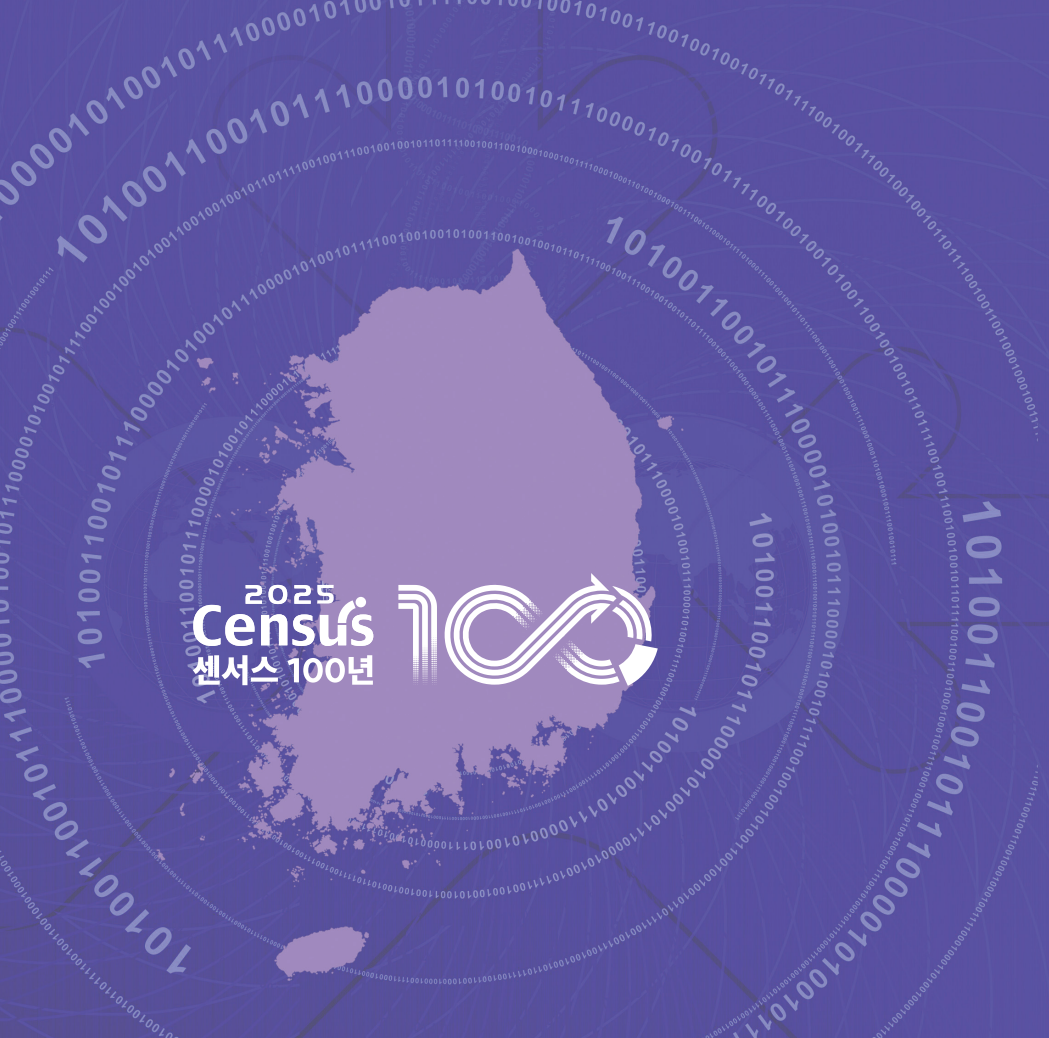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이 두드러졌다.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전문직과 관리직에서 여성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직, 전문직, 판매직에서 성비가 개선되는 추세이다. 서비스직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압축적 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고학력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구조 변화도 산업과 직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 및 직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모습은 급격히 달라질 것이다.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제조 및 서비스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국가와 개인 차원의 준비가 중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12장

통근·통학과 주간인구

구형모



1.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가 대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도시화는 도시 주변 지역의 도시화와 더불어 주거지의 교외화를 동반한다. 교외화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내 직장과 주거지 간 불일치, 즉 직장·주거(직주) 불일치를 야기한다. 직주 불일치는 대체로 고용이 중심업무지구와 같은 도시의 중심에 집중되고, 주거지는 외곽으로 확산함에 따라 발생한다(Loo and Chow, 2011).

직주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통근·통학인구와 이동 거리의 증가를 야기한다. 통근·통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단거리 혹은 장거리 인구이동이다. 이 이동은 주거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행정경계를 넘는 통근·통학이 활발히 발생한다.

통근·통학의 과도한 증가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양상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통근·통학은 도시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이며, 에너지 과다 사용, 공해·물질 과다 배출 등의 환경문제 역시 초래하게 된다(윤인하·김호연, 2003). 통근·통학에 대한 분석은 직장과 주거지를 재배치하여 직주 일치도를 제고하거나, 교통수단 및 교통로를 개선하여 통근·통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손승호, 2014; 이삼수, 2004; Zhao et al., 2011).

통근·통학인구 증가는 주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 통계청은 거주지와 통근·통학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인구를 주간인구라 한다(주간인구 = 상주인구 + 통근·통학 유입인구 – 통근·통학 유출인구). 주간인구는 주거지의 인구를 의미하는 상주(야간)인구와 특성이

다르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인구가 학교나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더 많은 공공서비스 수요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간인구 분석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수적이며, 도시 및 교통 계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지역의 주간인구는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에서 주간에 유입된 인구를 더하고, 유출된 인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주간인구는 해당 지역 내 비통근·통학자 수와 지역 내 통근·통학자 수, 그리고 타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자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은기수, 2001).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과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를 분석한다. 우선 전국 통근·통학 인구의 특성과 주간인구를 분석한 후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2. 전국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이 절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통근·통학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근·통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간인구의 변화를 탐색한다.

1) 통근·통학인구 비율과 연령대별 특성

먼저 전국 시도별 통근·통학인구 비율과 그 변화이다(표 12-1, 그림 12-1). 통계청 기준 통근·통학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학업이나 일을 위해 이동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통근·통학은 같은 행정구역 내(예를 들어 같은 시군구 내)에서의 통근·통학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행정구역으로 통근·통학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12-1〉은 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한 통근·통학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시도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제주가 대부분의 시기에서 가장 높다. 제주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1995년에 70.6%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2015년까지 유지되어 2015년에는 74.0%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제주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63.3%로 크게 감소하여, 세종, 서울, 경기보다 낮다. 세종은 2015년 69.7%, 2020년 69.3%로 상대적으로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다.

서울은 1995년 64.6%에서 2005년 61.5%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69.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후 다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63.4%를 기록하였다. 경기는 1995년 62.8%에서 시작하여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0년 69.5%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64.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두 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서울 64.6%, 경기 62.8%로 서울이 경기보다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모든 시점에서 경기가 서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12-1. 시도별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1995~2020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서울	64.6	63.7	61.5	69.3	66.7	63.4
부산	61.5	58.7	56.5	63.4	62.1	57.8
대구	60.9	58.9	57.6	65.7	63.8	59.4
인천	63.1	63.1	61.6	69.0	67.0	62.8
광주	62.9	61.2	60.9	68.2	66.0	62.5
대전	62.0	61.5	60.0	68.0	66.9	62.7
울산	-	63.0	62.6	69.1	67.5	61.4
세종	-	-	-	-	69.7	69.3
경기	62.8	63.9	62.6	69.5	68.2	64.2
강원	61.6	60.7	57.8	66.4	65.3	59.3
충북	64.6	64.6	61.5	68.6	67.2	60.8
충남	66.3	66.1	65.1	71.3	69.4	61.3
전북	65.8	63.5	59.8	67.2	64.4	58.2
전남	68.4	66.9	62.4	68.3	66.1	58.1
경북	65.0	63.4	61.8	67.8	65.8	57.1
경남	65.6	64.2	62.7	68.3	67.0	60.5
제주	70.6	68.9	67.1	75.1	74.0	63.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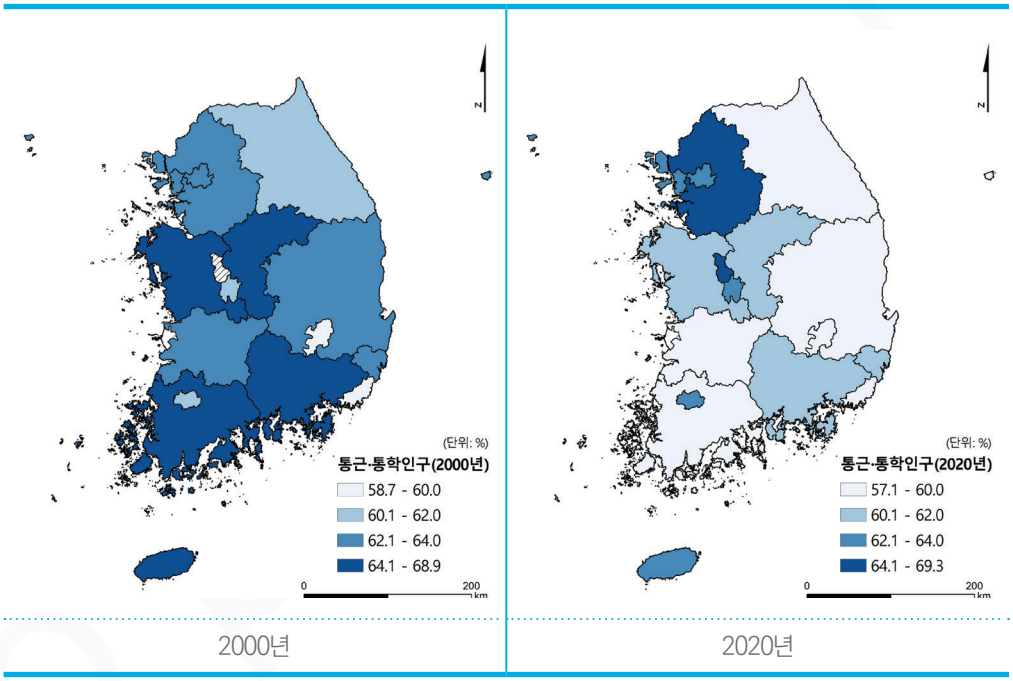


그림 12-1. 시도별 통근·통학인구 비율(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다음은 통근·통학인구의 연령별 특성과 그 변화이다(표 12-2, 그림 12-2). 10대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다. 12~14세 인구는 모든 시점에서 약 99%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으며, 15~19세도 85% 이상이 통근·통학을 한다. 15~19세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1995년 89.5%에서 2020년 85.1%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49세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10대보다는 낮지만, 59%에서 79% 사이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20대는 학교와 직장에 다니는 인구 모두가 존재하기에 60.9~79.1%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통근·통학인구 비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20~49세 인구는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로 통근·통학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30~40대 중에서는 1995~2010년에는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40~44세에서 가장 높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45~49세에서 더 높아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0대부터는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상승했다. 50~54세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1995~2005년 60% 미만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71%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0년 이후 55~59세의 통근·통학인구 비율도 62% 이상으로 2010년 이전 50~54세의 비율보다도 높다. 65세 이상에서는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모든 시점에서 21~25% 수준으로 유사하다.

표 12-2. 연령대별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1995~2020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2~14	99.6	99.6	98.9	99.0	97.5	99.6
15~19	89.5	88.8	89.4	87.7	88.3	85.1
20~24	62.8	62.0	70.5	79.1	74.1	65.8
25~29	60.9	63.9	67.0	77.8	75.5	72.6
30~34	59.1	61.7	62.8	73.0	74.4	74.2
35~39	61.7	64.6	65.0	73.0	73.8	72.9
40~44	62.9	65.1	66.3	76.3	75.9	73.7
45~49	61.5	62.7	62.9	75.9	76.7	74.2
50~54	58.7	57.0	57.1	71.2	73.6	71.6
55~59	53.6	49.2	47.8	62.5	65.3	64.1
60~64	29.9	41.2	37.4	48.6	51.4	48.9
65세 이상	-	23.2	21.6	25.1	23.6	21.0

주: 1995년의 60~64세는 60세 이상 연령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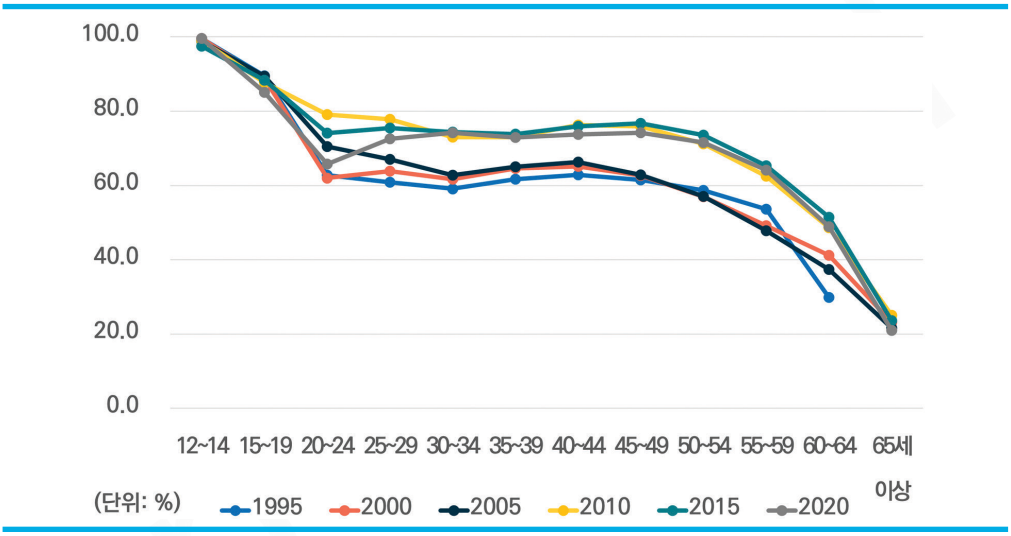


그림 12-2. 연령대별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199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유형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표 12-3, 그림 12-3).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10대에서는 같은 시군구 내 통근·통학 비율이 75% 이상이다. 즉 10대는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높지만,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10대의 비율은 1995년 75.8%에서 2020년 81.7%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대는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대부분 시점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이는 20대에는 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데, 대학이 고등학교에 비해 수가 적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대의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1995년 32.6%에서 2010년 37.2%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26.5%이다. 이는 30대의 31.0%와 40대의 28.2%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30대와 40대는 20대와 마찬가지로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지만, 20대와는 달리 같은 시군구 내로 이동하는 비율이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높다. 30대의 같은 시군구 내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1995년 37.0%로, 다른 시군구로의 비율인 23.5%보다 높다. 하지만 30대는 2005년 이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3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40대 역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1995년 21.8%에서 2020년 28.2%로 증가 추세이다. 같은 시군구 내 이동 비율과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 간 차이는 40대가 30대보다 크다. 이러한 증가세는 해당 연령대에서 비통근·통학인구 비율의 감소에 기인하며, 증가 폭은 같은 시군구 내 이동보다 다른 시군구로의 이동에서 더 크다.

표 12-3. 연령대별 통근·통학 유형 비율 변화(1995~2020년)

(단위: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995	비통근·통학	3.9	33.1	39.4	37.7	43.5	69.5
	같은 시군구 내	75.8	34.3	37.0	40.5	41.0	27.1
	다른 시군구	20.4	32.6	23.5	21.8	15.5	3.4
2000	비통근·통학	4.9	31.0	36.5	35.4	46.3	69.9
	같은 시군구 내	78.4	37.1	39.8	42.9	39.1	27.0
	다른 시군구	16.7	31.9	23.7	21.7	14.6	3.1
2005	비통근·통학	6.7	31.3	36.1	35.3	47.0	65.9
	같은 시군구 내	77.4	31.6	33.8	38.4	33.8	27.4
	다른 시군구	15.9	37.1	30.1	26.2	19.1	6.7
2010	비통근·통학	8.1	21.6	27.0	23.9	32.5	56.8
	같은 시군구 내	79.1	40.8	40.4	47.6	44.6	32.3
	다른 시군구	12.7	37.2	32.2	28.0	22.5	10.5
2015	비통근·통학	8.7	25.2	25.9	23.7	30.4	55.2
	같은 시군구 내	78.7	40.4	40.2	46.4	46.1	32.8
	다른 시군구	12.6	34.4	33.9	29.9	23.5	12.0
2020	비통근·통학	9.6	30.5	26.5	26.0	32.1	57.1
	같은 시군구 내	81.7	43.0	42.5	45.8	45.9	31.6
	다른 시군구	8.7	26.5	31.0	28.2	22.1	11.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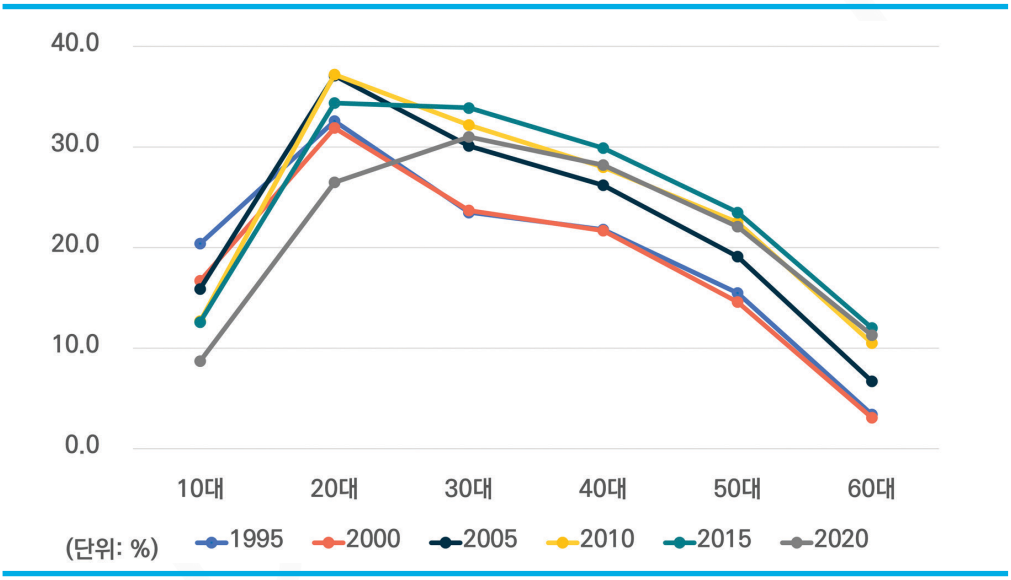


그림 12-3. 연령대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199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전국 시군구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다음과 같다(그림 12-4). 2020년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구는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역시 내의 자치구에서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다. 특히 부산의 자치구에서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은데, 동래구(30.0%), 수영구(28.2%), 북구(27.6%) 순으로 높다. 부산을 제외하면 대구 달성군(24.1%), 울산 중구(22.9%), 세종(21.8%)이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다.

2000년과 2020년의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경기 남부에서의 증가가 확인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 무안군과 경북 예천군에서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안군은 인근의 목포시와 광주광역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며, 예천군은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는 형성되었지만 관내의 고용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수도권에서 해당 기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남 천안시(4.6만 명)와 대전 유성구(4.0만 명)로 이는 수도권 교통 접근성의 향상과 주변 세종시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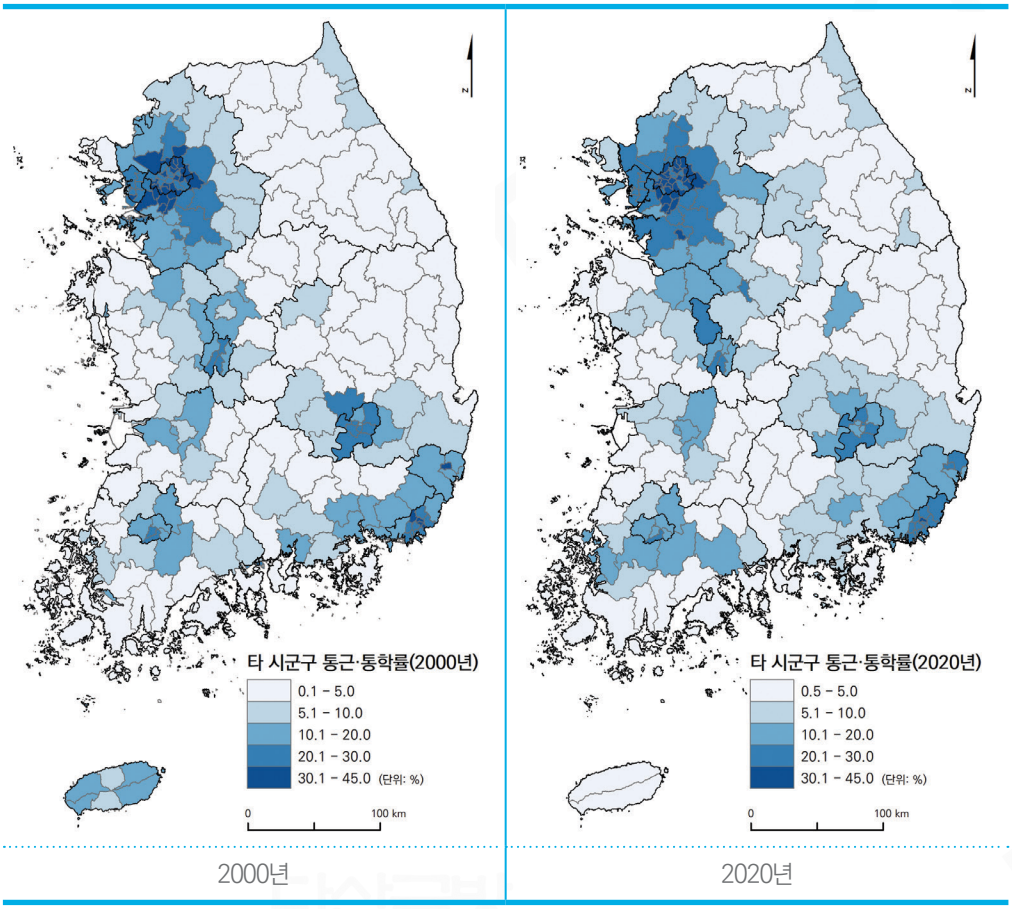


그림 12-4. 시군구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 지역별 주간인구 지수

통근·통학 유형 중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이동은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간의 차이를 유발한다.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에 100을 곱한 값이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면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고, 100보다 작으면 상주인구가 주간인구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1)]

1) 다만 주간인구와 상주인구는 통근·통학인구와 달리 12세 미만 인구를 포함한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 주간인구 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다(표 12-4, 그림 12-5).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 지역에서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초과한다. 이는 광역시에서 주변 도 지역으로 주간에 인구가 유출됨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인천과 대구에서 특히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 대구의 2005년 주간인구 지수는 96.0에서 2015년 95.2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에는 96.6으로 증가하였다.

표 12-4. 시도별 주간인구 지수 변화(1995~2020년)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서울	105.0	105.0	106.0	108.6	108.1	108.8
부산	98.0	98.0	98.0	98.4	98.3	99.4
대구	96.0	97.0	96.0	95.4	95.2	96.6
인천	96.0	95.0	95.0	95.3	92.2	94.2
광주	98.0	98.0	97.0	96.6	96.6	97.2
대전	98.0	99.0	98.0	98.2	97.9	99.0
울산	-	101.0	101.0	101.3	101.3	101.0
세종	-	-	-	-	105.4	93.4
경기	93.0	95.0	95.0	92.7	94.1	94.5
강원	101.0	101.0	101.0	101.3	101.5	100.5
충북	101.0	101.0	101.0	101.6	102.1	101.6
충남	103.0	104.0	105.0	104.5	105.7	103.1
전북	100.0	100.0	100.0	100.3	100.1	100.0
전남	101.0	101.0	102.0	102.9	102.9	102.2
경북	104.0	103.0	104.0	104.8	105.1	103.5
경남	102.0	102.0	101.0	101.0	101.0	100.0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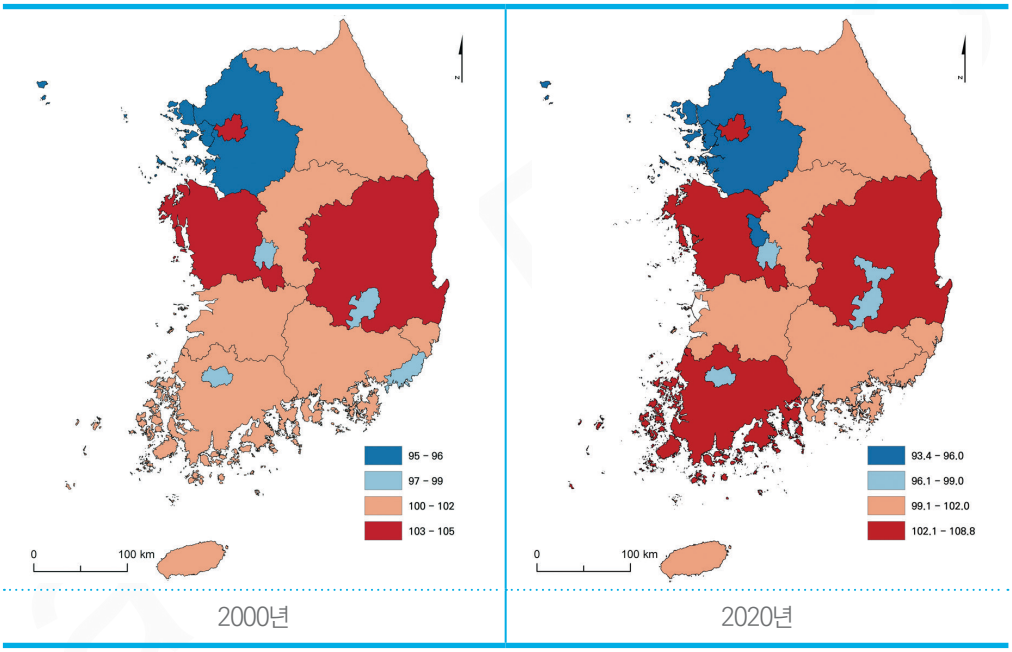


그림 12-5. 시도별 주간인구 지수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로의 통근·통학 이동이 우세하며, 그 경향성은 유지·강화되고 있다. 1995년 서울의 주간인구 지수는 105.0으로, 이는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5% 정도 더 많음을 의미한다. 즉, 서울은 통근·통학으로 유출되는 인구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다. 주로 경기(93.0)와 인천(96.0)에서 인구가 유입된다. 서울의 주간인구 지수는 2020년 108.8로 증가한 반면 경기의 주간인구 지수는 2005년 최고치인 95.0에서 2020년에는 94.5로 감소하였다. 인천의 주간인구 지수 역시 2020년(94.5)이 1995년(96.0)보다 낮아, 수도권 내에서 서울로의 통근·통학 집중이 유지·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5〉는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상위 15개 시군구, 즉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현저히 많은 지역을 보여준다. 모든 시점에서 서울 중구의 주간인구 지수가 가장 높다. 2020년 서울 중구의 상주인구는 11.8만 명인 반면 주간인구는 38.0만 명으로 상주인구의 3배 이상이다. 중구의 유입인구는 29.0만 명으로 유출인구 2.8만 명보다 훨씬 많다. 유입인구는 대부분 통근인구(27.3만 명)로 전체 유입인구의 94.3%를 차지한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외에도 부산 중구, 인천 중구, 대구 중구 등 대도시의 중심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모두 상주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중심업무지구가 있어 고용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도시 이외에도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경기 포천시 등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가·교육·주거 여건이 부족하여 다른 도시로부터의 통근인구가 많아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표 12-5. 주간인구 지수 상위 15개 시군구(1995~2020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서울 중구	395	서울 중구	292	서울 중구	354	서울 중구	348	서울 중구	373	서울 중구	321
부산 중구	249	서울 종로구	216	서울 종로구	251	서울 종로구	239	서울 종로구	266	서울 종로구	245
서울 종로구	244	부산 중구	191	부산 강서구	213	부산 강서구	214	부산 중구	195	서울 강남구	193
인천 중구	191	대구 중구	168	부산 중구	197	서울 강남구	184	부산 강서구	192	부산 중구	169
대구 중구	167	서울 강남구	166	대구 중구	186	부산 중구	180	서울 강남구	188	부산 강서구	151
서울 강남구	160	인천 중구	145	서울 강남구	182	대구 중구	169	대구 중구	166	대구 중구	145
서울 영등포구	150	광주 동구	141	인천 중구	171	인천 중구	163	인천 중구	158	서울 영등포구	143
광주 동구	140	서울 영등포구	138	서울 서초구	140	서울 서초구	142	서울 영등포구	146	서울 서초구	140
서울 용산구	135	부산 강서구	133	광주 동구	140	서울 영등포구	138	서울 서초구	141	인천 중구	136
대전 유성구	134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용산구	134	전남 영암군	134	전남 영암군	139	서울 금천구	129
서울 동대문구	126	서울 동대문구	130	서울 영등포구	133	광주 동구	129	광주 동구	132	전남 영암군	126
서울 서초구	125	서울 서초구	121	부산 동구	130	서울 용산구	125	서울 금천구	128	서울 용산구	125
경기 김포군	125	대전 유성구	120	경기 화성시	129	부산 동구	124	서울 용산구	127	경기 포천시	123
경기 광주군	121	경북 경산시	120	전남 무안군	125	경기 포천시	120	부산 동구	124	서울 마포구	121
전남 여천시	119	부산 동구	117	충북 청원군	121	충북 진천군	119	충북 음성군	124	경북 성주군	12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수도권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수도권 인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604.6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2%이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1989년부터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가 개발되었지만, 주거는 서울 주변으로 분산된 것에 비해, 교육 및 고용의 분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이희연·이승민, 2008). 시도별 주간인구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은 여전히 고용과 교육의 중심지로 주변에서 많은 통근·통학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직주 불일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며, 수도권은 직주 불일치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통근·통학 분포와 주간인구의 탐색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를 2020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00년과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본다.

1) 수도권 통근·통학 특성

2020년 기준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경기(64.2%), 서울(63.4%), 인천(62.8%) 순이다(표 12-1 참조).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에서는 화성시(68.7%), 시흥시(68.1%), 오산시(67.6%) 순으로 비율이 높다(그림 12-6). 서울에서는 서초구(66.9%), 강남구(66.0%), 송파구(65.8%), 인천에서는 연수구(66.5%), 서구(65.9%), 중구(63.9%) 순으로 비율이 높다. 이 지역들은 경제활동이나 학업으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0년과 2020년의 통근·통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지역 내 경제활동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2-6〉에서 2000년과 2020년

의 통근·통학인구 비율 지도는 동일한 급간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두 시기의 비율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2000년 대비 2020년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 강화군이며, 이어 경기 양평군과 여주시가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인천 중구, 경기 시흥시와 평택시에서는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도시개발과 맞물려 학업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10~40대가 많이 유입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그림 12-7). 2020년 기준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경기 과천시(41.3%), 의왕시(39.5%), 서울 광진구(36.1%) 순으로 높다. 그 외 서울과 인접한 경기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등도 30% 이상으로 높다. 서울에서는 광진구 외에도 관악구, 동작구, 은평구 등에서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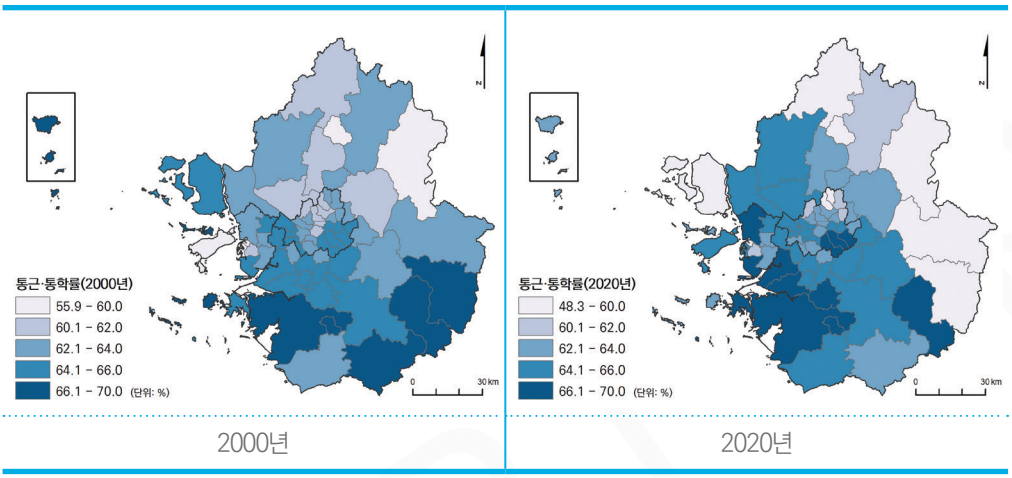


그림 12-6. 수도권 시군구별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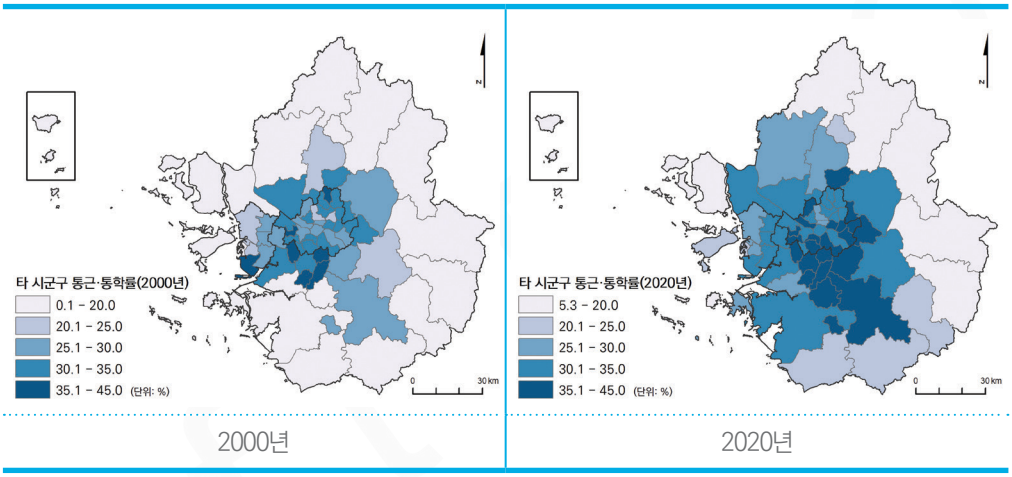


그림 12-7. 수도권 시군구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2000년과 2020년 사이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증가하였다. 2000년 다른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의왕시(43.1%), 과천시(43.0%), 군포시(38.4%)로 2020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수원시, 오산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는 2000년 대비 2020년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5%p 이상 상승했다.

1995~2020년 수도권 내 시도 간 통근·통학 지역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표 12-6). 2010년까지 서울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 이후로는 경기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서울 내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1995년 48.1%에서 2010년 38.0%, 2020년 3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경기 내 통근·통학 비율은 1995년 27.5%에서 2010년 36.9%, 2020년 41.7%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비율은 4% 내외,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은 9%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도 약 1%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이 통근·통학의 목적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경기와 인천에서는 시군구별로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에 차이가 있다(그림 12-8).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대체로 인천보다는 경기에서 더 높으며,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 시군에서 높다. 2020년 경기 하남시가 24.7%로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시(24.2%), 광명시(23.3%), 구리시(22.0%) 순으로 높다.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서울 남서쪽에 위치한 경기 시군에서는 감소한 반면 동쪽에 위치한 시군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서쪽에 위치한 경기 부천시와 안양시, 군포시에서는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경기 가평군과 양평군은 2000년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각각 2%대였으나, 2020년에는 각각 3.2%와 6.4%로 증가하였다. 경기 김포시는 2000년 12.6%에서 2020년 15.6%로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 남부에서 고용이 증가하면서 서울 남서쪽 시군의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도시철도와 같은 교통수단 확충으로 서울 동쪽과 서쪽으로 통근·통학 가능 구역이 확장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12-6. 수도권 내 시도 간 통근·통학 비율의 변화(1995~2020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서울 → 서울	48.1	42.9	39.2	38.0	35.0	33.3
서울 → 인천	0.6	0.5	0.6	0.6	0.5	0.4
서울 → 경기	4.0	4.3	4.2	3.6	4.1	3.7
인천 → 서울	1.2	1.3	1.2	1.2	1.3	1.1
인천 → 인천	9.2	9.1	8.7	8.9	8.7	8.8
인천 → 경기	0.7	1.0	1.1	0.9	1.4	1.3
경기 → 서울	8.2	8.6	8.8	9.0	8.9	8.8
경기 → 인천	0.6	0.6	0.8	0.9	0.8	0.9
경기 → 경기	27.5	31.7	35.4	36.9	39.3	4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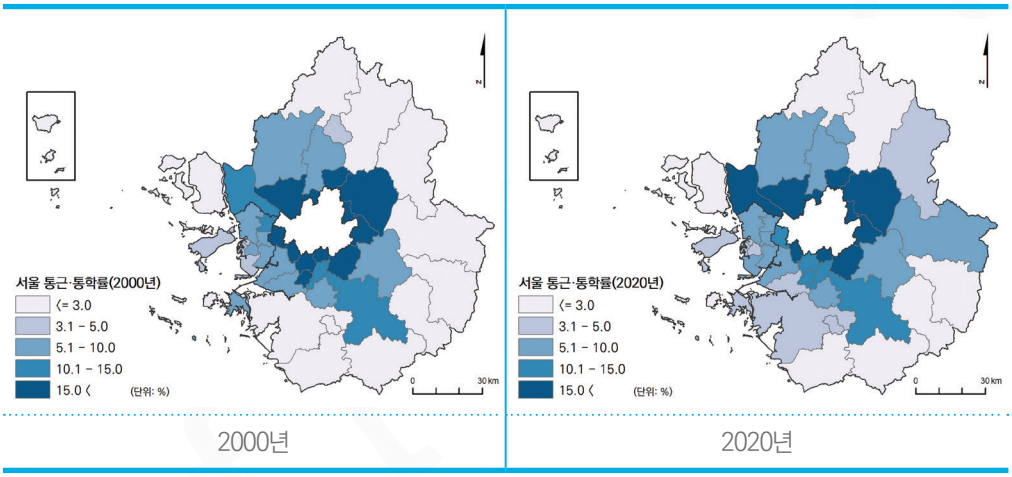


그림 12-8. 수도권 시군구별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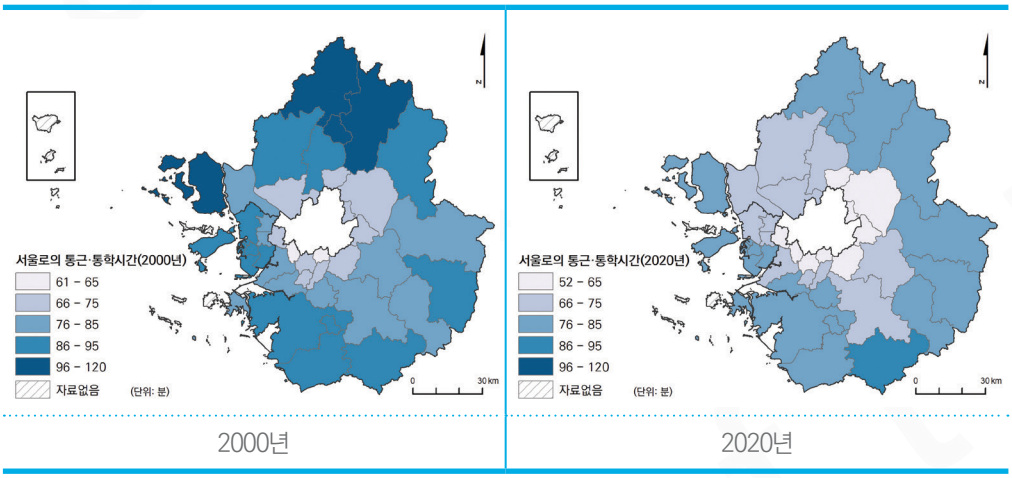


그림 12-9. 수도권 시군구별 서울로의 통근·통학 시간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교통의 발달로 인해 서울로의 평균 통근·통학시간은 수도권 내 모든 시군구에서 감소하였다(그림 12-9). 2020년 기준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은 경기 안성시로, 88.3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인천 강화군이 85분으로 길었다.

2000년 기준으로는 경기 연천군이 119.5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경기 동두천시 100.1분, 인천 강화군 99분 순이다.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경기 북부의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에서 통근·통학 시간이 약 20분 감소하여 가장 감소폭이 컸다. 다음으로 인천 동구와 서구에서 약 16분, 경기 파주시와 하남시도 약 14분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크게 증가한 양평군과 가평군도 통근·통학시간이 각각 6.1분과 11.5분 감소했다.

2) 수도권 주간인구

타 시군구로의 통근·통학인구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간의 차이를 유발한다.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시군구별 통근·통학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규모를 비교하여 살펴본다(그림 12-10).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규모가 동일한 경우 해당 비율은 1로 나타나며, 비율이 1보다 크면 유입인구가, 1보다 작으면 유출인구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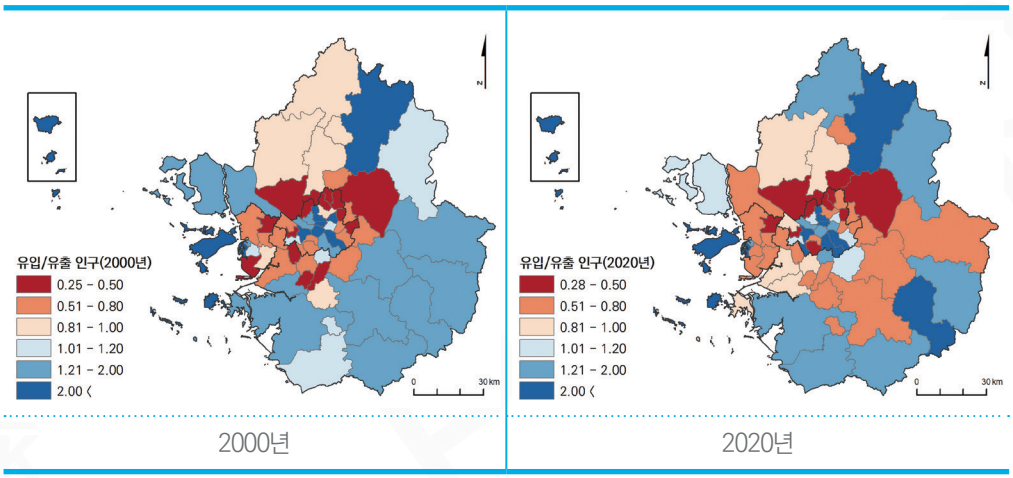


그림 12-10. 수도권 시군구별 통근·통학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와 서울과 인접한 시군구에서는 대체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 규모가 더 크다. 2020년 기준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은평구(0.28)와 서울 도봉구(0.36)이다. 이 지역의 통근·통학 유입인구는 유출인구의 약 30%에 불과하여,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 규모가 현저히 작다. 경기에서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0.38과 0.39의 낮은 비율을 보인다. 반대로 서울 중구는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이 10.4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종로구 7.5, 강남구 5.1 순으로 높다.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업무지구로 통근·통학인구 유입이 매우 크며, 고용이 집중된 지역이다.

2000~2020년 수도권 시군구별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 변화와 유사하게 서울 남부에 위치한 경기 시군을 중심으로 유출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경기 양평군, 용인시, 광주시는 2000년 통근·통학 유입인구 규모가 더 컸으나, 2020년에는 유출인구가 더 커졌다. 반대로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는 2000년에는 통근·통학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컸으나, 2020년에는 유입이 유출보다 커졌다.

통근·통학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차이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는 수도권 시군구별 주간인구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11). 서울 중심부와 그 인접 자치구에서 대체로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고, 서울 외곽이나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의 시군구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다. 2020년 수도권 시군구별 주간인구 지수를 살펴보면, 중구가 321.0으로 가장 높으며, 종로구(244.7), 강남구(192.7), 영등포구(142.8) 순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업무지구가 집중된 곳으로, 수도권 내 다른 시군구의 통근 목적지의 역할을 한다. 반면 서울 외곽의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는 주간인구 지수가 낮은 자치구로, 서울 내에서 통근·통학의 출발지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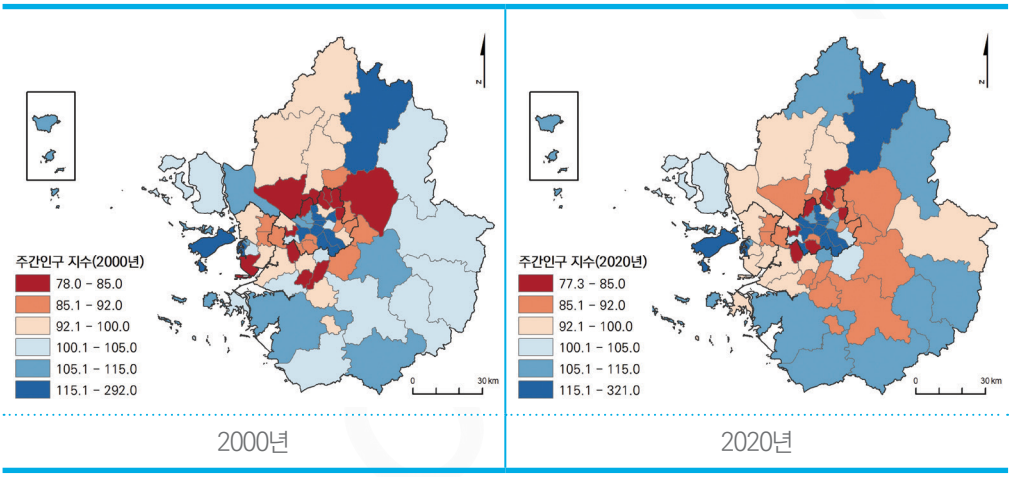


그림 12-11. 수도권 시군구별 주간인구 지수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000~2020년 주간인구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내 도시 구조 변화를 탐색할 수 있다. 2020년과 2000년의 주간인구 지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7). 주간인구 지수 변화가 0보다 큰 경우는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간인구 지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서울 금천구이며, 이는 가산디지털단지 개발과 더불어 주거지역에서 업무지역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간인구 지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서울 중구, 종로구, 강남구 등으로 2000년에도 주간인구 지수가 매우 높았던 지역이다. 반면 주간인구 지수가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기 광주시와 김포시로 주거지역이 새롭게 개발된 지역이다. 주간인구 지수의 변화 탐색을 통해 대체로 기존 업무지역의 역할은 강화되며, 주거지역은 서울 주변부로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동대문구처럼 업무지구와 상권의 쇠퇴로 주간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도 존재한다.

표 12-7. 수도권 주간인구 지수 변화 상하위 5개 시군구(2000·2020년)

구분	시군구	2000(A)	2020(B)	B − A
상승	서울 금천구	88.8	128.6	39.8
	서울 중구	292.0	321.0	29.0
	서울 종로구	215.7	244.7	29.0
	서울 강남구	166.4	192.7	26.3
	서울 서초구	121.2	140.2	19.0
하락	서울 동대문구	129.6	105.2	−24.4
	경기 김포시	114.2	94.1	−20.1
	경기 광주시	103.7	87.8	−15.9
	경기 용인시	104.1	90.0	−14.1
	경기 오산시	100.1	86.5	−13.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4. 맺음말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구이동 현상인 통근·통학, 이로 인한 주간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와 행정에서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는 상주인구를 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대도시의 발달과 교외화로 인해 직장과 주거지 간 불일치는 점차 증가하고,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간의 차이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통근·통학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간의 차이도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행정에 있어서 주간인구는 상주인구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 분석은 도시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도시의 중심업무지구와 같이 고용 특화 지역일 수 있지만, 전남 영암군이나 경북 성주군과 같이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부족한 지역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수도권의 신도시나 전남 무안군과 같이 주간인구 지수가 낮은 지역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같은 내용을 통근뿐 아니라 통학에 적용하여 교육 여건의 부족 정도와 주변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다. 이렇듯 통근·통학 양상 및 주간인구 지수의 분석은 지역 환경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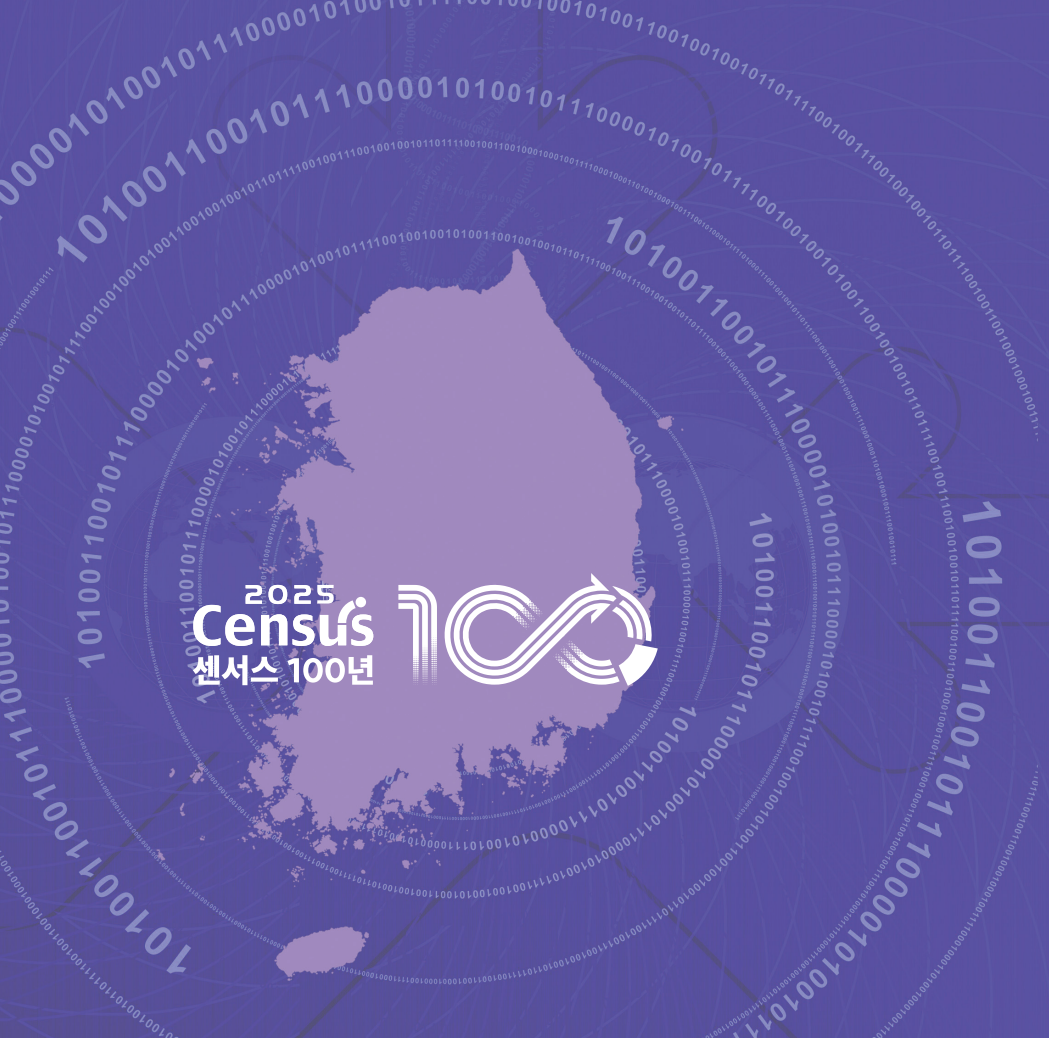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이 장에서 수도권에 대한 통근·통학인구 비율 및 주간인구 지수 변화를 살펴본 것과 같이, 통근·통학과 주간인구 분석은 대도시의 도시 구조와 그 변화를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 내 신도시 건설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신도시 개발이 대도시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수도권이나 기존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주거의 이동은 달성하였으나, 고용의 이동은 서울과 같은 기존 도시 중심에 머물러 통근·통학인구 비율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최근 장거리 통근·통학으로 인한 도시 문제 증가와 더불어 주거와 고용을 모두 확보하는 복합 신도시 개

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기존 도시에 대한 통근·통학 분석은 향후 신도시 개발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3장

혼인과 가구·가족

진미정



1. 머리말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혼인, 출생, 사망, 이동 등의 인구학적 사건도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구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가족관계는 혼인, 출산, 입양 등을 통해 맺어지며, 가족의 핵심 요소는 성별(젠더)과 세대이다.

가족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면서도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관계이므로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혼인이 가능한 연령, 성별, 친족 범위는 사회마다 다르며, 혼인에 수반되는 법적 절차나 권리와 의무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와 시대를 비교할 때는 제도적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가족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변화를 경험하였다. 근대적 의미에서 가족과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제도화되었다.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 특히 장자 계승 규범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1980년대까지 「민법」에 남아있다가 1991년 개정으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로 변화했다. 부계 8촌, 모계 4촌으로 구분된 친족 범위가 부계와 모계 모두 8촌으로 같아지고, 장남 우대 상속 규정도 개정되었다. 가족 제도 변화는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문과 상속을 아들이 이어받는 제도에서는 남아 선호가 뚜렷했다.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남아 선호를 약화시켰다. 1980년대에 자연 성비를 크게 웃돌았던 수치는1980년대에 자연 성비를 크게 웃돌았던 수치는 2020년 자연 수준에 가까워졌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와 가구를 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다. 가구는 가족과 혼용하기

쉬운 개념인데, 가족과는 다른 개념이다. 총조사에서 가구는 주거지를 공유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가구는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이다. 이는 주거지를 공유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여러 명이 함께 사는 다인 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 가족을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며 혼인과 가족, 그리고 가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은 가족 형성의 첫 단계로 중요하며,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비춰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 100년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혼인과 가족, 가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혼인상태의 변화

1)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의 혼인통계

대한민국에서 가족·친족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은 「민법」이다. 「민법」 제4편(친족), 제5편(상속)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르며, 이 법이 가족 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규율한다.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에 시행되었다. 혼인적령은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였는데, 2007년 「민법」 개정으로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되었다. 현재 혼인은 18세 이상 남녀 성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인구의 혼인상태를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으로 구분한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 있음으로 분류한다. 미혼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이혼은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도 포함한다.

반면 인구동향조사에 의한 혼인·이혼 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다(통계청, 2023b). 즉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와는 다른 법률혼 기준의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2)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비

192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1〉과 같다. 남북한을 모두 포함한 1925년 조사에서 여성의 혼인상태 분포는 유배우(76.0%), 사별(17.7%), 미혼(5.3%), 이혼(1.1%) 순이었다. 조혼 풍습이 존재했던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에는 15세 이상의 여성 대부분이 결혼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으며, 미혼이나 이혼 상태의 여성은 소수였다.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여성의 유배우 비율이 63.3%로 감소하였으며, 미혼 비율은 18.5%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혼 풍습의 약화와 더불어 한국전쟁으로 인해 혼인 시기가 늦춰진 결과로 해석된다(박기주·김성남, 2013). 1980년에는 여성의 미혼 비율이 28.7%까지 상승했고, 유배우 비율은 57.4%로 감소했다.

이후 유배우 여성 비율은 60% 내외를 유지하다 2015년 54.5%를 저점으로 2020년 55.2%로 소폭 증가했으며, 미혼여성 비율은 25%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이혼한 여성 비율은 1980년 0.6%를 기록한 후 2020년 6.3%까지 꾸준히 상승했고, 사별 비율은 12~13%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다.

남성의 혼인상태 분포가 1925년에는 유배우(72.1%), 미혼자(18.1%), 사별(8.5%), 이혼(1.4%) 순이었다. 당시 여성과 비교했을 때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은 공통적이나, 미혼 비율이 높고 사별 비율이 낮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기대수명이 짧아 사별자가 적고, 결혼에 대한 규범적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55년 조사에서는 남성의 혼인상태 비율도 크게 변하였다. 1925년에 비해 유배우 비율은 감소하여 63.6%를 기록했고, 미혼 비율은 31.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까지 이어져 유배우 비율은 57.4%, 미혼 비율은 40.4%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유배우(56.6%), 미혼(36.0%), 이혼(5.3%), 사별(2.1%) 순인데, 여성에 비해 미혼 비율은 약 10%p 높고 사별 비율이 약 10%p 낮은 현상은 유지되고 있다.

표 13-1. 혼인상태별 구성비 변화(1925~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여성					남성				
	인구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인구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25	5,754	76.0	17.7	1.1	5.3	6,066	72.1	8.5	1.4	18.1
1930	6,219	77.4	16.2	0.6	5.9	6,494	72.1	7.6	1.6	18.8
1955	6,495	63.3	16.7	1.5	18.5	6,143	63.6	3.9	1.0	31.5
1960	8,077	56.5	14.6	0.8	27.6	7,868	55.4	2.8	0.5	41.0
1970	9,266	59.1	15.2	0.9	24.9	8,927	59.8	2.4	0.4	37.4
1980	12,542	57.4	13.3	0.6	28.7	12,209	57.4	1.9	0.4	40.4
1990	16,266	58.8	12.5	0.9	27.8	15,991	59.3	1.8	0.7	38.2
2000	18,366	60.0	12.8	2.1	25.1	17,981	61.2	1.8	1.8	35.1
2005	19,298	58.5	12.9	3.2	25.4	18,758	60.0	2.1	2.8	35.1
2010	20,403	56.9	12.9	4.4	25.8	19,800	58.6	2.2	3.6	35.6
2015	21,513	54.5	13.1	5.7	26.7	21,211	57.4	2.1	4.5	36.0
2020	22,159	55.2	12.2	6.3	26.3	21,799	56.6	2.1	5.3	36.0

주: 1) 1925~1930년 수치는 남북한을 포함한 수치임.
2) 1940년 자료는 사별·이혼이 구분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고, 1944~1949년에는 혼인상태 관련 내용이 공표되지 않음.

자료: 2000년까지는 변화순(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다음으로 1970~2020년간 연령대별 미혼율[1]을 분석함으로써, 49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인구 비율인 생애미혼율에 대해 살펴본다.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1) 해당 연령까지 결혼하지 않고 미혼 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증가하였다(표 13-2). 1970년 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57.2%였으나 25~29세에는 9.7%로 급격히 감소하여 주로 20대 후반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이후에는 미혼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대부분의 여성이 34세 이전에 결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여 2020년에는 25~29세 여성의 82.0%, 35~39세 23.3%, 45~49세 9.8%가 미혼으로, 49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 비율이 열 명 중 한 명으로 증가하였다.

남성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생애미혼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 1970년에는 20~24세 인구의 92.6%, 25~29세 43.4%, 30~34세 6.4%가 미혼이었다. 남성은 주로 20대 후반에 결혼하기 시작하여 34세까지 대부분 결혼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25~29세 인구의 92.2%, 30~34세의 65.9%가 미혼으로, 이전보다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45~49세 미혼율도 20.5%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49세까지 미혼이다.

생애미혼율 증가는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져 혼외출산율이 낮다. 1989년 혼외출생은 5,211건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0.8%였고, 2019년에도 혼외출생은 6,974건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2.3%에 그쳤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김두섭·허나영, 2020).

표 13-2. 성별·연령대별 미혼율 변화(1970~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여성	미혼 인구	2,301	3,597	4,508	4,586	5,271	5,834
	15~19세	97.1	98.2	99.5	99.3	99.6	99.9
	20~24세	57.2	66.1	80.5	89.1	96.0	98.0
	25~29세	9.7	14.1	22.1	40.1	69.3	82.0
	30~34세	1.4	2.7	5.3	10.7	29.1	46.0
	35~39세	0.4	1.0	2.4	4.3	12.6	23.3
	40~44세	0.2	0.5	1.1	2.6	6.2	14.7
	45~49세	0.1	0.3	0.6	1.7	3.3	9.8
남성	미혼 인구	3,333	4,928	6,104	6,286	7,041	7,855
	15~19세	99.7	99.8	99.9	99.7	99.7	100.0
	20~24세	92.6	93.1	96.4	97.5	98.8	99.2
	25~29세	43.4	45.2	57.3	71.0	85.4	92.2
	30~34세	6.4	7.3	13.9	28.1	50.2	65.9
	35~39세	1.2	1.7	3.8	10.6	26.7	37.8
	40~44세	0.4	0.7	1.5	4.9	14.4	27.2
	45~49세	0.2	0.4	0.8	2.4	7.5	20.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가구와 가족

1) 용어 정의

인구총조사에서 가구 항목을 처음 조사한 것은 1955년이다.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구 조사가 포함되었으며, 가구를 분류하는 방식이나 지칭하는 용어는 조금씩 변화해 왔다. 〈표 13-3〉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25~1955년 조사에서는 혈연가구를 보통가구라고 하였고, 1960년에는 개인가구, 1966~1975년에는 다시 보통가구, 1980년부터는 일반가구라고 칭하고 있다. 비혈연가구도 1925~1955년에는 준가구, 1960년에는 집단가구, 1966~1975년에는 다시 준가구, 1980년부터는 집단가구라 부른다(김민경, 2002).[2)]

통상 가구와 가족에 관한 통계는 일반가구 기준으로 공표되는데, 일반가구에 관한 정의가 시대에 따라 변했기 때문에 통계치를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1960년 조사에서는 같이 사는 가사도우미 등 비혈연 동거인도 네 명까지는 혈연가구로 포함되었다. 김정화(2002)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미혼여성들, 특히 학력과 기술이 없는 10대 여성들은 '식모'로 불리는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주인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공장 등 다른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가사도우미 수는 감소하였다. 1970년 조사에서는 비혈연가구를 모두 준가구로 분류하였고, 1980년부터는 비혈연가구도 구성원이 5인 이하면 일반가구로, 6인 이상이면 집단가구로 분류되었다. 점차 혈연가족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 가구도 일반가구로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가구와 가족을 혼용하는 이유는 가구원이 가족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구원이 반드시 가족관계일 필요는 없다. 1960년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입주 가

2) 현재 가구통계는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인가구는 논외로 하였다.

표 13-3.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기준

구분	일반가구		집단가구	
1925~1955	보통가구		준가구	
1960	개인가구	혈연가구[1]	집단가구	집단시설
		1인 가구		비혈연 5인 이상
1966	보통가구	혈연가구	준가구	1인 가구(독립된 부엌시설 없음)
		1인 가구(독립된 부엌시설)		기타 준 가구
1970·1975	보통가구	혈연가구	준가구	집단시설 가구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1980~2000	일반가구	혈연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 가구
		비혈연 5인 이하		비혈연 6인 이상
		1인 가구		

주: 1) 비혈연 동거인 4인까지는 주인집의 동거가구원으로 조사함.
2) 외국인가구는 표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1925~1955년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60~2000년은 김민경(2002: 32).

사도우미는 가족이 아닌 가구원이었다. 현재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이고, 같이 살다가 그 가구를 떠나면 가구원이 아니게 된다. 반면 가족은 규범적인 관계이므로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나 세대 관계가 유지되면 가족으로 인정된다. 또한 가족의 범위는 개인과 국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일례로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는 '혼인과 파트너십 지위' 항목이 있어 혼인 비율, 등록 동거 비율, 비등록 동거 비율 통계가 포함된다. 이처럼 가족 개념은 범위가 유동적이고, 주거지에 상관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구와 가족 개념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2) 가구 수와 평균 가구원 수

1925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 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3-4). 본격적인 가구 조사는 195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인구 부문에서 기본 가구 통계를 제공하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조사 이전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1955년과 1960년 가구 수는 일반

가구와 집단가구를 모두 포함한 총가구 수이므로 시계열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통가구(일반가구) 수는 1925년 369만 가구에서 1944년 492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분단 이후 남한만 조사한 1955년 조사에서 보통가구 수는 379만 가구였고, 1970년에는 558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후 가구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0년에는 천만 가구를 넘었고, 2020년에는 2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가구 수 증가는 두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원인은 인구증가이고, 두 번째 원인은 가구분화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가구 수가 증가한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던 가구원이 독립하면 가구가 분화하여 가구 수가 증가한다. 〈그림 13-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와 가구 수는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구증가 속도는 완만해진 반면 가구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는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1925년부터 1970년대까지 평균 가구원 수는 5인 이상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4명대, 1990년대에는 3명대로, 2005년부터는 2명대로 낮아져, 2020년에는 2.3명이 되었다. 지난 65년 사이에 평균 가구원 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표 13-4. 일반가구 수와 평균 가구원 수 변화(1925~2020년)

(단위: 가구, 명)

구분	일반가구 수	평균 가구원 수	구분	일반가구 수	평균 가구원 수
1925	3,686,691	5.3	1980	7,969,201	4.5
1930	3,957,111	5.3	1985	9,571,361	4.1
1935	4,264,332	5.3	1990	11,354,540	3.7
1940	4,586,565	-	1995	12,958,181	3.3
1944	4,920,203	-	2000	14,311,807	3.1
1955	3,790,647	5.5	2005	15,887,128	2.9
1960	4,376,439	5.6	2010	17,339,422	2.7
1970	5,576,277	5.2	2015	19,111,030	2.5
1975	6,647,778	5.0	2020	20,926,710	2.3

주: 1) 1940년, 1944년 통계는 제시하지 않음.
2) 1955년, 1960년 통계에는 집단가구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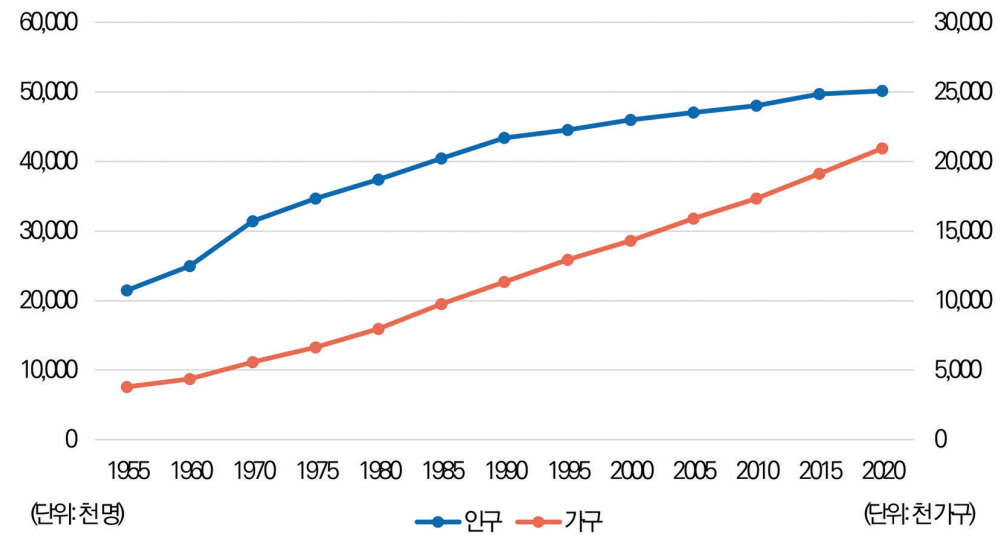


그림 13-1. 인구와 가구 수 변화(1955~2020년)

주: 1) 좌축은 인구(천 명), 우축은 가구(천 가구)임.
2) 인구는 내국인, 가구는 일반가구 기준임.
3) 1960년 인구에는 외국인, 1955~1960년 가구에는 집단가구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가구 규모와 세대 구성

가구 규모와 세대 구성은 지난 4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표 13-5). 1980년에는 6인 이상 가구가 2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인 가구는 4.8%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단 5년 만에 변화하여, 1985년에는 4인 가구가 25.3%로 가장 많았으며, 6인 이상 가구는 19.5%로 감소하였다. 2000년까지 1~4인 가구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였고, 5인 이상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가족을 상징하는 이미지였다. 그러나 출생 자녀 수 감소, 미혼 비율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4인 가구 비율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5년 31.7%였던 4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2.5%, 2020년 15.6%로 하락했다.

표 13-5. 일반가구 규모와 세대 구성 변화(1980~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일반가구 수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20,927
가구 규모(%)									
1인 가구	4.8	6.9	9.0	12.7	15.5	20.0	23.9	27.2	31.7
2인 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26.1	28.0
3인 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21.5	20.1
4인 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18.8	15.6
5인 가구	20.0	19.5	18.8	12.9	10.1	7.7	6.2	4.9	3.6
6인 이상 가구	29.9	19.5	9.8	5.5	3.3	2.3	1.8	1.5	0.9
세대 구성(%)									
1세대 가구	8.3	9.6	10.7	12.7	14.2	16.2	17.5	17.4	18.6
2세대 가구	68.5	67.0	66.3	63.3	60.8	55.4	51.3	48.8	44.0
3세대 가구	16.5	14.4	12.2	9.8	8.2	6.9	6.1	5.4	3.6
4세대 이상 가구	0.5	0.4	0.3	0.2	0.2	0.1	0.1	0.1	0.0
기타	6.3	8.6	10.5	14.1	16.7	21.4	25.1	28.3	33.8

주: 세대 구성의 기타에는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가 포함됨.
자료: 2000년까지는 김정석(2002); 2005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세대 구성 추세 역시 변화를 겪었다. 기대수명이 길어졌음에도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총기간이 짧아지고(진미정 외, 2014), 확대가족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세대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세대 가구는 1980년 8.3%에서 2020년 18.6%로 10.3%p 증가하였고, 가구 수로는 66만 가구에서 389만 가구로 약 5.9배 증가하였다. 2세대 가구는 1980년 68.5%에서 2020년 44.0%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가구 수로는 546만 가구에서 920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비율과 수 모두 감소하였다. 1980년 3세대 가구는 131만 가구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3.6%(76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4) 1인 가구

지난 40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보인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다양하다. 아래에서는 1인 가구의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대별 구성 변화를 통해 그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13-6).

표 13-6. 1인 가구의 성, 혼인상태, 연령대 구성비 변화(1980~2020년)

(단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별	남성	35.4	37.6	41.5	42.3	42.5	44.7	46.5	44.4	49.7
	여성	64.6	62.4	58.5	57.7	57.5	55.3	53.5	55.6	50.3
혼인상태	미혼	37.4	45.3	48.1	45.9	43.0	45.0	44.5	43.8	50.3
	유배우	15.9	15.1	12.3	11.3	12.0	11.6	12.9	11.2	13.2
	사별	40.3	34.4	33.8	36.0	35.1	31.6	29.2	29.4	20.5
	이혼	5.0	5.1	5.7	6.8	9.8	11.8	13.4	15.5	16.1
연령대	15~24	22.4	22.7	17.3	14.8	10.9	9.9	7.7	8.0	8.5
	25~34	20.5	24.2	29.4	26.7	24.8	24.4	22.2	17.6	21.0
	35~44	8.9	8.7	10.1	12.6	15.6	15.8	16.4	14.3	13.9
	45~54	12.0	9.9	9.3	9.7	11.1	13.5	15.4	15.2	14.7
	55~64	18.3	16.5	15.5	14.6	13.2	11.7	12.6	15.8	16.9
	65~74	12.9	13.2	13.4	15.2	16.0	14.9	13.8	14.1	12.7
	75~84	4.2	4.2	4.4	5.7	7.5	8.6	10.1	12.2	9.5
	85+	0.3	0.3	0.5	0.6	0.9	1.1	1.8	2.7	2.9

자료: 1980~1995년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2020년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1980년 1인 가구의 성별 비율은 남성 35.4%, 여성 64.6%로 여성이 29.2%p 높다. 그러나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남성 42.5%, 여성 57.5%로 15%p 차이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남성 49.7%, 여성 50.3%로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성비 변화는 혼인상태별 1인 가구 비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80년에는 1인 가구 중 사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20.5%로 감소했고, 미혼자 비율은 1980년 37.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50.3%에 이르렀다. 즉, 1인 가구 중 절반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이다. 초혼연령 증가가 1인 가구,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 중 이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5.0%에서 2020년 16.1%로 증가하여, 이혼율 증가가 1인 가구 증가의 또 다른 원인임을 보여준다. 이혼한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여성이 양육하는 비율이 남성이 양육하는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여성가족부, 2022), 이혼 후 남성은 원가족으로 돌아가거나 재혼하지 않으면 1인 가구로 살 가능성이 높다. 자녀를 양육한 여성도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에는 1인 가구로 살 가능성이 크다. 양육 여부에 따라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시점은 달라지지만, 남녀 모두에게 이혼과 1인 가구로서의 삶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의 변화는 1인 가구 구성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1980년에는 1인 가구 중 15~24세가 22.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연령대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8.5%로 감소하였다. 1인 가구 중 35~4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8.9%에서 2010년 16.4%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13.9%로 감소하였다.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75~84세로, 1980년 4.2%에서 2020년 9.5%로 증가하였다.

5) 여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통계는 통상적으로 부계 가부장제와 보편혼 규범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와 결혼이 당연시되는 보편혼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남편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여성 가구주의 수와 비율 변화는 이러한 규범이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성 가구주 통계는 1975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1980년 여성 가구주 가구는 11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4.7%였으며, 2020년에는 6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7%를 차지하여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13-7).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 원인은 혼인상태별 구성 비율의 변화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1980년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에서는 사별이 58.1%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사별 비율은 감소하여 2020년에는 25.9%를 차지했다. 반면 유배우, 미혼, 이혼 상태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사별한 여성 가구주 비율 감소는 사별 규모 자체의 감소보다는 유배우, 미혼, 이혼 여성 가구주 증가에 기인한다.

표 13-7. 여성 가구주 비율 및 혼인상태 변화(1980~202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여성 가구주 가구 수		1,169	1,501	1,787	2,147	2,653	3,485	4,497	5,666	6,845
여성 가구주 비율		14.7	15.7	15.7	16.6	18.5	21.9	25.9	29.6	32.7
혼인상태	유배우	22.3	22.7	17.7	15.7	16.6	17.9	24.0	24.7	32.8
	미혼	15.7	20.7	20.5	21.1	21.4	23.2	22.3	21.5	24.9
	사별	58.1	52.2	56.3	56.1	50.5	44.5	37.7	35.8	25.9
	이혼	3.9	4.3	5.6	7.1	11.6	14.4	16.0	18.1	16.5

주: 여성 가구주 비율은 일반가구 수 대비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여성 가구주 가구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도 1995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배우 여성 가구주 비율은 1980년 22.3%에서 1995년 15.7%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32.8%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에서 유배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가부장주의 규범 약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직장 등으로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는 여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혼한 여성 가구주 비율 역시 1980년 3.9%로 낮았으나 2000년부터 10%를 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16.5%를 차지했다. 미혼 여성 가구주 비율도 1980년 15.7%에서 2020년 24.9%로 증가했다.

4. 맺음말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된 이래 혼인과 가족·가구의 모습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인구와 가구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가구분화, 출생률 감소, 가구원 수 감소, 여성 가구주 증가 등 대부분 변화는 혼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초혼연령이 20대 초중반이던 시기에는 최종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통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1인 가구의 삶을 지속하는 청년인구가 늘어나면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 1990년까지 1% 미만이었던 45~49세 미혼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2020년에는 여성은 약 10%, 남성은 약 20%에 달한다.

혼인율 감소는 출생률 하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혼인관계 내 출산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어, 혼외출산이 드문 한국 사회의 특성상 혼인율 저하는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진다. 출생률이 낮아지면 평균 가구원 수도 감소하고,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진다.

한편 여성 가구주의 증가도 유의미한 변화다. 과거 사별 위주였던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미혼과 이혼인 비율도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와 가부장적 가족 규범의 약화를 반영한다.

지난 100년간 혼인과 가족, 그리고 가구는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법률혼에 국한하지 않은 혼인상태 관련 통계를 가구단위로 작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혼인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가족에 관한 통계가 미비하다. 이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혼인과 파트너십 지위' 항목을 통해 등록 또는 비등록 동거 비율이 제공되는 것과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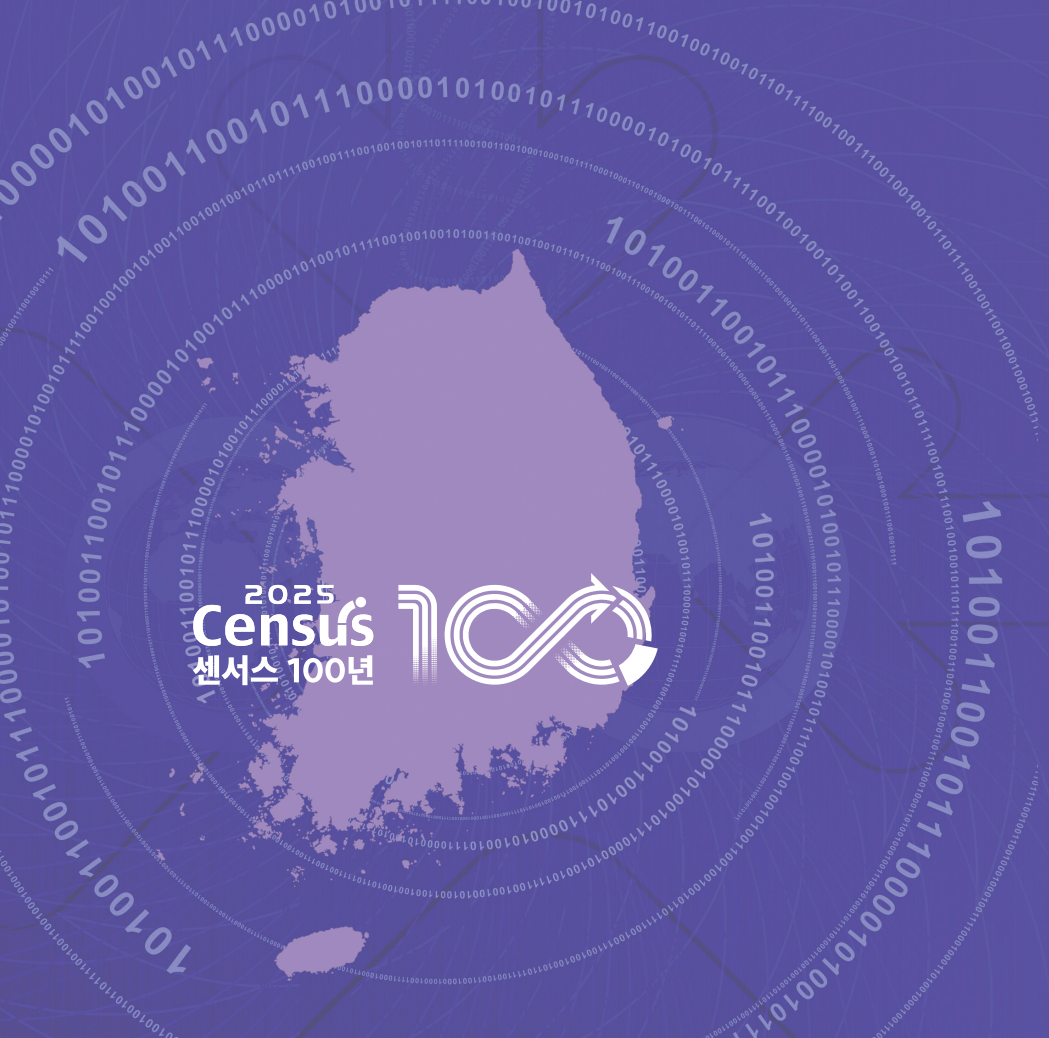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법률혼 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

는 것이 그 배경이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10년 전의 45.9%에서 19.3%p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혼인제도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개편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4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및 아동 양육 가구의 보육

정성미 · 양미선



* 정성미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양미선은 보육을 각각 집필했다.

1. 머리말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역할은 성별에 따라 분담되어 왔다. 남성이 생계를,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전통적 가족 형태는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라 불린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아동 보육에 대한 사회적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61.8%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65.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즉 경력단절이 손꼽힌다.

경력단절은 노동시장 참가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력 및 숙련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노동력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이 제정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추진되었고,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다.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한 여성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여성에게는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였다. 2013년부터 3년마다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 이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조사에도 경력단절 여성 관련 항목이 포함되었다. 2015년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조사항목이 신설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보육(돌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5년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25). 이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했다(보건복지부, 2009; 5).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정책 확대로 부모 부담이 경감되고, 기관 이용 연령이 하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요인으로 초등돌봄 부족이 꼽히면서, 초등단계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 또한 시행되었다. 정부는 초등학교 내 방과 후 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증설하였고,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더하여 만 6~12세 초등학생의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는 등 지역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갔다.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초등단계 아동을 위한 돌봄 유형이 다양화되고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 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보육을 함께 살펴본다.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자녀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녀 변수에 따른 육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아동 양육 가구의 특성과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보육 현황을 살펴본다. 보육 항목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실시되었기에, 이 장에서는 그 이후 자료부터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2.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경력단절

1) 여성 고용률 변화

여기서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고용률의 장기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여성 인구 대비 취업 여성 인구 비율인 여성 고용률은 1970년 37.8%였으나, 1985년 30.0%로 감소하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50.4%를 기록하였다.

분석 대상을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1970년 36.0%에서 1985년 29.4%로 감소했고, 2020년 49.2%까지 증가했다. 15~54세 기혼여성으로 분석 대상을 좁혀 고용률을 분석하면, 1970년 36.3%에서 1985년 31.2%로 감소했다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20년 64.0%를 기록하여 전체 여성(50.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용률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20년까지 10년 단위로 1세 단위 연령별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M자 곡선이 나타났다(그림 14-1). 결혼, 출산, 육아 등이 집중되는 30세 전후에서 여성 고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그래프에서 M자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준다. 고용상태에 있던 20대가 출산과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30대에 고용률이 낮아지고, 육아 이후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패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000년에는 M자 곡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고용률 저점이 31세에 나타났으며, 30% 후반 수준을 기록한 후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2010년과 2020년에 이르러서는 고용률의 저점이 우상향하며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은 2010년에 비해 M자 곡선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고용률 저점이 30대 후반에 60% 초반 수준으로 넓게 퍼져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40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4-2). 2000년에 비해 2020년으로 올수록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여,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표 14-1. 여성 고용률 변화(1970~2020년)

(단위: 명, %)

구분	여성 전체(15세 이상)			기혼여성 고용률	기혼여성 고용률 (15~54세)
	인구	취업자	고용률		
1970	9,399,474	3,549,890	37.8	36.0	36.3
1985	14,458,117	4,340,039	30.0	29.4	31.2
1990	16,006,625	5,118,099	32.0	30.1	32.1
2000	18,177,942	6,865,280	37.8	37.7	42.2
2010	20,099,900	9,396,064	46.7	46.7	56.0
2020	21,862,105	11,021,556	50.4	49.2	64.0

주: 1980년은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 1985년으로 대체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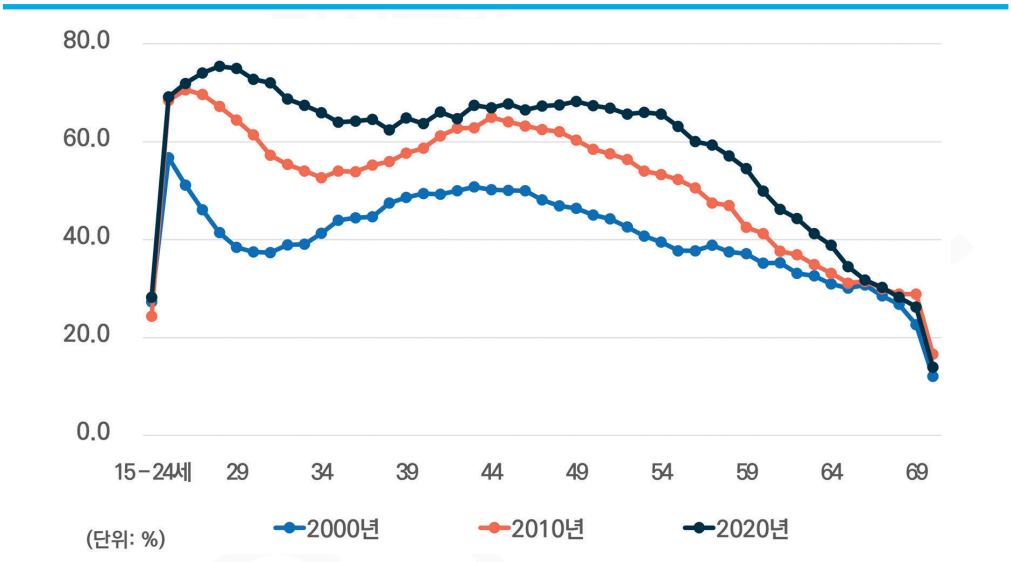


그림 14-1.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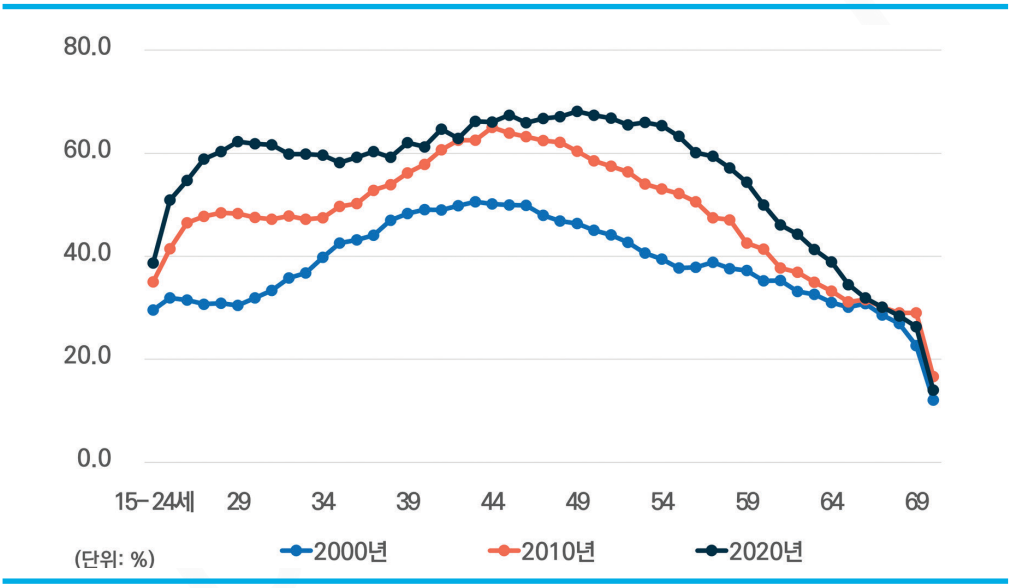


그림 14-2. 기혼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화(2000~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여성의 낮은 고용률, 특히 30~40대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는 출산·육아 및 자녀 돌봄에 따른 경력단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한 편이다. OECD 주요국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1)]

여성 고용률이 높은 OECD 주요국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도 대체로 높다. 특히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막내 자녀의 나이가 0~2세(영아)인 여성의 고용률이 70%를 상회한다(그림 14-3). 한편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 국가 중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 고용률이 60% 수준으로 낮은 국가도 막내 나이 3~5세(유아) 이상인 경우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주로 우리나라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일부 국가로, OECD

1) 이때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의 국제비교는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의 차이가 반영되어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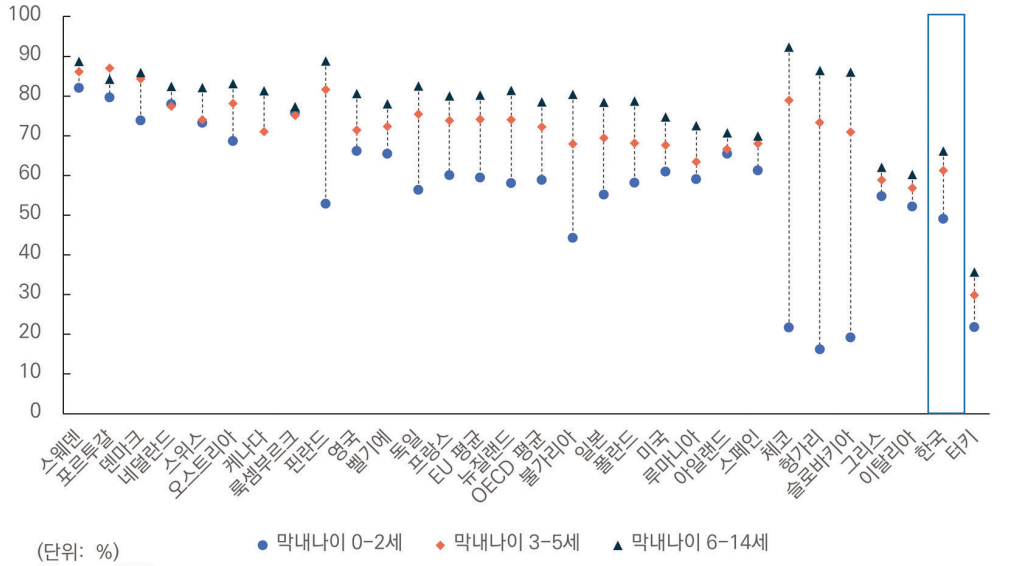


그림 14-3. OECD 주요국의 막내 자녀 나이에 따른 15~64세 여성 고용률(2019년)

주: 1) 한국은 15~54세 기혼여성, 일본은 15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며, 한국, 미국, 캐나다는 0~17세 자녀가 있는 여성임.
2) 자녀 나이 범주는 한국은 0~6세, 7~12세, 13~17세이고 캐나다는 0~5세, 6~17세, 미국은 0~2세, 3~5세, 6~17세임.
3) 일본은 2018년, 터키는 2013년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주요국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가 0~2세일 때 고용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2)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및 핵심연령층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으나 직장을 그만둔 20세 이상 기혼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문항은 2015년과 2020년에 혼인상태가 유배우, 사별, 이혼 중 하나인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기서는 두 시점의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020년 기준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여성은 약 969만 명이며, 이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82.2%인 796만 명으로 조사되었다(표 14-2). 2015년과 비교하면, 경력단절 여성인구는 약 100만 명 증가했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7.3%p 증가해 5년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력단절의 주요 사유는 결혼이 4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이 임신 및 출산(24.5%)이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출산 자녀 수에 따른 규모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표 14-3). 2020년 기준 출산 자녀가 2명인 경력단절 여성은 약 439만 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하였다. 2015년 대비 약 38만 명 증가했지만, 전체 경력단절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p 감소하였다. 반면 출산 자녀가 없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2015년 4.7%에서 2020년 7.9%로 늘어났다.

표 14-2. 2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변화(2015·2020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20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여성	9,289,005	100.0	9,691,937	100.0
경력단절 경험 있음	6,960,274	74.9	7,964,799	82.2
결혼	4,068,450	43.8	4,225,306	43.6
임신, 출산	1,978,022	21.3	2,372,860	24.5
양육(취학 전 아동)	498,555	5.4	228,876	2.4
교육(취학 자녀)	149,238	1.6	67,797	0.7
가족 돌봄(부모 등)	266,009	2.9	234,502	2.4
기타	-	-	835,458	8.6
경력단절 경험 없음	2,328,731	25.1	1,727,138	17.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4-3. 2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출산 자녀 수별 비중 변화(2015·2020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20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출산 자녀 0명	323,681	4.7	631,729	7.9
출산 자녀 1명	1,452,867	20.9	1,745,512	21.9
출산 자녀 2명	4,012,082	57.6	4,393,818	55.2
출산 자녀 3명	945,362	13.6	984,684	12.4
출산 자녀 4명	160,088	2.3	154,777	1.9
출산 자녀 5명 이상	66,194	1.0	54,279	0.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핵심연령층인 20~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 및 비중을 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2020년 기준 약 526만 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65.1%에 달한다(표 14-4). 이는 2015년 58.8%에서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 후 현재 취업 상태인 여성 비율은 37.9%로 2015년보다 증가한 반면 경력단절 이후 미취업인 비중은 27.2%로 감소했다. 이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도 활발해졌음을 시사한다.

표 14-4. 20~54세 기혼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변화(2015·2020년)

(단위: 명, %)

구분	기혼여성 전체	경력단절 여성 규모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중		
			현재 취업	현재 미취업		현재 취업	현재 미취업
2015	9,101,360	5,355,977	2,674,340	2,681,637	58.8	29.4	29.5
2020	8,079,636	5,263,679	3,062,233	2,201,446	65.1	37.9	27.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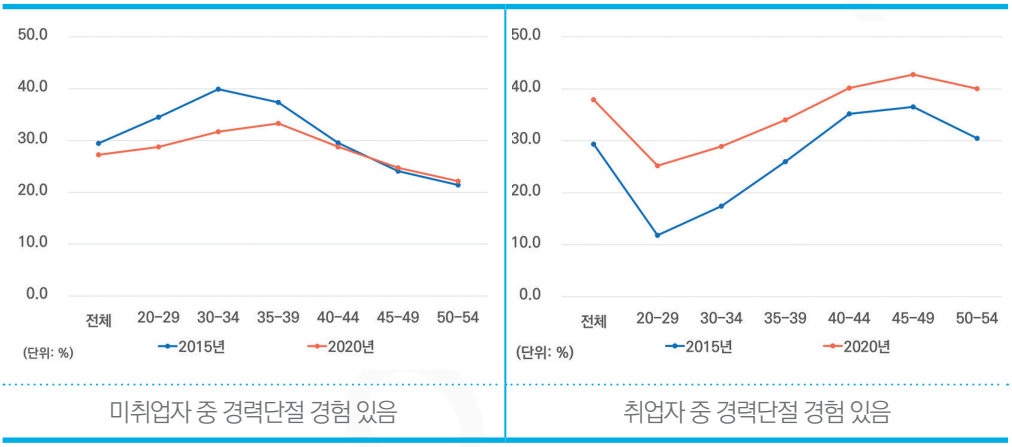


그림 14-4. 연령별·취업여부별 20~54세 경력단절 여성 비중 변화(201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연령별, 학력별, 자녀 수별로 취업 여부별 경력단절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20~54세 기혼여성 미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이 20~29세, 30~34세, 35~39세에서 2015년 대비 2020년에 낮아졌다(그림 14-4). 특히 30~34세는 2015년 39.9%에서 2020년 31.7%로 가장 크게 감소(8.2%p)하였다. 그러나 40~44세, 45~49세, 50~54세는 시기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

반면 20~54세 기혼여성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 대비 2020년 증가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경력단절을 겪더라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한 이들이 전 연령에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39세에서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경력단절 경험 후 재취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학력별 경력단절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54세 기혼여성 미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5년에는 고졸, 전문대졸, 중졸 이하, 대졸 이상 순서로 높았으나, 2020년에는 전문대졸,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순으로 높다(그림 14-5). 반면 20~54세 기혼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2015년에는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높았으나, 2020년에는 전문대졸,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순으로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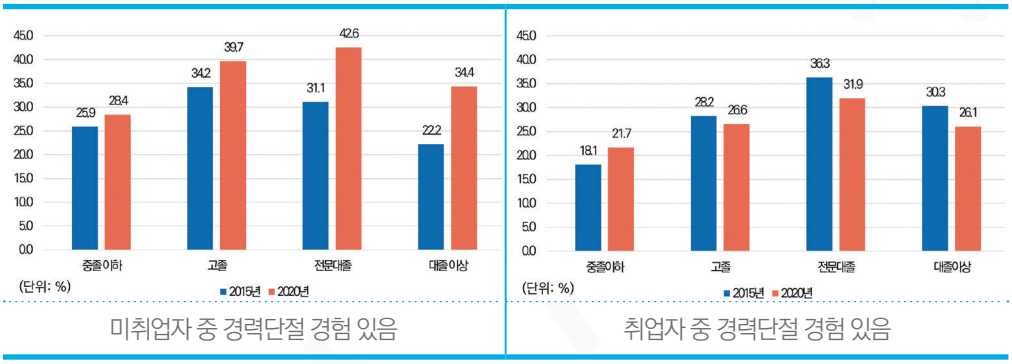


그림 14-5. 학력별·취업여부별 20~54세 경력단절 여성 비중 변화(201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분포를 전체 여성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5). 2020년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1%), 도매 및 소매업(16.3%), 제조업(12.8%) 순이다. 이는 전체 여성의 종사 산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2%), 도매 및 소매업(14.7%), 교육서비스업(12.2%) 순인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015~2020년 경력단절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소폭 증가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소폭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전체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분포의 변화와 유사하다.

표 14-5. 전체 여성과 20~54세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 변화(2015·2020년)

(단위: %)

구분	2015		2020	
	전체 여성	경력단절	전체 여성	경력단절
농업, 임업 및 어업	2.1	2.4	1.2	1.3
광업	0.0	0.0	0.0	0.0
제조업	12.9	14.9	12.0	12.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2	0.2	0.2	0.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	0.2	0.3	0.3
건설업	1.7	2.0	2.1	2.7
도매 및 소매업	15.7	18.3	14.7	16.3
운수업	1.6	1.5	1.9	1.9
숙박 및 음식점업	10.9	12.5	10.5	1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1.2	3.0	1.8
금융 및 보험업	4.8	4.2	4.8	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	2.9	1.7	2.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3	2.5	4.9	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5	3.3	3.7	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3	1.7	4.8	3.4
교육서비스업	13.4	10.3	12.2	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5	14.5	15.2	1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	1.6	2.3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7	4.7	4.3	4.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0.6	0.9	0.2	0.2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전체 여성과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2020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14-6). 2015년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비율이 전체 여성에 비해 약 5%p 낮았던 반면 2020년에는 그 격차가 3%p 내외로 줄었다. 이는 2015~2020년간 경력단절 여성 직업 구성비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3.5%에서 25.3%, 사무 종사자는 18.5%에서 23.4%로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같은 기간 전체 여성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구성비는 29.9%에서 28.1%로 감소하여 경력단절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표 14-6. 전체 여성과 20~54세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의 직업 분포 변화(2015·2020년)

(단위: %)

구분	2015		2020	
	전체 여성	경력단절	전체 여성	경력단절
관리자	0.7	0.7	0.4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9	23.5	28.1	25.3
사무 종사자	23.2	18.5	26.8	23.4
서비스 종사자	14.6	16.6	16.6	17.9
판매 종사자	14.0	17.3	12.9	1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	1.9	1.1	1.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3.4	4.4	3.0	3.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7	7.3	5.1	6.0
단순노무 종사자	6.8	9.9	5.9	7.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면, 전체 여성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다(표 14-7). 2015~2020년 임금근로자 비율이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는 72.4%에서 77.1%, 전체 여성은 80.2%에서 83.3%로 상승한 경향은 동일하지만 두 비율 간 격차는 컸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하락한 경향도 동일한데, 2020년에도 경력단절 여성(13.1%)이 전체 여성(9.6%)에 비해 높은 현상이 유지되었다.

표 14-7. 전체 여성과 20~54세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2015·2020년)

(단위: %)

구분	2015		2020	
	전체 여성	경력단절	전체 여성	경력단절
임금근로자	80.2	72.4	83.3	77.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1	13.8	9.6	13.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4	6.2	3.7	5.2
무급 가족 종사자	5.3	7.6	3.4	4.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보육

다음은 보육과 관련된 항목의 분석 결과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아동 보육 문항의 조사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아동을 12세 이하 인구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수는 2005년 763만 명에서 2010년 646만 명, 2015년 585만 명, 2020년 527만 명으로 지난 15년간 236만 명 줄었다.[2] 연령별로 보면, 영아(0~2세)는 2005년 기준 전체 아동의 19.4%였으나, 2015년 22.0%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7.3%까지 줄었다. 유아(3~6세)는 2005년 기준 전체 아동의 29.6%에서 2010년 27.6%로 떨어졌고, 이후 반등하여 2020년 31.0%를 차지한다. 초등 아동(7~12세)은 2005년 전체 아동의 52.8%를 차지했으나 2015년 46.7%까지 줄었고, 2020년에는 다시 51.7%까지 늘어났다. 이하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아동 양육 가구 특성

미혼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을 통제하지 않아 아동가구가 아닌 가구까지 포괄하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 가구 중 미혼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된 가구는 2005년 56.3%에서 2020년 41.2%로 크게 줄었다(표 14-8). 이는 혼인율 하락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무자녀 가구의 증가 영향으로 판단된다.

미혼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가 많았다. 이혼 등으로 부와 미혼자녀 또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005~2020년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부부·미혼자녀·부모로 구성된 3세대 가구 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 내국인 기준이다.

표 14-8. 미혼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된 가구 수 변화(2005~2020년)

(단위: 가구, %)

구분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미혼자녀+미혼형제자매	조부모+미혼손자녀	한조부모+미혼손자녀	부부+미혼자녀+부모	부부+미혼자녀+부	부부+미혼자녀+모	전체 가구 대비 비율
2005	6,692,040	269,358	1,123,900	71,704		62,832	146,703		585,273	56.3
2010	6,440,285	341,573	1,273,272	57,423	53,688	68,157	137,394	73,141	457,337	48.3
2015	6,546,785	344,316	1,542,046	35,126	50,233	63,760	124,850	63,508	380,431	45.6
2020	6,389,956	410,459	1,632,257	28,949	41,992	62,758	75,982	50,160	275,456	41.2

주: 1) 2005년 조사에서는 '한조부모+미혼 손자녀'는 '조부모+미혼 손자녀'로 분류함.
2) 2005년 조사에서는 '부부+미혼자녀+부와 부부+미혼자녀+모'를 '부부+자녀+한부모'로 분류함. 4세대 이상, 5세대 이상은 표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아동가구 수는 2020년 3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6.8%를 차지한다(표 14-9, 그림 14-6). 아동가구 비율은 2005년 30.9%에서 2010년 24.4%, 2015년 19.9%, 2020년 16.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혼인율[3] 감소와 무자녀 부부 비율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아동 1명을 둔 아동가구 비율은 2005년 48.2%에서 2020년 56.6%로 약 10%p 증가하였고, 아동 2명을 둔 아동가구는 45.7%에서 37.7%, 아동 3명 이상 아동가구는 6.1%에서 5.7%로 감소하였다(그림 14-7). 이는 혼인 시기가 늦어지면서 첫 자녀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후속 출산이 어려워지거나 포기한 유자녀 가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

3) 조혼인율은 2005년 6.5%, 2010년 6.5%, 2015년 5.9%, 2020년 4.2%로 하락했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표 14-9. 아동 수별 아동가구 수 변화(2005~2020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가구 수	아동가구 수	아동가구 비율	아동 수		
				1명	2명	3명 이상
2005	15,888,233	4,907,421	30.9	2,364,754	2,244,628	298,039
2010	17,341,966	4,225,451	24.4	2,290,500	1,708,793	226,158
2015	19,111,731	3,803,735	19.9	2,086,610	1,471,508	245,617
2020	20,926,710	3,523,343	16.8	1,995,457	1,327,930	199,956

주: 아동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아동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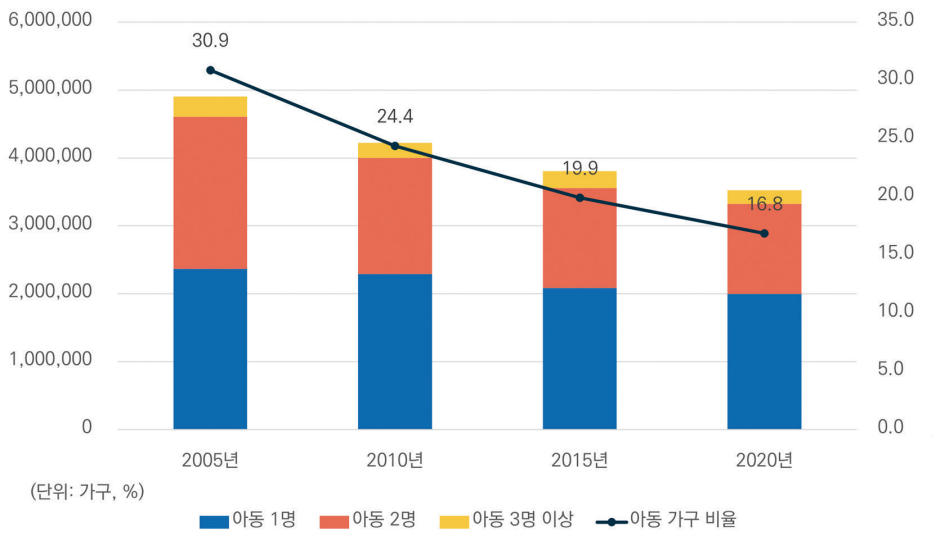


그림 14-6. 아동 수별 아동가구 수 변화(200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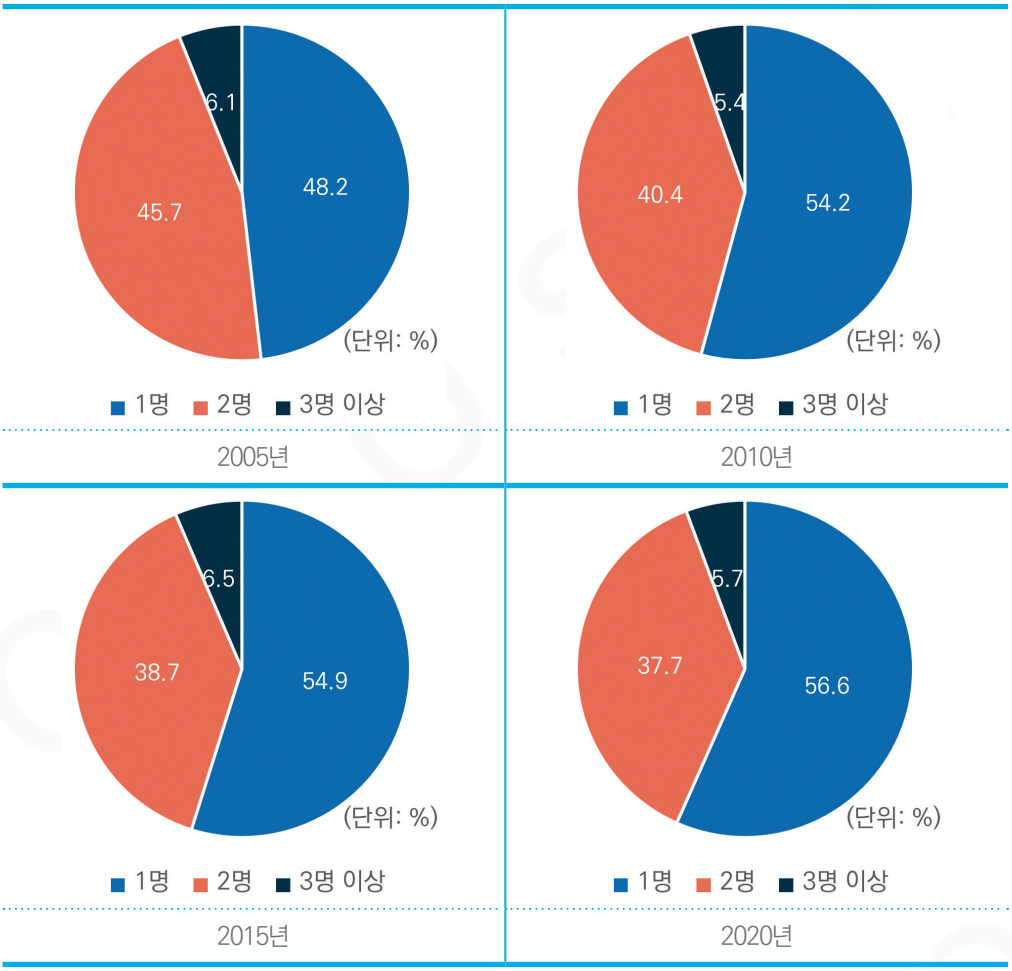


그림 14-7. 아동 수별 아동가구 비중 변화(200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2) 보육현황

12세 이하 자녀 돌봄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표 14-10, 그림 14-8). 부모 외에 조부모(친가, 외가), 어린이집·놀이방 및 유치원, 방과후 학교 등 공식 보육·교육 기관,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가사도우미, 이웃 등이 돌봄을 제공하며, 아동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비율은 2005년 65.7%에서 2010년 48.0%로 감소했다가 2020년 60.2%까지 다시 증가했다. 부모 다음으로 높았던 학원 비율은 2005년 32.7%에서 2020년 15.7%로 꾸준히 감소했다. 어린이집·놀이방 비율은 2005년 9.3%에서 2015년 20.7%로 증가했다가 2020년 17.8%로 감소했다. 2005년에는 주된 보육 유형이 부모, 학원, 어린이집·놀이방 순이었는데, 2020년에는 부모, 어린이집·놀이방, 학원 순으로 바뀌었다.

표 14-10. 보육 유형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가정 내 양육				기관 이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기타
	자녀의 부모	조부모 (친·외가)	기타 가족, 친·인척	가사 도우미, 이웃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기타 보육 시설	방과후 학교	학원 (예·체능 포함)		
2005	65.7	8.8	1.0	0.7	7.8	9.3	0.3	-	32.7	5.3	0.5
2010	48.0	10.2	1.3	1.0	8.6	16.9	0.6	8.5	26.5	4.4	0.1
2015	50.3	10.4	0.9	1.1	10.2	20.7	1.3	11.8	25.7	3.0	0.1
2020	60.2	12.0	1.4	1.2	8.7	17.8	1.1	5.9	15.7	4.6	0.1

주: 1) 복수응답임.
2) 2005년에는 '방과후 학교'가 보기에 포함되지 않음.
3)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놀이방'이 '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으로 통합하여 조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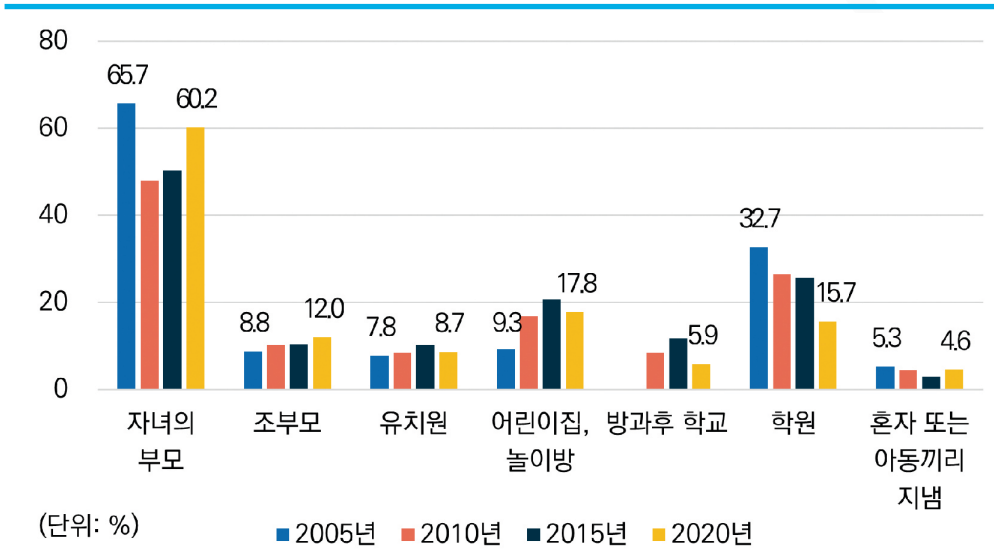


그림 14-8. 보육 유형 변화(200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다음으로 2005년과 2020년 사이 자녀의 연령대별 보육 유형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는 공식 보육·교육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증가했고 부모가 보육하는 비율은 감소했다(표 14-11). 영아는 부모 비율이 82.1%에서 72.2%로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놀이방 비율이 9.1%에서 34.7%로 크게 증가했다. 유아는 부모 비율이 65.7%에서 53.6%로 감소했고, 어린이집·놀이방 비율이 24.9%에서 37.3%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연령대 자녀를 보육하는 곳이 학원인 비율은 57.1%에서 30.3%로 크게 감소했는데, 조부모가 보육하는 비율은 7.4%에서 12.2%로 증가했다. 2005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과후 학교 비율은 2020년 11.1%를 기록했다.

어린이집 및 놀이방, 유치원, 기타 보육시설, 방과후 학교 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되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이 초등자녀 돌봄으로 지목되면서 방과후 학교 및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표 14-11. 자녀의 연령대별 보육 유형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가정 내 양육				기관 이용					혼자, 아동끼리 지냄	기타
		자녀의 부모	조부모 (친·외가)	기타 가족, 친·인척	가사 도우미·이웃사람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기타 보육시설	방과후 학교	학원 (예·체능 포함)		
2005	영아	82.1	12.1	1.4	1.7	-	9.1	-	-	-	-	0.2
	유아	65.7	9.2	1.1	0.6	25.1	24.9	0.4	-	10.8	1.8	0.2
	초등	59.9	7.4	0.9	0.4	-	-	0.3	-	57.1	9.3	0.7
2020	영아	72.2	12.0	0.7	2.2	-	34.7	-	-	-	-	0.1
	유아	53.6	11.5	0.8	1.2	27.7	37.3	0.1	0.8	0.9	0.2	0.1
	초등	60.1	12.2	2.1	0.8	-	-	2.2	11.1	30.3	8.9	0.1

주: 1) 복수응답임.
2) 자녀의 연령을 영아는 0~2세, 유아는 3~6세, 초등은 7~12세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이용률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0~2세는 OECD 평균이 36.0%인 반면 우리나라는 62.6%이며, 3~5세는 OECD 평균이 87.1%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94.0%로 더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표 14-12). 특히 우리나라 0~2세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발달한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영아반을 비롯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표 14-12. OECD 주요국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영아(0~2세)				유아(3~5세)			
	2005	2010	2015	2020	2005	2010	2015	2020
오스트리아	–	12.5	–	20.2	–	85.0	88.1	89.7
덴마크	–	–	–	55.3	–	96.9	98.0	97.6
핀란드	24.6	26.6	–	37.0	68.1	72.6	73.9	88.2
프랑스	43.9	47.9	52.3	58.1	100.0	100.0	100.0	100.0
독일	16.8	26.8	–	39.2	87.6	94.2	96.0	93.7
이탈리아	27.3	23.3	29.5	26.4	–	–	94.9	94.6
일본	16.2	25.3	–	–	–	–	91.0	94.9
한국	–	38.2	52.5	62.6	–	84.6	91.9	94.0
뉴질랜드	–	–	–	45.6	–	–	93.8	88.7
노르웨이	32.7	52.6	–	58.3	87.7	96.2	96.7	97.0
스웨덴	–	46.5	–	47.6	–	–	92.7	95.0
영국	37.0	40.1	34.4	–	90.2	92.3	100.0	100.0
미국	–	25.8	–	–	66.3	65.8	66.6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4. 맺음말

이 장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자녀의 보육 유형 변화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진입하면서 여성의 고용률은 하락하며, 이는 출산·육아 및 자녀 돌봄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20세 이상)은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핵심연령층(20~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비중은 37.9%로 적었다. 경력단절 후 취업한 여성은 전체 여성 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인 비율도 다소 낮았다.

보육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간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지역별 격차를 보임에 따라 보다 면밀한 데이터 기반의 수급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과 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관련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여성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경력단절 여성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정책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통계는 여전히 부족하며, 2008년 경단법 제정 이후에서야 관련 조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는 경력단절 여성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로, 일·가정 양립과 유연근무제 관련 변수의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 주거환경과 부모의 보살핌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 조사를 체계화하여야 하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5장

고령인구의 삶: 사회참여, 활동제약 및 돌봄, 생활비 원천

석재은 · 강은나



* 석재은은 사회참여와 생활비, 강은나는 활동제약과 돌봄을 각각 집필했다.

1. 머리말

고령화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다.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47.7%에 달해 인구의 거의 절반이 고령인구가 될 것이다.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72년 1,72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노년부양비도 같은 기간에 21.8에서 104.2로 증가하여, 생산인구 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구조에서 생산인구 1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구조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1]가 2020년 350만 명(총인구 대비 6.8%)에서 2072년 1,156만 명(총인구 대비 31.9%)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 향상 속도가 더뎌 활동제약을 경험하는 인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라 고령인구 내에서도 연령별, 계층별 격차가 크다. 고령인구의 욕구는 노화에 따른 활동제약에 대한 돌봄부터 은퇴 이후에도 사회참여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발달이 지연되면서 고령인구의 경제적 제약도 매우 큰 가운데, 빈곤율은

1) 고령인구는 6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주로 65~74세는 전기 고령인구,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인구로 분류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생활비는 고령인구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공적연금만으로 적정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은 매우 적다.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활동제약 관련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고령인구의 활동 양상을 분석한다.[2] 여기서 활동은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유지를 의미한다. 먼저,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양상을 분석해 생활상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제약과 인지기능 제약 수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포함된 활동제약 고령자의 돌봄 수급 및 돌봄제공자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소득원으로서 생활비 원천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활동제약에 따른 일상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OSIS에서 제공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제공하지 않는 항목은 10%와 2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표 15-1). 활동제약과 생활비 원천 항목은 2000년부터, 사회활동 항목은 2010년부터 조사되었는데, 세부 항목이 변경된 내용을 일치시켜 가용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연도부터 시계열 분석을 수행했다.

활동제약 관련 문항은 2020년에 전면 개편되었고, 활동제약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돌봄 필요 여부와 주간 돌봄제공자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이 장에서는 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활동제약의 변화, 생활비 원천, 그리고 사회활동을 분석한다.

2) 198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된 심신장애 문항은 이 장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5-1. 인구주택총조사의 고령인구 특성 관련 분석 문항(2020년)

구분	활동제약	활동제약 돌봄	생활비 원천	사회 활동
최초 조사	2000년	2020년	2000년	2010년
대상	(2000년) 60세 이상 → 5세 이상	(신규) 5세 이상	(~2015년) 60세 이상 → 20세 이상	20세 이상
응답 방식	복수응답	단수응답	복수응답(2개 이내)	복수응답
문항과 보기 (2020년)	활동제약 – 보는 것 – 듣는 것 –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 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 –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 활동제약 지속기간 (단수응답) – 6개월 미만/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간 돌봄제공자 – 배우자 – 자녀/자녀 배우자 – 부모/조부모 – 기타 가족/친인척 – 방문 요양보호사 – 주간보호시설 – 돌볼 사람이 없음 – 기타	– 본인의 일·직업 – 배우자의 일·직업 – 금융자산 – 공적연금 – 개인연금 – 부동산 등 실물자산 – 자녀의 도움 – 부모의 도움 – 국가·지자체 보조 – 기타	– 사회분야단체 – 경제분야단체 – 문화분야단체 – 정치분야단체 – 종교분야단체 – 지역단체 – 친목단체 – 교육단체 – 기타 – 없음

2. 고령인구 현황

1) 인구 특성

고령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비율은 2005년 39.9%에서 2020년 44.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성 비율은 60.1%에서 56.0%로 감소하였다(표 15-2, 그림 15-1). 연령대별 변화를 보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 비율이 2005년 32.5%에서 2020년 41.0%로 꾸준히 증가했다. 65~69세 비율은 2005년 38.7%에서 2015년 32.8%로 감소했다가 2020년 33.8%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2.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변화(2005~2020년)

(단위: 명, %)

구분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인구		4,315,415	5,283,620	6,408,951	7,858,775
성별	남성	39.9	40.9	42.5	44.0
	여성	60.1	59.1	57.5	56.0
연령대	65~69세	38.7	34.0	32.8	33.8
	70~74세	28.8	29.2	27.2	25.2
	75세 이상	32.5	36.7	40.0	41.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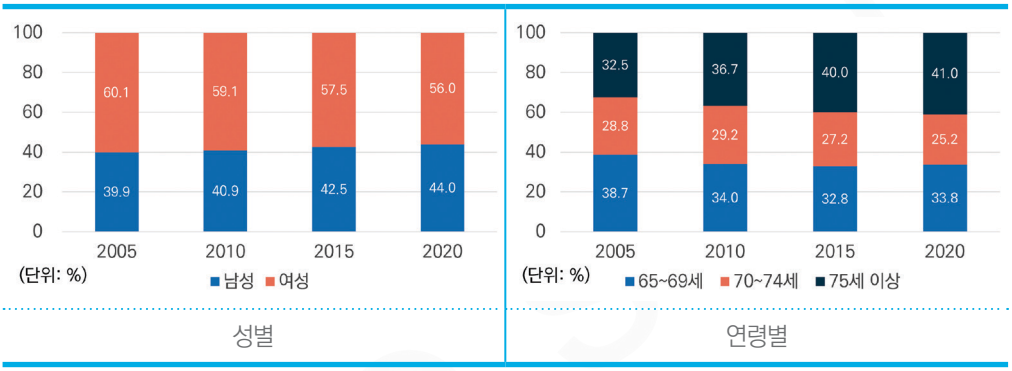


그림 15-1.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변화(200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 고령인구가 속한 가구의 세대 구성 변화

고령인구의 연령대를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구가 속한 가구의 세대 구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15-3〉과 같다. 2005~202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1인 가구, 부부 가구,[3] 2세대 가구 비중이 증가했고, 3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했다. 75세 이상 인구의 세대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은 22.2%에서 25.5%로 증가했고, 부부 가구 비율은 21.4%에서 30.3%로 증가했으며, 2세대 가구 비율도 23.4%에서 27.6%로 증가했다. 반면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은 31.8%에서 14.0%로 감소했다.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 또는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치관 변화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 비율은 2011년 27.6%에서 2020년 12.8%로 감소하는 등 고령 부부 가구 또는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3) 이 글에서 부부 가구란 부부 외 다른 구성원이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표 15-3. 고령인구의 세대 구성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2005	1인 가구	14.1	19.1	22.2
	부부 가구	38.7	35.6	21.4
	2세대 가구	28.6	21.7	23.4
	3세대 이상 가구	17.4	22.3	31.8
	기타 일반가구	1.3	1.3	1.2
2010	1인 가구	15.2	19.4	25.4
	부부 가구	39.1	38.6	25.4
	2세대 가구	29.6	22.8	23.2
	3세대 이상 가구	14.3	17.7	24.7
	기타 일반가구	1.8	1.5	1.3
2015	1인 가구	14.9	17.7	23.4
	부부 가구	39.3	38.5	26.0
	2세대 가구	32.1	27.3	27.1
	3세대 이상 가구	11.0	14.2	21.2
	기타 일반가구	2.6	2.3	2.3
2020	1인 가구	17.2	19.3	25.5
	부부 가구	42.9	43.0	30.3
	2세대 가구	29.7	26.0	27.6
	3세대 이상 가구	6.4	8.6	14.0
	기타 일반가구	3.7	3.1	2.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건강수명의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참여는 단체 및 기관 가입, 일자리 참여 등의 공식적 활동과 가족 및 친구 관계, 사회적 모임, 종교활동, 자원봉사, 각종 모임 등의 비공식적 활동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수영 외, 2015). 사회참여는 수명 연장에 따라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고령에 접어든 개인들이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정립하고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속감, 애착감 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Berkman et al., 2000).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가능케 한다. 이 절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회활동 문항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사회참여에 대해 살펴본다.

1)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

고령인구 중 어떠한 사회활동도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매우 높은데, 2015년 75.4%, 2020년 75.5%로 비슷하다(그림 15-2). 참여유형별 비율은 친목단체가 2015년 13.2%, 2020년 11.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종교분야단체가 같은 기간에 각각 8.8%, 8.6%로 나타난다. 문화분야단체에 참여한 비율은 각각 4.5%, 4.8%로 나타난다. 사회분야단체와 지역단체에 참여한 비율은 2% 내외이다. 경제, 정치, 교육 등 전문 분야 단체에 참여한 비율은 1% 미만으로 낮다. 거의 모든 유형에서 참여 비율은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표 15-4). 2015년과 2020년 모두 친목단체에 참여한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다. 친목단체에 참여한 비율이 남성은 2015년 19.0%, 2020년 16.7%인 반면 여성은 9.1%와 8.3%로 낮다. 문화분야단체 참여율도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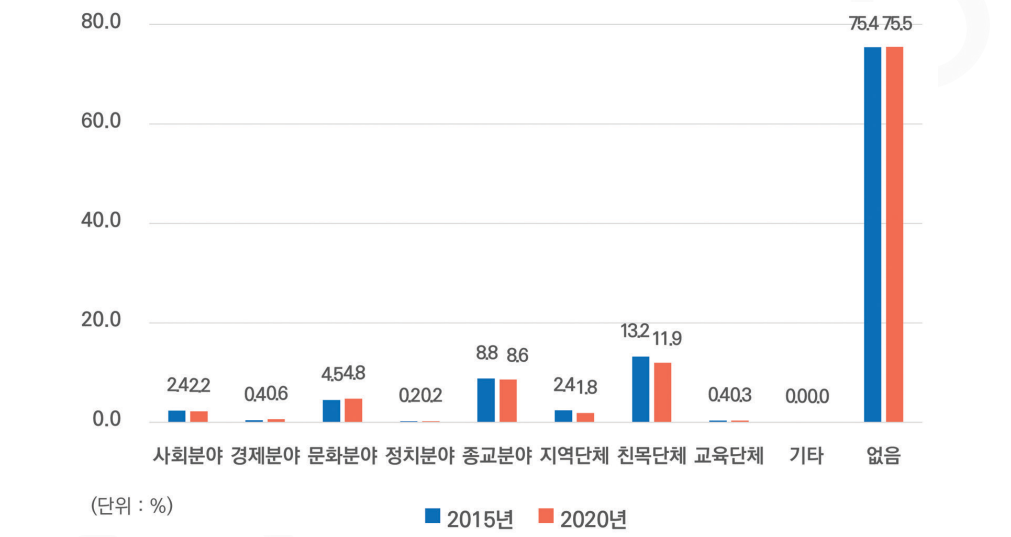


그림 15-2.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 변화(2015·2020년)

주: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5-4. 고령인구의 성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 변화(2015·2020년)

(단위: 천 명, %)

사회활동	2015			2020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고령인구	6,555	2,756	3,799	8,225	3,556	4,669
사회분야단체	2.4	3.1	1.8	2.2	2.7	1.8
경제분야단체	0.4	0.8	0.1	0.6	1.0	0.4
문화분야단체	4.5	5.6	3.6	4.8	6.2	3.7
정치분야단체	0.2	0.4	0.1	0.2	0.3	0.1
종교분야단체	8.8	7.4	9.8	8.6	7.3	9.5
지역단체	2.4	2.6	2.2	1.8	2.0	1.7
친목단체	13.2	19.0	9.1	11.9	16.7	8.3
교육단체	0.4	0.5	0.3	0.3	0.4	0.3
기타	0.0	0.1	0.0	0.0	0.0	0.0
없음	75.4	70.8	78.7	75.5	71.6	78.6

주: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이와 반대로 종교분야단체에 참여한 비율은 여성이 2015년 9.8%, 2020년 9.5%로 같은 기간 남성의 7.4%와 7.3%에 비해 각각 상대적으로 높다. 이외 분야의 단체 참여 비율은 매우 낮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한편 어느 분야의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여성이 2015년 78.7%, 2020년 78.6%로 남성의 70.8%와 7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2015년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회활동 유형에서 유사하다(표 15-5).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사회활동 참여 비율의 감소 정도가 크다. 친목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2020년 65~69세 17.7%, 70~74세 14.0%, 75세 이상 6.3%로 고령층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의 노화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5.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 변화(2015·2020년)

(단위: 천 명, %)

사회활동	2015				2020			
	전체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전체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고령인구	6,555	2,113	1,761	2,680	8,225	2,695	2,014	3,515
사회분야단체	2.4	3.6	2.5	1.3	2.2	3.3	2.4	1.2
경제분야단체	0.4	0.7	0.4	0.2	0.6	0.9	0.7	0.4
문화분야단체	4.5	6.6	4.9	2.5	4.8	7.1	5.5	2.6
정치분야단체	0.2	0.3	0.2	0.1	0.2	0.4	0.2	0.1
종교분야단체	8.8	10.2	9.3	7.4	8.6	9.7	9.5	7.2
지역단체	2.4	2.7	2.6	2.0	1.8	2.2	2.0	1.5
친목단체	13.2	19.6	14.6	7.3	11.9	17.7	14.0	6.3
교육단체	0.4	0.5	0.4	0.2	0.3	0.5	0.3	0.2
기타	0.0	0.0	0.0	0.1	0.0	0.0	0.0	0.0
없음	75.4	67.6	73.3	82.9	75.5	67.8	72.2	83.4

주: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사회활동 참여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사회활동 참여 여부는 다음과 같다(표 15-6). 2015년과 2020년 모두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혼, 미혼, 사별 순이었다. 어떠한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사별자의 경우 2015년 82.9%, 2020년 83.7%였으며, 같은 기간 미혼은 81.8%, 81.4%, 이혼은 78.7%, 79.1%, 유배우는 70.4%, 71.2%이다. 사별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이들이 다른 혼인상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는 사별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경우가 많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6.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 변화(2015·2020년)

(단위: 천 명, %)

사회활동	2015					2020				
	전체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체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고령인구	6,555	77	3,823	2,413	242	8,225	134	5,183	2,479	428
사회분야단체	2.4	2.3	3.0	1.3	2.3	2.2	2.1	2.7	1.2	2.1
경제분야단체	0.4	0.3	0.6	0.1	0.4	0.6	0.6	0.8	0.3	0.7
문화분야단체	4.5	3.4	5.6	2.6	4.3	4.8	3.3	5.9	2.5	4.6
정치분야단체	0.2	0.1	0.3	0.1	0.2	0.2	0.2	0.3	0.1	0.3
종교분야단체	8.8	10.6	9.2	8.2	8.2	8.6	9.6	9.1	7.8	6.8
지역단체	2.4	0.6	2.7	2.0	1.6	1.8	1.0	2.1	1.5	1.3
친목단체	13.2	4.3	18.0	6.3	9.5	11.9	4.4	15.5	5.4	8.7
교육단체	0.4	0.3	0.5	0.2	0.3	0.3	0.3	0.4	0.1	0.2
기타	0.0	0.1	0.0	0.1	0.0	0.0	0.0	0.0	0.0	0.0
없음	75.4	81.8	70.4	82.9	78.7	75.5	81.4	71.2	83.7	79.1

주: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4. 고령인구의 활동제약과 돌봄

노인돌봄체계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제약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과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2007~2008년 노인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4] 노인돌봄기본서비스,[5]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시범사업) 등이 도입되어 지금의 노인돌봄체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2008년 돌봄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신체기능이 저하된 중증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1년 치매[6]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법」이 제정되고, 2014년 치매특별등급,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자 및 경증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은 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로 통합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은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되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활동제약을 파악한다. 보는 것, 듣는 것,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스스로 옷 입기/목욕하기/밥먹기 등,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활동제약 문항의 보기 항목은 조사연도마다 꾸준히 변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여기서는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 노인이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활동지원을 제공하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3).

5)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3).

6) '치매'는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로 이뤄진 단어로, 병명에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치매 용어 개정 논의가 지속되었다. 21대 국회에 치매관리법 개정이 발의되어 인지저하증, 인지증 등 대안용어가 제시되었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용어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행 법률이 바뀌지 않아 많은 법과 정책에서 '치매'를 사용하고 있는 바, 본 장에서도 법률상 용어를 따라 '치매'로 부르기로 한다.

2005~2020년 변화가 크지 않았던 일상적 신체활동 제약과 인지기능 제약 관련 항목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신체활동 제약은 '스스로 옷 입기/목욕하기/밥 먹기' 항목,[7] 인지기능 제약은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항목[8]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활동제약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돌봄 필요 여부와 주간 돌봄제공자를 최초로 조사한 2020년 자료를 심층 분석한다. 다만 2005년은 자료의 한계로 70~74세와 75세 이상을 통합하여 분석했다.

일상적 신체활동 제약이 있는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5.9%에서 2020년 7.9%로 증가했다(표 15-7). 같은 기간 제약이 있는 비율이 여성과 후기 고령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각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신체활동 제약이 있는 여성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6.3%에서 2020년 9.7%로 증가했다. 75세 이상 중 제약이 있는 비율은 2010년 10.7%에서 2020년 15.0%로 증가했다.

인지기능에 제약이 있는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8.4%에서 2010년 7.0%로 감소했다가 2020년 8.7%로 다시 증가했다(표 15-8). 마찬가지로 여성과 후기 고령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2010년 8.2%에서 2020년 10.5%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75세 이상은 12.3%에서 15.8%로 증가했다.

표 15-7.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일상적 신체활동 제약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인구		5.9	5.8	6.6	7.9
성별	남성	5.4	4.5	4.8	5.6
	여성	6.3	6.7	7.9	9.7
연령대	65~69세	3.0	2.1	1.9	2.0
	70~74세	7.8	3.7	3.6	3.4
	75세 이상		10.7	12.2	15.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7) 신체활동 제약 항목에 2005년과 2015년에는 '집 안 돌아다니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8) 인지기능 제약 항목이 2005년, 2010년, 2015년에는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였다.

표 15-8.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인지기능 제약 변화(2005~2020년)

(단위: %)

구분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인구		8.4	7.0	8.3	8.7
성별	남성	6.9	5.1	5.8	6.4
	여성	9.4	8.2	10.1	10.5
연령대	65~69세	4.2	2.8	2.5	2.6
	70~74세	11.0	4.8	4.9	4.4
	75세 이상		12.3	15.2	15.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다음으로 2020년 기준 6개 활동제약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응답한 고령인구의 특성과 돌봄 수요를 살펴보았다. 활동제약이 있는 고령인구 비율은 23.9%이고, 활동제약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비율은 22.1%이다(표 15-9).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면서 간호나 수발 등의 돌봄이 필요한 비율은 12.7%로, 활동제약이 있는 고령인구의 약 절반이었다.

활동제약이 있는 고령인구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후기 고령인구가 크게 높다. 여성 고령자 중 활동제약이 있는 비율은 28.2%이며, 돌봄이 필요한 인구 비율이 15.6%로 필요하지 않은 비율(12.6%)보다 높다. 남성 고령자는 활동제약이 있는 비율이 18.3%로 여성보다 낮은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비율(9.0%)이 필요하지 않은 비율(9.3%)보다 낮다. 한편 75세 이상 인구는 활동제약이 있는 비율이 39.0%로 크게 높고, 돌봄이 필요한 비율도 24.0%로 높다.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활동제약이 심한 인구 비율이 65~69세는 3.2%, 70~74세는 5.8%로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

표 15-9. 고령인구의 성별·연령대별 활동제약과 돌봄 필요 비율 변화(2020년)

(단위: %)

구분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	지속기간		돌봄 필요 여부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필요	불필요
65세 이상 인구		23.9	1.8	22.1	12.7	11.2
성별	남성	18.3	1.6	16.7	9.0	9.3
	여성	28.2	2.0	26.2	15.6	12.6
연령대	65~69세	10.2	1.3	8.9	3.2	7.0
	70~74세	15.9	1.6	14.3	5.8	10.1
	75세 이상	39.0	2.3	36.7	24.0	15.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활동제약이 있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인구 104.7만 명의 주간(9~18시) 돌봄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5-10). 주된 돌봄제공자는 주간보호시설(35.2%), 방문 요양보호사(21.9%),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14.7%), 본인의 배우자(12.4%) 순이었고, 돌봄이 필요함에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9.6%였다.

주된 돌봄제공자는 남성과 여성, 전기와 후기 고령인구 간 차이가 컸다. 남성은 주간보호시설(30.3%), 본인의 배우자(29.2%), 방문 요양보호사(18.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8.7%) 순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주간보호시설(37.4%), 방문 요양보호사(23.6%),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17.3%), 본인의 배우자(5.1%) 순으로 높았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된 돌봄제공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크게 높았다.

한편 75세 이상은 주간보호시설(36.9%), 방문 요양보호사(22.8%),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16.1%), 본인의 배우자(9.5%) 순으로 높았다. 전기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65~69세와 70~74세는 모두 주간보호시설, 배우자, 방문 요양호보사,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순으로 높았다. 후기 고령인구(75세 이상)는 전기 고령인구(65~74세)에 비해 주간보호시설, 방문 요양보호사,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비율이 높고, 본인의 배우자 비율이 크게 낮다.

표 15-10.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 대한 주간(9~18시)의 주된 돌봄제공자(2020년)

(단위: 명, %)

구분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주된 돌봄제공자						
			배우자	자녀/배우자	친인척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시설	기타	없음
65세 이상 인구		1,047,376	12.4	14.7	2.1	21.9	35.2	4.0	9.6
성별	남성	320,406	29.2	8.7	2.0	18.0	30.3	3.7	8.1
	여성	726,970	5.1	17.3	2.2	23.6	37.4	4.1	10.3
연령대	65~69세	86,499	24.3	7.4	3.6	17.1	28.9	5.2	13.5
	70~74세	116,548	25.1	9.6	2.4	19.0	27.6	3.7	12.6
	75세 이상	844,329	9.5	16.1	2.0	22.8	36.9	3.9	8.8

주: 주된 돌봄제공자는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5. 고령인구의 생활비 원천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심각하다. 2020년 기준 한국 고령인구의 소득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고령인구의 생활비 원천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낮은데, 이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OECD, 2023).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사업 등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태완·이주미, 2022).

한국 고령자의 소득 구성은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모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그림 15-3). 일본,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수의 OECD 국가는 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소득비례연금, 자산조사연금 등)과 사적퇴직이전소득(퇴직연금, 퇴직급여, 사망수당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소득의 약 2/3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48.6%로 매우 높은 편으로 OECD 평균(25.5%)의 2배 수준이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핀란드와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고령자 소득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데 비해, 한국은 OECD 평균(57.3%)의 절반 수준인 30.0%로 가장 낮은 편이다. 자본소득 비중은 한국이 21.4%로 OECD 평균(9.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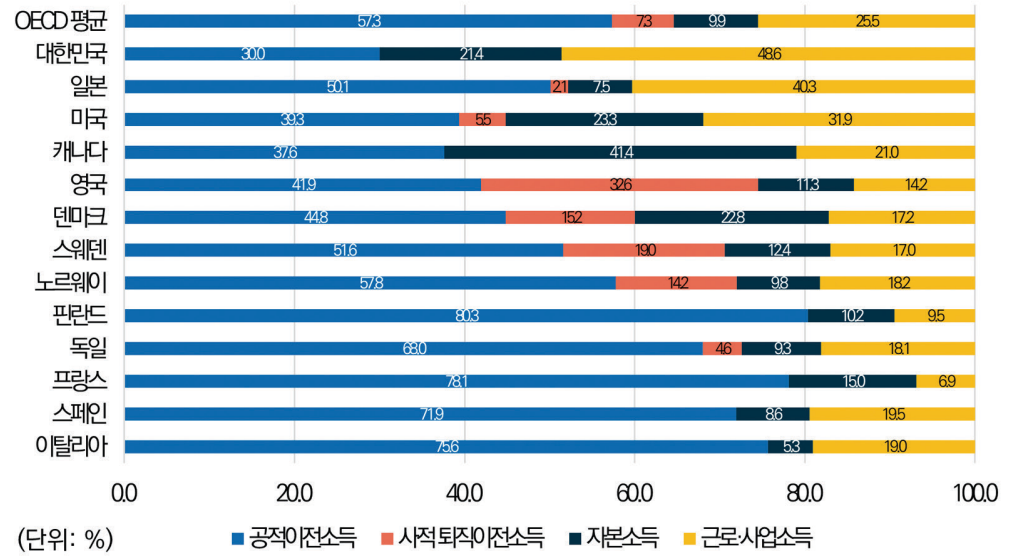


그림 15-3. OECD 국가의 고령인구 소득원 구성 비교(2020년)

자료: OECD(2023).

2010~2020년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구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5-11).[9]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구성비는 가구구조, 공적연금[10]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으며 크게 변화하였다. 2010년에는 '자녀의 도움(52.4%)',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24.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18.3%)', '공적연금(14.1%)' 순이었는데, 2020년에는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3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31.7%)', '자녀의 도움(29.7%)', '공적연금(26.4%)' 순으로 변화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은 2010년 24.9%에서 2015년 21.1%

9) 2020년부터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항목은 '본인의 일, 직업'과 '배우자의 일, 직업'으로 분리된 한편 '예금, 적금'과 '주식, 펀드, 채권 등'은 '금융자산'으로 통합되었고, '함께 사는 자녀'와 '따로 사는 자녀'는 '자녀의 도움'으로 통합되었다. 2020년에 삭제된 항목을 포함하여 응답 비율이 낮은 항목은 기타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10) 사회정책에서 공적연금으로 분류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2015년 조사표와 조사지침서에는 기초연금을 공적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중 어떤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2020년 조사표와 조사지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신설되었다.

로 감소했다가 2020년 33.2%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0~2020년에 '공적연금'은 14.1%에서 26.4%로 증가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는 18.3%에서 31.7%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녀의 도움'은 52.4%에서 29.7%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15-11. 고령인구의 생활비 원천 구성 변화(2010~2020년)

(단위: %)

구분		2010	2015	2020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전체	24.9	21.1	33.2
	본인	-	-	23.5
	배우자	-	-	9.7
금융자산	전체	11.5	8.9	6.2
	예금, 적금	11.2	8.7	-
	주식, 펀드, 채권 등	0.3	0.2	-
공적연금		14.1	23.2	26.4
개인연금		3.8	3.3	4.0
부동산 등 실물자산		5.4	5.6	5.0
자녀의 도움	전체	52.4	43.7	29.7
	함께 사는 자녀	21.5	13.6	-
	따로 사는 자녀	30.9	30.1	-
국가·지자체 보조		18.3	26.6	31.7
기타		3.0	1.4	0.7

주: 주된 2가지를 조사한 복수응답 문항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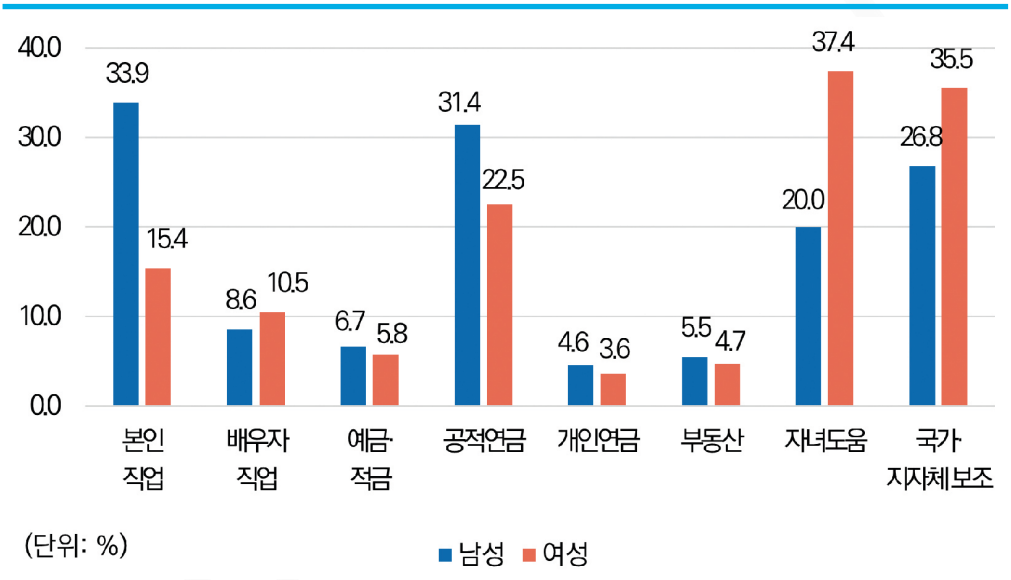


그림 15-4. 고령인구의 성별 생활비 원천 구성(2020년)

주: 주된 2가지를 조사한 복수응답 문항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2020년 세부 문항 기준으로 살펴본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15-4). 남성은 '본인의 일·직업(33.9%)', '공적연금(3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26.8%)' 순으로 비중이 높다. 반면 여성은 '자녀의 도움(37.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35.5%)', '공적연금(22.5%)' 순으로 비중이 높다. '본인의 일·직업'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18.5%p 높은데, '자녀의 도움'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17.4%p 낮다. 또한 '공적연금'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8.9%p 높은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8.7%p 낮다.

고령자의 연령별 생활비 원천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일·직업'과 '배우자의 일·직업'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자녀의 도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비율은 높아진다(그림 15-5). 65~69세는 생활비 원천 중 '본인의 일·직업'이 3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적연금이 27.4%로 높았다. 70~74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30.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적연금(29.7%)'이 높았는데, '자녀의 도움(25.3%)'이 '본인의 일·직업(2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75세 이상은 '자녀의 도움(44.1%)'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42.3%)'가 크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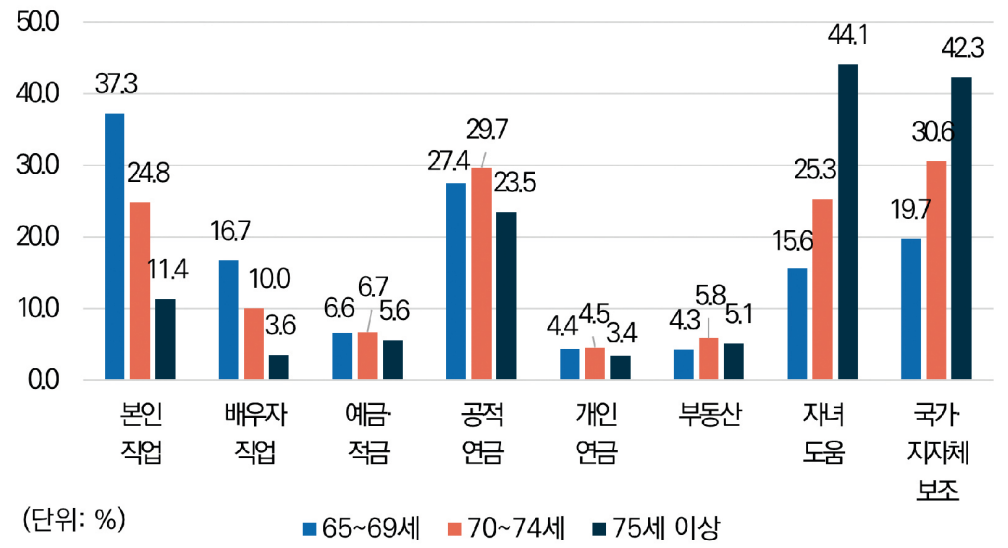


그림 15-5.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생활비 원천 구성(2020년)

주: 주된 2가지를 조사한 복수응답 문항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6. 맺음말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고령인구의 현황, 사회참여, 활동제약과 돌봄 그리고 생활비 원천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질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여성, 후기 고령층, 사별·미혼·이혼 고령층에서 사회참여 비율이 낮은데, 낮은 사회참여 정도는 관계적 빈곤으로 연결되기 쉽다. 고령인구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빈곤율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고령인구 및 후기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활동제약 인구 및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가족 돌봄이 고령자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으나 인구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 체계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후기 노년으로 갈수록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적 돌봄이 축소되고, 사적 돌봄을 공적 돌봄이 대체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현상도 발견된다.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 저하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가족의 사적 돌봄에 의존하는 고령인구 비중이 약 3분의 1이고, 돌봄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인구가 약 10%에 달한다. 저출산 심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노년기 가구 유형 변화와 돌봄 자원의 축소로 이어져 사적 돌봄 기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의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축소되는 사적 돌봄을 메꿀 수 있는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인프라 확대와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부양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대두된다.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고령자 내에서도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생활비 원천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과 전기 고령인구는 생활비 원천에서 본인의 일·

직업인 비율이 높고, 여성과 후기 고령인구는 자녀의 도움과 국가·지자체 보조인 비율이 높다. 고령자의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여성, 후기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소득보장정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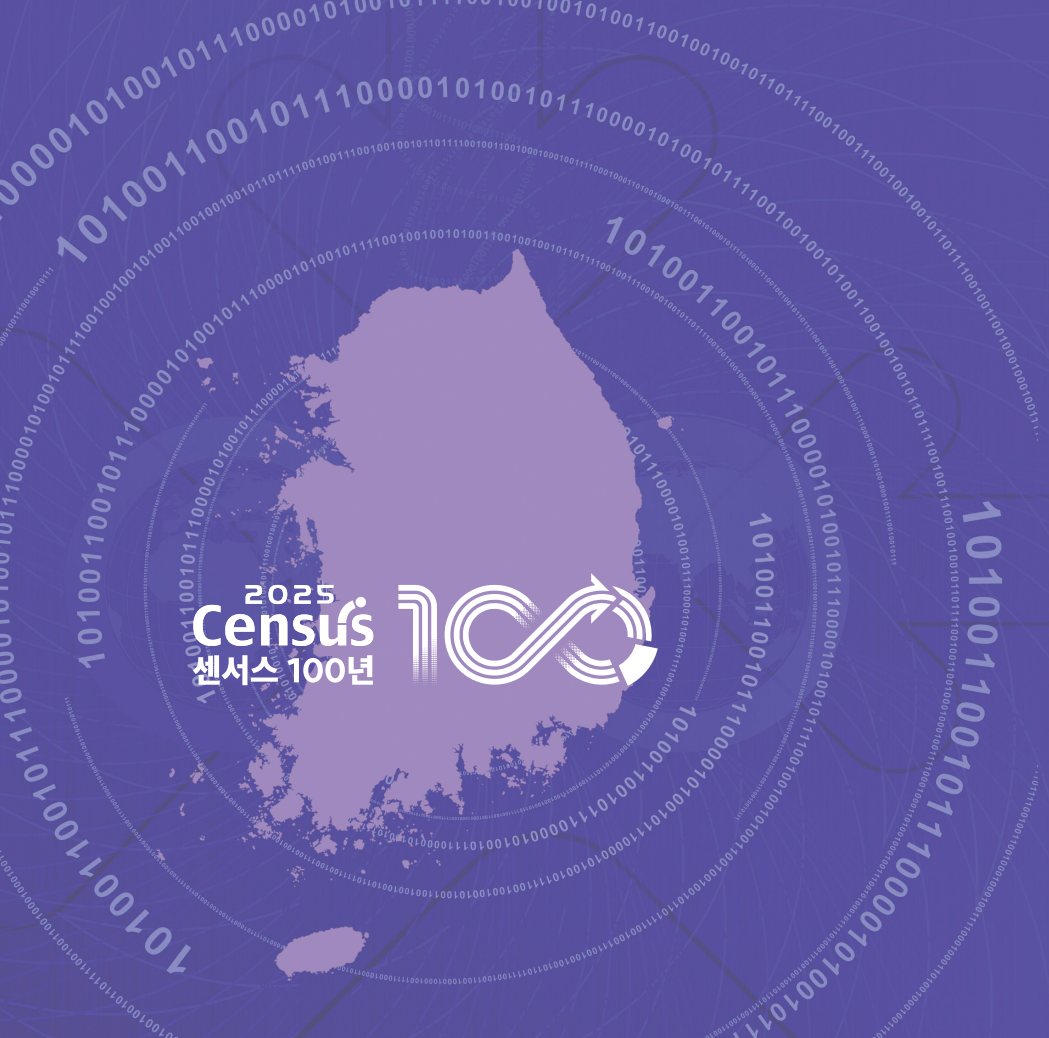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제약 관련 항목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시점별 항목의 변화가 커서 5년 주기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고령인구 천만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의 활동제약과 돌봄 수요 특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 항목을 선정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해야 향후 20~30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급증하는 고령인구의 특성과 돌봄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제약 관련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표적인 비공식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돌봄 시간, 돌봄 내용, 돌봄 부담, 돌봄 제약 등의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16장

교육

최은영 · 김기성



1. 머리말

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적 성취보다는 가족의 계층 상승 기대가 경합하는 장이었고,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를 이끈 동력이었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교육 관련 항목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을 거듭했다. 조사항목 변화를 통해 국가가 교육의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1960~1970년에는 문해율이 낮았고, 일부 계층만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문해 여부와 취학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후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교육정도는 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으로 세분되었고, 전공 분야 항목이 신설되었다. 과거 중등·고등교육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먼 이야기였다. 부모들은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땅을 팔고 소를 팔아가며 고된 노동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학비를 마련해 자식을 가르쳤다. 가난한 가족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남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다른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중등교육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대학 진학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대학 진학 여부보다는 대학과 학과의 서열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 및 관련 항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부 자료를 통해 공교육 기반 확대와 진학률 상승을 살펴본 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교육수준 향상,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 등에 대

해 살펴보았다. 세대 간 교육수준은 시도별, 서울의 구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학력은 졸업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 재학·중퇴 등은 고등학교 졸업(고졸)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시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60년 이후로 설정했다. 교육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 교차해 왔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인구주택총조사 교육 관련 조사항목의 변화

1960년 조사 이전에도 교육 관련 항목은 있었으나 안정적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국세조사는 1930년에 문해 여부를 조사했고, 1940년에는 처음으로 교육정도를 조사하였다. 1949년에는 학력을 조사하였으나 자료가 소실되었다. 1955년에는 불취학·졸업자·재학생으로 나누고, 불취학자에게는 국문 해독가능 여부, 졸업자와 재학생에게는 학교급을 조사하였다.

196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교육 관련 조사항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16-1). 문해 여부의 조사대상이 1960~1966년에는 모든 응답자였고, 1970년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불취학) 응답자였다. 1975~1980년에는 조사를 중단했다가 1985년에 마지막으로 조사했다.

교육정도의 세부 항목은 초등(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제 구분이 대체로 유지되었다.[1] 1966년에는 학제 개편에 따른 수학년수를 고려해 일제강점기의 구제중학교(5년제 또는 4년제)와 개정 교육법 이후 신제중학교(3년제)를 구분해 조사했는데, 1970년부터 이 구분은 사라졌다(오성철, 2015). 1966년 이후 초급대·전문대와 대학교를 구분하기 시작했고,[2] 1990년부터는 '대학 이상'을 대학교와 대학원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는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구분하고 있다.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에는 학교급별 교육기간과 학교급의 명칭이 자주 바뀌었는데, 1951년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대학 4년 학제가 정착되었다.

2) 4년제 미만인 고등교육과정은 초급대, 전문대, 대학(2·3년제) 등 여러 표현으로 조사·공표되어 왔으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대학교(2·3년제)'로 조사되었다. 이하에서는 4년제 미만을 '대학'으로, 4년제 이상을 '대학교'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공 분야 항목은 1980년과 2000년에 조사한 뒤, 2015년부터 다시 조사하고 있다. 2000년에는 대학 이상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만 조사했고, 2015년부터는 대학 이상 교육기관을 졸업·재학·수료·휴학·중퇴한 경우 모두 조사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2000년에는 13개 계열, 2015년에는 8개 계열과 기타, 2020년에는 10개 계열로 나누어 조사했다.

표 16-1. 교육 관련 조사항목의 변화(1960~2020년)

<table>
<tr><th>구분</th><th>교육정도</th><th>교육상태</th><th>문해 여부</th><th>전공 분야</th></tr>
<tr><td>1960</td><td>국민, 중학, 고등, 대학
– 수학년수로 조사</td><td>취학여부로 조사
(다닌다/안 다닌다)</td><td>읽고 쓸 줄
안다/모른다</td><td rowspan="3">–</td></tr>
<tr><td>1966</td><td>국민, 신제중*, 구제중*,
고등, 초대전문, 대학 이상</td><td rowspan="2">재학, 졸업, 중퇴,
안 다녔음</td><td>쓸줄 안다, 읽는다,
모른다</td></tr>
<tr><td>1970</td><td>국민, 중학, 고등, 초대·전문,
대학 이상</td><td>글을 읽고 쓸줄
안다/모른다</td></tr>
<tr><td>1975</td><td>안 다녔음, 국민, 중학, 고등,
초대·전문, 대학 이상</td><td rowspan="4">재학, 졸업, 중퇴</td><td>–</td><td rowspan="2">–</td></tr>
<tr><td>1980</td><td>안 다녔음, 국민, 중학,
인문고, 실업고, 초대, 대학</td><td>–</td><td>실업고, 초대,
대학 졸업자</td></tr>
<tr><td>1985</td><td>안 다녔음, 국민, 중학, 고등,
초대·전문, 대학 이상</td><td>(교육정도
‘안 다녔음’ 응답자)
글을 읽고 쓸줄
안다/모른다</td><td rowspan="3">–</td></tr>
<tr><td>1990</td><td>안 다녔음, 국민, 중학, 고등,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td><td>(폐지)</td></tr>
<tr><td>1995</td><td>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국민, 중학, 고등, 초급·전문대,
대학(교), 대학원</td><td>졸업, 재학, 휴학, 중퇴</td><td rowspan="4">–</td></tr>
<tr><td>2000</td><td rowspan="3">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초등,
중학, 고등, 대학(4년제 미만),
대학교(4년제 이상), 석사, 박사</td><td rowspan="3">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td><td>대학 이상
졸업·수료자</td></tr>
<tr><td>2005</td><td rowspan="2">–</td></tr>
<tr><td>2010</td></tr>
<tr><td>2015</td><td rowspan="2">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초등, 중학, 고등, 대학(2·3년제),
대학교(4년제 이상), 석사, 박사</td><td rowspan="2">대학 이상 졸업·재학·
수료·휴학·중퇴자</td></tr>
<tr><td>2020</td></tr>
</table>

주: 구제중과 신제중은 중학교 학제의 시대를 구분한 것으로, 구제중은 일제강점기의 중등교육과정인 고등보통학교(5년제 또는 4년제), 신제중은 해방 이후 교육개혁에 따라 정착된 3년제 중학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2. 공교육 기반의 확대와 교육수준의 향상

1) 학교와 학생 수의 변화

해방 후 한국의 공교육 기반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순차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초등학교 교육은 1948년, 중학교 교육은 1985년에 의무화되었다. 의무교육이 바로 무상교육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과거에는 초등학교도 매달 수업료 명목의 월사금을 내야 했다. 월사금은 육성회비로 명칭이 바뀐 채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1997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뀔 때 사라졌다.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의무가 아니지만 1990년대에 보편화되었고, 20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 고등교육(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도로 빠르게 상승했다.

1970~2020년 학교 신설이 빠르게 이루어졌다(표 16-2). 초등학교 수는 1980년 6,487개교로 가장 많았다가 2000년 5,267개교까지 감소했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120개교로 1990년과 비슷해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는 1970년 이후 줄곧 증가했는데, 2010년 이후로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1970~2020년간 중학교는 1,608개교에서 3,223개교, 고등학교는 889개교에서 2,367개교로 증가했다.

표 16-2. 학교급별 학교수 변화(1970~2020년)

(단위: 개교)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초등학교	5,961	6,487	6,335	5,267	5,854	6,120
중학교	1,608	2,100	2,474	2,731	3,130	3,223
고등학교	889	1,353	1,683	1,957	2,253	2,367

자료: 1970~1980년은 문교부 교육통계연보; 1990년은 교육부·중앙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 2000년은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0년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0년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표 16-3. 학교급별 취학률 및 상급학교 진학률 변화(1980~2020년)

(단위: %)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20
취학률	초등학교	97.7	100.5	97.2	99.1	98.2
	중학교	73.3	91.6	95.0	96.5	95.1
	고등학교	48.8	79.4	89.4	91.7	90.5
	고등교육기관	11.4	23.6	52.5	69.3	71.0
진학률	초등학교→중학교	95.8	99.8	99.9	100.0	100.0
	중학교→고등학교	84.5	95.7	99.6	99.7	99.7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27.2	33.2	68.0	79.0	72.5

주: 1) 취학률은 학생수와 통계청의 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산출됨.
2) 진학률은 해당 교육기관 졸업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임.
3)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0년까지는 합격자, 2020년은 등록자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학교급별 취학률과 진학률도 1980년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표 16-3). 취학률은 해당 학교급의 재학생 수를 취학적령인구로 나눈 비율이며, 진학률은 해당 교육기관 졸업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비율이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부터 100%에 근접했다.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 73.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이후 9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48.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11.4%에서 2010년 69.3%로 30년 사이에 약 60%p 상승했고, 2020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되어 71.0%를 기록했다.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201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취학적령인구(18~21세)의 70% 이상이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다. 한편 중학교 진학률은 1990년, 고등학교 진학률은 2000년을 전후하여 100%에 근접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2010년 79.0%까지 상승한 뒤, 2020년에는 72.5%로 하락했다.

1970년부터 10년 단위로 학교급별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6-4, 그림 16-1). 학교급별 학생 수 변화는 기본적으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지만, 교육기

회 확대도 큰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70년 574.9만 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269.4만 명으로 1970년 대비 절반이 되었다. 중학교 학생 수는 1970년 131.9만 명에서 1980년 247.2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해 2020년에는 131.6만 명으로 1970년과 비슷해졌다. 고등학교 학생 수는 1970년 59.0만 명에서 1990년 228.4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133.7만 명이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고등학교 학생 수는 197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데, 이는 1970년에 고등학교 진학이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4년제 미만) 학생 수는 2000년 91.3만 명, 4년제 대학교 이상(대학원 포함) 학생 수는 2010년에 236.7만 명을 고점으로 감소했다.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이 상승하면서 1970~1980년에는 고등학생 수, 1980~1990년에는 대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0년까지도 대학생 수는 증가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대학과 대학교 학생 수 합계는 1970년에는 초등학생 수의 약 3%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비슷해졌고, 2020년에는 초등학생 수보다 많다. 50년 동안 초등학생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고등학생 수는 2배 이상, 대학생 수는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표 16-4.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1970~2020년)

(단위: 천 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초등학교	5,749	5,658	4,869	4,020	3,299	2,694
중학교	1,319	2,472	2,276	1,861	1,975	1,316
고등학교	590	1,697	2,284	2,071	1,962	1,337
대학	40	23	340	913	767	622
대학교	153	437	1,127	1,916	2,367	2,301

주: 1) 특수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대학 등은 제외함.
2) 교육대는 1970~1990년에는 초급대, 2000~2020년에는 대학교에 포함함.
3) 대학은 4년제 미만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하며, 대학교에는 대학원도 포함함.

자료: 1970~1980년은 문교부 교육통계연보; 1990년은 교육부·중앙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 2000년은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0년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0년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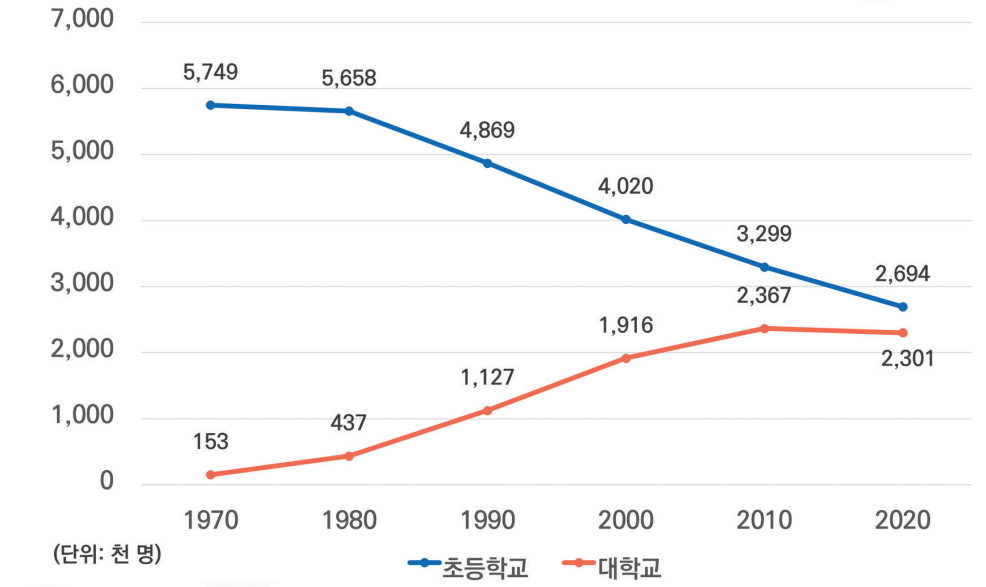


그림 16-1. 초등학교·대학교 학생수 변화(1970~2020년)

주: 1) 특수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대학 등은 제외함.
2) 대학에는 대학원도 포함하며, 교육대는 2000~2020년에만 대학교에 포함함.

자료: 1970~1980년은 문교부 교육통계연보; 1990년은 교육부·중앙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 2000년은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0년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0년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9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고교 모두 60명 내외였다. 1980년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50~60명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40명 미만이 되었고, 2020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20명대로 급감했다(표 16-5). 1960~1970년대에는 학교는 부족하고 학생은 많아 '콩나물교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밀학급이 많았고, 오전반·오후반을 나누어 한 개의 교실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20명 내외 규모의 학급이 일반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표 16-5.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1970~2020년)

(단위: 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초등학교	62.1	51.5	41.4	35.8	26.6	21.8
중학교	62.1	65.5	50.2	38.0	33.8	25.2
고등학교	58.2	59.8	52.8	42.7	33.7	23.4

주: 학급은 1999년 이전은 편성학급,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가학급 기준임.

자료: 1970~1980년은 문교부 교육통계연보; 1990년은 교육부·중앙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 2000년은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0년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0년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 급격한 교육수준의 향상

해방 전인 1944년 인구조사에서 15세 이상 조선인의 교육수준은 불취학이 80.3%였다. 인구 대부분이 학교에 다닐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초등교육 의무화가 명시되었고 1949년 교육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에도 13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30% 수준이었고, 1970년까지도 약 10%의 인구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다(표 16-6, 표 16-7).

1960~1970년 문맹률은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지며, 성별 격차도 컸다. 1960년 55세 이상의 69.4%, 45~54세의 46.4%, 35~44세의 33.2%가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1960년 문맹률이 남성은 16.9%였던 반면 여성은 39.9%로 성별 차이가 컸다. 1970년까지도 여성의 17.7%가 글을 읽고 쓰지 못했는데, 남성의 5.2%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다만 34세 이하의 문맹률이 1960년 13.8%에서 1970년 1.8%까지 하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초등교육의 확대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표 16-6. 13세 이상 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읽고 쓸 줄 아는 비율(1960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34세 이하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전체	15,376,955	7,328,990	8,047,965	8,700,625	2,597,120	1,933,060	2,146,1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읽고 쓸 줄 앎	10,926,136	6,089,756	4,836,380	7,498,230	1,733,880	1,036,295	657,731
	71.1	83.1	60.1	86.2	66.8	53.6	30.6
읽고 쓸 줄 모름	4,450,819	1,239,234	3,211,585	1,202,395	863,240	896,765	1,488,419
	28.9	16.9	39.9	13.8	33.2	46.4	69.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6-7. 13세 이상 인구의 성별·연령대별 글을 아는 비율(1970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34세 이하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전체	19,792,391	9,752,814	10,039,577	11,607,751	3,315,991	2,309,087	2,559,5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학	15,336,084	8,277,989	7,058,095	11,113,616	2,521,416	1,155,275	545,777
	77.5	84.9	70.3	95.7	76.0	50.0	21.3
불취학	4,456,307	1,474,825	2,981,482	494,135	794,575	1,153,812	2,013,785
	22.5	15.1	29.7	4.3	24.0	50.0	78.7
글을 안다	2,178,600	969,120	1,209,480	281,975	467,156	642,836	786,633
	11.0	9.9	12.0	2.4	14.1	27.8	30.7
글을 모른다	2,277,707	505,705	1,772,002	212,160	327,419	510,976	1,227,152
	11.5	5.2	17.7	1.8	9.9	22.1	47.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0세 이상 인구(내국인)의 교육수준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6-8). 1970년에는 초졸 이하인 비율이 77.7%로 크게 높았고, 중졸과 고졸은 10% 미만이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은 3.2%에 불과했다.

세대를 이어가며 높은 교육열이 유지되었고,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늦게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의 지원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반이었다.[3]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생하며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고학생'이 많았던 이유이다. 산업화 시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가난한 가족을 부양했던 자녀들은 산업체 부설학교[4]와 야학 등에서 배움을 이어가기도 했다.

1990년까지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초졸 39.7%, 중졸 19.7%)였으나, 2020년에는 그 비율이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0년에 초졸 이하는 11.7%, 중졸은 9.1%로 낮아진 반면 고졸은 38.2%, 대학 졸업은 11.5%, 대학교 졸업 이상은 29.5%까지 높아졌다.

3)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 전후 실시되었고, 대학교 학비 융자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다.
4) 1976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1977년부터 만들어진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산업체에 부설하여 설립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이다(김상숙, 2018).

표 16-8. 30세 이상 인구의 성별 교육수준 변화(1970~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전체	인구	10,378	13,375	19,075	24,699	30,171	34,919
	초등학교 졸업 이하	77.7	61.6	39.7	26.6	19.1	11.7
	중학교 졸업	9.7	15.8	19.7	15.1	11.2	9.1
	고등학교 졸업	8.2	15.6	28.7	37.2	37.8	38.2
	대학 졸업	1.1	0.8	1.6	6.1	9.5	11.5
	대학교 졸업 이상	3.2	6.2	10.3	15.1	22.4	29.5
남자	인구	4,959	6,413	9,267	11,975	14,546	17,056
	초등학교 졸업 이하	65.8	47.6	27.7	17.5	12.2	7.0
	중학교 졸업	13.5	18.4	18.9	13.9	10.5	8.4
	고등학교 졸업	12.8	22.3	35.1	39.8	38.6	38.5
	대학 졸업	1.9	1.1	2.3	7.5	10.4	11.6
	대학교 졸업 이상	6.0	10.5	16.0	21.3	28.4	34.5
여자	인구	5,419	6,962	9,808	12,724	15,625	17,863
	초등학교 졸업 이하	88.6	74.5	51.1	35.2	25.5	16.1
	중학교 졸업	6.3	13.3	20.5	16.2	11.9	9.8
	고등학교 졸업	4.1	9.5	22.6	34.8	37.0	37.9
	대학 졸업	0.4	0.4	1.0	4.7	8.7	11.4
	대학교 졸업 이상	0.7	2.3	4.8	9.2	16.9	24.8

주: 외국인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교육기회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성별 교육수준 격차는 크게 감소했다(그림 16-2). 1970년 30세 이상 인구의 초졸 이하 비율은 남성 65.8%, 여성 88.6%로 여성이 20%p 이상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남성 6.0%, 여성은 0.7%로 큰 차이를 보였다.

1970~2020년 30세 이상 여성의 초졸 이하 비율은 88.6%에서 16.1%로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2020년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여성 24.8%, 남성 34.5%로 여전히 여성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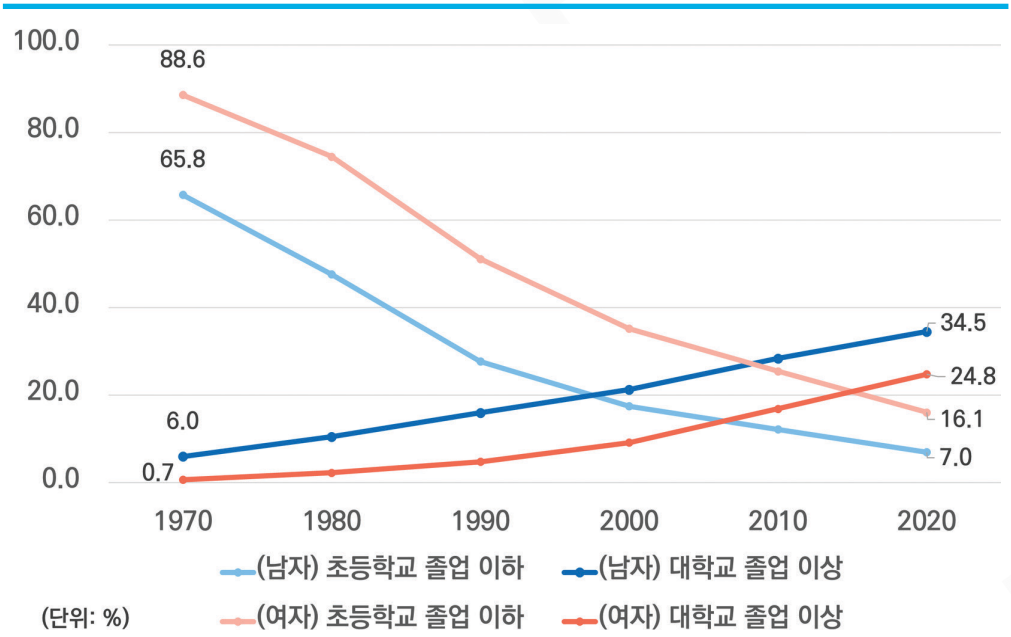


그림 16-2. 30세 이상 인구의 성별 교육수준 변화(1970~2020년)

주: 외국인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

1) 전국의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

다음으로 1970~2020년 50년 동안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지역 간 교육수준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1970·2020년 부모와 자녀 세대의 교육수준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6-9, 그림 16-3). 1970년에 비해 2020년에는 초혼연령과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크게 상승했지만, 일반적으로 30년이 한 세대이므로 25~29세를 자녀 세대, 55~59세를 부모 세대로 동일하게 분석했다.

표 16-9.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 변화(1970·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25~29세	55~59세
1970	인구	2,204	855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3	91.6
	중학교 졸업	20.1	4.7
	고등학교 졸업	20.1	2.2
	대학 졸업	1.7	0.7
	대학교 졸업 이상	5.8	0.7
2020	인구	3,423	4,092
	초등학교 졸업 이하	0.1	2.7
	중학교 졸업	0.9	12.3
	고등학교 졸업	31.6	52.3
	대학 졸업	19.3	7.7
	대학교 졸업 이상	48.1	25.0

주: 외국인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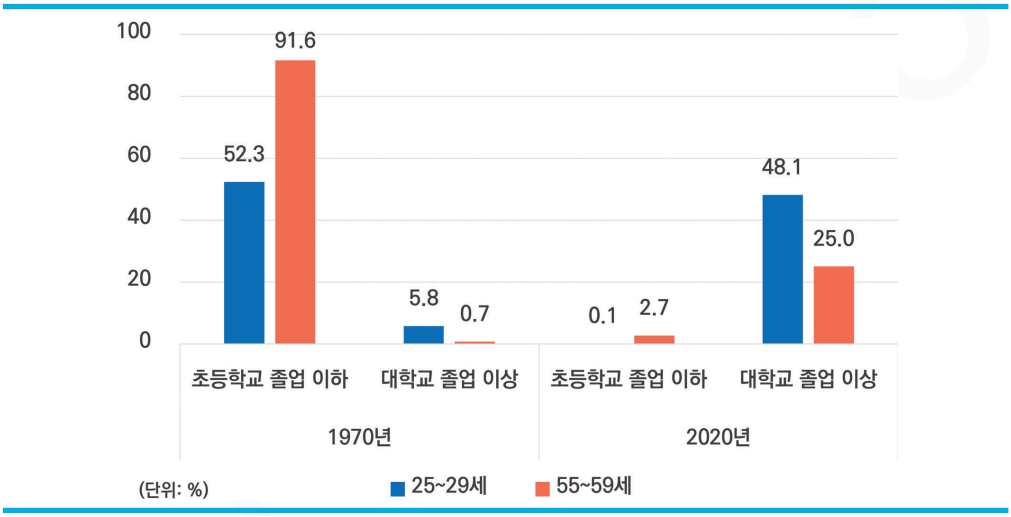


그림 16-3.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 변화(1970·2020년)

주: 외국인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70년 부모 세대(1910~1914년생)는 91.6%가 초졸 이하의 학력이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 0.7%를 포함한 고졸 이상 비중이 3.6%에 불과하다. 자녀 세대(1940~1944년생)의 52.3%가 초졸 이하였고, 고졸은 20.1%, 대학교 졸업 이상은 5.8%였다.

2020년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 학력 구성이 확연히 변화했다. 2020년 부모 세대(1960~1964년생)의 초졸 이하 비율은 2.7%로 낮아졌고, 고졸은 52.3%, 대학 졸업은 7.7%, 대학교 졸업 이상은 25.0%로 높아졌다. 2020년 자녀 세대(1990~1994년생)는 중졸 이하 비율이 1%대로 낮아졌고, 고졸 31.6%, 대학 졸업 19.3%, 대학교 졸업 이상 48.1%로 높아졌다. 50년 사이에 교육수준 분포가 크게 변화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비중이 낮은 구조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비중이 높은 정반대의 구조로 바뀌었다.

2) 시도별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와 인구이동

〈표 16-10〉과 〈표 16-11〉은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1970년과 2020년 사이 부모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 변화를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1970년에는 서울, 부산 순으로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교육수준이 높고, 타 시도는 큰 차이가 없다. 초졸 이하 비율이 부모 세대는 서울 71.4%, 부산 82.8%로 가장 낮았고, 다른 시도는 모두 90%를 넘었다. 초졸 이하 비율이 자녀 세대는 서울 30.3%, 부산 37.9%였고 다른 시도는 모두 50%를 넘었다.

자녀와 부모 세대 모두 고졸 이상 비율이 서울과 부산에서 높았다. 1970년 55~59세의 경우, 서울은 대학교 졸업 이상 3.2%, 대학 졸업 3.0%, 고졸 8.1%로 고졸 이상이 14.3%를 차지했다. 부산은 고졸 이상이 6.8%였으며 다른 시도는 모두 3% 미만이다. 서울과 부산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초졸 이하 비율이 30%대로 낮았고, 고졸 이상은 30~40%대로 높았다. 25~29세의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서울 13.1%, 부산 6.1%로 4% 미만인 다른 시도에 비해 높았다.

표 16-10. 시도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1970년)

(단위: %)

구분	25~29세					55~59세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서울	30.3	23.3	30.4	2.9	13.1	71.4	14.3	8.1	3.0	3.2
부산	37.9	27.3	26.8	1.8	6.1	82.8	10.4	4.3	1.2	1.3
경기	53.4	22.1	19.2	1.5	3.8	92.5	4.7	1.8	0.5	0.5
강원	61.1	19.0	16.1	1.1	2.7	94.7	3.4	1.3	0.3	0.3
충북	68.1	14.6	13.5	1.2	2.6	96.8	1.7	1.1	0.2	0.2
충남	66.3	15.7	13.9	1.3	2.8	95.7	2.5	1.2	0.4	0.3
전북	65.2	15.9	14.7	1.4	2.8	96.0	2.4	1.1	0.3	0.3
전남	67.1	15.6	13.4	1.2	2.7	95.5	2.9	1.1	0.3	0.3
경북	60.2	18.9	15.7	1.3	3.8	95.8	2.6	1.0	0.3	0.4
경남	61.4	18.5	16.0	1.2	2.9	96.1	2.4	1.0	0.2	0.2
제주	53.8	22.2	19.6	1.6	2.8	94.3	3.4	1.5	0.6	0.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6-11. 시도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2020년)

(단위: %)

구분	25~29세					55~59세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서울	0.1	0.6	28.0	16.2	55.1	2.2	9.7	45.9	6.8	35.4
부산	0.1	0.8	31.7	16.9	50.5	2.7	13.6	51.8	7.9	24.0
대구	0.1	0.8	30.8	22.3	46.1	2.7	13.9	49.4	9.1	24.8
인천	0.2	1.1	35.1	23.3	40.3	2.5	11.9	59.8	7.5	18.3
광주	0.1	0.8	31.8	15.0	52.3	2.2	10.6	49.4	9.0	28.9
대전	0.1	0.9	29.3	16.6	53.1	2.5	11.7	47.5	7.6	30.7
울산	0.1	1.1	30.9	23.3	44.6	2.1	11.2	60.7	8.5	17.4
세종	0.0	0.7	27.2	13.0	59.0	2.9	8.0	42.2	7.5	39.4
경기	0.1	0.9	32.4	20.9	45.8	2.3	10.6	53.6	7.8	25.8
강원	0.1	1.0	31.8	17.9	49.2	4.3	15.2	51.8	7.1	21.6
충북	0.1	1.1	33.2	21.8	43.8	3.9	15.5	53.4	7.1	20.1
충남	0.1	1.2	37.6	19.3	41.8	3.9	15.0	55.0	7.0	19.2
전북	0.1	1.3	35.3	15.3	48.1	3.6	14.0	51.4	6.4	24.5
전남	0.2	1.4	34.1	21.4	42.9	4.2	17.4	53.1	8.3	17.0
경북	0.2	1.1	34.0	22.7	41.9	3.1	15.5	54.7	9.2	17.5
경남	0.1	1.0	32.2	20.9	45.8	2.6	14.0	56.7	7.9	18.9
제주	0.1	1.4	32.4	23.4	42.7	2.0	9.3	51.3	10.7	26.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50년간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2020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55~59세의 초졸 이하 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했고, 25~29세의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40%를 초과했다. 55~59세의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세종(39.4%)과 서울(35.4%)에서 크게 높다.

25~29세의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도 세종(59.0%)에서 가장 높다. 세종 다음으로 서울(55.1%)에서 높은 가운데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팽창으로 모든 시도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40%를 초과했다.

1970년과 2020년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서울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교육수준에 따라 공간적으로 차별적인 인구이동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다. 인구이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0장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25~29세 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이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생지 대비 현 거주지, 5년 전 대비 인구이동이 교육수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2020년 25~29세 인구의 출생지 대비 현 거주지를 교육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구이동이 활발하다(표 16-12). 출생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시도인 비율이 고졸은 34.1%인 반면 대학교 졸업 이상은 42.1%로 고졸에 비해 8.0%p 높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은 더 확연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졸 인구 중 출생지가 타 시도인 비율은 32.5%이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 인구는 45.0%로 12.5%p 높다.

현 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를 비교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표 16-13). 전국 대학교 졸업 이상 25~29세 인구 중 5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시도인 비율은 27.9%로 고졸(18.3%)에 비해 9.6%p 높다. 출생지-현 거주지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인구이동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구이동이 활발하다. 25~29세 서울 거주자 중 5년 내 다른 시도에서 이동해 온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32.3%로, 고졸(20.3%)에 비해 12.0%p 높다. 대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하는 사회현상이 통계로 확인된다.

명목적인 교육수준의 분포로 본다면, 1970년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고학력자는 고등교육의 확대를 통해 2020년에는 비수도권, 특히 세종·대전·광주 등 지역의 거점도시로 확산했다. 그러나 비수도권과 서울의 교육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학과 일자리를 향해 서울로 이주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표 16-12. 25~29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현 거주지와 출생지(2020년)

(단위: 명, %)

구분	교육수준	25~29세 인구	출생지				
			현재 살고 있는 집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다른 시도	북한 또는 외국
전국	전체	3,579,826	6.1	38.0	11.2	37.8	6.9
	중학교 이하	60,552	3.2	18.9	5.4	17.1	55.4
	고등학교 졸업	1,169,262	6.1	38.0	10.9	34.1	11.0
	대학 졸업	674,478	7.3	42.1	12.2	35.3	3.1
	대학교 졸업 이상	1,675,534	5.7	37.1	11.2	42.1	3.8
서울	전체	824,786	5.0	39.9	10.2	39.6	5.3
	중학교 이하	6,379	3.9	33.2	10.0	20.1	32.8
	고등학교 졸업	230,411	5.7	44.2	11.4	32.5	6.2
	대학 졸업	131,781	6.3	45.0	11.7	34.7	2.4
	대학교 졸업 이상	456,215	4.3	36.3	9.2	45.0	5.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표 16-13. 25~29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현 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2020년)

(단위: 명, %)

구분	교육수준	25~29세 인구	5년전 거주지				
			비이동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다른 시도	북한 또는 외국
전국	전체	3,579,826	42.4	14.7	13.0	23.0	6.9
	중학교 이하	60,552	28.2	12.5	9.1	12.7	37.5
	고등학교 졸업	1,169,262	43.7	17.0	12.2	18.3	8.8
	대학 졸업	674,478	47.1	17.0	12.9	19.6	3.4
	대학교 졸업 이상	1,675,534	40.1	12.3	13.7	27.9	6.0

구분	교육수준	25~29세 인구	5년전 거주지				
			비이동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	다른 시도	북한 또는 외국
서울	전체	824,786	38.2	10.5	17.3	27.4	6.7
	중학교 이하	6,379	34.3	13.8	18.0	12.1	21.7
	고등학교 졸업	230,411	44.4	13.2	16.6	20.3	5.5
	대학 졸업	131,781	45.7	12.2	15.4	23.5	3.2
	대학교 졸업 이상	456,215	33.0	8.6	18.1	32.3	8.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

3) 서울의 구별 세대 간 교육수준 변화

교육기회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대학 진학과 교육 자원의 측면에서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서울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대와 경쟁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과 일자리를 둘러싼 기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서울의 구별 교육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서울 구별 교육수준은 지난 50년간 크게 변화하였다(표 16-14). 1970년 55~59세의 대졸 이상 비율은 종로구(7.3%), 중구(6.4%), 용산구(4.2%) 순으로 높고, 25~29세의 대졸 이상 비율도 종로구(23.0%), 중구(18.2%), 용산구(17.1%) 순으로 높다. 현재 강남구·서초구의 과거 행정구역이었던 성동구는 55~59세(2.0%)와 25~29세(9.0%)의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가장 낮았다.[5)]

5) 1970년 서울의 한강 이남은 영등포구와 성동구 2개 구로 나뉘어 있었다. 서울특별시(2017)와 각 구청 홈페이지의 연혁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 본 결과 현재의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는 영등포구에 속했고,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성동구에 속했다. 서초구 서쪽은 영등포구에, 동쪽은 성동구에 속했다. 당시 성동구는 강남과 강북에 걸쳐 있었는데, 현재의 성동구, 광진구도 포괄하였다. 강남구가 성동구에서 분구된 해는 1975년이며, 서초구는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되었다.

표 16-14. 서울 구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1970년)

(단위: %)

구분	25~29세					55~59세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종로구	20.5	18.6	34.1	3.8	23.0	56.8	16.9	13.1	5.8	7.3
중구	24.8	20.5	32.6	3.9	18.2	56.6	20.2	12.0	4.9	6.4
동대문구	30.9	23.1	30.4	2.9	12.7	72.9	14.5	7.6	2.7	2.3
성동구	35.1	24.9	28.6	2.4	9.0	77.1	12.5	6.4	2.0	2.0
성북구	29.0	22.3	30.9	2.9	14.9	69.1	14.7	9.2	3.4	3.6
서대문구	28.3	21.5	31.2	3.2	15.8	68.5	14.8	9.3	3.6	3.8
마포구	24.7	22.1	33.3	3.3	16.6	70.9	14.8	7.8	3.1	3.4
용산구	23.9	20.9	34.5	3.5	17.1	66.0	16.6	9.4	3.9	4.2
영등포구	34.0	26.0	28.4	2.4	9.2	77.3	12.6	5.9	2.1	2.0

주: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3개 구에 음영 처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6-15. 서울 구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수준(2020년)

(단위: %)

구분	25~29세					55~59세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종로구	0.1	0.4	29.9	10.4	59.2	2.2	11.0	38.0	5.1	43.7
중구	0.1	0.5	28.2	13.5	57.7	2.8	10.9	48.7	5.7	32.0
용산구	0.1	0.8	25.0	12.1	62.0	1.5	7.1	35.2	5.7	50.5
성동구	0.0	0.5	27.9	14.6	57.0	2.3	11.4	46.2	6.2	34.0
광진구	0.0	0.6	27.2	16.4	55.8	2.4	11.4	49.4	6.2	30.6
동대문구	0.1	0.7	32.9	14.5	51.8	2.8	13.4	52.8	6.3	24.6
중랑구	0.1	0.8	35.5	22.2	41.5	3.8	16.5	58.0	5.3	16.4
성북구	0.1	0.7	31.2	15.1	52.9	2.6	11.5	48.2	6.9	30.7

구분	25~29세					55~59세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강북구	0.2	1.4	38.0	21.7	38.7	4.4	16.4	55.7	6.2	17.3
도봉구	0.2	0.8	32.8	22.6	43.6	2.5	11.7	52.3	7.9	25.5
노원구	0.1	0.7	30.5	17.2	51.5	2.0	8.4	48.2	7.6	33.8
은평구	0.1	0.6	31.0	19.6	48.7	2.4	9.8	52.2	7.1	28.6
서대문구	0.0	0.3	27.7	12.5	59.5	1.9	8.4	44.8	7.0	37.9
마포구	0.0	0.4	25.4	13.5	60.6	1.9	7.8	38.8	7.7	43.8
양천구	0.0	0.4	28.8	18.4	52.5	1.8	8.5	42.0	6.9	40.8
강서구	0.0	0.5	26.0	18.7	54.6	2.1	9.0	52.5	8.0	28.5
구로구	0.1	0.6	26.7	22.0	50.6	2.2	11.7	54.6	8.0	23.5
금천구	0.2	0.9	31.0	21.3	46.7	3.5	17.2	59.1	5.5	14.7
영등포구	0.1	0.3	21.7	15.8	62.1	1.4	9.2	43.4	8.2	37.8
동작구	0.0	0.3	27.0	14.6	58.1	1.6	7.2	43.5	8.0	39.7
관악구	0.1	0.5	25.9	17.2	56.3	3.2	11.3	52.3	6.5	26.6
서초구	0.0	0.3	23.6	9.6	66.5	0.6	2.8	20.5	6.2	69.9
강남구	0.0	0.5	25.9	10.3	63.3	0.8	2.2	23.2	5.7	68.0
송파구	0.0	0.4	24.3	13.4	61.9	1.2	5.1	37.7	6.8	49.2
강동구	0.1	0.4	28.8	15.8	54.8	2.1	9.7	47.8	6.3	34.1

주: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3개 구에 음영 처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70년까지는 부모·자녀 세대의 교육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던 현 강남지역(영등포구·성동구)은 2020년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졌다(표 16-15). 2020년 55~59세의 대졸 이상 비율은 서초구(69.9%), 강남구(68.0%) 순으로 높고, 25~29세의 대졸 이상 비율도 서초구(66.5%), 강남구(63.3%) 순으로 높다.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 인구 비율이 1970년에는 종로구와 중구에서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가장 높다. 고학력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북

에서 강남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학군'으로서 강남의 탄생과 결을 같이 한다. 강남(영동지구) 개발을 위해 정부는 강북 도심 중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정책을 추진했다. 전통적인 명문고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경기고등학교가 1976년 강남구로 이전하였으며, 이어 많은 도심의 명문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하였다(최은영, 2004). 도심에서 이동한 20개교 중 대부분이 강남구(6개교), 서초구(2개교), 송파구(4개교), 강동구(3개교)로 이전하였다(그림 16-4).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8학군' 강남 유입은 진학 정보와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기대와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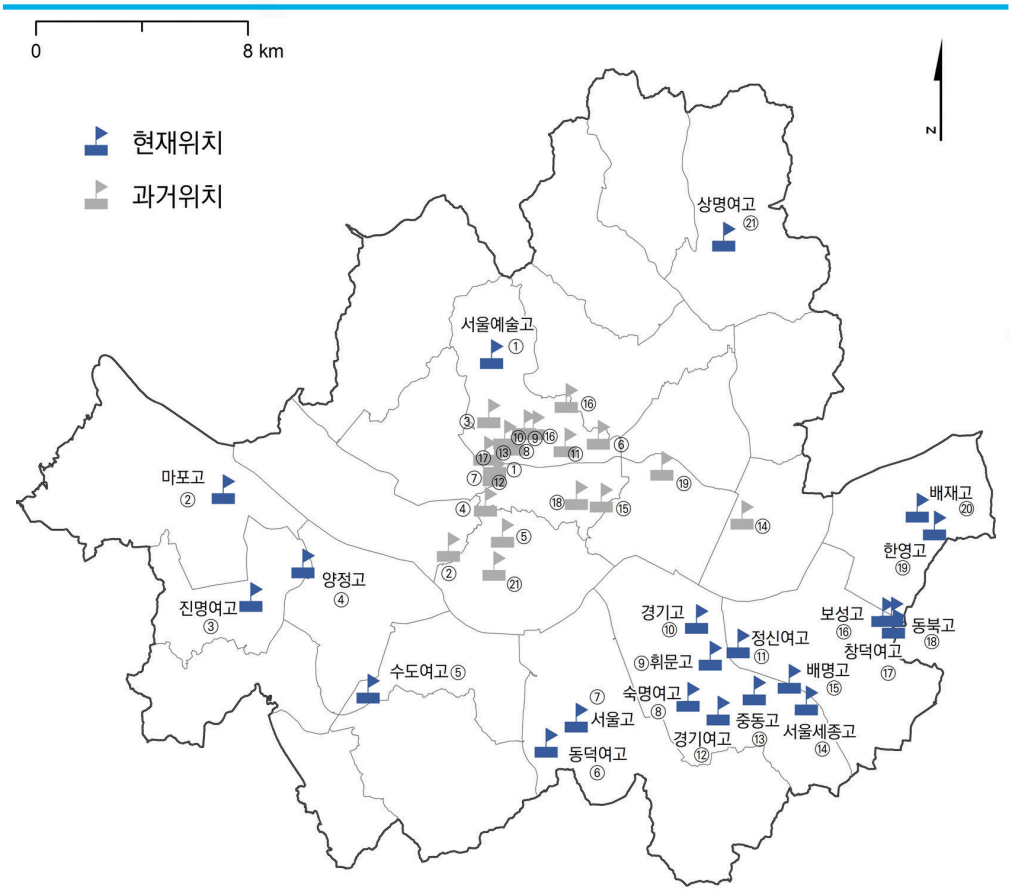


그림 16-4. 도심 소재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출처: 최은영(2004)을 토대로 재작성.

4.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차이

1) 교육과 경제활동

여기에서는 교육수준 격차가 경제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은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 선택, 고용의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 종사상 지위, 직업 및 산업 분포의 차이를 통해 교육이 어떻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인구주택총조사상 시계열의 연속성과 세부 분류 비교에 한계가 있어 2000년과 2020년을 중심으로 주요 지표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2000년과 2020년 사이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52.1%에서 59.6%로 상승했다(표 16-16). 모든 시기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고용률이 높다. 동일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2000~2020년 사이 고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은 고용률이 약 5%p씩 상승했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용률이 2000년 84.6%, 2020년 80.7%로 3.9%p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대학교 졸업의 고용률이 70.7%에서 75.4%로 4.7%p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중졸 이하의 고용률은 40.0%에서 28.9%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중졸 이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고졸과 대학교 졸업의 고용률 격차는 2000년 17.5%p에서 2020년 16.8%p로 큰 변화가 없다.

2000년과 2020년 사이 모든 교육수준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비율은 낮아졌다(표 16-17). 특히 고졸과 대학교 졸업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고졸은 66.3%에서 73.5%로 7.2%p, 대학교 졸업은 77.1%에서 83.6%로 6.5%p 높아졌다.

2000년과 2020년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비율이 대체로 높다. 단, 2000년에는 대학 졸업이 대학교 졸업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율이 2%p 높다. 20년간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임금근로자 비율 격차는 5.9%p에서 1.5%p로 줄어들었다. 한편 2000~2020년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율은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상

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표 16-16. 교육수준별 취업자 수와 고용률 변화(2000~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10			2020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전체	35,088	18,276	52.1	38,896	22,020	56.6	43,073	25,653	59.6
중학교 졸업 이하	13,066	5,229	40.0	11,537	4,154	36.0	8,699	2,513	28.9
고등학교 졸업	14,612	7,769	53.2	15,121	8,831	58.4	17,163	10,055	58.6
대학 졸업	2,533	1,753	69.2	3,917	2,847	72.7	4,965	3,749	75.5
대학교 졸업	4,320	3,054	70.7	7,105	5,175	72.8	10,426	7,866	75.4
대학원 졸업 이상	556	471	84.6	1,215	1,012	83.3	1,821	1,470	80.7

주: 2000년은 '일하였음'과 '일시휴직'을 취업자로, 2010·2020년은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휴직'을 취업자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표 16-17.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2000·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20				
	계	임금 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임금 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8,276	62.3	22.1	6.8	8.9	25,653	77.1	14.4	5.1	3.4
중학교 졸업 이하	5,229	40.1	37.3	3.2	19.4	2,513	58.7	28.0	3.3	10.1
고등학교 졸업	7,769	66.3	20.2	7.1	6.4	10,055	73.5	17.2	5.1	4.1
대학 졸업	1,753	79.1	10.8	7.2	2.9	3,749	82.2	10.9	4.6	2.3
대학교 졸업	3,054	77.1	9.9	11.3	1.7	7,866	83.6	9.3	5.5	1.5
대학원 졸업 이상	471	83.0	5.0	11.5	0.5	1,470	85.1	7.4	6.8	0.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2000년과 2020년 사이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학력 간 고용률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그간 노동시장의 구조는 자영업자 비중은 축소되고 임금노동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고졸과 대학교 졸업 모두 임금노동으로의 진입이 늘어났다. 여전히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과 종사상 지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고학력자의 고용률 상승은 제한적이며 대학원 이상 학력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5.0%에서 7.4%로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2) 교육과 직업·산업

〈표 16-18〉은 2000~2020년 사이 직업별 교육수준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20년간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2000년에는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다수의 직업군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았다. 2020년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10%보다 낮은 직업군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8.8%)뿐이며, 모든 직업군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직업별 교육수준 향상은 균질적이지 않다. 직업군 내 상승률로만 보자면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의 교육수준도 크게 상승했지만, 일부 직업군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직업 간 교육수준 격차는 커졌다. 2020년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71.7%), 관리자(69.1%), 사무 종사자(49.8%) 등에서 상당히 높아졌고,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1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5.7%), 단순노무 종사자(13.7%)는 여전히 10%대이다.

표 16-18. 취업자의 직업별 교육수준 변화(2000·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20				
	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전체	18,276	28.6	42.5	9.6	19.3	25,653	9.8	39.2	14.6	36.4
관리자	972	8.1	38.3	11.8	41.8	208	1.2	19.2	10.5	69.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81	2.5	23.0	18.4	56.1	5,105	0.2	11.9	16.2	71.7
사무 종사자	2,488	4.9	48.7	17.5	29.0	5,200	2.4	30.8	17.1	49.8
서비스 종사자	1,744	33.6	52.2	6.7	7.4	3,237	12.1	51.3	14.1	22.6
판매 종사자	2,299	23.2	56.9	8.8	11.2	2,890	7.1	48.9	15.5	28.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56	81.4	15.9	1.2	1.5	1,093	46.4	39.4	5.4	8.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905	32.4	55.3	6.9	5.5	2,306	11.7	54.8	15.3	1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90	28.7	62.1	5.4	3.8	3,087	11.7	57.6	14.9	15.7
단순노무 종사자	1,370	53.1	41.1	3.0	2.9	2,413	26.5	51.1	8.7	13.7
군인	71	1.6	47.0	11.7	39.7	115	0.1	28.2	23.1	48.6

주: 1) 2000년과 2020년의 직업분류체계가 상이하며, 행 구분은 2020년 조사결과에서 준용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임. 2000년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관리자'에 포함함.

2) 2000년과 2020년 사이의 변경된 직업분류는 따로 중분류 이하의 시계열 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2000년(제5차)의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통합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주요 산업별 교육수준 역시 향상되었지만, 일부 산업군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며, 서비스업 내에서 분화가 진행되었다(표 16-19). 2000년에는 농림어업의 80% 이상이 중졸 이하 학력이었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산업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20%를 넘지 않았다. 2020년에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군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를 초과한다.

표 16-19. 취업자의 산업별 교육수준 변화(2000·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20				
	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전체	18,276	28.6	42.5	9.6	19.3	25,653	9.8	39.2	14.6	36.4
농업, 임업 및 어업	2,414	81.1	16.1	1.3	1.6	1,102	46.4	38.9	5.3	9.4
제조업	3,810	23.3	51.9	9.3	15.4	4,465	7.4	45.8	16.7	30.1
건설업	1,344	28.5	47.1	9.2	15.2	1,674	10.4	49.2	14.4	25.9
도매 및 소매업	2,896	19.8	53.4	10.4	16.4	3,439	6.8	44.9	15.5	32.8
숙박 및 음식점업	1,369	37.7	50.7	5.6	6.0	2,108	12.2	52.7	13.4	2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0	11.0	32.1	16.1	40.8	1,136	1.3	18.0	14.2	66.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21	14.2	45.9	14.0	26.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92	10.8	40.7	13.7	34.7	1,369	10.5	27.1	12.4	50.0
교육서비스업	1,115	4.4	16.4	16.1	63.0	1,711	2.7	16.5	9.9	7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6	6.4	29.2	27.0	37.4	2,122	10.3	28.4	22.0	39.2

주: 1) 2000년과 2020년의 산업분류체계가 상이하며, 행 구분은 2020년 조사결과에서 준용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임. 모든 산업군이 아니라 비교적 시계열이 일관적이고 종사자수가 많은 산업을 간추려 제시함.
2) 2000년과 2020년 사이의 산업분류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통합한 것을 제외하고 중분류 이하의 시계열 미세조정을 하지 않았음.
3) 2020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2000년에는 '사업서비스업'으로 통합되어 있었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20% 표본(원자료).

2000년과 2020년 사이 서비스업의 분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이 동반되었다. 2020년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교육서비스업(7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6.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서비스 행정(50.0%)에서 높다. 대졸 이상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20년간 37.4%에서 39.2%로 상승폭이 작고,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상승폭이 큼에도 여전히 30%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사업서비스업 대분류는 20년 사이 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으로 분화되었는데, 이는 서비스업 내 교육수준의 격차와 분화를 보여준다.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고학력자(대학교 졸업 이상)는 여전히 특정 직업군(전문가, 관리자)에 편중되어 있다. 단순노무·기능직·생산직 등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여전히 낮다. 서비스업 전반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지만, 교육·전문서비스와 같은 지식 기반 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 간의 격차가 뚜렷해지면서 서비스업 내부의 분화가 심화되었다. 직업과 산업 구조 속에 새로운 형태의 위계와 분리가 재구성되고 있다.

6)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등이 포함된다.

5. 맺음말

인구주택총조사는 교육수준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통계이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1960~1970년대까지도 문맹률과 취학 여부를 조사할 정도로 교육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1944년 15세 이상 조선인의 교육수준은 불취학이 80.3%일 정도로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초등학교 교육은 제헌 헌법에서 의무화가 명시되었지만 1960년에도 13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30% 수준으로 높았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적었고, 여성은 특히 더 적었다.

한국의 공교육 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국가는 학교를 짓고, 교사를 양성했다. 못 배운 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부모 세대는 피땀을 흘렸다. 그 결과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맹률은 극적으로 감소했고, 1970~2020년 50년 사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비중이 낮아지는 구조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정반대의 구조로 바뀌었다.

보편교육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눈부신 성취의 원동력이었다. 다만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향한 경쟁은 '학군'이란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1970~1980년대 서울 강남 개발을 위해 강북 도심에 있던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한 정책은 교육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 비율이 1970년에는 한강 이북에 위치한 종로구와 중구에서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한강 이남에 위치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가장 높다. 서울 강남의 고학력 인구 비율이 강북보다 높아지고, 세종시의 고학력 인구가 서울보다 높아진 현상은 국가의 공간 정책이 인구이동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의미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극소수가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던 시대와 달리 더 이상 학위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계층 상승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 상위권 대학과 특정 학과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확대와 함께 교육기회도 확대되었지만, 공교육이 확대될수록 사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다. 계층 상승과 재생산을 위한 교육투자와 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가족이 감당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 성별, 지역,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인구가 성장하던 시기에 콩나물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최근에는 폐교로 지역사회의 거점이 붕괴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집중 심화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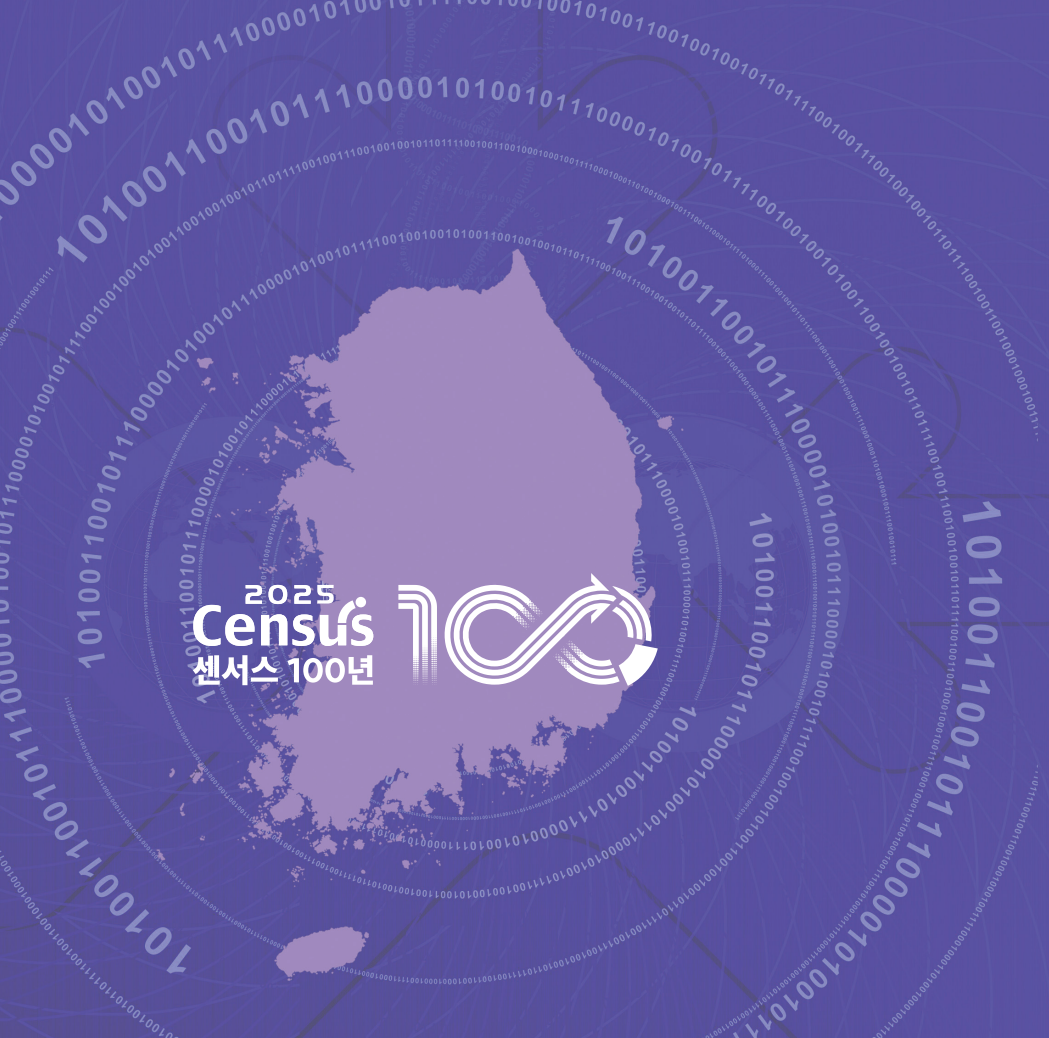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교육 관련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교육 항목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며, 그 안에 담긴 개인들의 선택과 경험, 그리고 사회구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교육 항목은 시계열 분석과 시도·시군구별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항목과의 연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 항목에 대한 시도별, 서울 구별 분석을 제한적으로만 수행했고, 인구이동, 종사상 지위, 직업·산업 등과 연계하여 기초적인 분석만 수행했다. 향후 교육 관련 항목에 대한 다양한 공간 단위 분석 및 주거, 종교 등 다른 항목과 연계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간 정책, 균형발전 정책, 산업 정책, 저출산·고령화대응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7장

종교인구의 변화

최현종



1. 머리말

한 사회의 공적 제도나 관습이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세속사회에서도 종교는 개인 삶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종교가 하나의 세계관이라면, 같은 종교에서 공유된 세계관은 사회적 현실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국교가 없는 세속국가이면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교가 혼재된 다종교 국가이다. 종교인구의 구성과 변화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읽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인구는 1985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종교 항목은 10년 주기로 조사되기 때문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사되었다. 이 장에서는 1970년대는 문화공보부[1] 통계, 1985년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종교인구 변화를 살펴본다. 종교인구의 성, 연령, 지역에 따른 분포와 함께, 조사 문항 변화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점으로 비종교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제적 비교를 통해 종교인과 비종교인 비율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1) 문화공보부는 1968~1989년까지 존재했던 정부 부처로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이다.

2. 인구주택총조사 이전의 종교인구 조사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인구를 조사하기 이전 종교인구는 문화공보부가 각 종교단체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펴낸 종교법인단체일람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2] 문화공보부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각 종교단체의 보고에 의존한 것이기에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문화공보부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모든 종교별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종교인구도 1971년 1,796만 명에서 1980년 3,05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표 17-1).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17-1. 종교별 종교인구 변화(1971~1980년)

(단위: 명)

구분	1971	1974	1975	1977	1979	1980
전체	17,958,362	19,613,680	25,276,153	27,367,978	29,614,828	30,497,355
불교	7,106,018	7,985,773	11,972,930	12,906,851	13,390,975	12,329,720
개신교	3,217,996	3,463,108	4,019,313	5,001,491	5,986,609	7,180,627
천주교	779,000	790.367	1,012,209	1,093,829	1,189,863	1,321,293
유교	4,423,000	4,423,000	4,723,493	4,723,493	4,925,444	5,182,902
천도교	636,067	718,072	815,385	814,673	1,052,630	1,152,636
원불교	619,219	681,783	740,362	806,550	904,568	947,993
대종교	113,720	145,002	128,198	170,631	257,442	316,571
기타	1,063,342	1,406,775	1,864,263	1,850,460	1,907,297	2,065,613

자료: 문화공보부, 종교법인단체일람표(1971, 1974, 1975); 종교법인 및 단체 현황(1977); 종교단체 현황(1979, 1980).

2) 1977년에는 '종교법인 및 단체현황', 1979년과 1980년에는 '종교단체현황'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1971~1980년 문화공보부의 일람표에 따르면 불교, 개신교, 유교가 종교인구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교 인구는 1971년 442만 명, 1980년 518만 명으로 보고되었으나,[3]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48만 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교도 종교단체의 보고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간 차이가 나타난다.

불교인구는 1971년 711만 명에서 1980년 1,233만 명으로 약 74% 증가했다. 특히 1974년과 1975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조사에 포함된 종단이 증가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1975년 자료부터 미등록 사찰 3,337곳을 포함하였다는 내용이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미등록 사찰의 경우 그 정확성을 판명하기 어렵다.[4]

개신교인구는 1971년 322만 명에서 1980년 718만 명으로 약 123% 증가하였다. 문화공보부 자료에서 개신교의 명칭은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는데, 1971년과 1980년에는 개신교, 1974년과 1979년에는 기독교, 1975년과 1977년에는 기독교(개신교)로 표기하고 있다.

천주교인구도 1971년 78만 명에서 1980년 132만 명으로 약 70% 증가하였다. 천주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1974년과 1975년 사이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전 조사에는 누락되었던 공소 1,847곳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도교가 1971년 64만 명에서 1980년 115만 명으로 81%, 원불교는 62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53%, 대종교는 11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178%, 기타 종교는 106만 명에서 207만 명으로 94% 증가했다. 문화공보부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모든 종교별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종교인구도 1971년 1,796만 명(58.2%)에서 1980년 3,050만 명(81.1%)으로 70% 증가하였다.

종교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이후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50% 전후인데 비해 문화공보부 자료는 80%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부정확하다고

3) 한국종교사회연구소(1997)가 집계한 종교별 교세 현황에 의하면, 유교는 1995년 기준 1,018만 명의 신도 수를 여전히 보고하고 있다.

4) 불교의 미등록 사찰 포함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미등록 사찰의 경우 공식적 통계에 포함하기 어렵거나, 혹은 잘못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판단된다. 일부 종단에서는 교세를 부풀려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등록만 해놓고 나오지 않는 사실상 비종교인을 포함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종교에 중복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좀 더 정확한 종교인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종교인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

1)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 변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 문항은 1985~2005년 전수조사에서 2015년에는 20% 표본조사로 변경되었다. 통계청이 KOSIS에 공표하는 종교 문항의 결과표는 내국인으로 한정된다.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종교인구는 1,720만 명(42.6%)이다(표 17-2, 그림 17-1). 1980년 문화공보부 자료에서 종교인구가 3천만 명 이상으로 보고된 것에 비해 크게 적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공보부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문화공보부에 보고된 자료의 격차는 종교별로 상이하다. 유교는 특히 격차가 심했으며, 불교나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그 차이가 컸다. 개신교의 격차는 다른 종교에 비해 적은 편이었고, 천주교는 오히려 기존 자료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2. 종교별 종교인구 변화(1985~2015년)

(단위: 명, %)

구분	1985		1995		2005		201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40,419,652	100.0	44,553,710	100.0	47,041,434	100.0	49,052,389	100.0
종교있음	17,203,296	42.6	22,597,824	50.7	24,970,766	53.1	21,553,674	43.9
불교	8,059,624	19.9	10,321,012	23.2	10,726,463	22.8	7,619,332	15.5
개신교	6,489,282	16.1	8,760,336	19.7	8,616,438	18.3	9,675,761	19.7
천주교	1,865,397	4.6	2,950,730	6.6	5,146,147	10.9	3,890,311	7.9
유교	483,366	1.2	210,927	0.5	104,575	0.2	75,703	0.2
원불교	92,302	0.2	86,823	0.2	129,907	0.3	84,141	0.2
천도교	26,818	0.1	28,184	0.1	45,835	0.1	65,964	0.1
대종교	11,030	0.0	7,603	0.0	3,766	0.0	3,101	0.0
대순진리회	-	-	62,056	0.1	34,550	0.1	41,176	0.1
기타	175,477	0.4	170,153	0.4	163,085	0.3	98,185	0.2
종교없음	23,216,356	57.4	21,953,315	49.3	21,865,160	46.5	27,498,715	56.1

주: 비율은 해당 종교의 신도 수를 당해연도 인구로 나눈 값임. 미상은 제시하지 않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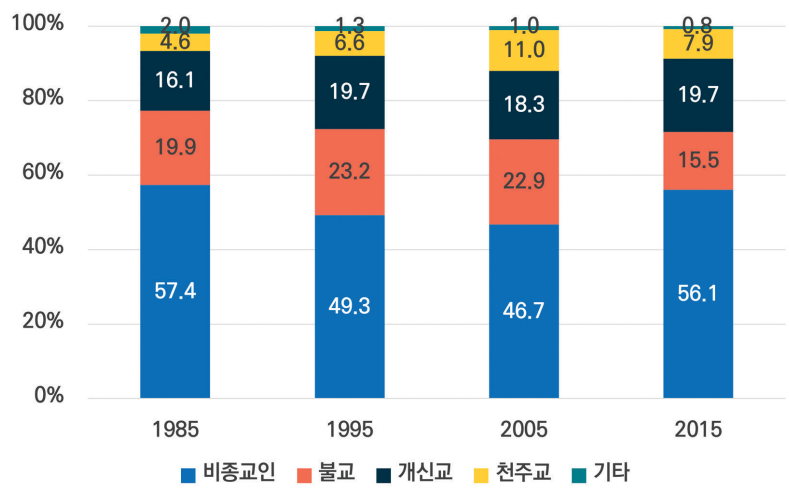


그림 17-1. 종교별 종교인구와 비종교인 비율 변화(1985~201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종교인구는 2,260만 명으로 1985년 대비 539만 명이 늘어났고, 그 비율도 50.7%로 8.1%p 증가하였다. 종교별 인구 비율이 불교(3.3%p), 개신교(3.6%p), 천주교(2.0%p)는 증가한 반면 유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들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유교와 대종교의 감소세가 컸다. 한편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대순진리회가 선택지로 추가되었다. 종교별 인구 비율 순위는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마찬가지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새롭게 추가된 대순진리회가 기존의 천도교나 대종교보다도 더 많은 신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인구는 2,497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95년 대비 종교인구 비율은 2.4%p 증가하였다. 다만 1985~1995년간 증가폭(8.1%p)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원불교·천도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와 개신교는 신도 수가 감소하였으며, 불교는 신도 수가 증가하였으나 인구 비율은 0.4%p 감소하였다. 반면 천주교 신도 수는 220만 명 증가하여 인구 비율은 4.3%p 증가했다.

2015년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2005년 대비 전체 종교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10년 사이에 종교인구는 2,497만 명에서 2,155만 명으로 342만 명 감소하였고, 인구 비율도 53.1%에서 43.9%로 9.2%p 낮아졌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를 조사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2005년까지 종교인구가 계속 증가했다는 점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종교인구 비율은 1985년 수준(42.6%)과 비슷하여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2005~2015년 종교별 인구 비율을 비교했을 때 개신교만 1.4%p 증가했고, 불교(-7.3%p), 천주교(-3.0%p) 모두 감소했다. 2005~2015년 불교인구의 감소 규모는 311만 명으로 전체 종교인구 감소 규모인 342만 명과 큰 차이가 없다.

2) 성별 종교인구 변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종교별 인구뿐 아니라 각 종교의 분포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 대해 종교인구의 성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종교인구 비율은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다(표 17-3).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인구는 남성 795.6만 명(남성의 39.3%), 여성 924.7만 명(여성의 45.8%)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인구 비율이 높다. 성별 종교인구 비율의 차이는 불교 2.9%p, 개신교 2.7%p, 천주교 0.9%p 순이다.

2015년에도 여성의 종교인구 비율이 더 높았고, 종교인구 비율의 성별 차이는 1995년에 비해 모든 종교에서 증가하였다. 불교는 2.8%p에서 3.2%p로, 개신교는 2.8%p에서 3.8%p로, 천주교는 1.3%p에서 2.0%p로 커졌다.

표 17-3. 성별 종교인구 비율 변화(1985~2015년)

(단위: %)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전체	19.9	23.2	22.8	15.5	16.1	19.7	18.3	19.7	4.6	6.6	10.9	7.9
남	18.5	21.8	21.5	13.9	14.7	18.3	17.1	17.8	4.2	6.0	10.1	6.9
여	21.4	24.6	24.1	17.1	17.4	21.1	19.6	21.6	5.1	7.3	11.8	8.9

주: 각 비율은 해당 종교의 신도 수를 당해연도 인구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3) 연령별 종교인구 변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연령별 종교인구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17-4). 1985년 불교인구 비율은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전체(19.9%)보다 높았다. 40~69세의 연령대에서 불교인구 비율이 30%를 상회했으며 70세 이상에서도 28.0%로 높았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불교인구 비율은 전체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0~9세(9.5%)에서 낮았다.

표 17-4. 연령대별 종교인구 비율 변화(1985~2015년)

(단위: %)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전체	19.9	23.2	22.8	15.5	16.1	19.7	18.3	19.7	4.6	6.6	10.9	7.9
0~9세	9.5	11.3	13.2	6.0	14.1	19.3	19.9	20.4	3.8	5.6	9.7	5.7
10~19세	15.0	18.3	17.7	8.4	18.1	22.5	20.4	22.1	4.4	7.2	11.7	6.9
20~29세	18.6	19.4	19.3	9.6	17.3	19.7	17.9	17.6	4.9	5.8	11.2	7.3
30~39세	25.2	24.7	19.6	11.6	17.9	20.0	17.7	18.6	5.7	7.0	9.8	7.7
40~49세	30.3	31.5	26.6	15.6	14.9	20.0	17.7	19.5	4.9	8.0	11.3	7.4
50~59세	31.5	34.7	31.7	22.0	12.8	16.7	17.8	19.1	4.3	6.3	12.0	8.8
60~69세	30.4	34.5	34.1	26.0	13.0	16.0	16.9	20.6	4.5	6.2	10.8	10.1
70세 이상	28.0	30.5	31.1	25.5	12.4	17.5	18.2	21.3	4.4	6.8	11.5	9.9

주: 각 비율은 해당 종교의 연령대별 신도 수를 당해연도 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이와 반대로 1985년 개신교인구 비율은 10~3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10대에서 18.1%로 가장 높았다. 0~9세의 경우 14.1%로 전체보다 2.0%p 낮으나, 그 차이는 불교에 비해 적다. 반면 40대 이상에서 개신교인구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개신교는 불교와는 반대로 소년-청년 중심의 종교였다. 천주교인구는 불교나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0~9세에서 천주교인구 비율이 3.8%로 가장 낮았고, 30대가 5.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 편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 불교인구 비율은 60대(26.0%), 70세 이상(25.5%), 50~59세(22.0%)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불교인구 비율은 1995년을 고점으로 감소하였으며, 1995년 대비 감소폭은 40대(-15.9%p), 30대(-13.1%p), 50대(-12.7%p) 순으로 크다.

2015년 개신교인구 비율은 10대(22.1%), 70세 이상(21.3%), 60대(2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신교인구 비율은 20대(-0.3%p)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2005년 대비 증가하여 불교인구의 감소 추세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2015년 천주교인구 비율은 60대(10.1%), 70세 이상(9.9%), 50대(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5년 천주교인구 비율은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 3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 전 연령층은 -3.0%p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고, 10대(-4.8%p), 0~9세(-4.0%p), 20대(-3.9%p)·40대(-3.9%p) 순으로 컸다. 개신교 이외 종교인구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감소한 것은 앞서 언급한 비종교인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4) 지역별 종교인구 변화

지역별 종교인구도 종교별 편차가 나타났다(표 17-5). 1985년 불교인구 비율은 부산(31.2%), 경남(29.0%), 제주(28.7%), 대구(27.5%) 순으로 주로 영남권에서 높았다. 반면 전북(8.1%), 전남(10.6%), 인천(13.4%) 순으로 호남권에서 낮았다. 다른 지역들은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개신교인구 비율은 서울(23.8%), 인천(21.8%), 전북(19.3%), 경기(19.1%) 순으로 높아 수

도권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천주교는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나 개신교에 비해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 비율은 경남(2.6%)과 경북(2.7%)에서 낮았으며, 인천(7.5%), 서울(6.5%), 대구(5.8%) 순으로 높았다.

표 17-5. 시도별 종교인구 비율 변화(1985~2015년)

(단위: %)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전국	19.9	23.2	22.8	15.5	16.1	19.7	18.3	19.7	4.6	6.6	10.9	7.9
서울	18.4	18.4	16.8	10.8	23.8	26.2	22.8	24.2	6.5	8.7	14.2	10.7
인천	13.4	14.6	13.8	8.8	21.8	25.8	22.4	23.1	7.5	9.0	13.7	9.5
경기	17.3	18.5	16.8	10.7	19.1	23.7	21.9	23.0	5.6	7.7	12.4	9.0
충북	17.6	23.5	23.8	16.4	10.8	15.2	15.1	15.8	4.0	6.2	9.9	7.4
대전	17.7	23.2	21.8	14.0	15.4	21.1	20.5	21.8	3.6	6.6	10.7	7.4
세종		–	–	13.8		–	–	19.9		–	–	7.9
충남		19.9	20.5	13.8		19.1	19.6	20.7		4.7	9.1	6.2
전북	8.1	12.2	12.8	8.6	19.3	26.4	26.3	26.9	3.5	6.0	11.4	7.5
광주	10.6	15.3	14.4	9.5	14.6	21.7	19.7	20.0	3.3	9.1	13.0	8.6
전남		13.6	16.1	10.9		20.4	21.8	23.2		4.3	8.7	5.6
강원	19.0	23.2	23.0	16.4	12.2	16.2	15.6	17.5	3.6	5.1	9.1	6.7
대구	27.5	33.2	33.4	23.8	11.2	11.6	10.4	12.0	5.8	6.8	9.8	7.7
경북	26.1	31.0	33.9	25.3	10.2	12.3	11.5	13.3	2.7	3.9	7.1	5.2
부산	31.2	38.2	39.2	28.5	10.1	11.1	10.4	12.1	3.7	4.7	7.4	5.4
울산	29.0	36.3	39.8	29.8	7.3	9.1	9.5	10.9	2.6	3.6	6.4	4.2
경남			40.1	29.4			8.5	10.5			5.9	4.2
제주	28.7	33.6	32.7	23.4	7.4	8.4	7.2	10.0	3.9	6.2	10.3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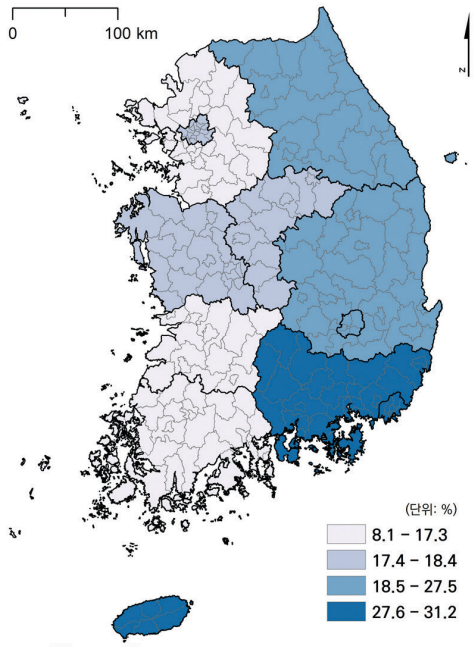
주: 각 비율은 해당 종교의 지역별 신도 수를 당해연도 지역별 인구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시도별 종교인구 분포는 이전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불교인구 비율은 울산(29.8%), 경남(29.4%), 부산(28.5%) 순으로 높았다. 2005년 대비 불교인구 비율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부산(-10.7%p)·경남(-10.7%p), 울산(-10.0%p) 순으로 컸다. 불교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영남권과 제주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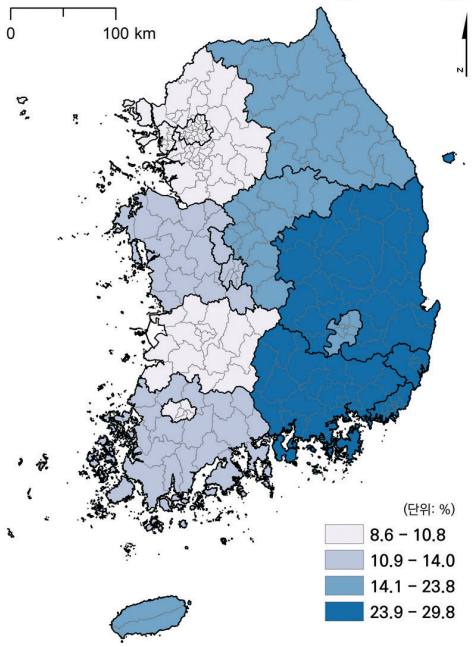
개신교인구 비율은 전북(26.9%), 서울(24.2%), 전남(23.2%) 순으로, 이전 조사와 유사하게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5년 대비 개신교인구 비율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주(2.8%p), 강원(1.9%p), 경북(1.8%p) 등 개신교인구 비율이 높지 않았던 시도에서 증가폭이 컸다.

천주교인구 비율은 서울(10.7%), 인천(9.5%), 경기(9.0%) 순으로 높았으나 시도별 편차는 작았다. 2005년 대비 천주교인구 비율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광주(-4.4%p), 인천(-4.2%p), 전북(-3.9%p)에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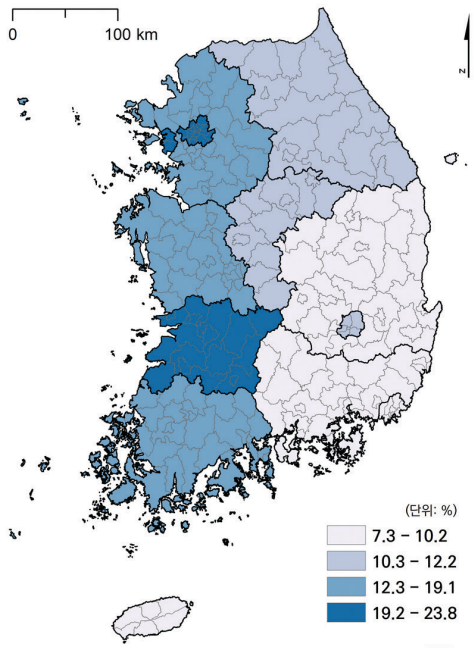
종합하면 불교는 영남권과 제주에서, 개신교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종교인구 비율이 높았다(그림 17-2). 반대로 영남권과 제주에서는 개신교 비율이 낮고, 호남권과 수도권에서는 불교 비율이 낮다. 천주교는 2015년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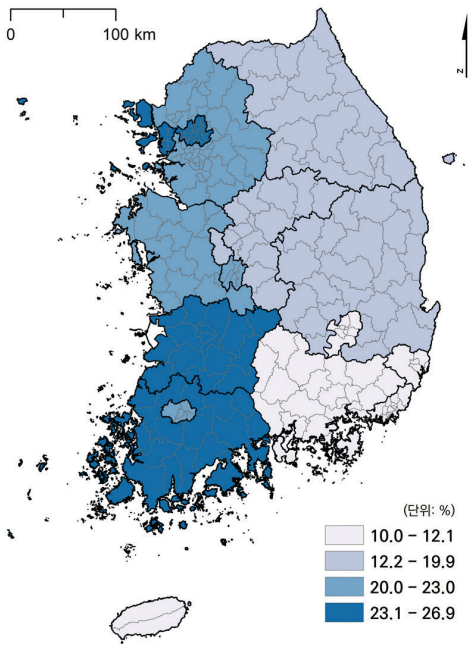
불교(1985년)



불교(2015년)



개신교(1985년)



개신교(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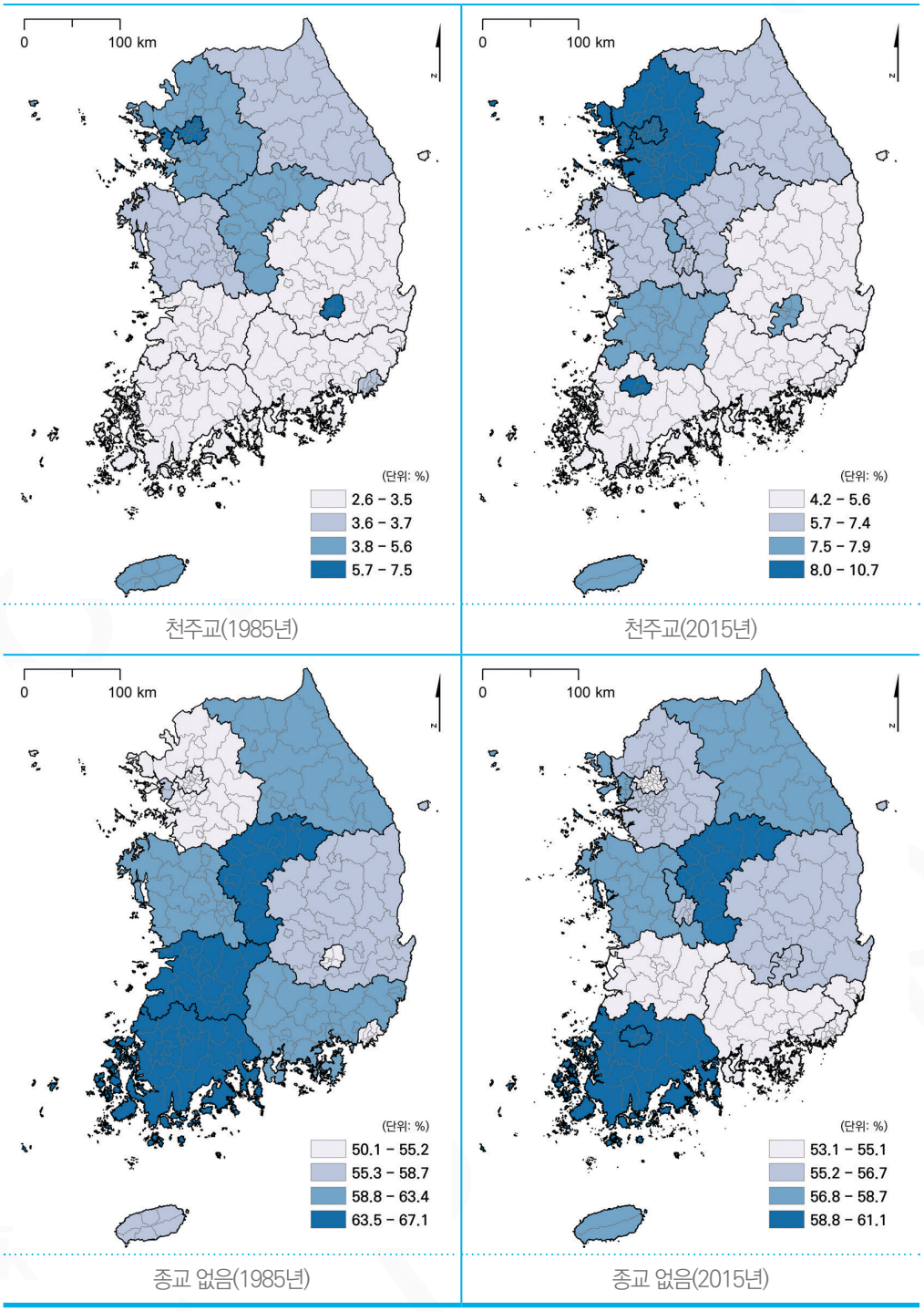


그림 17-2. 시도별 종교인구 및 비종교인구 비율 변화(1985·201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5) 비종교인구 변화

다음으로 비종교인구 증가폭이 가장 컸던 2005~2015년 조사결과를 연령별, 지역별로 비교하고, 한국인의 종교인 및 비종교인 비율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005~2015년 연령별 비종교인의 변화는 50대 이하에서 두드러졌다(표 17-6). 비종교인 비율의 증가폭은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10.0%p를 상회했다. 아울러 4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비종교인 비율이 종교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이하에서 비종교인 비율은 60%를 상회하였다. 60대 이상에서는 비종교인 비율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이에 따라 2015년에도 종교인구가 비종교인보다 많았다.

표 17-6. 연령대별 비종교인구 변화(2005·2015년)

(단위: 천 명, %, %p)

구분	2005		2015		비율 증가폭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체	21,865	46.5	27,499	56.1	9.6
0~9세	3,112	56.1	3,027	67.5	11.4
10~19세	3,204	49.0	3,436	62.0	13.0
20~29세	3,697	50.4	3,874	64.9	14.5
30~39세	4,232	51.6	4,517	61.6	10.0
40~49세	3,449	43.0	4,795	56.8	13.8
50~59세	1,895	36.9	3,939	49.3	12.4
60~69세	1,295	36.3	2,054	42.3	6.0
70세 이상	983	36.6	1,856	41.8	5.2

주: 각 비율은 당해연도 연령대별 비종교인구를 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표 17-7. 시도별 비종교인구 변화(2005·2015년)

(단위: 천 명, %, %p)

구분	2005		2015		비율 증가폭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국	21,865	46.5	27,499	56.1	9.6
서울	4,369	44.8	5,058	53.6	8.8
인천	1,226	48.7	1,613	57.9	9.2
경기	4,909	47.5	6,728	56.7	9.2
대전	659	45.8	842	56.2	10.4
세종	933	49.6	114	57.8	-
충남			1,180	58.7	-
충북	733	50.4	917	60.0	9.5
강원	748	51.2	866	58.7	7.5
대구	1,114	45.4	1,341	55.8	10.5
경북	1,199	46.2	1,436	55.4	9.2
부산	1,453	41.4	1,785	53.1	11.8
울산	450	43.1	610	54.5	11.4
경남	1,338	44.0	1,764	55.1	11.1
광주	731	51.7	892	61.1	9.3
전남	926	51.0	1,033	59.3	8.3
전북	823	46.3	980	55.0	8.7
제주	254	47.9	338	58.0	10.1

주: 각 비율은 해당 연도의 지역별 비종교인 수를 당해연도 지역별 인구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KOSIS).

2005~2015년 지역별 비종교인의 증가폭은 부산(11.8%p), 울산(11.4%p), 경남(11.1%p) 순으로 크고, 강원(7.5%p), 전남(8.3%p), 전북(8.7%p) 순으로 작았다(표 17-7). 영남권의 비종교인 비율 증가는 해당 지역의 불교인구 감소와 관련이 있다.

현재 한국의 종교인 및 비종교인 비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종교에 대한 세계적 데이터는 조사마다 편차가 커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비종교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2개 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비종교인 비율의 상위 10개국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한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서 한국의 비종교인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표 17-8). 68개국 6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의 2017년 조사결과에서 한국의 비종교인 비율은 60%로 10위권 바로 바깥에 위치하였다.

표 17-8. 비종교인 비율 상위 10개국(2010·2017년)

구분	Pew Research Center(2010)		WIN/GIA(2017)	
	국가	비율(%)	국가	비율(%)
1	체코	76.4	중국	90.0
2	북한	71.3	스웨덴	73.0
3	에스토니아	59.6	체코	72.0
4	중국	52.2	영국	69.0
5	대한민국	46.4	벨기에	64.0
6	라트비아	43.8	아제르바이잔	64.0
7	네덜란드	42.1	베트남	63.0
8	우루과이	40.7	홍콩	63.0
9	뉴질랜드	36.6	오스트레일리아	63.0
10	몽골	35.9	노르웨이	62.0
			대한민국	60.0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2); Gallup International(2017).

4. 맺음말

이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 관련 문항을 처음 포함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종교인구 비율은 1985년 42.6%에서 2005년 53.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15년에는 43.9%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3대 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종교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1985년부터 2005년까지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순으로 많았으나 2015년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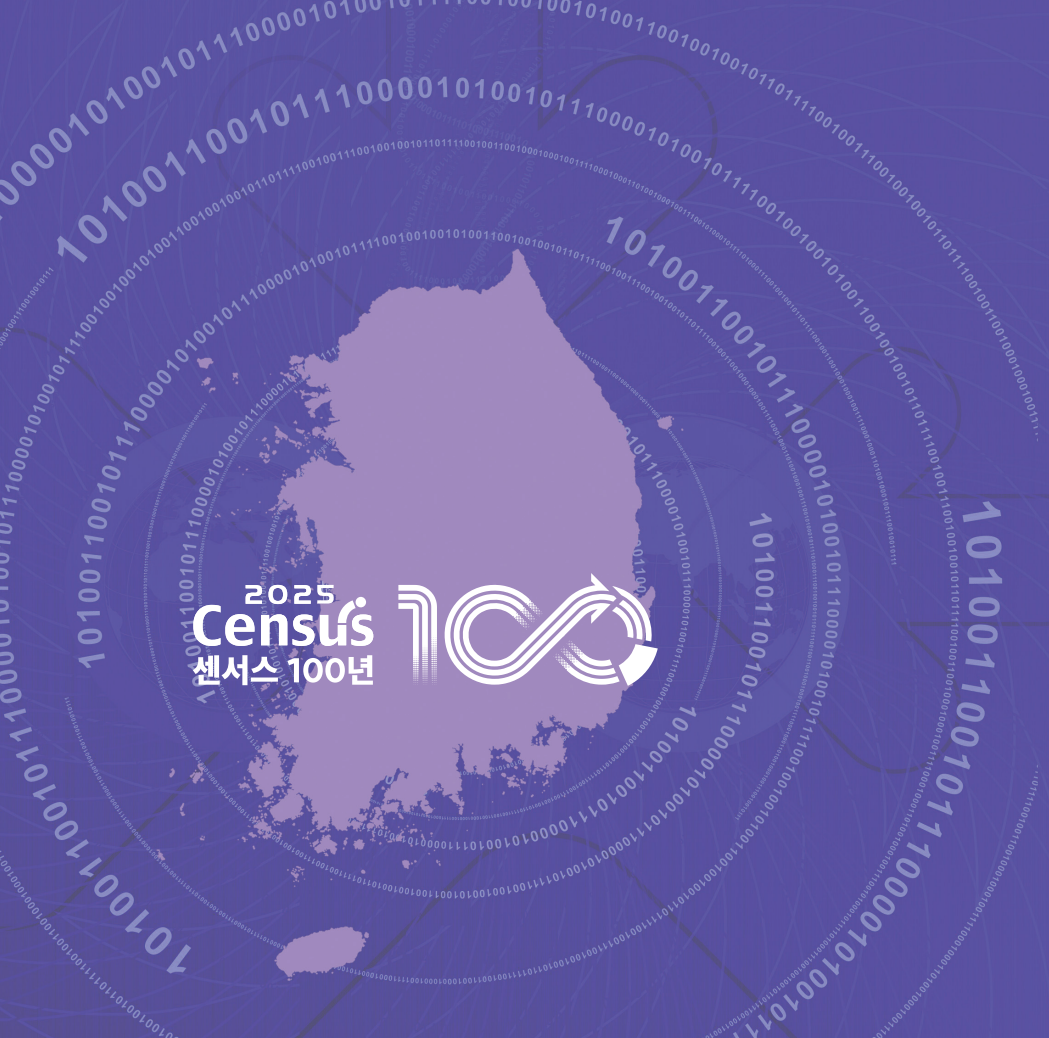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인구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3대 종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연령별 종교인구 비율은 종교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015년 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이며, 전반적으로 4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 신자 비율이 높다.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로 타 종교에 비해 청소년 신자 비율이 높다. 최근으로 올수록 불교는 더 고령화되고, 개신교도 장·노년층의 신자 비율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천주교는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편중이 크지 않은 가운데, 1985~1995년에 비해 2015년에는 60대 이상에서 신자 비율이 증가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비종교인 비율은 56.1%로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비종교인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15년이 최초인데, 이러한 추세가 향후 조사결과에서도 지속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18장

인구정책

이삼식 · 정기선



* 이삼식은 출산조절정책, 정기선은 이민정책을 각각 집필했다.

1. 머리말

인구정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인구정책을 인구와 사회 영역 간 불균형 상태를 예방하거나 지연시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규모, 구성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인구와 사회 영역 간 불균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상황까지 포괄한다.

인구정책은 인구규모, 분포,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인구정책은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구과정에 따라 출산조절정책, 인구분산정책, 이민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산조절정책은 인구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출산행태 등의 변화를 유도한다. 인구분산정책은 지역 간 인구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민정책은 외국인 유입을 통해 인구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인구의 규모, 구조, 분포를 결정하는 출생과 이동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정책으로서 출산조절정책과 이민정책을 다룬다.

2. 출산조절정책

1) 인구증가억제정책(1962~1995년)

(1) 가족계획사업 중심 출산억제정책

1945년 해방 이후 실시된 1949년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전쟁 종료 이후 실시된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 간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1.1%이다. 그러나 전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해 1955~1960년 인구주택총조사 간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0%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정부는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을 수립하면서 당시 높은 인구증가율을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1961년 11월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했다. 가족계획은 부부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육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자녀 수와 출산 간격을 조절하는 수태조절방법이다(한국인구학회, 2006). 그러나 당시 가족계획은 국가가 개인의 출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초기 가족계획사업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피임법을 무료로 보급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인구증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더 나아가 1자녀로 보다 적은 수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남아선호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홍보도 병행했다.

매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 설정한 인구증가율(자연증가율)과 합계출산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1966년부터 '목표 할당제'를 도입했다. 합계출산율 목표는 1986년 2.3명, 1988년 2.1명, 1995년 1.8명, 인구증가율 목표는 1993년 1%로 설정했다(경제기획원, 1981; 경제기획원, 1986).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어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자 목표 할당제는 1989년에 폐지되었다.

(2) 규제·보상적 출산억제정책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 가임기에 진입하고 남아선호관이 지속되면서 출생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족계획사업만으로 추가적인 출산억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년)에서 인구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율 1% 달성 목표 시기를 당초 2000년에서 1990년대 초로 앞당겼다(문현상 편, 1991). 전두환 정부는 피임법 보급 중심의 인구증가억제대책을 사회지원시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한 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49개 시책이 1981년 12월 채택되었다(조남훈 외, 1989; 이삼식 외, 2005). 공무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2자녀 이하로 제한, 교육비 보조금 비과세범위를 2자녀 이하로 제한, 2자녀 불임수용자에게 생업자금 및 중장기 복지주택자금 우선 융자 및 공공주택 입주우선권 부여가 규제 및 보상 제도로 실시되었다. 사회제도개선 및 남녀차별 시정 조치로 의료보험 피부양자범위에 결혼한 여성의 직계존속 포함 등도 실시되었다.

2) 인구자질향상정책(1996~2004년)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1.5~1.7명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이삼식 외, 2005).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해 보건복지부는 1995년 2월 인구정책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996년 6월 인구증가억제대책을 폐지하고, 대신 인구의 질적 문제와 노동력 부족, 노인인구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자질향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 1996).

인구자질향상정책의 본질은 그간 국가가 국민의 출산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였던 결과로 나타난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이다. 후유증은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및 재생산 건

강(reproductive health)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과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구분된다. 대응책은 크게 인구자질향상정책과 인구구조변화대응정책으로 세분화된다.

(1) 인구자질향상정책

재생산 건강은 재생산 기능과 과정에 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의미한다(UN DESA, 1995). 재생산 건강은 장기적으로 추진된 인구증가억제대책으로 인하여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출산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재생산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후유증이 발생했다.

인구자질향상정책은 재생산 건강 증진, 인공임신중절 예방, 출생성비 왜곡 시정, 청소년 성 활동 예방, 가족보건·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법상 태아 성감별 금지 규정을 홍보하며, 의료계의 자정 운동을 권장하여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출생성비 왜곡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각종 사회제도를 성평등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으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산전·산후관리, 고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조기치료 등을 실시했다. 청소년과 미혼여성의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 성 관련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성교육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 출산억제를 위한 사회지원시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로, 정부는 피임기구의 무상 보급을 중단했다. 두 자녀까지로 제한한 공무원 가족수당 및 학비 보조 지원 및 건강보험 분만급여 혜택, 불임수술 시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 등은 폐지했다.

(2) 미래 인구구조 변화 대응

1996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추계 결과를 두고 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이삼식·조남훈, 2000). 이와 관련하여 미

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자 했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돌봄의 탈가족화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고령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적합 직종 확대, 퇴직 후 재고용, 퇴직준비 프로그램 개발,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등을 확충했다. 또한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소득보장 강화, 재가보건복지서비스 확충, 여가 서비스 활성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을 추진했다.

인구자질향상정책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02년에는 1.1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그럼에도 인구자질향상정책은 합계출산율 하락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수립하기보다 보건복지 영역에 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저출산 덫(trap of low fertility)'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 기간은 인구정책의 공백기로 평가될 수도 있다.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2005년~)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자 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인구정책을 시작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을 지향했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은 점진적인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회복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기반으로 간주한 국가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성평등과 인구 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1차에서 제4차까지의 기본계획은 비전 및 목표는 변화하였을지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저출산 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돌봄 지원, 보건의료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등을 추진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저출산 대책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저출산의 원인이 고용, 주택,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고용, 주택, 교육 등의 영역들이 제외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지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 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교육, 육아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핵심의제로 포함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청년 일자리 관련 과제가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 고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포함되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었다.

주택 부문의 경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만혼 현상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지원을 확대했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과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예비부부와 청년을 전세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출산의 상당 비율은 비혼동거 부부 등 다양한 가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가족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동거 부부 등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면 신속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혼모와 미혼부 등의 아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자녀 성(姓) 결정에 대한 가부장적인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폐지 등 법적 개선과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및 주거에 대한 지원 강화, 가족 형태별 맞춤형 통합 가족 서비스 체계 강화 등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세제개편을 수차례 단행하여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폭을 차등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했다. 2010년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했고, 2015년에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했다. 2008년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가 시행되었고, 2018년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정책을 도입했다. 2010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했고, 2024년 그 대상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6년에서 14년까지 연장했다.

(2) 보건의료 지원

저출산 대책으로서 보건의료 지원은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난임 치료에 대한 시책은 2006년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2007년 남성 불임 치료 비용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16년 난임 시술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체외시술 지원횟수와 지원금을 확대했다. 나아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했다. 2018년에 난임 휴가를 도입하고, 그 기간을 점차적으로 연장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난임 부부 치료 지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했다.

(3) 보육·돌봄 지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었다. 우선 보육·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교육을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2006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에 대해 기본보조금[1]을 지급하여 보육의 질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었고, 이에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했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공보육 어린이집의 설치·이용률이 25% 미만인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공급했다.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도 도입되었다. 2006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2012년에는 설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한 2013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형, 자치단체 협업형, 대학, 산업단지 등 다양한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지원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해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2006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아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근로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는 3~4시간 단시간 보육 등 다양한 시간제 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 등에 제공했다. 또한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을 설치했다.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시설보육과 직접 돌봄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아에 대한 다양한 보육비 지원

1)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표준보육단가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을 영아수당(부모급여)으로 통합·개편하여 부모가 자신이나 아이의 상황에 맞은 서비스 유형이나 직접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 일·가정양립 지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을 강화했다. 2006년부터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급여(90일간)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했다. 출산 후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법정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보장했다. 2007년에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했고 휴가일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에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출산 전후 급여를 국고로 지원했다.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 출산 전후 급여(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제공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1세 미만에서 3세 이하, 6세 이하, 8세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정액제로 월 5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정률제로 전환했다. 정률제 개편 이후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2014년에는 "아빠의 달"을 도입하여 1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월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센티브 기간을 3개월로 확대했다. 다자녀 우대정책의 기준을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로 전환하였으며, 휴직급여의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에는 "아빠의 달"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00~300만 원)까지

인상했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200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5~30시간) 도입을 시작으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3. 이민정책

이민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경을 넘는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한다(이혜경 외, 2016). 이민정책은 이민자 유입정책, 체류관리정책, 이민통합정책, 국제(이민)협력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기선 외, 2016). 이민자 유입정책과 체류관리정책, 이민통합정책은 인구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1) 이민정책 기조 변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이민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를 보충하는 "잠재인력"으로 인식된다. 잠재인력인 외국인력에는 해외우수인재,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비전문인력이 포함된다. 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를 위해 체류편의를 제공하거나 영주자격 취득 시 우대정책을 펴는 반면 비전문인력과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도입 규모를 조정하고 체류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이민정책에는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적응지원, 국민 대상 다문화인식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민정책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을 동반하는 정주형 이민자의 유입과 정

착, 영주·귀화 경로를 열어놓음으로써 인구정책으로 기능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력이 아닌 장기간(혹은 영구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구성원으로서 이민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책용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이라는 정책용어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유치" 과제를 통해 이민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영주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은 '해외우수인력'으로 제한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민자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도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과제를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이민정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한해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이민자 유치 정책

(1) 취업이민자: 과학기술인재 및 산업기술인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전문외국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2] 이 중 해외 과학기술인재나 첨단산업분야 기술인재는 적극적 유치 대상이 되는 반면 나머지 직종은 내국인 일자리 대체 정도, 학력, 경력, 소득수준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야 취업이민이 허용된다.

과학기술분야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1968년 재외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사업(1968~1994년)에서 시작되었다(권채리 외, 2021). 2000년대에는 해외 과학인재 유치 정책이 법제화되었고,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부터 과학기술인력 유치 및 정부초청 석·박사과정 이공계 유학생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2) 예술흥행(E-6)에서 호텔업시설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을 하는 호텔·유흥(E-6-2) 자격은 전문인력으로 보지 않는다.

첨단산업 부문 해외기술인재 유치지원 정책은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다(권채리 외, 2021). 2000년에는 8개 첨단기술분야[3] 국내 기업(중소기업 우선)과 연구소, 대학교, 정부, 공공기관의 28개 직종에 대해 해외 산업기술인재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정부는 고용추천서를 작성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사증 및 체류상 우대를 하는 골드카드제와 IT카드제를 도입했다.[4] 200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력 발굴·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14년 범부처 '해외우수인재유치활용방안'을 통해 우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인재는 비자 발급 상한기간 확대(5년), 복수비자, 국내 거주 3년 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일반비자 취득자는 5년 이상), 배우자 취업 허용,[5] 근무처 변경 가능 등 사증 및 체류상 우대를 받게 된다. 2023년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여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F-2, 취업요건 없이 5년 체류 보장)을 보장하고, 연구경력이나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에 영주권·국적(우수인재 특별귀화)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2) 비취업이민자: 유학생 및 투자자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은 2004년 한국유학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나 유학생들의 중도탈락,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2008년부터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질적 접근으로 전환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지하 외, 2020; 이창원 외, 2020).

3)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디지털전자, 바이오, IT, 나노, 기술경영이 해당한다.
4) 골드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T카드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해서 특정활동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5) 전문외국인력 비자(예술흥행 E-6-2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는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질적 관리는 대학의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지도, 장학제도, 취업활동 지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유학생 유치 홍보 등에 이르는 유학생 관련 업무 전 과정의 관리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교육부, 2019). 유학생 체류관리는 유학생 비자를 위한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확대,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학활동 병행 등 유학생비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2013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현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 지정 투자처에 7~10억 원 투자 시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거주(F-2)비자를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 지정 공익펀드에 기준금액(1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비자를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018년 시행된 기술창업이민제도는 국내·외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국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일정 이상 점수를 얻는 외국인에게 기술창업비자(D-8-4)를 부여하고, 창업비자로 3년 체류 후 일정 요건(3억 원 투자금 유치, 국민 2명 6개월 이상 고용)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3) 이민자 정착 정책

(1) 취업이민자: 단순노무인력 및 숙련기능인력

일반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계절근로자로 단순노무인력이 국내에 유입된다.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 도입으로 단순노무직(E-8, E-9, E-10, H-2) 외국인력이 제조업체 등에 공식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나, 열악한 근로환경, 인권문제,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 불법체류·취업, 송출비리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산업연수생제는 1997년 2년간 연수 후 체류자격을 변경해 1년간 근로자로 체류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로 전환했다(권채리 외, 2021).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03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일반

외국인대상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동포대상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비전문(E-9) 외국인근로자가 3년(1년 10개월 연장 가능)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고용허가제의 체류기간은 2005년 3년, 2009년 5년, 2012년 9년 8개월로 점차 연장되었다. 2022년에는 장기근속 특례 비전문근로자의 경우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최대 10년 이상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이 증가하고, 업종별 개별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도 확대되어 비전문외국인력 유입은 2004년 2만 명에서 2024년 12만 명으로 확대되었다.[6)]

2002년에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해 국내 친인척의 초청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을 일부 서비스 분야에 한정해 허용하였다. 취업관리제는 2004년 특례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으며, 2007년부터 무연고 동포에게도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문취업(H-2)비자를 시행했다(이규용 외, 2017). 방문취업동포는 취업교육 이수 후 취업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특례고용허가를 받는 사업체에 3년(1년 10개월 연장가능) 범위에서 취업하며,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다. 방문취업비자 동포에게 허용된 업종은 20여 개에서 3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내국인 일자리보호가 대두되면서 2009년 사증발급총량제를 도입하여 방문취업동포가 30.3만 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김기택 외, 2020; 권채리 외, 2021). 2009년 5월부터 건설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를 제한하고, 취업교육 이수자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취업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방문취업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동포가 고령화되면서, 2020년에 건설업취업교육이 폐지되고, 2023년에 건설업취업인증의 발급 규제도 폐지되었다.[7)]

계절근로제는 3개월 단기취업(C-4) 외국인력 도입제도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농가로부터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 신청을 받아 제출하면 법

6) 고용노동부,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경쟁력 높인다-「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2023.08.24.

7) 고용노동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더 오래 함께 일한다-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2022.12.29.

무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입 규모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 수는 2017년 21개에서 2023년 12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8)]

숙련기능 외국인력은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E-7은 전문성과 내국인 일자리 대체 정도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한다. 숙련기능인력은 일반기능직종(E-7-3)과 숙련기능직종(E-7-4)으로 세분한다.

숙련기능인력은 전문인력과 달리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할 우려가 있어 직종별로 자격과 임금요건, 쿼터를 설정하여 신규 도입 및 체류자격 전환 규모를 통제한다. 숙련기능인력점수제(E-7-4)는 농림축산어업 및 뿌리산업체, 중소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9)] 단순노무취업 체류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쿼터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2) 비취업이민자: 재외동포, 가족이민, 난민

비취업이민자를 재외동포, 가족이민, 난민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했다. 재외동포정책은 해외거주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모두를 포괄한다.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우대정책을 법제화했다. 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재외동포(F-4)는 2년간 체류할 수 있고,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할 수 있다. 또한 단순노무 외 직종에 대한 취업, 금융거래, 건강보험 등에 대해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에 선진국 거주 동포의 모국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 2002년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일부 서비스 분야에 2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가 시행되었다. 2007년 무연고 외국국적동포도 포함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었다.

8) 법무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021.10.17.
9) 2023년 6월에 체류자격 변경 기준을 5년에서 4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다. 법 제정 당시,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부터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불법체류자다발국가로 지정된 중국,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 국가) 출신 동포는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어려웠으나 2008년부터 전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소수 엘리트에 한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재외동포비자 발급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설동훈·문형진, 2020).

방문취업동포는 비전문직 종사자임에도 일반외국인과 달리 미성년자녀와 배우자 동반 체류를 허용했다. 2009년부터 재외동포(F-4)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방문취업동포도 제조업, 농축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동일업체에 4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등에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에는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귀국을 희망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거나, 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2019년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에 재외동포 4세도 포함했다.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단순노무취업도 전면 허용되었다.

가족형성을 목적으로 이민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F-6비자를 부여하며, 가족동반 또는 가족재결합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F-1, F-3비자를 부여한다.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1998년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아내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아내의 단독 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혼인한 여성의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했다.

2000년대 초반 결혼중개업체의 국제결혼중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혼이민여성의 언어소통과 생활 적응의 어려움,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가 시행되어 등록 전 결혼중개업자 사전교육 강화, 이용자 신상정보 및 통·번역서비스 제공,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주기적 시행, 지자체 지도점검 등이 의무화되었다. 2012년 결혼이민자 비자(F-6)를 별도 체류자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결혼이민 비자 발급요건에 한국어 검증제도,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을 신설하여 심사를 강화했다(법무부, 2012).

한국 정부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의정서에 가입하고 국회비준을 얻었으며,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의 인정과 취소 등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8년 난민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보충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규정을 신설하고 처우와 지원 규정,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가 2013년 1,574명에서 2018년 16,173명으로 급증했고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1만 5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법무부, 2023). 2015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2020년까지 170여 명의 난민을 가족 단위로 받아들였다.[10)]

4) 이민통합정책

정부는 「외국인처우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적 또는 거주·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 귀화한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

10) 연합뉴스, "재정착 난민 적응 위해 예산 늘리고, 지자체 적극 나서야", 2021.10.17.

또한 2009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최초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며, 방문취업(H-2)동포, 외국인 연예인(E-6-2), 고시 7개국[11] 출신 결혼이민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주형 이민자를 우선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정보, 한국어 및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우수외국인재와 투자자, 유학생 또한 이민자 통합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노동시장 통합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취·창업지원서비스는 주로 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허가제 비전문(E-9) 외국인노동자는 입국전·후 취업교육, 재직자직업능력교육, 귀국준비 차원에서 기능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이규용 외, 2017).

이민자 1세에 대한 교육은 주로 한국어, 한국 사회 이해, 취·창업준비 등을 다룬다. 이민자 2세에 대한 교육은 언어발달, 양육과 보육, 기초학습능력증진,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교육, 공교육 진입 확대, 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학 및 진로지도,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내국인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자의 빈곤 예방, 건강, 주거 등 복지 관련 이민자통합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는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에 한해 제공된다. 영주권자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소라미 외, 2012).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정책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룬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와 여성, 아동 등 취약이민자 인권증진을 포함한다. 제1차 기

11) 고시 7개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 포함된다.

본계획(2008~2012)은 사회 전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개방적 태도 증진, 다문화 이해 증진 등에 초점을 두고 학교교육과 다문화시설 종사자·공무원·교원·경찰·군인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2014년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면서 제2차 기본계획(2013~2017)부터는 문화다양성 컨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세계시민교육 확산 등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은 외국인을 위한 다언어프로그램 정규편성 및 다언어 콘텐츠 확대, 이주민 자조모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지역 내 이주민과 선주민 간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문화이해활동 촉진 등을 추진하였다.

영주자격제도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체류자격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영주자격(F-5) 소지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하지 않고는 강제퇴거되지 않는다. 영주권자는 입국, 체류 및 경제활동이 선언적으로 보장되고, 「공직선거법」(2005)과 「주민투표법」(2004) 개정으로 주민투표권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의 선거권(피선거권 제외)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권리는 제한적이다.

1997년 「국적법」을 개정해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했고 이중국적자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특정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귀화요건을 완화했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기존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제도에 예외를 두는 제한적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한국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첨단산업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투자이민자 등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일반영주자격 신청요건[12]보다 완화했다.

2018년 혼인 등에 의한 간이귀화나 우수인재의 특별귀화가 아닌 일반귀화의 경우 영주권 전치주의[13]가 시행되면서 '단기체류 → 장기체류 → 영주권 → 귀화(국적)'의 순서가 이민자 사회통합과정의 핵심 경로가 되었다. 영주자격 외국인은 2004년 1만여 명에서 2020년 16만 명으로 증가했다.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거주, 재외동포(F-4)는 2년 이상 거주 후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대했다. 2023년 6월 18만 2천 명의 영주자격자 중 약 70%가 외국국적동포이다.[14]

12) 주재(D-7)~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

13) 2018년 국적법 개정으로 일반귀화 신청자는 영주자격 취득 후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되었다.

14) 법무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023.05.30.

4. 맺음말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의 인구정책은 큰 변화를 경험했다. 1960~1980년대에는 출산 억제를 지향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자질향상을 도모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을 장려했다. 이민정책은 2000년대 중후반에 국가정책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 활용을 넘어 이민자통합을 포괄하는 종합적 이민정책의 성격을 띠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2008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1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은 2010년 수립되었다. 인구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이민자 유입과 정착, 통합을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은 2020년대 이후이다.

인구정책은 고정 불변이 아니고 인구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끊임없는 분석을 토대로 적시에 방향을 변경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지난 60여 년간의 인구정책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평가받아 왔다. 미래에도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정책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나침반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강영옥·윤은주·정재희, "소지역 통계구역 획정방안 연구",『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2007, pp.15-36.

강영옥·장세진, "소지역 통계공표구역 설정지침 보완 연구",『한국지도학회지』, 8(2), 2008, pp.47-57.

강은택·강정구·안아림·마강래, "고급인력의 인구이동패턴과 인적자원의 지역 불균형",『대한부동산학회지』, 34(2), 2016, pp.305-321.

건설교통부,『GIS기반 소지역통계집계 공표구역의 획정 및 관리방안』, 2007.

경제기획원,『제4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계획 시안』, 1976.

_____,『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인구부문계획(안)』, 1981.

_____,『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 인구부문계획(안)』, 1986.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2019.

구병준, "조선총독부의 인구관리와 영아사망률 통계 문제",『역사문제연구』, 44, 2020, pp.301-334.

구형모, "대학 진학 이동과 대학 졸업자 취업 이동의 공간적 특성 탐색",『한국도시지리학회지』, 21(3), 2018, pp.109-122.

권기중, "호적대장을 통해 본 조선후기 노비층의 증감현상 - 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91, 2015, pp.7-34.

권내현, "조선 후기 호적,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한국사연구』, 135, 2006, pp.279-305.

_____, "성장과 차별, 조선 후기 호적과 신분",『대동문화연구』, 110, 2020, pp.7-34.

권채리·최서리·유민이,『체류외국인 250만 명(동포포함)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제1권: 국내 이민정책의 전개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2021.

권태환,『한국의 인구』, 서울대학교, 1975.

권태환·김두섭,『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김경리, "일본의 제1회 국세조사 홍보와 자각하는 '근대'",『일본사상』, 44, 2023, pp.41-74.

김기택·곽윤경·이주미·주유선·정기선·김석호·김철효,『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김대래,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 추이와 그 함의(1970-2018)",『지방정부연구』, 23(1), 2019, pp.1-24.

김동춘, "1971년 8·10 광주대단지 주민항거의 배경과 성격",『공간과 사회』, 21(4), 2011, pp.5-33.

김두섭, “미군정기 남한인구의 재구성”,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 변동과 사회사 Ⅰ』,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9.
_____, “인구의 성장과 변천”,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김두섭·이삼식, “지역의 생태환경에 따른 사망원인구조의 차이”, 『한국사회학』, 38(4), 2004, pp.133-158.
김두섭·허나영, “혼외출산행태의 주요 변화와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개발원, 2020.
김민경,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 19(1), 1996, pp.73-92.
_____, “인구센서스의 발전과 특징”,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_____, 『한국의 인구주택센서스』, 통계청, 2018.
김상숙, “‘희망 고문’과 고투(苦鬪) - 산업체 학교 제도와 여성 노동자들의 생애사적 경험: 1980년대 대구경북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9(2), 2018, pp.107-142.
김설희, “센서스지도 제작을 위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조 연구”, 『한국GIS학회지』, 1(1), 1993, pp.17-28.
김수영·이민홍·손태홍, “고령자 사회참여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2015, pp.451-479.
김수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국적법 제정 논의 과정에 나타난 ‘국민’ 경계 설정”, 『한국근현대사연구』, 49, 2009, pp.114-144.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 136, 2007, pp.287-323.
김영표·한선희, 『GIS를 활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김정석, “가족과 가구”,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_____, “고령화사회의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변화와 전망”, 『국토』, 280, 2005, pp.6-19.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2002, pp.81-107.
김종한·박섭·박영구, “한국전쟁과 부산의 인구 및 노동자 상태 변화”, 『지역사회연구』, 14(3), 2006, pp.23-51.
김지하·조옥경·서영인·문보은·송효준·김지은·채재은·오상아·이찬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0.
김창환, “1990년대 이후 광역권별 지역이동의 계층적 특징”, 『한국인구학』, 38(1), 2015, pp.1-32.
김태완·이주미,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보건복지포럼』, 305, 2022, pp.60-73.
김태홍,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결정요인과 특징”, 『여성연구』, 59, 2000, pp.93-114.
김형석·전광희·이삼식·김가은·김미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및 행정자료 확대 방안 연구 사업”, 통계청, 2021.
김흥순, “일제강점 후기 우리나라 도시화의 동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5), 2011, pp.1-28.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3』, 1953.

문소정, “일제하 농촌의 인구와 가족의 변화”,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 :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논문집 제2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문현상 편, 『인구정책 3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문현상·한영자·전학석, 『도시화 문제와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민경희, “노동력”,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2009, pp.29-58.
박경애, “성별 사망력 차이: 한국의 지역적 격차”, 『보건사회연구』, 8(1), 1988, pp.130-147.
_____,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한국인구학』, 26(2), 2003, pp.1-32.
박기주·김성남, “한국인의 초혼연령의 추이—전시기(戰時期)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54, 2013, pp.39-70.
박명규·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제와 센서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박이택, “식민지기 조선인 인구추계의 재검토—1910~1940”, 『대동문화연구』, 63, 2008, pp.331-373.
박재규, “한국사회의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1996, pp.32-38.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2.
변화순, “혼인상태”,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보건복지부, 『향후 인구정책 추진』, 1996.
_____, 『보육사업안내』, 2006.
_____, 『아이사랑플랜(2009~2012)』, 2009.
_____, 『2013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2013.
서수희,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 조사방식 개선 중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계획 연혁 제1권』, 이호문화사, 2017.
설동훈·문형진, 『재한 조선족, 1987~2020년』, 한국학술정보, 2020.
소라미·정정훈·박영아·김아현·김철효·한아름,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2.
손병규, “조선왕조의 호적(戶籍)과 통치체계”,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_____, 『국가의 인구 관리, 옛날과 오늘』, 국학진흥원 교양학술 총서, 2020.
손승호, “수도권의 직주균형과 통근통행의 변화: 2005~2010년”, 『대한지리학회지』, 49(3), 2014, pp.390-404.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1996.
양진아, “일제강점기 국세조사(國勢調査) 법령의 체계와 특징”, 『법이론실무연구』, 11(2), 2023, pp.115-144.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2.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
오성철, "한국 현대교육사의 시기 구분에 관한 시론", 『교육사학연구』, 25(2), 2015, pp.157-184.
유홍림·김경태, "우리나라 통계행정 60년: 제도적 변천과 주요 활동", 『한국조직학회보』, 5(2), 2008, pp.1-29.
윤인하·김호연, "수도권의 통근통행 패턴에 관한 연구, 1990-1996", 『국토계획』, 38(6), 2003, pp.87-97.
윤주현, "한국인의 경제, 사회 및 주거생활 변천", 『한국의 주택』, 통계청, 2002.
은기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2001, pp.41-65.
_____, "경제활동: 직업 및 산업",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이건·이명진·서우석·변미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방법", 『조사연구』, 7(1), 2006, pp.109-129.
이건학·최은영, "센서스 GIS와 지리통계시스템의 구축", 『통계연구』, 16(2), 2011, pp.1-21.
이규용·김기선·정기선·최서리·최홍엽,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7.
이동원, 『현대 사회학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이삼수, "직주재배치를 통한 서울대도시권 통근통행의 효율성 분석", 『국토계획』, 39(3), 2004, pp.95-109.
이삼식, "한국인의 사망률 구조에 관한 분석", 『한국인구학』, 13(1), 1990, pp.51-80.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이삼식·조남훈, 『인구개발에 관한 UN 행동강령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삼식·조남훈·백화종·손수정, 『남북한 인구변동과 통일시 사회·인구학적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이상림,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동", 『한국인구학』, 32(3), 2009, pp.43-72.
이상의, "1930~40년대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동원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상호, "해방과 분단에 따른 인구의 대이동", 『경기도사; 경기도의 사회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이창원·김도혜·최서리·신소희, 『국내 유학생의 학업실태 및 취업이행 연구: 이공계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2020.
이혜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 『이민정책론』, 박영사, 2016.
이희연·이승민,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3(4), 2008, pp.561-579.
장주영·허정원, 『국내 이주민 대상 통계 검토』, 이민정책연구원, 2020.

전효숙·서홍관,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의사학』, 12(2), 2003, pp.3-143.
정기선·강동관·곽재석·김안나·오경석·이규옹·이창원·이혜경·전경숙·조영희·최서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정기원·이상은·강혜규, 『남북한의 인구 · 보건 · 사회보장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조계표·박재익, “미군정시대의 사회상황과 행정조직의 변화”, 『한국행정사학지』, 39, 2016, pp.131-154.
조남훈·김일현·서문희·장영식, 『최근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조은주, “인구통계와 국가형성: 1960년, 1966년 한국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5), 2014, pp.137-172.
_____, “1960년대 한국의 통계 발전과 지식 형성의 실천: 주한 통계 고문단(1958~1963)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8(1), 2016, pp.213-238.
_____,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지태근·곽경화·제갈정·박민수·김광기, “지역사회 사망률 관련 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2(3), 2015, pp.11-22.
진미정·변주수·권순범, “한국 가족생애주기의 변화: 1987년 공세권 연구와의 비교”, 『가족과 문화』, 26(4), 2014, pp.1-24.
차명수, 『기아와 기적의 기원』, 해남, 2014.
최병선, “인구와 도시화”, 『인구보건논집』, 2(1), 1982, pp.99-104.
최은영, “서울의 거주지 분리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최은영·박영실,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통계개발원, 2009, pp.176-264.
최진호,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최현종, 『한국 종교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통계청, 『통계로 다시보는 광복이전의 경제·사회상』, 1995.
_____, 『인구주택총조사 기초단위를 이용한 통계적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 2003.
_____,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표본조사용)』, 2005.
_____, 『(위대한 숫자의 역사) 한국통계발전사: 시대사』, 2015a.
_____, 『(위대한 숫자의 역사) 한국통계발전사: 사회통계』, 2015b.
_____, 『기초단위구 특성 번호 및 집계구 획정 개선 방안 연구』, 2017.
_____, 『인구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0.
_____, 『통계청 직무편람: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도 구축』, 2021a.
_____,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제안요청서』, 2021b.
_____, 『2022년 사회조사 결과』, 2022.

_____, 『2023년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 개선 사업 제안요청서』, 2023a.
_____, 『2022 혼인·이혼통계』, 2023b.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대사전』, 통계청, 2006.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제4권 1996~1997』, 1997.
홍두승·박경애·이건·김현의·이세용·박미해,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8(1), 1996, pp.74-155.

石南国, "韓國人口の將來推計 - 1960~1980", 『函館大學論集. 第5輯』, 第5輯, 1970, pp.207-239.
石南国, 『韓國の人口增加の分析』, 勁草書房, 1972.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Verso Books, 2006[1991].
Berkman, L. F., Glass, T., Brissette, I., and Seeman, T. E., "From social integration to health: Durkheim in the new millennium", *Social Science & Medicine*, 51(6), 2000, pp.843-857.
Curtis, B., *The Politics of Population: State Formation, Statistics, and the Census of Canada, 1840-1875*,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Fernandes, F., Turra, C. M., and Rios-Neto, E. L., "World population aging as a function of period demographic conditions", *Demographic Research*, 48, 2023, pp.353-372.
Foster, H. M., Polz, P., Gill, J. M., Celis-Morales, C., Mair, F. S., and O'Donnell, C. A.,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association between unhealthy lifestyle factors and adverse health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Wellcome Open Research*, 8, 2023.
Hauser, P. M., "The use of sampling in the censu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36(215), 1941, pp.369-375.
Holden, C., "Why Do Women Live Longer than Men?", *Science*, 238(4824), 1987, pp.158-160.
Hulsegge, G., Looman, M., Smit, H. A., Daviglus, M. L., van der Schouw, Y. T., and Verschuren, W. M., "Lifestyle changes in young adulthood and middle age an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all-cause mortality: The Doetinchem Cohor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5(1), 2016, e002432.
Kamyari, N., Soltanian, A. R., Mahjub, H., and Moghimbeigi, A., "Diet, Nutrition, Obesi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COVID-19 Mortality: Development of a Marginalized Two-Part Model for Semicontinuous Data",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 7(1), 2021, e22717.
Kwon, T. H.,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Laaribi, A., and Peters, L., *GIS and the 2020 Census: Modernizing Official Statistics*, ESRI Press, 2019.

Lantz, P. M., House, J. S., Lepkowski, J. M., Williams, D. R., Mero, R. P., and Chen, J., "Socioeconomic factors, health behaviors, and mortality: res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prospective study of US adults", *Jama*, 279(21), 1998, pp. 1703-1708.

Lee, S. I., Khang, Y. H., Yun, S., and Jo, M. W., "Rising rates, changing relationships: caesarean section and its correlates in South Korea, 1988-2000", *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 Gynaecology*, 112(6), 2005, pp.810-819.

Lewis, W. 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1954, pp.139-191.

Lim, D., Park, S. H., and Song, I., "Secular Trends in Sex Ratio at Birth by Birth Order in South Korea, 1981-2017",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6(1), 2021, pp.117-123.

Loo, B. P. Y., and Chow, A. S. Y., "Jobs-housing balance in an era of population decentralization: An analytical framework and a case stud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9(4), 2011, pp.552-562.

Luy, M., and Gast, K., "Do women live longer or do men die earlier? Reflections on the causes of sex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Gerontology*, 60(2), 2014, pp.143-15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2023.

Openshaw, S., "A geographical solution to scale and aggregation problems in region-building, partitioning, and spatial modelling",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4), 1977, pp.459-472.

Peters, A. H., and MacDonald, H., *Unlocking the Census with GIS*, Esri Press, 2005.

Ravenstein, E. G.,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1885, pp.167-235.

Schooling, C. M., "Could androgens be relevant to partly explain why men have lower life expectancy than women?", *Journal of Epidemiolology and Community Health*, 70(4), 2016, pp.324-328.

Sharma Waddington, H., Masset, E., Bick, S., and Cairncross, S., "Impact on childhood mortality of interventions to improve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to household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Medicine*, 20(4), 2023, e1004215.

Trewartha, G. T., and Zelinsky, W., "Population Distribution and Change in Korea 1925-1949", *Geographical Review*, 39(1), 1955, pp.1-26.

United Nations, *Handbook on Geographic Database and Census Mapping*,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Measur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Censuses, United Nations,

2008.

UN DESA,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United Nations, 1995.

_____,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United Nations, 2017.

_____, *Methodology Report: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United Nations, 2022.

Wabo, T. M., Wang, Y., Nyamao, R. M., Wang, W., and Zhu, S., "Protein-to-carbohydrate ratio is informative of diet quality and associates with all-cause mortality: Finding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14)",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2022, 1043035.

White, J., Greene, G., Kivimaki, M., and Batty, G. D., "Association between changes in lifestyle and all-cause mortality: the Health and Lifestyle Surve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72(8), 2018, pp.711-714.

Yang, S., Khang, Y. H., Chun, H., Harper, S., and Lynch, J, "The changing gender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in Korea 1970-2005", *Social Science & Medicine*, 75(7), 2012, pp.1280-1287.

Yoo, S. H., Hayford, S. R., and Agadjanian, V., "Old habits die hard? Lingering son preference in an era of normalizing sex ratios at birth in South Kore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6(1), 2017, pp.25-54.

Yoon, J. J., "Historical Consequences of Migr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인구학』, 15(1), 1992, pp.73-81.

Zhao, P., Lü, B., and Roo, G. D., "Impact of the jobs-housing balance on urban commuting in Beijing in the transformation era",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9(1), 2011, pp.59-69.

《통계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0).

교육부·중앙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199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20).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0).

문교부, 『교육통계연보』(1970, 1980).

문화공보부, 『종교법인 단체 일람표』(1971, 1974, 1975).

_____, 『종교법인 및 단체현황』(1977).
_____, 『종교단체 현황』(1979~1980).
법무부, 『202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25~2022).
_____, 『인구주택총조사』(1925~2020).
_____, 『국제인구이동통계』(2000~2022).
_____, 『생명표』(1970~2023).
_____, 『장래인구추계』(1990년 기준, 2005년 기준, 2010년 기준, 2015년 기준, 2017년 기준, 2020년 기준, 2022년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1980~2020).
OECD, Elderly Population(2023).
_____, Family Database.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더 오래 함께 일한다-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2022.12.29.
_____,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경쟁력 높인다-「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2023.08.24.
동아일보, "국세조사(國勢調査)에서 조선제외 이유(朝鮮除外 理由), 소요후 인심의 동요가 안정되지 아니해 조선은 호구조사만 할터(騷擾後 人心의 動搖가 安定되지 아니해 朝鮮은 戶口調査만 할터)", 1920.07.15.
_____, "이번 총인구조사(總人口調査)는 국가시책(國家施策)의 기본(基本)이 된다. 너도나도 빠짐없이 신고(申告)하자!", 1949.04.29.
법무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023.05.30.
연합뉴스, "재정착 난민 적응 위해 예산 늘리고, 지자체 적극 나서야", 2021.10.17.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09.05.
_____,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3.07.13.
한겨레신문, "21세기에 '60년대식' 출산 캠페인!", 2016.10.20.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2023.11.08.

Gallup International, "Religion Prevails in the World", 2017.04.10.
Pew Research Center,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2012.12.18.

《기타자료》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e뮤지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 e뮤지엄.
통계청, SGIS 도시화 분석지도.

센서스 100년, 한국의 인구

발행일 2025년 8월 20일
펴낸이 안형준
발행처 통계청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www.kostat.go.kr
인쇄처 다산글방

© 2025, 통계청

ISBN 978-89-5801-542-0 93310

※ 구입 신청은 한국통계진흥원(042-869-224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